

인권정보자료실

R1.1.6

인권하루소식

합본 VI 호
(501호 ~ 674호)



1996. 9.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



합본 VI 호 (501호 ~ 674호)

인권정보자료실
R1.1.6

인권운동사랑방



였다. Rajamony Venn(인도)이 보고관 이었다.

1996년 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알제리아, 앙골라,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방글라데쉬, 벨라루스, 베닌, 부탄, 브라질, 불가리아, 카메룬, 캐나다, 칠레, 중국, 콜롬비아, 코스타이보리, 쿠바, 덴마크, 도미니카 공화국, 에쿠아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에디오피아, 프랑스, 가봉, 독일, 기니,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레이시아, 말리, 마우리타니아, 멕시코, 네팔, 네덜란드, 니카라과,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한국, 러시아 연방, 스리랑카, 우간다,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공동번역=한국국제문제연구회·인권운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

95년 10월

(제501호 - 제515호)

오늘 4면 발행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국회위증죄 국회고발없어도 기소 가능 민변, 검찰 5.18 위증 불기소 결정 반박

최근 검찰이 국회의 고발 없이는 국회위증죄를 수사할 수 없다고 결정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고영구, 민변)은 10일 반박 의견서를 서울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민변은 "국회에서의 위증은 국민의 주권 및 알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행위이고, 삼권분립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삼권분립을 근거로 국회 고발없이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는 자가당착"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국회 위증죄를 국회의 자율권에 맡기는 것은 정치적 논리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관하고 범죄를 용인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주장했다. 친고죄인 형법상의 간통죄, 명예훼손죄 등은 모두 '고소가 있어야만 논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다. 이에 비해 '국회에서의 증인·감정에 관한 법률'에는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음으로 국회의 고발을 공소제기 요건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민변은 법원에서 위증한 경우 재판부의 고발이 없어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듯이 국회에서 위증한 경우도 국회의장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요건이 갖추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검찰의 논리를 반박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위증하는 것이 법원에서 위증하는 것보다 중벌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국회에서 위증이 국민의 알 권리와 국가입법권을 침해하는 국민 전체에 대한 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변은 "5.18 관련 국회 위증자들에 대한 혐의를 가려 즉시 기소할 것"을 촉구했다.

민변은 지난 7월 21일 서울지방검찰청에 전두환씨등 5.18 관련자 7명이 88, 89년 국회 5공특위와 광주특위 증언에서 위증을 했다며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주 검찰은 한때 전씨등에 대한 수사를

검토하였으나, 민자당의 반대에 부딪쳐 국회의 고발 없이는 수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최근 정리했다.

여성고용할당제 기피 세추위안에 여연 반발

「세계화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이홍구 등 2명, 세추위)는 9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을 확정했다. 세추위는 여성의 공직 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해 5, 7급 공무원과 공기업 채용시 여성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안 외에도 △여성발전기본법(가칭) 제정 △민간참여 보육시설 확대 △학교급식 확대 △방과후 아동지도제도 도입 △출산휴가급여 사회보험 분담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이미경 등 2명, 여연)은 10일, 세추위의 방안에 대해 "여성가산점제도는 열등한 성에 대한 특혜 조치라는 측면을 포함하고 있어 불평등 이념의 유포에 일조를 가한다"며 일정부율의 고용할당제 방식을 주장했다. 또 공동육아협동조합을 지원한다는 방침에서 "그 범위가 운영비의 지원이 누락되어 기존의 한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시설의 종류에 관계없이 보육비용의 공정성을 기하는 아동중심의 비용보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쇠파이프 구속 학생 구속적부심서 석방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 3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종로3가에서 있었던 5.18집회에 참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된 윤진영(동국대 공과대 2년)씨를 10일 "계속 구속할 이유가 없다"며 석방했다. 윤씨는 집회에서 쇠파이프를 들고 있던 것이 경찰의 사진에 확인되어 구속되었다. 집회현장에서 연행, 경찰에 사진이 찍혀 구속된 학생이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방위비 삭감 운동 전개
국회의원에 엽서 보내기

「방위비삭감을 위한 연대모임」(연대모임)은 국방예산안이 심의되는 정기국회 기간동안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방위비 증액 반대 의지를 전하는 엽서 보내기 운동을 펼친다. 연대모임은 엽서에서 방위비 증액을 줄이고 사회복지 분야의 재정 증액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오는 13일에는 발대식을 갖고 거리홍보전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연대모임은 지난 7월 재정경제원(재정원) 장관에게 96년 국방예산편성에 관한 건의문을 보내 지난 9월 답변을 받았다. 재정원은 답변서에서 "북한의 근본적인 체제변화가 없고 군사적 위협도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위비는 계속 지원돼야 한다"며 96년에 10.7% 증가되는 방위비는 군인복지분야의 확대를 위해 쓰여질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모임은 재정원의 답변에 대해 "군인처우개선은 예년과 비슷한 11.8%가 증가하고(94년 11.7%, 95년 11.5%) 전력증강비는 7.4%(94년 4.2%, 95년 6.2%)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방위비 증가율을 높인 것이 전력증강에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또한 "방위예산을 4년만에 두 자리 수나 증가시킨 것은 충선을 앞둔 김영삼대통령의 기득권 세력을 위한 인기성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오늘 5백호 특집
4면 발행

<인권하루소식> 5백호 발간 기념 좌담/인권과 인권운동의 현실을 진단한다①

본질적 개선 외면 인권현실 후진성 담보

사회: 박노현 (방송대 법학과교수)

토론자:

김형태(변호사, 천주교인권위원장)
조홍식(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래군(<인권하루소식> 편집인)

일시: 95년 10월9일(월) 오후1시
장소: 기독교회관 귀빈레스토랑

사회자: 인권하루소식의 지령 5백호를 맞이해서 한국의 인권 및 인권운동의 현황을 진단하고 나아가 방향을 모색하는 좌담회를 갖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마침 김영삼 정권 후반기 초입에 들어가 있는 시점이기도 해서 문민정부 전반기의 인권현실을 개관하기에 매우 적절한 때인 것 같습니다. 김영삼정권이 들어서면서 누구라 할 것 없이 과거의 극심한 인권문제를 시원스레 해결해 줄 것과 반인권적 법제, 기구를 전면 혁파하여 인권신장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기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경과를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기대들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는지 한 번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선 공안인권과 노동인권 그리고 사회복지인권 분야를 살펴보고 나서 다른 인권영역으로 나가기로 하죠. 공안인권에 대해서는 박래군씨가 말씀해 주시지요.

94년 시국사법 93년에 비해 3배 증가
박래군: 우선 최근의 국감자료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93년도에는 시국관련 구속자 수가 그 전해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는데 94년도에는 93년의 3배가 넘는 사람이 구속된 점을 말씀드리고 싶군요. 특히, 지금의 양상을 보면 과거와 같이 조직사건을 터뜨리기보다 과거의 활동을 문제삼아서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 사는 사람까지 구속시키는 게 특징입니다. 그 결과 집행유예로 나올 것이 뻔한 사건을 갖고 언론을 통해 크게 부풀려 보도하게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서 공안사건 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구속자도 알게 모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보안법

관련으로 구속되는 비율이 과거에는 30%였다면 지금은 60%-70%선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라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양심수를 양산하는 정치적 탄압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이러한 측면이 더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김정권 인권정책 지나치게 즉흥적

사회자: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공안인권 분야에서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는 평가인 듯합니다. 노동인권의 경우 어떻습니까?

김형태: 저는 우선 김영삼 정권 하의 인권수준이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대통령 개인의 능력수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기 보다는 대통령 개인의 인권 의식에 따라서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김영삼 정권의 특징이 아닌가 합니다. 과거에는 정권이 분명히 자본의 쪽에 섰는지 군부독재를 했는지 하는 식으로 인권이 유린될 때 뚜렷한 제도적 측면을 갖고 있었는데 비해 지금은 그것도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야말로 개인적이고 즉흥적인 측면이 있는 듯하고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인권수준은 대통령의 수준이라고 한마디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통신 사태에서도 보았듯이 국가전복이라는 개념을 일반인은 생각할 수도 없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노동쟁의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때 국가전복주의 운운하며 탄압을 지시한 것은 단적으로 대통령의 수준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합니다.

김영삼정권이 들어서면서 특히 노동 쪽과 관련해서 제가 불 때는 이른 혼란상태가 인권운동의 활성화를 저해한 측면도 있습니다. 가령, 그전까지는 예를 들면 계급적 관점 같은 것이 뚜렷하게 존재했기 때문에 그레도 제 목소리를 뚜렷하게 낼 수가 있었는데 반해 그게 허물어지면서 구체적으로 그림 무엇으로 노동인권을 주장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혼란스럽게 제기되었다고 봅니다. 한편,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이나 경제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

고 그 결과 노동운동의 질적, 양적 변화가 불가피하게 된 점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노동운동을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실득력 있는 이론을 제시할 필요가 더욱 커진 그런 상황에도 조금은 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노동인권을 살펴보면 예전의 군사독재시절부터 제기되어 온 제3차개입금지나 복수노조금지문제등 노동3권의 과제도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만, 민주노총이 곧 출범을 앞두고 있고 그에 따라 노동조합조직을 전체적으로 산별 쪽으로 바꿔보자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점은 가장 큰 틀에서 발전하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태까지는 완전히 개별기업노조이다 보니 많은 한계가 있었지만 산별노조화라는 구체적인 줄거리를 잡음으로 해서 새로운 전망과 희망이 보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동3권·산재등 노동문제 산적

노동인권 쪽에서는 노동3권 외에도 구체적 피해를 받는 산업재해가 크게 문제가 됐는데 약간의 제도적 개선이 없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산재발생율이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엄청난 산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산재를 막는 방법들이 불모지로 남아 있던 말이죠. 이런 해묵은 문제들 말고도 외국인노동자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미 외국인노동자가 10만명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것을 눈감을 수 있는 현실이 아니지요. 이 문제는 우리 노동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구요. 그런 측면에서 노동력의 국제적인 이동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겠는데 전반적으로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가 아닌가 합니다. (다음 쪽에 이어짐)

개인적이고 즉흥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인권수준은 대통령의 인권수준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인권하루소식> 5백호 발간 기념 좌담/인권과 인권운동의 현실을 진단한다①

사회자: 노동인권에 있어서도 노동악법개정에 실패함으로써 법제도적 차원에서는 어떠한 진전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노동악법 집행이 완화되었는가 하면 한통사태등에서 드러났듯이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 같군요.

문민정부 들어서도 우리의 현실은 국제기준에 맞춰 노동인권을 보장하는 데 바빴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종 특별입법을 통한 근로조건개악 움직임을 막기에 급급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대도 약간의 성과가 있었던 데 반해 아마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상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여 광범위한 사회적 각성을 이뤄내고 약간의 제도적 개선을 생취해낸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김변호사님 말씀대로 민주노총의 출범으로 노동인권의 향상을 위한 주체적 조건을 어느 정도 형성시켜 가는 와중에 있다는 것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동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노동능력을 상실한 결과 사회복지장을 요하게 된 계층의 인권문제, 곧 사회복지 인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아볼까요. 조홍식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개선 없는 복지, 말의 전치만 무성

조홍식: 어느 면에서 사회복지 분야는 노동분야보다도 더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김영삼정권이 초기부터 내세운 것이 신경경제정책이었거든요. 자본의 논리에 충실한 신경경제정책을 갖고 출발했기 때문에 김영삼정권은 처음부터 노동과 복지, 분배 차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었고, 가질래야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사회복지에 관한 한 김정권의 특징은 명목적으로는 관심이 있는 듯이 말의 잔치를 벌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혜택이라든가 법적장치라든가 예산투입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군사정권 때보다도 못한 면도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일반 노인, 장애인, 영유아, 편모자등 여러 소외 계층, 그리고 주거문제, 수용시설 문제등등에 대해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군사정권에서 해왔던 것들을 그대로 지속하고 있을 뿐입니다. 말로만 세계화니 삶의 질이니 하며 떠들 뿐 실질적인 혜택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권중심으로 정책기조를 바꾸고 군축

으로 재원을 충당하지 못하는 이상 사회권에서의 실질적 진전은 기대하기 매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자: 행정권의 경제정책기조인 신경경제정책이란 것이 외형성장을 제일로 아는 자본의 논리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인권이 과거 개발독재시대나 마찬가지로 찬밥신세일 수 밖에 없다는 구조를 지적해 주셨 습니다. 지금까지 공안인권, 노동인권, 사회복지인권을 살펴본 결과 부분적으로 약간의 개량적인 조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노동과 복지쪽에서는 고용보험이 금년 7월1일부터 실행에 들어가고 남녀고용평등법이 약간 손질되었다든가, 국보법과 관련하여 몇몇 전향적 판결이 나오고 비전향장기수 몇분이 지난 8.15 대사면 때 출소를 하는 등의 소소한 변화는 있었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군사개발독재시대의 인권억압 논리, 제도, 관행이 별로 바뀌지 않고 힘을 발휘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점에서 관심을 이러한 인권현실에 책임있는 당사자의 하나인 사법기구로 돌려볼까요?

사법 민주화 외면, 인권개선 막아

김형태: 인권을 직접 다루는 국가기 구들이 경찰, 검찰, 법원과 재야법조인 들인데 이들 영역에서 개혁이 없을 경우 시민단체들이 인권보장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법기구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 실제로 김영삼 정권이 들어선 이래 이에 대한 개혁요 구가 표면화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사법개혁시도는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한 채, 그것도 일부 몇사람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내용과 방식 모두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내용을 보면 국민들이 자신에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호소할 수 있는 법원 쪽에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대폭적인 인원충원과 시설충원을 통해서 사법서비스를 대폭 늘려야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을 도외시키고 일부 변호사들의 과다수입으로 이야기만 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재판시간 한건 처리시간이 10분에 불과한데 오는 사법상의 여러 문제점들을 충분히 대처할 수 없습

니다. 사법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판검사등 사법인력을 많이 늘려서 그들이 충분히 심리하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완전히 도외시되었던 것이죠. 다음으로 사법제도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하는 문제는 박정희 때부터 내려온 문제인데 전혀 해결이 안되고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가령, 검찰총장이 옷벗자마자 여당 국회의원으로 나선다든지,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고교후배라든지 이런 현상이 지배적인 곳에서는 무엇보다도 사법의 정치적 독립이라는 것이 사법개혁의 핵심인데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다보니 사법개혁이란 것이 우스꽝스럽게도 로스쿨 운영을 둘러싼 교수, 변호사, 대법원 사이의 다툼 차원으로 격화된 것이죠. 인권과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법기구개혁, 특히 검찰과 법원의 독립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 실질적 토론도 하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되다가 그나마 용두사미로 끝날 조짐을 보이고 있으니 나중에 이 의제를 어떻게 다시 꺼낼 수 있을지 갑갑하기조차 합니다. 사법의 민주화라고 하는 부분이 김영삼정권 하에서 인권회복을 위한 중요한 변수였는데 무산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자: 인권의 관점에서 사법기구 개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검찰 및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 충분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봉사자의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사법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데 이와 같은 과제들이 사법개혁의 논의과정에서 도외시됨으로써 인권개선을 위한 사법절서의 민주적 재판가능성이 좌초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에 이어짐)

인권중심으로 정책기조를 바꾸고 군축으로 재원을 충당하지 못하는 이상 사회권에서의 실질적 진전은 기대하기 매우 힘들다

<인권하루소식> 5백호 발간 기념 좌담/인권과 인권운동의 현실을 진단한다①

이렇게 보면 김영삼정권에서 인권이 사법적 방식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 역시 매우 희박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인권현황을 살펴보기로 하지요. 행정인권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행정-분절적 개선없이 최저수준 유지

박래군: 행정문제는 행정권 들어와서 행정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는 외형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행정법은 불명확개념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 마구잡이 재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뚜렷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지요. 특히 행정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어온 교도소장의 재량이 개정 행정법에서도 전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열, 집전, 청원등 여러 면에서 제법 발전된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한데도 교도소장의 재량이라는 것을 달아놓아서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행정수준은 생활수준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최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행형에 관한 국제인권기준과는 거리가 멀고 행형을 개선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도 없는 형편입니다. 이번 박용길장로님의 경우를 보면 10년전이나 지금이나 하도 개선되지 않았구나 하는 점을 느끼게 됩니다. 고령자에 대한 배려는 물론 병자에 대한 배려도 없습니다. 의료시설이나 병사도 없는 상황에서 독방에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말미암아 정치범들 뿐 아니라 일반수들이 당하는 고통까지 감안하면 행형이야말로 인권의 측면에서 다뤄져야 할 분야라는 생각입니다.

사회자: 양심수들은 몇몇해서, 일반수들은 창피해서 행정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결과 이른바 특별권력관계를 빌미로 행정편의와 규율을 앞세운 인권침해가 일상화된 곳이 감옥이 아닌가 싶습니다. 행정개선을 위한 인권적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인권하루소식이 특히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인권운동의 대중성 확보를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할 듯합니다. 또 다른 대중적 주제인 여성인권은 요즘 어떻습니까?

김형태: 여성인권에 관해서는 최근의 북경여성대회를 계기로 약간이나

마 대중적 인식이 제고된 측면이 있습니다.

북경여성대회 계기로 여성인권 제고

그러나 가장 널리 알려진 사건은 역시 성희롱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성희롱 사건의 경우 항소심 판결로만 보면 우리가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판단할 때 성희롱이라고 보는 것을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나쁜 선례를 남긴 측면도 없지 않지만 이 사건을 통해 성희롱을 인권차원의 문제로 끌어올린 점은 나름대로 의의가 있지 않으나 싶습니다.

행형과 관련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제주지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재심청구를 위해 변호사가 만나려했고 본인이나 가족도 재심을 청구할 의사가 있는데도 변호사 접견을 허락치 않았습니까. 세상에 21세기를 요양에 두고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 교도소를 다니면서 만나려고 해도 만나게 해주질 않습니다. 본인은 재심청구를 하려 하고 있는데도 '본인이 그런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만나게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듯 가장 기본적인 권리행사마저 박탈하는 현행 행형제도도 정말 원시시대에 있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회자: 정말 기가 막힌 얘기들입니다. 그 밖에도 무주택세입자나 노점상 등의 인권상황도 지나칠 수 없는데요.

철거현장 원시적 폭력 난무

박래군: 최근 철거현장에서 나타나는 인권상황은 심각합니다. 언론에서도 별로 보도가 없지만 올해에도 봉천동 철거현장에서 철거용역강제들에 의해 성폭행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정작 그 피해자인 전철순씨는 법정 피고인식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지난 4일에는 변3동에서 대학생 옷을 벗겨주고가다 학생들이 항의하자 경찰이 총을 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들은 철거장폐들의 행패에 대해서는 수사도 하지 않고 편들어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 중산층 끌어안기의 하나로 더 두드러지기 쉬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듯 인권보다는 물권을 옹호하는데 급급한 것이 김영삼정권의 일반적인 인권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사회자: 사실 몇개월 전에 장애인노점상이 강제철거에 항의하며 자살을 한 사건은 여러 모로 현재의 인권상황을 웅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통신 서비스와 지면 혁신으로 보답하겠습니다.

5백호 동안 우리는 수많은 인권피해자들을 만났고, 인권침해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는 평화의 날, 더 이상 <인권하루소식>이 필요없는 날이 오기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러기 2년여, 아직은 <인권하루소식>이 달려가야 할 인권침해의 현장도, 세상에 알려야 할 일도 너무 많습니다. 매일처럼 팩스신문으로 만들어 내는 이 일이 힘들고 벅차지만, 지금도 기본권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인권피해자들의 고통이 있기에 <인권하루소식>은 쉬임없이 달려가겠습니다.

11월부터 <인권하루소식>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 <인권하루소식>의 통신 서비스 시대 개막

11월 드디어 <인권하루소식>을 통신으로 받아보고, 검색할 수 있게 됩니다. 하이텔을 통해 제공되는 <인권하루소식>은 준비호부터 현재의 모든 기사를 주제별, 시기별로 검색할 수 있으며, 제목과 본문 검색이 모두 가능하게 됩니다.

■ 심층적인 사건 분석과 전망 기사 강화

인권상식관을 매주 1회 개설하여 인권의 개념과 용어, 주요 인권문제에 대해 간략한 해설을 합니다. 또한, 깊이 있는 이해와 분석, 전망을 찾을 수 있도록 인권전문가들의 컬럼을 매주 1회 게재합니다. 이와 더불어 해설기사와 충실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겠습니다.

오늘 4면 발행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노태우씨 망언에 분노·규탄
학살 면죄부 현 정권에도 책임

11일 발간된 <뉴스플러스>에 노태우 전대통령이 6일 경북고 동창모임인 경신회에서 "수천만 명이 희생을 당하고 엄청난 피를 흘린 중국문화대혁명에 비하면 광주사태는 아무 것도 아니다", "더 이상 역사의 뒤안길에서 고개를 숙이고 꾸조려 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는 등의 발언을 해 각계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 발언은 5.18특별법이 정기국회의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5.18 서명교수모임(공동대표 김삼곤등)은 11일 성명을 발표,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해야 마땅한 노 전대통령 등 쿠데타 및 학살주범들이 적반하장격으로 오만분손하고 뽕뽕스럽게 나오는 것을 볼 때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이들을 끝까지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5.18 관련자들에 대한 정권적 차원의 비호를 즉각 중단할 것과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에 필요한 특별법 제정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도 "노태우씨의 발언에 따라자면, 우리 국민은 '겨우 수백명'에 '죽지 않았고, 고문과 은갖 인권유린으로 얼룩진 80년대를 살아 남았음'을 다 행으로 여기고 그들에게 감

사해야 하는가"라며 "노태우씨 개인을 탓하기 보다는 국민을 업신여기는 작태를 자행하도록 만든 현 정권의 무능에 대해 항의한다"고 말했다.

5.18국민위, 5.18 광주전남공대위, 5.18특별법 제정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전국연합 등도 "학살의 주범인 노태우씨가 이러한 발언을 할 수 있는 동인은 김영삼 정부의 불철저한 역사청산 작업 때문"이라며 "이는 광주민중항쟁의 계승자임을 자처하는 김영삼 정부가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을 회피하고 있고 오히려 학살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발행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용서와 화해는 명확한 진상이 규명되고 광주 시민의 명예가 회복된 가운데 피해 당사자들이 고려할 수 있는 문제"라며 "노태우씨는 무도한 망언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자숙하기"를 권고했다.

"서울대 총학생회"(총학생회장 김태식)도 성명을 발표하고, 노씨의 발언은 "5.18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망언"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5.18과 관련한 정확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없이 이 문제를 정당화 정략적으로 끌고 내려가는 정치세력의 자성을 촉구하며 민자당에 의해 특별법안이 부결될 경우 정권

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창희 교수 "전형적 간첩" 검찰, 무기징역 구형

지난 4월 간첩혐의로 구속된 박창희(한국의국어대 사학과, 63)교수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되었다.

서울지검 공안1부 이기범 검사는 11일 "박교수는 일본을 오가며 북한측과 여러 차례 접촉하여 공작금을 받고 남한에 조직을 확대하기 위해 제자, 동료 등을 포섭하려는 등 북한의 대남적화적 통일전술을 그대로 따랐다"며 국가보안법상의 회합통신등을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 합의2부(재판장 서재현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번 공판에서 검찰은 "북한공작원과 접촉하는 등의 행위는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한 대표적 학원침투 교수 간첩사건"이라며 "이러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중형을 구형한

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승헌 변호사는 "최근 남북한 유엔동시 가입, 정부의 대북정책 등을 볼 때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해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보안법 적용의 이중성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며 "무기형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20일 오전 11시 서울지법 311호에서 열린다.

5.18 특별법 제정 선언 언론계 6천4백여명

5.18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파 선언이 언론계에도 확산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등 언론 3단체는 11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7개 언론사 6천4백50인이 서명한 '학살자 처벌요구 언론계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에서 언론인들은 "지난 15년 동안 언론이 5월 학살 문제를 지면과 화면에서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사실을 국민 앞에 사과한다"며 "언론사 간부들과 경영진들도 이같은 우리의 뜻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인권하루소식 5백호 발간기념 독자 사은행사>

- 일시: 10월14일(토) 오후 4시
- 장소: 알펜호프 (숙대입구 전철역 하차, 전화 716-2244)
- 출연: 가수 원창연 (가곡 「금강」 주연)
- 문의: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홍보실(전화: 715-9185)
- * 주점과 서화전 수입금 전액은 인권정보자료실 건립기금으로 쓰여집니다.

<인권하루소식> 5백호 발간 기념 좌담/인권과 인권운동의 현실을 진단한다②

인권운동, 현장성 강화 절실하다

사회: 광노현 (방송대 법학과교수)

토론자:

김형태(변호사, 천주교인권위원장)

조홍식(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래군(<인권하루소식> 편집인)

일시: 95년 10월9일(월) 오후1시

장소: 기독교회관 귀빈레스토랑

위기의식 극복, 인권영역 확대 의미
사회자: 그러면 이상으로 미흡하나 마 인권현실에 대한 진단을 마치고 이제 인권운동의 현실을 짚어볼까요. 우선 종합적인 진단을 김형태변호사께서 내려주시지요.

김형태: 인권상황의 담보와 달리 인권운동은 보기에 따라서는 발전한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김영삼정권 초기만 해도 인권운동의 위기를 말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위기의식은 어느 정도 극복된 상태입니다. 오히려 지난 몇년간 인권운동은 외국인노동자, 사회복지, 주한미군범죄등의 문제로 영역을 넓혀가면서 제법 위치를 잡아가며 분화되는 단계에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권운동은 특히 유엔이 최근들어 매년 개최하고 있는 인권관련 대규모 국제회의 및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정부보고서 제출에 적극 대처하면서 새로운 계기를 맞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제회의의 참가로 국제연대의 기틀을 다지고 인권운동차원의 반박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함으로써 인권현황을 전면적으로 점검, 비판, 전망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지요. 생각해 보면 인권하루소식이 작지만 고정적인 독자층을 확보한 채 벌써 지령 5백호를 맞고 있다는 사실도 인권운동의 성과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인권이란 말이 과거에는 일부 양심수를 연상시키는 매우 한정적 의미로 쓰여왔다면 이제는 훨씬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가치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는 점도 인권운동의 성과로 지적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국제인권조약 및 기구의 적극적 활용 및 국제인권회의의 적극적 참여로 대표되는 국제인권운동의 활성화

현상이 반드시 바람직하지만은 않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하겠습니다. 정권도 인권을 국내적 현상이 아닌 외교적 현상으로도 인식하고 있는 판에 인권운동마저 그러한 경향을 따라가게 되면 큰 일이거든요.

사회자: 지난 2년여동안 인권운동에서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역시 리우환경회의, 비엔나 인권회의, 카이로 인구회의, 코펜하겐 사회개발회의, 북경 여성회의, 이스탄불 주거권회의등 유엔주최 인권관련 국제회의들에 대한 대규모 참여와 국제인권조약들에 따른 반박보고서 작성운동을 통해 인권운동의 활성화와 연대화를 이뤄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밖에도 동티모르독립운동가나 아르헨티나 오월광장 어머니회를 초청하는등 적극적 국제연대에 뛰어든 것도 특기할 만합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이야기하신 것과 같이 국내인권상황에 별 진전이 없는 가운데서 이런 모습만 두드러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국내인권운동이 전략적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채택한 그런 면도 있지만 국내인권운동이 과연 이렇게 국제화에 열을 쏟아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인권이 국제적 관심사가 되었다고 해서 국내인권문제를 외국에 나가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인권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국제화보다는 인권피해 현장에의 밀착화가 더욱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안인권운동분야에서의 성과와 과제를 알아볼까요.

인권단체 집요한 뒷힘 돋보여

박래군: 공안인권운동과 관련해서는 서로 다른 두가지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전에 양심수석방운동이 상당히 큰 호응을 얻고 전국민적이고 정치적인 관심사로 떠올라 일정정도 정권에 압력을 행사했던 반면 김영삼정권 들어와서는 이런 분위기가 많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여론과 언론의 주요 관심사에서 멀어진 채 작은 목소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전에 일각에서만 주장하던 것들이 이제 널리 확산되어 무리없이 인권문제

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수 문제는 80년대 말에서 90년초에 겨우 조심스럽게 얘기하기 시작한 것인데 요즘 장기수 석방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공안인권운동분야에서는 특히 민가협외 주요집회가 1백회 이상 진행되고 있는 점이나 천주교인권위에서 지속적으로 장기수 재심청구운동을 벌이고 있는 등 과거에 보지 못했던 집요성이 돋보입니다. 그동안 인권운동단체들의 큰 약점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 집요하게 몰고 들어지는 뒷힘이 부족하다는 점이 꼽혔는데 이 점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단체간 연대의식이 나름대로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힘있게 공동대처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뭔가 하긴 하는데 필요한 후속작업등을 진행하지 못해 자꾸 이벤트성으로 끝나버리니까 별다른 반향을 일으키지 못한 채 정권에 밀리게 되는 현상이 반복되는데 이런 것들이 극복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자: 지난 몇해간 인권운동의 관심사를 자유권에서 사회권에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런대로 설득력을 갖게 되었고, 특히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기구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국내적으로도 국민생활취급선 확보운동을 전개하고 공익소송을 통해 사법적 대응을 모색하는등 비교적 활발했던 것 같은데 그동안 활동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뒷쪽에 이어짐)

지난 몇년간 인권운동은 외국인노동자, 사회복지, 주한미군범죄 등의 문제로 영역을 넓혀가면서 제법 위치를 잡아 분화되는 단계에도 달했다.

<인권하루소식> 5백호 발간 기념 좌담/인권과 인권운동의 현실을 진단한다②

정치적·시민적 권리가 사회권 없다
조홍식: 저는 두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사회권운동이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기는 하였지만 그 제도적 전제가 결여된 상태라 실제적 효과는 별로 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인권운동이라고 하면 자유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자유권마저 유린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것이지요. 잘 알려진 마살의 논리대로라면 자유권에서 좀더 발전해서 참정권을 문제삼고 더 발전하면 사회권을 문제삼게 되는데 우리는 서양에서 1백년 동안 진행된 과정을 한꺼번에 압축적으로 진행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요즘에는 사회권이 인권문제의 중심이 된 감마저 있는데 자유권의 기본적인 것조차 안되고 있는 마당에 마치 다 된듯이 착각을 일으키는 운동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가지들을 함께 추구하되 사회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자유권과 참정권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없다는 인식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을 볼때 우선 자유권과 참정권 중심으로 인권운동을 한번 제대로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권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확보되어야 하고,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특별법과 같은 것도 필요한만큼 자유권이나 참정권과 같은 바탕을 튼튼히 확보할 필요가 있거든요. 다음으로 사회권분야 인권운동의 내용을 보면 특히 생활보호나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종이 위의 명목적 권리에서 실제적 권리로 격상시키려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한달에 10만원도 안되는 생활보호수당에 대해 위헌소송을 내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운동이 활발히 전개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권이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축을 통한 평화배당금을 확보하는 것, 민주적 산별노조가 건설되는 것, 나아가서 진보적 정당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치를·시민적 권리가 사회권 없다
조홍식: 저는 두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사회권운동이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기는 하였지만 그 제도적 전제가 결여된 상태라 실제적 효과는 별로 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인권운동이라고 하면 자유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자유권마저 유린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것이지요. 잘 알려진 마살의 논리대로라면 자유권에서 좀더 발전해서 참정권을 문제삼고 더 발전하면 사회권을 문제삼게 되는데 우리는 서양에서 1백년 동안 진행된 과정을 한꺼번에 압축적으로 진행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요즘에는 사회권이 인권문제의 중심이 된 감마저 있는데 자유권의 기본적인 것조차 안되고 있는 마당에 마치 다 된듯이 착각을 일으키는 운동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가지들을 함께 추구하되 사회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자유권과 참정권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없다는 인식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을 볼때 우선 자유권과 참정권 중심으로 인권운동을 한번 제대로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권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확보되어야 하고,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특별법과 같은 것도 필요한만큼 자유권이나 참정권과 같은 바탕을 튼튼히 확보할 필요가 있거든요. 다음으로 사회권분야 인권운동의 내용을 보면 특히 생활보호나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종이 위의 명목적 권리에서 실제적 권리로 격상시키려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한달에 10만원도 안되는 생활보호수당에 대해 위헌소송을 내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운동이 활발히 전개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권이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축을 통한 평화배당금을 확보하는 것, 민주적 산별노조가 건설되는 것, 나아가서 진보적 정당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반박보고서에 이은 후속행동 필요
김형태: 반박보고서의 문제는 보고서들을 내고 관련유엔기관에서 여러차례 권고가 왔는데 제3차가입금지과 관련된 지난번 손종규씨 사건의 경우 UN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했음에도 정부에서는 전혀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 이상형씨의 경우에도 유엔인권위원회로부터 자의적 구금이라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접견조차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박보고서 작성과정을 통해 인권단체들의 연대가 자연스레 이루어지고 국내인권상황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지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긴 했는데 정작 정부에서 전혀 탄소리를 하고 있을때 마땅한 후속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한계라고 봅니다.

사회자: 지금 인권운동의 현황을 살펴보면 인권운동도 마치 김영삼정권과 같이 국제화에 적극 동참해서 거기서 동력을 찾아보려고 한 측면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현황타파가 안된다는데 모두가 공감하는 듯합니다. 이 주제를 좀더 다뤘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번 좌담회 일정이 급박하게 잡히는 바람에 참석하신 분들이 일정 조정을 못해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정도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권운동의 방향과 관련하여 각자 한 말씀씩 자유롭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김형태: 저는 인권운동의 범주를 어디까지 뒤야할 지 아직 혼란스럽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소위 제아나 운동권의 관점으로 인권운동을 규정짓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것이 오늘날 인권운동의 현주소가 아닌가 봅니다. 구체적으로 인권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어느 범위까지인지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

태라는 거죠. 광의의 인권운동, 그러니까 제아전체를 인권운동이라고 보는 전체 하에서 이야기하면 인권운동은 김영삼정권에 들어와서 전체적인 측면이 이루어졌습니다. 인적 측면에서 국내운동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70, 80년대에 헌신적으로 투신했다가 사회전체가 최소한의 형식적인 자유주의를 갖추면서 국민들이 큰 호응을 해주지 않으니까 떠나가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단체들의 알맹이가 빠져나가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큰 단체들도 우려가 될 정도입니다. 그러면서도 인권운동이 전문화로서 가치를 쳐서 발전하긴 했는데 아직도 끝까지 몰고 들어지지 못하는 것과 단체간의 이기주의가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단기적으로는 자기 단체에 손해가 나더라도 일을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인권운동단체들이 단체이기주의를 버리는 것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국제인권운동만 해도 최근 들어서 방향정리가 되지 않으니까 모든 단체들이 너도나도 국제연대에 달려들어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권운동이 국민 속으로 다가가야

조홍식: 인권운동의 범위는 보기 나름이겠지만 앞으로 노동인권은 노동운동 쪽에서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회복지분야 중에서도 사회복지협회는 기본적으로 노동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노동운동이 맡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는 그렇지 않지요. 각 부문이 제 자리를 잡으면서 인권운동은 점점 조직된 대변인이 없는 분야로 제 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권운동이 위축되리라 보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문제가, 새로운 차별이 끊임없이 생길테니까요. (다음 쪽에 이어짐)

사회권분야 인권운동은 특히 생활보호나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종이 위의 명목적 권리에서 실제적 권리로 격상시키려는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5백호 발간 기념 좌담/인권과 인권운동의 현실을 진단한다②

다음으로 국제연대나 국제인권기구의 활용에 대해서는 제한된 범위에서 효용을 인정하되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만큼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운동이 국민 속으로 파고 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문제가 있는 곳에 찾아가 도움을 주는 열의가 필요합니다.

인권운동-사람과 정보가 필수

김형태: 저는 첫째 사람이 중요하고 다음에 정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 하나 하나가 전문가가 되어 구멍가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활동가들에게 충분한 대우를 함으로써 다른 분야로 흡수되는 우수한 인력을 끌어들이는 것도 중요 합니다. 정보의 경우에는 단순한 양적 문제가 아니라 체계화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점에서 인권운동사랑방이 인권정보자료를 운영하고 그 내용을 내실화하는 성가신 작업을 꾸준히 벌여나가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시도라고 봅니다.

박래군: 예전과 달리 인권단체의 활동범위가 좁아지고 영역의 미묘함이 있는데 이런 와중에서 모두가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이 인권교육입니다. 마침 올해부터 향후 10년은 유엔이 정한 인권교육기간인데 정부나 단체가 모두가 이를 등한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권교육에 힘을 쏟을 때 라고 봅니다.

인권운동의 생명력은 도덕성

사회자: 아쉬운대로 마무리를 지어 야겠습니다. 인권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권피해현장에서 출발하여 사법과정과 입법과정을 거치면서 의식과 제도의 개혁을 이뤄내는 총체적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인권운동의 생명력은 역시 도덕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권현장에서 인권피해자

무엇보다도 인권운동가 개개인의 정의에 대한 예리한 감수성과 불의에 대해 살아있는 분노, 그리고 다함없는 선의가 중요

와 함께 있으면서 집요한 선의로 문제를 해결해 낼 때 비로소 도덕성에 기반한 대중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사회 각부문이 제 자리를 잡으면 잡을수록 인권운동은 작은 운동이 될 수 밖에 없을 듯합니다. 그러나 인권운동이 인간성의 깊은 요청에 부응하는 이상 작더라도 반드시 사회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질 것이고 인권운동은 그런 의미에서 모든 여타 사회운동의 도덕적 기반이자 인권존중사회의 도덕적 토대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인권운동이 이러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권운동가 개개인의 정의에 대한 예리한 감수성과 불의에 대해 살아있는 분노, 그리고 다함없는 선의가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결국 이러한 도덕성의 바탕 위에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이것이 인권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닐까 합니다. 인권하루소식이 인권운동의 이러한 방향을 선도하는 기능을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좌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참석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정리: 광노현 방송대 법학과 교수)

-끝-

의보보험료 납부 거부 운동 의보국민연대, 두달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민주노총(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68개 사회단체와 5개 지역 의보연대회의가 함께 결성한 「의보보험통합일원화와 보험적용확대를 위한 범국민 연대회의」(의보국민연대)는 1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1월부터 두 달 동안 보험료 납부거부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들은 "농촌의보가 직장의보보다 1.6배나 높은데도 최근 전국 각지에서 보험료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에 대한 항의표시이자, 근본적 해결책인 의료보장제도의 전면 통합을 요구하기 위해" 보험료 납부거부운동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합의료보장법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도 표명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및 대다수의 직장의료조합에서는 법정 최고 적립금 수준인

100%를 훨씬 넘어서는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다"며 "보험급여 확대나 보험료를 경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보국민연대는 준비적립금이 100%를 넘어서는 직장의보조합의 보험료 징수가 정당인지 판단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이러한 조합의 보험료 자동징수의 중단을 요구하기 위하여 보험료 징수중단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또한, 이들은 11월부터 통합일원화를 위한 국민서명운동 전개하기로 했다.

병역특례 노동자 이중 지위 부당한 대우 철폐 요구

「민주노총준비위」, 「전국연합」 등 6개 노동·사회단체는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병역특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공청회를 가졌다.

주제발표에 나선 권규대변호사는 병역특례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특례노동자들은 노동자와 병역특례라는 이중적 지위로 인해 법적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특례노동자들 가운데는 산재가 발생해도 해고의 위협때문에 회사에 알리지도 못한 채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근로조건에 있어서 일반노동자보다 낮은 임금체계에 부당한 잔업까지 강요받고 있다고 밝혔다.

권변호사는 병역특례제도의 문제해결을 위해 △근로관계법률에 의한 근로규정 △배정인원 및 편입요원 명단 공개 △편입취소시 징집처분 개정 등을 제안했다.

한편, 병역특례제도는 70년대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방위산업체를 중심으로 자격과 기능을 갖춘 입영대상자를 채용하여 병역의무 대신 해당분야에 5년간 종사케 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80년대 들어서는 10개 업종에서 23개 업종으로 사업체 범위가 확대되고 기간은 3년으로 단축되었다. 이는 노동자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3D업종 등 중중제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것이었다. 현재 병역특례의 범주에는 전투경찰, 경비교도대,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이 속한다. 전국적으로 전문연구와 산업에 배치되어 있는 병역특례자는 모두 6천2백20여명의 70만6백90명에 달하고 있다.

500호 발간!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유아교육 정부가 책임져야

유아교육 연대회의 결성, 국회청원 등 전개키로

정부의 5세 아동 조기취학에 반대하고 유치원 공교육화를 추진하기 위한 민간단체가 결성되었다. 「전국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7개 유아교육 관련단체들은 12일 프레스센터에서 「만5세아 국민학교 입학반대 및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추진 연대회의」(유아교육연대회의)를 결성하고, 활동계획을 밝혔다.

유아교육연대회의는 결성취지문에서 "국민학교 5세 아동의 입학은 허용하는 것은 유아교육계에서 지금까지 주장해온 유치원을 국민학교등과 같이 교육기관화하는 기간학제화와 유아교육 공교육화라는 개혁안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길거리에 방치되고, 유아교육에 전문성이 없는 사실학원에 맡겨진 30만명의 만5세 유아들의 교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아교육연대회의는 5세 아동 국민학교 취학의 문제

점으로 △우수한 특수 영재아를 선발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아무런 준비가 없고 △선발제도로 인해 만4세 아동의 학원수강과 과의열풍이 불게 돼 유아교육기관 교육내용의 파행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조기입학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아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며, 현재의 열악한 국민학교 교육환경 속에서 오히려 교사들의 근무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점을 들었다.

이들은 정부가 말하는 유아교육의 기간학제화에 대해서도 "유아교육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무상의무공교육화하는 거리가 멀며, 의무교육에 소요될 교육재정 투자계획은 커녕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볼 때 오히려 의무공교육화를 호도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연대회의는 다른 나라처럼 모든 만5세아에게 무상으로 유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유아교육 의무공교육화를 추

진하고, 유아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서명운동과 국회청원, 정부기관에 편지쓰기 등의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유아교육연대회의는 지난 5월31일 정부 교육개혁위원회가 교육개혁안을 발표하고, 교육부가 '만5세아 국민학교 입학허용에 관한 교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이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활동을 해왔다 (<인권하루소식> 9월30일자 참조).

전국 백여곳에서 5.18서명운동 전개

「5.18 국민위」와 「5.18 특별법 제정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는 12일 전국의 1백여 곳에서 일제히 5.18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가두서명을 전개했다. 이날 서명에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유아교육 의무공교육화를 추

학생 1인당 직접교육비의 자원별 구성

(단위: 1천원, %)

학교 급별	공부담 공교육비	사 부 담 교육비	
		계	사부담교육비 사교육비
유치원	216.3(10.8)	1,804.4	553.5(27.5) 1,240.9(61.7)
공립	795.1(38.0)	1,295.5	119.6(5.7) 1,175.9(56.3)
사립	51.7(2.6)	1,936.3	676.9(34.0) 1,259.4(63.4)
국민학교	1,181.3(46.3)	1,369.0	18.9(0.8) 1,350.1(52.9)
중학교	855.8(31.2)	1,890.6	358.4(13.0) 1,532.2(55.8)
고등학교	908.3(29.8)	2,144.8	697.5(22.8) 1,447.3(47.4)

<자료제공: 한국교육개발원 1994년>

가해 서울에서만도 서울역 광장을 비롯한 11곳에서 서명운동을 벌였다. 지방에서도 수원, 청주, 전주, 부산, 대구 등에서 일제히 서명운동을 펼쳤다.

민변, 최초로 가두시위 갖기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 민변)은 16일 경오 대검찰청 앞에서 거리시위를 하고, 5.18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민변 소속 변호사 1백여명은 「서울 지방변호사회」, 서초법원에 서 교대전철역을 거쳐 대검찰청까지 행정을 한다. 이번 시위는 시국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변호사들이 집단적인 시위를 벌인다는 점에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충무로 폭행미군 첫공판

충무로 미군 폭행사건 1차 공판이 12일 서울형사지법 7단독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으로 나온 폴리나 프랭크씨는 자신의 모든 폭행사실을 부인하며 오히려 한국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진술했다.

2차공판은 11월3일 오후 2시 421호실에서 열리며 조정국씨등 당시 사건 목격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광 고>

이번주 '인권활동가들 위한 강좌'는 500호 사은행사로 쉽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함께길을 통합교육 한마당 스케치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준석이는 정신지체아들이 다니는 정진학교 4학년 학생이다. 누군가 잡아 주지 않으면 걷기 힘들 정도의 중증장애를 갖고 있어 항상 엄마와 다녀야 한다. 그런 준석이의 엄마가 아닌 친구들과 동물원에 왔다. 오래간만에 외출을 한 준석에게는 모든 것이 흥미롭다. 엄마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준석에게 오늘 만난 친구들은 매우 특별하다. 가끔 동네 골목길에서 마주친 아이들은 준석이의 뒤틀린 몸과 얼굴을 보고 놀리거나 피했는데 이 친구들은 다르다. 동물원도 같이 가고 밥도 같이 먹고, 그림도 함께 그리는 정말 친구다. 동물원 구석구석을 누비며 이사람 저사람 톡톡 건드려 보다가도, 옆친구의 손을 꼭 잡아보는 준석에게 오늘은 최고의 날인 것 같다.

12일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장애인아동과 일반아동 2백10명이 참여한 '함께길을 통합교육 한마당'이 열렸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주최로 서울방일국민학교와 정진학교 학생이 참가해 3인 1조로 동물원 견학을 함께 하는 것이다.

지난 4월에 열린 '어깨동무 놀이 한마당'에 이어 두 번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현장학습을 통한 통합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의 장애인동분리교육보다는 통합교육이 바람직하며, 이 접근을 위한 한 방편으로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공주사대 특수교육학과 김삼섭 교수는 통합교육을 위해 장애인아동과 일반아동이 함께하는 기회를 점차 늘려가는 방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 통합과정의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님을 이날 현장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우락부락한 얼굴에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장애인아동을 보고 무서워 우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낯선 얼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엄마를 찾는 아이도 있었다. 정말 '저래서 동물원 구경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는 생각이 들었다. 장애인아동을 따라온 부모들도 일반아동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더 큰 상처를 받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처음에 서먹해 하던 것도 잠깐. 동물원 구경을 하는 동안 아이들은 가을하

늘처럼 맑아져 서로 쟁겨주며 꼭 붙어 다니는 것이다. 같이 다니는 동안 장애를 가진 친구도 자신과 같이 웃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 무서움이나 이상함도 금방 사라져 버린 모양이다.

장애인아동들도 더이상 엄마나 선생님을 찾으며 뒤돌아보지 않았다. 아이들에게는 짧은 경험이

있지만 이다음에 어른이 되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덜 하지 않을까. 적어도 장애인들이 자신과 아주 다른 세계의 사람이 아님을 알게 되었으니 말이다.

장애아동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소외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이번 행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행사와 동정

- 「푸른사람들」 창립대회
 - 일시:14일(토) 오후6시 · 장소:종로4가 종로성당
 - 문의:749-4221
- 김영삼정권 실정 규탄과 민주개혁 정취를 위한 국민대회
 - 일시:14일(토) 오후3시
 - 장소: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 주최:5.18국민위원회, 전국연합, 민주노총 등 (☎ 747-4364)
- 5.18 진상규명과 특별법제정 촉구를 위한 거리시위 및 가두서명
 - 일시:16일(월) 12시
 - 장소: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법관 앞
 - 주최: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522-7284)
- 5.18 학살자 처벌과 특별법 제정 촉구 여성대회
 - 일시:17(화) 오전12시
 - 장소:여의도 국회 앞
 - 주최:여연, 이대민동, 여성사회연구회 (☎ 274-2883)
- 심포지엄-고용보험법과 여성의 고용안정
 - 일시:18(수) 오후2시 · 장소:기독교연합회관 4층
 - 주제발표:고용보험법 제정 배경 및 주요내용(이철수)/고용보험법 중 여성관련 조항의 활용방안(서명선)
 - 주최:여연, 여성노동자회, 여성민우회 등 (☎ 274-2883)
- 「전대협동우회」 집들이
 - 일시:20일(금) 오후2시
 - 장소:신설동로터리 전대협동우회 사무실
 - 문의: 3672-1989
- 가정평화를 위한 시민한마당
 - 일시:20일(금) 오후7시
 - 장소:기독교백주년기념관
 - 주최:한국여성의 전화 (☎ 269-2964)
- 고용평등추진본부 발대식
 - 일시:21일(토) 오후3시
 - 장소:명동 YWCA 묘우당
 - 주최:여성민우회 (☎ 269-5763)
- 운영규 전국연합 공동의장 회갑연
 - 참교육의 지평을 연 교단 35년, 네 차례의 수인생활동민주화의 불꽃으로 살아온 운영규 전국연합 공동의장의 회갑연이 자서전, 회갑기념 논문집 출판기념회와 함께 15일(일) 오후3시 광주 북구청 강당(062-512-1011)에서 열린다.
-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에 최현주(26)씨가 새식구로 일하게 되었다.

인권하루소식 5백호 발간기념 독자 사은행사

- 일시: 10월14일(토) 오후 4시
- 장소: 알펜호프 (숙대입구 전철역 하차, 전화 716-2244)
- 출연: 가수 원창연 (가극 「금강」 주연) 가수 류금신
- 문의: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홍보실 (전화: 715-9185)

* 주점과 서화전 수입금 전액은 인권정보자료실 건립기금으로 쓰여집니다.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민주개혁 공동투쟁 결의 다짐

오늘 서울등 전국 5곳에서 대규모 국민대회

계야단체들이 현 정권의 총체적인 실정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갖는다. 5.18 국민위, 방송개혁국민위, 의보연대회의, 민주노총(준), 전국연합 등이 주관하고 거의 모든 사회·시민단체들이 참가하여 14일 오후 서울을 비롯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등에서 '김영삼 정권 실정 규탄과 민주개혁 정취를 위한 국민대회'를 연다.

서울의 경우 이날 오후2시30분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있을 집회에서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 △근로자 파견제 도입 및 전임자 축소 반대 △의료보험 통합일송법 개혁과 방송주권 쟁취 등 '민주적 개혁'을 다짐한다. 집회에는 약 1만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명동성당까지 행진한다. 행사위원회에 따르면, "김영삼 정권의 개혁은 실종된 지 오래고 민주생존권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각계에서 개별적

으로 진행되어 온 민주개혁 요구를 모아 공동투쟁의 단초를 만들어 연대운동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이라고 국민대회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김종태 열사 묘지 망월동 이장

80년 광주민중항쟁 직후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신촌 로타리에서 분신했던 김종태(당시 22세) 열사의 유골이 13일 오후 망월동 5.18 묘지에 묻혔다. 김씨는 80년 6월9일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독재도 부정하며 목숨을 바쳐 항거할 것"과 "유신체제를 존속시키려는 구제계 잔존세력의 어떠한 원화와 보험적용 확대 △방송법 개혁과 방송주권 쟁취 등 '민주적 개혁'을 다짐한다. 김씨는 경기도 파주군 금촌묘원에 안장되어 있었으나, 「전국민주민주족통일유가족협의회」(회장 박정기)의 주선으로 망월동 묘역에 이장하게 되었다.

학살 책임 인정 요구 전국연합, 노세 사과 논평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13일 노태우씨의 5.18관련 발언 '미안'표명에 대해 "진지한 반성의 뜻이 담기지 않은 것"이라며 "국

민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앞박한 술수"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감"이나 '미안'같은 예매한 표현으로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민우통행위"라며 "광주학살의 명백한 책임자로 국민앞에 죄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이부영 의원에 5년 구형 국보법, 집시법 등 결심

민주당 이부영최고위원(53)이 국가보안법, 집시법 위반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 받았다. 서울지검 공안2부 강익중검사는 13일 "이의원이 국가보안법, 집시법, 정간물등류에 관한 법,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이중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받았을 뿐 나머지 혐의에 대

해서는 유죄가 분명하다"고 국가보안법을 적용,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 항소3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이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탈냉전등 시대상황이 많이 달라진 만큼 분단과 대결구도 속에 만들어진 국가보안법과 집시법에 대해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새로운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특측과 연락을 취하는 과정에서 통일원과 대한적십자사측에 협조를 의뢰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통일운동을 전개한 만큼 재판부의 전향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이의원이 지난 89년 전민련 의장을 맡을 당시 국가보안법 등 4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93년 1월 대법원에서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받았을 뿐 나머지 혐의에 대

바로 오늘 오후 4시! <인권하루소식> 5백호 발간기념 독자 사은행사

- 일시: 오늘 오후 오후 4시
- 장소: 알펜호프 (숙대입구 전철역 하차, 전화 716-2244)
- 출연: 가수 원창연 (가극 「금강」 주연)
- 문의: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홍보실 (전화: 715-9185)

* 독자사은행사에 꼭 참석해 주십시오.

해외진출 한국기업 인권침해 심각하다

참여연대, 인도네시아 현지 조사결과 발표

우리나라 해외진출기업들이 현지에서 반인간적인 노동통제와 인권억압으로 가장 싫은 기업으로 손꼽혀지고 있음이 한 시민단체의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더해 한국에 진출하는 외국 인노동자들에게 대한 인권침해도 큰 문제가 되고 있어 특히 동남아 지역에서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심각하게 실추되고 있는 형편이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해외진출 기업문제 특별위원회」(위원장 신윤환, 해외진출기업특별위는)는 12일 오후 7시 한글회관에서 '한국은 과연 좋은 이웃인가'란 주제로 제1회 해외진출기업 문제 시민포럼을 열었다. 해외진출기업특별위는 지난 7월 신위원장을, 김은영 간사등을 지난 7월 3주동안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파견,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들의 문제를 조사했다. 해외기업특별위는 올해 인도네시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내년에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현지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첫 조사국으로 인도네시아를 선택한 이유는 94년 중국 진출 이전 한국의 노동집약적 자본이 최초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투자되었던 국가라는 점과 90년 이후 중소기업이 국내의 노사분규와 임금인상을 피해 진출하기 시작한 이래 많은 노사분규를 초래(93년 노사분규 3백건 중 대부분이 한국기업)하였다라는 점이었다. 이들은 한국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또는 해고자들을 면담하였고, 직접 기업 방문하기도 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약 3백50개에 달하며 주

로 제조업 분야에서도 신발, 봉제업 등의 중소기업의 자본이다.

해외진출기업특별위는 해외진출 기업의 노사갈등과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노동집약적 산업 진출에 대한 강력한 통제 △투자자 및 관리자 교육강화 △현지근로감독체계 확립 △시민단체의 감시체계 확립 대안을 제시했다.

포럼에서 보고된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한국기업이 자행하고 있는 인권침해의 실상을 소개한다.

6,70년대식 노동통제 원용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단기적인 투자 진출 동기를 가지고 있을 뿐 그 나라에 대한 문화나 전통, 언어 등을 이해하는 등 현지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 한국 기업들은 6,70년대식의 노동통제 방식을 통한 이윤의 극대화만 꾀하고 있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는 '한국적 경영방식'이란 이름으로 불리고, 노동운동의 주요한 투쟁목표로 설정되고 있다.

한국기업의 엄격한 노동통제 방식은 화장실 사용과 관련한 사례들에서 가장 극심하게 드러낸다. 화장실 이용카드를 만들어 이를 번갈아 사용하게 하는 방법이 라든가 아예 화장실 수를 적게 만들거나 일정시간 외에는 화장실을 닫아놓는 등의 수법을 써 비난을 사고 있다. 또, 대부분이 이슬람교도인 인도네시아인들의 기도시간을 통제하고 기독교식 예배를 강요하는 것도 문제다.

또, 퇴근시간에 노동자들의 몸을 수색하는 것이라든가 여성노동자에 대한 거친

말투와 심지어는 폭행을 일삼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이런 일로 인해 한번은 한국인 사장이 노동자에게 피살되는 일도 있었다.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대부분이 국내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것도 심각하다.

노조설립 원천적 봉쇄 기도에 노조를 설립하려는 노동자를 해고하고 노조 설립 자체를 막지 못하면 철저히 어용화하려 든다. 노조의 중심 인물에 대한 불법해고와 잦은 부서이동

등의 국내 기업들의 수법이 원용되고 있다. 심지어 노조의 간부가 단 하루만 결근해도 해고시켜 버린다.

거친 노무관리는 더욱 큰 문제다. 자주 때리거나 소리치르고, 한국말로 욕을 하며, 모욕적인 언행을 가리지 않는다.

'시간 훔치기'라고 현지노동자들이 말하는 수법도 많이 사용된다. 즉, 잔업수당이나 휴가수당, 최저임금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듯 한국기업들이 보이는 노동억압은 한국자본가들의 현지 사정에 대한 몰이해와 사전교육의 부재도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70년대식 노동통제로
이윤극대화만 노려
심각한 노동인권 침해

◇ 인권간행물 ◇

- 사법감시 창간호(참여연대 ☎796-8364)
 - 주요내용: 사법감시를 내면서(박은정)/목불인견의 검찰, 그대들은 부끄러움이라도 있는가(한인섭)/특별검사제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법관의 편의주의와 권위주의의 등. 23쪽.
- 세계주거회의(HABITAT II)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 창립기념토론회(☎ 3673-3031)
 - 주요내용: 인간적 주거환경과 주거권(하성규)/HABITAT II 의의와 준비(유재현)/어떻게 준비할 것인가?(김영준)/세계주거회의 준비와 참여의 필요성(하성규)/HABITAT II 세계 행동계획/HABITAT II 원칙의 초안과 전세계적인 행동계획 등. 88쪽.
- Women's Rights in the UN
 - 주요내용: The UN Women's Rights Programme/Commission on HR and its Sub-Commission/Further Integration of women's Rights into existion mechanisms/The UN Centre for HR/UN specialise agencies 등. 69쪽.
- 해외진출기업감시 소식지-지구촌 인권통신(참여연대 ☎796-8364)
 - 주요내용: 인도네시아-간부의 거둬지는 폭행/필리핀-노동부장관 노동자 착취 여부 내사 지시/중국-종업원 학대를 이유로 엄중 문책/엘살바도르-흑사로 노동자 사망/인터뷰-중미 여성노동자 등. 22쪽.
- 인도네시아진출 한국기업의 노사관계: 현지조사 보고서(참여연대 ☎796-8364)
 - 주요내용: 인도네시아진출 한국기업의 노사관계-한국적 경영방식 이미지 형성과 노동자 담론의 확산(신윤환) 등. 44쪽.

<이달의 주제-불처벌>

과거 인권침해의 해결에서 완전한 진실의 규명없는 처벌은 자의적 복수일 뿐이고, 진상규명없는 관용은 면책의 특례를 부여할 뿐이다.

-조세 잘라케(Jose Zallaquett)-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균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민변, 5.18 특별법 제정 거리시위 변호사 단체 시국관련 최초 집단행동, 서명운동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 민변) 소속 변호사 1백여명은 16일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별관에 모여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항의시위를 갖고 검찰청 앞까지 거리시위를 벌였다.

행진에 앞서 가진 집회에서 고영구 회장은 "검찰은 유사 이래 가장 잔혹하고 부

정의한 범죄인 광주 5.18사건 책임자들의 처벌을 해피하고 낡은 법논리로 거부했다"며 "역사적 사명감과 법조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거리시위와 서명운동을 벌이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5.18의 해결을 위해 항고, 제항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국회에 5.18특별법 제정을 청원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했으나 관철이

불투명하다"고 말하고 헌법재판소의 양심적이고 역사적인 결정을 촉구했다. 김영삼정부에 대해 "이제 기대와 가능성은 없으나 지금이라도 군사독재의 자식임을 거부하고 역사적 책무를 다하라"고 주장하고 국회의 5.18 특별법제정을 요구했다.

이돈명 변호사는 "민주주의라는 이름하에 다시 군사독재시대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없어 거리시위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며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만이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고 정의와 민족정기를 세우는 길이다. 이것이 관철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집회를 마친 이들은 서울 지방변호사회 서초별관 앞에서 교대역을 지나 대검찰청 앞까지 행진을 하며 서명운동을 펼쳤다.

민변 사무국장 이석태 변호사는 "변호사 이전에 국민의 도리를 다하고자" 시위를 계획했다며 "법을 수호해야 할 법조인으로서 검찰

의 법과피행위에 대해 국민에 속죄하는 뜻도 있다"고 밝혔다. 이날 시위와 서명운동에는 민변 회원이 아닌 변호사들도 40명 가량 참여했다.

변호사들이 시국사건으로 집단적인 거리시위를 벌인 것은 처음 있는 일로 각계의 주목이 크게 집중되었다.

천정연, 명동성당서 시국기도회 · 촛불시위

16일 오후 7시, 천주교 신자인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공동의장 김동주등, 천정연) 소속 회원 1백여명은 명동성당에서 5.18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국기도회를 열었다.

이들은 시국 기도회가 끝난 뒤 명동성당 입구에서 1시간여 동안 5.18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등을 요구하며 촛불침묵시위를 했다. 천정연은 이날 성명을 통해 "5.18 책임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철회하고 책임자를 즉각 법정에서 세울 것, '특별검사제 도입과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촉구했으며 '모든 종교인들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과 정부에 항의의견화, 편지쓰기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등을 호소했다.

학살자 처벌 · 정권퇴진 주장 한총련 학생 13명, 민자당사 점거농성

16일 오전 5.18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 정태홍, 한총련) 학생 13명이 여의도 민자당사를 점거했다. 한총련 산하 구국결사대라고 밝힌 이들은 오전 9시경 민자당사 지하주차장에 모였다가 일제히 6층 정채위 의장실에 들어가 창문 유리창을 깨고 '민자당 심판, 5.18 학살자 비호 김영삼 퇴진'등의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고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4천만 국민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등 3종의 유인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반민족행위자처벌법'이란 특별법 제정의 경험이 있으며, 나치전범을 처벌하기 위해 공소시효에 상관없이 지금까지 반인륜행위자들을 처벌하고 있는 여러 나라가 있다"며 "학살자들에게

공소시효란 없다"며 자신들의 점거농성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5월 학살자 전두환, 노태우 처벌 △특별법,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5월문제의 해결 △김영삼 정권의 퇴진과 민자당의 해체를 주장했다.

경찰은 이날 9시50분경 출입문을 열고 최루탄을 쏘며 진입하며 10분만에 모두 연행했다. 16일 저녁 현재 농성 학생들 전원은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연행자 명단>

백현중(서울신학대), 강형구, 김재철(시립인천대), 최미선(경인여자전문대), 이성진(서울시립대), 홍석기(전남대), 김지선(부산공업대), 차차원, 박희정(경북대), 박정철(군산대), 임광성, 정재성, 심규현(전북대)

○ 주요 공판 안내 ○

- 17일(화)
 - 강종숙, 국보법위반, 오후2시, 서울형사지법 9단독, 317호
- 19일(목)
 - 이창호등(한국사회의 이해), 국보법위반, 오후4시, 장원지법 대법정
- 20일(금)
 - 박창희, 국보법위반, 오전11시, 선고, 서울형사지법 21부, 311호
 - 함평기, 국보법위반, 오전10시, 서울형사지법 3부, 319호

민주노총 사무실에 경찰 불법난입 수배자 오인 자총련 김승호씨 연행

경찰이 영장제시도 없이
제야단체 사무실에 난입,
단체 간부를 불법연행해 비
난을 받고 있다.

16일 오후 7시5분경, 신분
을 밝히지 않은 20명 가량의
'사복'들이 민주노총(준)
사무실(종로구 명륜동 4가
소재)에 난입, 전화를 받고
있던 '자동차노조연합준비
위원회'(자총련) 김승호 부
장을 연행해 갔다. 이들은
민주노총(준) 집행위원 10여
명이 영장 제시를 요구하자
이를 묵살하고, 집기 부수
등 난동을 부리다가 김승호
씨를 확인하고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준)의 간
부들이 폭행을 당해 타박상
과 찰과상을 입었다. 또, 연
행과정을 사진으로 찍던 여
성 간부는 가슴을 주먹으로
맞기도 했다.

민주노총(준)에 의하면 16
일 하루종일 수상한 사람들
이 자총련 사무실 주위를
배회했고, 신원을 알 수 없
는 전화도 자주 '김승호씨'
를 찾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연행된 김씨를
수배중인 전 노총협 의장
김승호씨로 착각해 저지른
일이 아닌가 추측된다.

오후 8시경 김씨가 동대
문경찰서에 연행된 사실을
확인되었으며, 연행된 김씨
는 불법연행에 항의, 목비

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노총(준)은 17
일 오전 집행위원회를 열어
△경찰청장 사과와 재발방
지 약속 △책임자 처벌 등
을 요구할 예정이며, 경찰
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
다는 입장이다.

비리사학 경영주체 바뀌어 민교협·사교련, 주장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
협의회」(회장 김상곤 등,
민교협) 「사립대학교수협의
회연합회」(회장 윤봉용, 사
교련)는 대구대·상지대·
목원대·청주대 등 사립대
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원사
태의 본질을 '교육원리'보다
'경영원리'를 앞세우는 학원
소유자들의 의식과 교육당
국의 무책임한 행정에 있다
고 지적했다.

민교협과 사교련은 16일
오후 성균관대에서 '사학비
리구조와 그 개혁방안' 세
미나를 가졌다. 이 자리
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선중
(성균관대, 교육학)교수는
"상지대, 대구대 및 청주대
학은 각기 국립, 시립, 도립
및 특수법인화의 형태로 경
영주체를 바꾸는 일이 최
선"이라고 밝혔다.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4일 열린 <인권하루소식> 5백호 발간 기념 및 인
권정보자료실 기금 마련전은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힘
입어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인권운동과 인권운동사랑방에 대한 뜨거운 애정으로 함께
해주신 독자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속한 것처럼 이번의 수익금은 인권운동의 질적 발전의
한 계기가 될 인권정보자료실의 건립 기금으로 사용됩니
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 앞으로도 저희는 더욱더 인권운
동의 발전을 위해 전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인권운동사랑방 일동-

주/간/인/권/호/름

(95년10월9일부터 15일까지)

<9일>(월)

여연, 금융노련 등 11개 단체, 고용평등법대책위 발족-간접
차별·성희롱 금지 조항 신설 촉구/정상용의원, 안기부 서
울지부 정보과 산하 40여명 규모의 별도의 언론팀 구성 보
도 통제 폭로/경기도 동두천시 주민 3백명, "군견폭행 사
과, 미군기지 이전" 요구 집회 가져/5.18서명교수 모임, 박
영식 교육부 장관의 5.18동조교수 징계 발언에 항의성명
<10일>(화)

<뉴스플러스>, 노태우 전대통령 "광주시태 별 것 아니
다" 발언 게재/정부, 내년에 여성발전기본법 제정키로/부
산 교사 1천32명 5.18 특별법 제정 촉구 선언/민변, 국회
위중 수사 국회 고발없이도 가능하다고 검찰에 의견서
제출/미얀마 아웅산 수치, 정치활동 재개 선언
<11일>(수)

노태우 전대통령 망언에 사회각계 규탄 잇따라/박일룡 경
찰청장, "화염병 시위는 테러행위"라며 집시법 강화 입장
밝혀/박실의원, 사적등 안가에서 B자로 작성 청와대에 직
접 보고, 정치사찰 폭로/언론계 6천여명 5.18 선언/일본 오
사카지범, '정용피해 재일동포 보상거부는 위헌 소지' 판결
<12일>(목)

노태우 전대통령, 광주 관련 발언 사과/유엔 인권고등판
무관실, "고상문씨 북한 정착 연구활동" 돌아올 의사 없
다고 가족에 통보했음이 밝혀/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과
천 서울대공원에서 '함께 걸음 통합교육한마당' 행사 열
어/전교조등 18개 단체, 만5세 아동 국교 입학 반대 연대
회의 결성/한국과학기술연구원, 목동 소각장에서 '맹독'
다이옥신 검출 기준치 12배 초과 밝혀
<13일>(금)

경기 고양시 금정굴 희생자 유족회, 국회 진상조사단 구성
요구 시위/전남 농민 2천여명, 5.18 특별법 제정 촉구 선언
/전남 노동부장관, 근로기준법 전사업장 확대하겠다고 밝혀
/법무부, 범행 신고자 보복범죄 최고 사형 법안 마련 추진
중/올해 노벨평화상, 반핵평화운동가 로트블라트씨와 반핵
평화운동단체 퍼그위시회의 선정돼/미국 캘리포니아대 학
생 수천명, 미 약자차별철폐 폐지 항의 거리시위
<14일>(토)

김영삼대통령, <뉴욕타임즈> 등 의신과 회견에서 한미행
정협정 개정, 보안법은 개정 불가 입장 밝혀/서울 등 6개
도시에서 '김영삼 정권 실정 규탄과 민주개혁 쟁취 국민
대회' 열려, 5.18 특별법 제정 등 촉구/미국 세계식량연구
소, 전세계 8억 인구 굶는다는 내용의 보고서 발표
<해설>

노태우 전대통령이 광주학살을 중국의 문화대혁명과 비교
하면서 '아무 것도 아니다'라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 한주
동안 정치권과 제야 사회단체의 규탄이 뜨거웠다. 이들
만에 노태우씨는 자신의 발언이 실수였음을 인정하는 선
에서 이 사태는 진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지켜보
는 우리는 다시 한번 철저한 과거청산의 의미를 되새기지
않을 수 없었다. 아마도 노씨는 자신이 갖고 있던 평소의
생각을 마음이 맞다고 생각한 경복고 동기들 앞에서 시
원스레 펼쳐놓았을 것이다. 확실한 진상규명과 단죄만이
광주의 대학살과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진
리를 이번 기회에 확인한 셈이다. 이와 함께 다시 지적할
것은 김영삼대통령이 빨리 학살자의 단죄를 결단하지 않
을 시 그도 역사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점이다.

<이달의 주제-특별법>

과거 인권침해의 해결에서
완전한 진실의 규명없는
처벌은 자의적 복수일 뿐이고,
진상규명없는 관용은 면책의
특혜를 부여할 뿐이다.

-조세 잘라케(Jose Zallaquett)-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균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여성단체 5.18 헌법소원·민자당사 시위 의사 2천3백여명, 특별법 제정 촉구 선언

민자당이 정기국회에서
5.18특별법 제정을 반대하
고 나섬에 따라 지금까지
5.18문제 해결을 요구해온
여러 사회단체들이 크게 반
발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
「12.12 군사발란 및 내란자
기소추구를 위한 여성 200
인 선언」등 여성단체들은
17일 오전9시 헌법재판소에
검찰의 5.18 불기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또한 이들은 오전 1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5.18특별법 제정을 촉구하
는 여성대회를 갖고 민자당
까지 항의시위를 벌였다.

집회에서 이미경(여연 공
동대표)씨는 연설을 통해 "2
천만 여성들은 부끄러운 역
사의 심판을 후대에 맡기지
않겠다는 굳은 각오로 거리
로 나섰다"며 "광주학살에
대한 진상규명과 학살자 처
벌을 반드시 여성의 손으로
해내자"고 주장했다.
여성들은 결의문을 발표

하고 △5.18 특별법 제정
△검찰의 '공소권 없음'결정
취소 △헌법재판소의 불기
소처분 취소 결정 등을 요
구했다. 이들은 5.18 특별법
이 제정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김영삼 정부가
5.18 주범들을 처벌하지 않
는다면 15대 총선에서 심판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5.18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연석회의)도 이
날 여의도 민자당사를 방
문,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 1백여명의 저
지로 무산되었다.

연석회의 소속 회원 50여
명은 오후2시 여의도 여성
동대표)씨는 연설을 통해 "2
천만 여성들은 부끄러운 역
사의 심판을 후대에 맡기지
않겠다는 굳은 각오로 거리
로 나섰다"며 "광주학살에
대한 진상규명과 학살자 처
벌을 반드시 여성의 손으로
해내자"고 주장했다.
여성들은 결의문을 발표

구했다. 또한, 한총련 민자
당사 점거에 대해 "진리를
탐구하고 지식을 연마해 사
회의 기둥이 될 학생들이
자신을 돌보지 않고 온몸을
내던진 것은 궁극적으로 민
자당에 책임이 있다"며 연
행학생의 석방을 요구했다.

의사들 최대 시국선언

검찰의 5.18불기소 결정이
후 학생, 시민, 교수, 교사,
변호사들의 서명 및 시국선
언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7일 의사들도 5.18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홍창의(전 서울대 병원
장), 조한익(서울대 임상병
리학 교수), 서한태(목포 서
방사건과 의원장) 등 의사
2천3백76명은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5.18 특별법 제
정 촉구 서명운동에 참여자
명단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썩은
상처는 도려내야 하며 일시
적 부작용을 우려하여 근본
적 치료를 미루는 것은 병
세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
이라며 "국민의 건강을 책
임지고 있는 의사들로서
5.18 문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고 정의롭게 만
드는 것"이라며 서명운동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검찰의 5.18 수사결
정은 역사발전엔 역행하는
것이며 사회의 기강을 무너
뜨리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검찰의 5.18 불기소 취소와

특별법제정등을 요구했다.
이 서명운동은 「신문 청
년외사」 「인도주의실천의사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지
난 9월25일부터 3주간 벌여
왔다. 의사들의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발언은 87년
4.13 호헌조치에 반대하는
1백37명의 시국선언 이후
두번째 서명운동으로 해방
이후 가장 큰 규모이다.

전국연합, 국보법 철폐 주장 김대통령 입장 반박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
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
연합)은 김영삼대통령이 캐
나다 전국지 <글로벌 앤드
메일>과 가진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불가' 발
언한 것에 대해 17일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연합은 성명에서 "국
가보안법 철폐는 대통령이
야당시절 민주와 통일을 가
로막는 법이라고 지적하며
철폐를 주장했던 약법"이라
며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겠
다는 것은 구시대적이고 반
통일적인 발상으로 철폐되
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대북정책은
대통령의 심기와 집권당의
이해에 따라 자주 뒤바뀌고
있다"고 지적하고 "거시적
인 안목으로 대북정책을 입
안, 추진해야 할 것"을 촉
구했다.

김영삼대통령은 16일 캐
나다 방문을 앞두고 가진
<글로벌 앤 메일>지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뜻이 없으며 북한의
현 지도체제가 유지되는 한
화해 가능성은 비관적"이라
고 밝힌 바 있다.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4일 열린 <인권하루소식> 5백호 발간 기념 및 인
권정보자료실 기금 마련전은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힘
입어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인권운동과 인권운동사랑방에 대한 뜨거운 애정으로 함께
해주신 독자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속한 것처럼 이번의 수익금은 인권운동의 질적 발전의
한 계기가 될 인권정보자료실의 건립 기금으로 사용됩니
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 앞으로도 저희는 더욱더 인권운
동의 발전을 위해 전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인권운동사랑방 일동-

<자료> 5.18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학교수 의견서(부분요약) 공소시효로 헌법적 파괴를 용인할 수는 없어

<편집자주> 5.18 사건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심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대학의 법학교수들이 헌법 재판소에 검찰의 불기소 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박홍규, 민주법연)가 의견서를 작성, 이달초부터 전국의 2백50여명의 법학교수들을 상대로 동의를 구하고 있다. 이에 호응하고 있는 법학교수들은 17일 현재 1백30명이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법연은 조만간 이들 법학교수들의 서명을 모아 헌법 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검찰의 5.18 불기소 논리를 정면하게 반박하고 있는 법학 교수들의 의견서 중 공소시효에 관한 내용만 요약해 소개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반드시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할 부분은 바로 공소시효의 문제다.

가. 내란과 같은 헌법파괴적 범죄나 집단살해와 같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내란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 제도의 이름으로 사실상 헌법의 파괴를 용인하는 한편 향후에도 그러한 범죄행위의 시도를 고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소시효 제도는 적어도 헌법의 파괴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범죄행위나 헌법의 기본정신을 이루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예초부터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사실 68년의 "전쟁범죄 및 인간성에 반한 범죄의 시효적용 제외에 관한 조약"은 이러

25일까지 구독료 납부!

지로용지를 못 받으신 독자께서도 전국 어느 은행이든지 지로창구에서 아래의 지로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지로번호: 7618848

한 관점에서 집단학살등 반인륜적 범죄에 대하여는 국내법상의 공소시효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5.18 내란은 중대성과 현재까지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피해의 규모와 죄질 등을 보건대 공소시효의 제도목적에 비추어 시효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형사정의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설사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피고소인들의 실권 장악기간, 특히 대통령 재직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헌법 제84조에 대해 혹자는, 내란이나 외환의 죄에 대해 대통령의 형사불소추특권을 배제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내란죄의 경우 공소시효의 정지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한다. 그러나, 이럴 경우 내란이나 외환의 범죄에 연루된 대통령에게는 어떠한 형사상의 특권도 배제하려는 의도에서 마련된 이 헌법조항이 오히려 내란이나 외환의 범죄에 연루된 대통령에게만 형사상의 특권을 제공해주는 헌법조항을 둔갑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다음으로 공소시효정지 사유는 범죄자가 대통령이라는 최고 통치권자였고, 또 범죄의 소추권자인 검찰은 바로 그러한 대통령의 명령과 지휘를 받는 지위에 있다는 점 때문이다. 사실상 소추불가상태에 따른 공소시효정지를 인정하는 이런 입장에 따르면 헌 문민정권이 출범하기 전까지는 5.18내란죄의 공소시효가 완전히 정지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대통령 재직기간 중 내란죄의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5.18 내란죄의 공소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 기산점은 아무리 빨리 잡아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81년1월25일이기 때문이다. 공소시효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반드시 해명하지 않으면 안될 실로 중요한 헌법문제다. 과연 내란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는지, 내란죄의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언제

로 보아야 하는지, 대통령 재직기간에는 내란죄의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는지 여부는 헌법에 관한 최종적인 해석권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반드시 해명해야 할 중요한 헌법문제다.

대전고법, 비전향장기수 변호인 접견처분취소 청구 각하

비전향장기수의 접견이 교도소측으로부터 거부당하자 변호사가 접견거부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가 결심이 끝나고도 심리를 재개하는 등 고의로 선고를 연기하던 중 수감자의 출옥을 빌미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대전고등법원 제1특수부(재판장 김연태 부장판사)는 6일 조용환 변호사가 지난 94년 5월16일 대전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비전향장기수 접견명, 안학섭, 한장호씨들에 대한 접견거부취소 청구소송 선고심에서 이들 비전향장기수들이 "지난 8월15일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소를 유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인이 자기 고유업무와 관련하여 구급되어 있는 수행자를 만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도소장은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조용환 변호사는 지난 94년 5월16일 위 장기수 3인의 전향제도 헌법소원과 관련 대전교도소를 방문 이들을 접견하려 했으나, 대전교도소측이 "이들이 변호사를 만나겠다는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며 접견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승호씨 5시간만에 풀려나 동대문서 수배자로 오인

16일 저녁 민주노총(준) 사무실에서 불법연행되었던 「자동차노조총연합회 준비위원회」의 김승호씨가 이날 자정에 동대문경찰서에서 풀려났다(<인권하루소식> 10월17일자 참조). 김씨가 불법연행에 항의, 목비권을 행사하자 동대문경찰서측은 수배중인 노우협 전 의장 김승호씨를 잘 아는 형사를 불러 확인시켰고, 이 과정에서 김씨를 잘못 연행한 것을 안 동대문서측은 계속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편, 민주노총(준)은 17일 오전 집행위원회를 열고, 동대문경찰서측의 사무실 불법단입과 불법연행에 대해 동대문경찰서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달의 주제-특취>

과거 인권침해의 해결에서 완전한 진실의 규명없는 처벌은 자의적 복수일 뿐이고, 진상규명없는 관용은 면책의 특혜를 부여할 뿐이다.

-조세 잘라케(Jose Zallaquett)-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대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인권협, 국보법 국제심포지엄 11월22일

엠네스티·유엔특별보고관 등 세계적인 전문가 한 자리에

최근 김영삼대통령이 캐나다를 순방하면서 국가보안법 철폐 불가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인권단체들이 세계적인 전문가들을 초청,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한국인권단체협의회」(대표 김상근, 인권협)는 오는 11월22일부터 3일간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하고, 이의 준비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인권협은 "탈냉전시대를 맞아 국제적으로 '국가안보'보다는 '인간안보'가 강조되고 있지만, 한반도는 아직

도 냉전 한가운데 있다"며 "국가보안법을 국제적인 인권기준에 비추어 재조명하는 일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에는 국제엠네스티 국제집행위원장 로스 다니엘(Ross Daniels) 교수, 유엔 비상사태 특별보고관 린드르 데스포이(Leandro Despouy) 교수, 대안법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하고, 이의 준비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글에서도 오제식 크리 스찬아카데미 사회교육원

장, 박홍규 영남대 법대교수, 조용환 변호사 등이 참석, 수준높은 국제심포지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석자들은 스탈냉전 국제질서에서의 국가안보와 인권, 그리고 민간인권단체의 역할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비상사태·국가안보에서의 인권보호 △나라별 사례연구 △아태지역 민간인권운동의 과제와 전략 등의 주제로 깊이 있는 토론을 전개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국가보안법 철폐의 당위성과 아시아 지역의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점검하고 이의 철폐를 위한 공동 네트워크의 결성도 결의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인권협 이성훈 간사는 "한국형 개발독재가 아시아 지역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개발독재의 배후에서 인권침해의 중심이 되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검토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국제적인 인권단체와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연행된 재학생 6명은 18일 오후 9시 현재 연행장소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총학생회측은 대전경찰청으로부터 충남대 활동가 자

안법의 역사와 구조'란 주제로 기초발제하며, 민주정치·노동문제·삶의 질·여성문제·심리구조 등 국가보안법과 연관된 8개 분야에 대해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인권협은 이런 국내·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제적인 캠페인 전략을 마련,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경찰청 수배자 검거령 민주노총(준), 강력 비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공동대표 권영길등, 민주노총(준))는 경찰청이 17일 권영길, 양규현씨 등 수배중인 노동운동 지도자 10여명에 대한 검거령을 내리자 이를 강력히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18일 민주노총(준)은 "헌정부도 군사정권처럼 노사관계나 노경관계에 대한 어떤 전망과 철학도 없이 구태의연하고 단기적인 대중요법에 의존하는데 개탄한다"며 경찰청의 수배자 검거령이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수백, 수천 명의 노조지도자들을 수배하고 구속한다고 해도 민주노조운동을 말살할 수는 없다"며 11월11일 민주노총의 창립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에 대해 △검거령등 민주노총(준)에 대한 강경대처 철회 △노동운동가에 대한 수배조치 해제 △노동법상의 독소조항 개정 등을 촉구했다.

<특별강의> 동양사상과 인권①-신영복(성공회대 교수) 인권의 문제는 '억압'으로부터 출발한다

<편집자주> 성공회대학교에서는 '인권과 평화' 강좌를 개설 진행중이다. 지난 15일에는 성공회대 신영복 교수가 '동양사상과 인권'이란 주제로 강의했다. 동양사상을 통해 본 인권의 의미를 독특하게 정리하고 있는 강의 내용을 2회에 걸쳐 게재한다.

무엇이 인권인가? 새로운 문명을 도입해야 하는 21세기에는 어떤 인간, 어떠한 인간적 권리를 지향해 나갈 것인가? 동양의 전통 속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인권문제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어떤 개념을 이해할 때 그 개념의 반대개념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점에서 인권의 문제를 억압에 관한 문제로부터 출발하고자 한다.

다. 우리는 의식하고 있던, 의식하지 못하던 간에 여러가지 억압 속에 살고 있고, 예속된 상태의 정서를 갖고 있다. 과연 어떤 것을 억압으로 인식할 것이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억압구조를 인식·분석하고, 그 결론으로 어떤 사회를 지향할 것인가를 전망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 억압이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는지 모른다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억압이 철폐된 상태를 자유라 한다. 우리가 예기하는 자유는 근대사회에 들어 생긴 개념이다. 이 자유는 봉건적 속박에서부터 봉건적·인신적·종교적·사회적인 여러 가지 억압의 철폐에서 나타난 것이었다. 시민사회의 자유는 결국 한마디

로 자본의 자유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자본주의의 억압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억압구조는 크게 두가지로 지적할 수 있다. 토대(사회하부구조)가 갖는 억압구조와 상부구조 즉, 문화·예술·종교적 구조이다. 자본의 자유는 어떠한 억압구조 위에서 있는가를 정확하게 분석해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인권문제를 예기한다는 것은 숲을 두고 나무의 작은 가지나 잎사귀만을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자본주의사회는 자본주의를 존재하게 하는 생산관계와 이를 규제하는 억압구조가 있다. 또한 상부구조는 그것이 억압구조가 아닌 '자유'라고 믿게 하는 '보이지 않는 억압구조'가 존재한다. 억압적인 구조 속에서 환상으로서의 자유, 허상으로서의 자유를 갖게 된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여성고용 안정 위해 고용보험 적용범위 넓혀야

여연, '고용보험법과 여성의 고용안정' 토론회서 지적

지난 7월부터 고용보험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제 한국에도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을 포함한 4대 사회보장 제도를 모두 갖추게 되었다. 고용보험제의 시행은 그동안 노동자의 개인책임으로 돌려졌던 실업, 취업, 직업능력개발 등의 문제를 사회적 책임으로 분담하겠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제의 적용범위, 실업급여 등 여성에게 불리한 부분을 안고 있어 여성·노동계의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이미경등 3인, 여연)은 18일 오후 2시 고용평등의 달을 맞아 고용보험법과 여성의 고용안정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고용보험제도와 여성'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서명선(한국여성개발원 선임연구원)씨는 도입배경에 대해 "사회보장적 측면보다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나타난 인력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노동정책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용보험제가 노동시장을 이중구조화하고 여성노동력을 주변화시켜 고용의 불안정성을 더욱 촉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고용보험제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적용범위이다. 고용보험제 프로그램에는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안정사업이 있는데 실업급여의 경우 적용대상이 30인 이상 사업장이고,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고용안정사업은 7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정해져 있다. 이중에서도 60세 이후 고용된 자, 시간제근로자, 일용근로자, 일시적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씨는 "여성노동자들 대부분이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어 실제 적용은 취업여성의 1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며 적용범위를 5인미만의 사업장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실업급여의 계산방식인 실업 전 소득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정률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여성에게 매우 불리하다며 모든 실직자에게 똑같은 액수의 급여를 지급하는 정액방식을 제시했다.

실제로 여성의 월평균 임금총액인 60만3천원을 실업급여로 환산해 보면 월 20만7천원 수준이다. 남성의 경우도 실업급여가 평균 37만5천원으로 최저생계비 66만6천원에 크게 모자라 급여수준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러한 일반적인 문제점 외에도 육아휴직장려금 지급에 대해 지적했다.

이 제도는 정부가 기혼여성의 육아휴직 30일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육아휴직제의 실시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참석자들은 "육아휴직제도 실시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유급여부 명시와 벌칙조항도 없어 사업주의 제방에 맡겨져 있다"고 말하며, 적용범위를 유급실시 사업장으로 축소하거나 육아휴직 기간을 실업으로 인정, 기본급여를 지급하지는 의견을 내놓았다.

토론회로 참석한 장신철(노동부 고용보험담당)사무관은 이러한 문제점 지적과 대안 제시에 대해 "고용보험제의 30인, 70인 적용범위는 노총의 10인 이상 사업장, 경총의 1백50인 이상 사업장을 절충하여 마련한 것이며, 98년에는 10인,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육아휴직에 대해 "실업급여는 실적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육아휴직기간은 실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달의 주제-불치법>

과거 인권침해의 해결에서 완전한 진실의 규명없는 처벌은 자의적 복수일 뿐이고, 진상규명없는 관용은 면책의 특혜를 부여할 뿐이다.
-조세 팔라케(Jose Zallaquett)-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균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5세아 입학은 아동에게 부담만 연대회의, "국민학교 빈자리 채우기 일 뿐"

교육부는 내년부터 만 5세아 입학에 대해 생년월일순으로 국민학교 입학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18일 전국 국민학교와 유치원에 '5세아 국민학교 입학 허용, 어떻게 하나'라는 홍보전단을 배포했다. 이 홍보전단에 따르면 "학교생활이 가능한 3월 2일이나 3월3일생의 아동이 6세에서 하루이틀이 모자라 일년을 기다리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입학연령을 전체적으로 5세로 낮추자는 것이 아닌,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 소수의 인원만 허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조기교육과열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일기, 쓰기, 셈하기 등의 어떠한 형태의 학력평가나 검사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5세아 입학문제에서 교육부와 입장을 달리해 온 '만5세아 국민학교 입학 반대 및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추진 연대회의'(연대회의)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연대회의는 19일, 교육부의 이러한 허용방침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연대회의는 성명을 통해 "만5세아 입학허용은 교육부 스스로가 입학연령의 탄력적 운영의 본래 취지라고 주장한 '특수 영재아 조기교육'이라는 목적과 전혀 관계가 없다"며 이는 국민학교 '빈의자 채우기'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5

세아 입학허용은, 교육적 이득이 전혀없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는 조기입학에 관한 갈등과 고민을, 아동들에게는 조기 입학으로 인한 부담을, 유치원에는 취원아동 감소로 인한 운영난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5세아 입학허용 방침은 교육부가 지난 5월 기준안을 발표한 이후 교육·사회단체와 학계 등에서 그 부작용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

포천주민대표, 군수면담중 연행

19일 오전 8시경 포천 병원 적출물 소각장 문제로 군수와 면담 중이던 주민대표 2명이 형사들에게 연행되는 일이 벌어졌다.

경기도 포천군 창수면 주민들은 18일 저녁 경찰과 함께 나타난 소각장 사업주 박용환(33)씨와 밤새도록 협상을 벌여 소각장 건설을 철회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 사실을 군수 앞에서 확인하지는 박씨의 요청에 따라 이진호 군수가 주민대표 김무경(36), 양한승(35)씨와 10여분간 대화를 나누던 중 사복형사 10여명이 덮쳐 이들을 연행했다. 경찰은 연행된 주민들을 불법감금 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9월13일에도 포천군의회 소각장 특위 위

원들의 조사를 용하던 김광분(50)씨가 연행되어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더그망언 항의 성명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운동본부)는 미하원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더그 비라이더 위원장이 "한미행정협정 개정 문제는 한국인론의 잘못된 보도 때문"이라 한 발언에 대해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19일 성명을 발표, "미국의 계속되는 한국관련 망언은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반성없이 책임을 한국인론에 돌리는 아전인수식 행위"라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이어 △미국의 망언중단 △공개사과 △미군범죄재발방지 대책마련 △한미행정협정 개정 등을 촉구했다.

한편, 더그 비라이더 위원장은 17일 미국에서 열린 한세미나에서 "최근 한국에서

한미행정협정 개정문제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한국인론의 잘못된 보도 탓"이라며 "한국인론은 고도로 도발적이고 대체로 부정확하며 명예훼손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다"고 비난했다.

충남대 자주대오 사건 대공분실과 기무사에서 조사중

18일 새벽 충남대 자주대오 사건으로 연행된 12명은 충남경찰청 옥계동 대공분실과 대전 기무사에 각각 6명씩 구금되어 있고, 이전 미행정협정 개정 문제는 한국인론의 잘못된 보도 때문"이라 한 발언에 대해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19일 오후 옥계동 대공분실에서 구속자들을 면회한 가족들은 구속자들이 잠을 못 자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으며, 친한 사람들과 부정부적으로 가졌던 모임에 대해 조직을 결성한 것처럼 몰아부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기무사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구속자 가족들은 기무사측의 거절로 이날 면회하지 못했다.

인권활동가를 위한 제2기 공개강좌(5회)

- 강사: 조병기(버클리대 한국학위원회 7대회장)
- 내용: 통일운동 관련한 미주버클리대 학생운동 소개
- 일시: 10월21일(토요일) 오전 11시-12시
-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 문의: 인권교육실 김수경 간사(전화:715-9185)

10월 21일 강좌로 예정되었던 '판례로 본 국가보안법'은 강의를 맡아주실 예정이었던 이석연 변호사님의 개인사정으로 취소하였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신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특별강의> 동양사상과 인권 ② 신영복(성공회대 교수)

“자유”의 최고치는 “평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빈곤, 질병, 무지, 나태, 불결 등 5가지 사회문제를 제거해야 시민사회에서 자본의 억압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사람들의 인권과 복지가 보장되는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에서 자유의 내용인 동시에 자유의 방법론이다. 이 5가지가 모두 해결되는 것이 가능한가? 오히려 자본주의는 이를 계속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시민계급의 자유는 자본의 운동과 함께 상품의 형태로 나타난다. 2초마다 균 비로 3천4백만원이 든다. 그러나 2초마다 영양실조 1명의 어린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 자본주의의 현실이다.

인간화의 실천이 인권문제의 가장 최고의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동양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몇 가지 특징을 인권문제와 연관하여 생각할까 한다.

첫째 천도사상이다. 천도(天道)는 무엇인가? 장자는 천(天)이라는 것을 우마사족(牛馬四足)이라고 했다. 소나 말의 다리가 네 개라는 것이 천이라는 것이다. 천의 반대 개념으로 인(人)의 개념을 썼다. 인이란 말의 입에다 재갈을 물리는 것, 송아지의 코를 꿰는 것이라고 했다.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자르지 말고, 오리 다리가 짧다고 늘리지 말라고 했다. 인도 즉 인본주의의 기본은 자연질서를 근거로 쌓아가야 한다. 동양학에서는 자연상태, 자연질서와 조화할 수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또하나 기본적인 사상은 이 세상을 하나의 생기(生

機)의 장으로 본다. 살아있는 순환체계로 본다는 것이다. 순환체계를 파괴하는 행위는 천도를 그르치는 행위이고, 생기의 장이 파괴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동양학에서 말하는 자연사상이다. 이 질서를 파괴하지 않고 자연과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 동양의 대표적인 자연주의 사상이다.

다음 사상은 인간주의다. 동양학의 상징인 유학사상은 한마디로 인(仁)이다. 인이라는 것은 사람이 인이라는 것으로 인간 관계에 대한 철학이다. 동양사상의 정수는 화해사상이다. 화(和)는 비화자에 입구를 써서 벼를 같이 먹는 뜻이다. 이는 밥을 나누어 먹는 것으로 평화의 기초가 된다. 해(諧)는 말씀 전에 모두 개자를 써서 모두 자기의 견을 한마디씩 하는 것으로 민주주의를 말한다. 이러한 인간관계론이 동양학의 기본이다.

논어에 회사후소(會事後素)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말은 그림 그리는 일은 회계 밑칠을 하고 나서 한다는 뜻이다. 인간관계는 인간의 예를 갖춘 뒤에 한다는 말이다. 모든 문화도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예가 갖추어 지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인간주의에 대한 선언들은 동양학 곳곳에서 나타난다. 인간주의에 대한 자연주의의 대표사상이 도가사상이고, 인간주의의 대표사상이 유가사상이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인간주의가 극단으로 달리면 자본주의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인간의 문제로 돌아

가 보자. 언제 이러한 인권이 보장되는가. 바로 사람들에게 대한 인권의 억압구조가 철폐될 때 인권이 보장된다. 억압을 철폐하면 자유로워지는데, 그 자유를 어디까지, 얼마만큼 누리면 만족할 수 있을까? 또 자유를 어디까지 추구해야 하는가? 대량생산, 대량소비, 무한한 지적 욕망의 추구 등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자유는 최고의 평등이다. 자유의 양적 측면이 아니라 자유의 질적 측면을 말하는 것으로 자유가 어떤 질을 갖느냐는 문제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의 최고의 질적 측면은 평등이라고 생각한다.

평등한 것이란 무엇인가?

약하고 강한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평등의 문제는 함께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이다. 함께라는 것은 자유의 내용으로서 최고치인 평등의 개념과 모순되지 않는 방법론이다. 목표와 수단에 있어서 동일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사회를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아마 21세기 문명 속에서 가장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21세기는 인권의 문제이면서 자유의 계승 발전이면서 평등의 실현이 되면서, 자본의 자유와 자본문화를 변혁하는 이런 것들을 인권문제라는 시각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다. (끝)

● 행사와 동정 ●

- 세계최장기수 김신명 석방 환영의 밤
 - 일시: 21일(토) 오후5시
 - 장소: 경희대 노년극장
 - 주최: 민가협(☎763-2606)
- 열린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호프광장
 - 일시: 21일(토) 오후2시
 - 장소: 성균관대 금잔디광장
 - 출연자: 문성근/김선재/정태춘/노래를 찾는 사람들 등.
 - 주최: 영화전태일제작위원회(☎3672-4138)
- 성폭력상담소 열림터 1주년기념세미나
 - 일시: 24일(화) 오후2시
 - 장소: 여성개발원 여성공동의 장
 - 문의: 576-7128
- 지하철 노사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
 - 일시: 23일(월) 오후2시
 - 장소: 종로성당 3층 회의실
 - 주최: 지하철개혁시민협의회(☎796-8364)
- 조각간첩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회
 - 일시: 24일(화) 오후7시
 - 장소: 명동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 행사내용: 조각간첩사태발표(신규영)/영화시사회
 - 주최: 친추교인인권위원회(☎777-0643)
- 이랜드 노조 2주년 기념식 및 정기총회
 - 일시: 24일(화) 오전9시
 - 장소: 도봉산 청소년수련원
 - 문의: 323-0456(☎ 5555)
- 외국인노동자 공청회
 - 일시: 25일(수) 오후3시
 - 장소: 서초동 변호사회관
 - 발제내용: 외국인노동자 실태보고/외국인노동자보호법의 내용(박석운)
 - 주최: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10월 공동행사와위원회(☎749-6052)

<이달의 주제-불치병>

과거 인권침해의 해결에서 완전한 진실의 규명없는 처벌은 자의적 복수일 뿐이고, 진상규명없는 관용은 면책의 특례를 부여할 뿐이다.

-조세 잘라케(Jose Zallaquet)-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대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시민단체, 고용불평등 감시 나선다

고용평등추진본부 오늘 발족, 현장 모니터·고발센터 운영

기업의 여성 고용실태를 조사하고, 고용불평등을 감시할 시민단체가 발족한다. 「고용평등추진본부」(공동대표 박원순등, 곽영추)는 21일 오후3시 서울 명동의 YWCA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되었다.

고영추는 「한국여성민우회」(대표 정강자)가 지난해 초부터 여성·노동계에 제언, 준비해온 결과로 탄생하게 되었다. 여성의 임금이 남성의 그것에 비해 56/100 밖에 되지 않는다는 통계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듯이 여성의 고용불평등은 매우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이 이를 또 하여금 고용평등운동을 제창하고 나서게 된 배경이다.

고영추는 △「고용평등과수꾼」을 통해 고용현황에 대해 체계적인 현장모니터 실시 △「고용불평등고발센터」 설치, 고발사례 접수 △모니터 결과와 고발사례를 통해 법, 제도상의 문제점 지적, 이의 개선을 정부·기업 등에 촉구 △여성적 직업능력개발, 고용평등에 관한 교육 실시 △고용평등과 고용안정을 위한 대안정책 개발 등 10대 시행과제를 설정하고 앞으로 최소한 3년간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들은 1년간 기업의 고용불평등에 관한 기업별 현장 모니터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자료를 분석, 96년 10월 기업별 고용평등지수

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용평등과수꾼을 연말까지 1천명을 목표로 모집중에 있고, 이를 점차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들 과수꾼은 자신의 직장에서 곽영추가 마련한 평가항목에 따라 현장모니터를 하고, 예비취업자들은 모집 채용과정에서 일어나는 고용불평등 사례를 수집하는 일을 한다. 이와 함께 주변에서 일어나는 고용불평등 사안이나 부당행위에 대해 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고영추에는 공동대표 3명 이외에도 고문단으로 오재식 크리스찬아카데미 사회교육원 원장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 13명이, 운영위원으로는 김대환 인하대 교수등 11명이 참가하고 있다. 또, 정책위원회, 직장자문위원회, 분쟁처리위원회 등의 위원회를 두게 된다.

「한국여성민우회」의 정양희(35) 부장은 “여성이 고용에서 당하는 불평등에 대한 지적은 많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대안 개발은 미흡했다”며 “특히 기업주들의 인식이 변하지 않는 한 여성고용문제는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에 대한 지수를 산출, 이를 근거로 해당 기업의 고용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장은 현재 언론, 건설, 병원, 사무 등의 업종 노조가 적극 이에 동참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여성계

보다 노조들이 이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다”고 전했다. 고용평등과수꾼으로 일할 사람이나 고용불평등을 신고할 사람은 전화 274-2755로 하면 된다.

박창희교수 징역7년 선고 학문목적 접촉은 무죄

서울지법 형사 합의21부(재판장 서재현 부장판사)는 21일 간접협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한국의국어대 박창희(63, 사학과) 교수에게 국가보안법상 기밀탐지수집죄를 적용, 징역7년에 자격정지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피고인은 국내 유수대학의 중진교수로서 사회적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북한공작원과 접촉, 공작금을 받고 국내정세를 전해준 것등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국내동향에 대한 문건과 자

료를 수집, 서태수로부터 발매사 책자를 받은 것은 학문적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여 무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학문연구에 기여한 점과 각종 사회활동에 긍정적 보탬이 된 점을 감안하여 구형량을 최대한 낮추었다”고 밝혔다.

박교수가 안기부와 검찰에서의 모든 진술은 위촉된 분위기에서 나온 거짓진술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변호사와 가족들과 5차례 접견을 했음에도 위촉된 상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교수는 지난 90년 10월 조총련 소속 서태수(71)씨와 접촉, 서씨로부터 주체사상 교육을 받은 뒤 93년 1월 8대 박아무개 교수를 서씨에게 소개하고 공작금 명목으로 일화 50만엔을 받는 등 30여차례에 걸쳐 서씨와 접선한 혐의로 지난 4월27일 구속됐다. 당시 안기부는 일본에 다녀온 8대 박아무개 교수의 신고로 이 사실을 알게됐다고 밝혔다. 한편, 박교수의 가족과 변호인단은 박교수의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준비중이다.

인권활동가를 위한 제2기 공개강좌(5회)

- 강사: 조병기(버클리대 한국학위원회 7대회장)
- 내용: 통일운동 관련한 민주버클리대 학생운동 소개
- 일시: 10월21일(토요일) 오전 11시-12시
-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 문의: 인권교육실 김수경 간사(전화:715-9185)

오늘로 예정되었던 ‘판례로 본 국가보안법’은 강의를 맡아주실 예정이었던 이석연 변호사님의 개인사정으로 취소하였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박용길 장로 일시 석방

11월30일까지 삼성의료원 치료 조건

서울지법 형사4단독(조승환 판사)은 2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박용길(76)장로의 구속집행정지를 받아들여 박장로를 석방했다. 재판부는 "박장로가 고령이며,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전문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11월30일까지 삼성의료원으로 주거를 한정하는 조건으로 석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 구속정지결정은 지난 10일 이덕우 변호사가 제출한 구속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여 이루어진 것이다. 박장로는 지난 7월31일, 갑일성 북한 주석 1주기에 참석하였다가 귀환 구속되었으며, 건강이 매우 악화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해왔다.

위안부민간기금 모집 활용 일 자치노 홍보물 수거

일본 민간단체가 한국정신대 관련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는 '일본 정신대 민간기금'모금 홍보물에 한국정신대 할머니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일본 '전국자치체노동조합'(자치노)이 최근 제작한 민간기금 모금 포스터에 정신대 최초의 증언자인 김학순할머니의 사진을 넣은 것이다.

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일본자치노에 항의서한을 보내 "일본 5대 일간지에 사과문을 게재할 것과 전국에 배포된 홍보물을 모두 회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자치노는 김할머니에게 사과편지를 보내고, 전국에 배포된 홍보물을 회수하기로 했다.

일본 정신대 민간기금은 지난 7월 일본 민간단체들로 구성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에서 주도하는 것으로 아시아 정신대 관련단체들은 "이는 일본정부가 일본종군위안부 문제를 축소·정리하기 위해 만든 단체"라며 민간기금을 반대해 왔다.

5.18·4천억 수사 촉구 전국연합·불교인권위 성명

최근 정치적인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전직대통령 4천억 비자금설과 관련해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과 '불교인권위원회'는 20일 성명을 발표, 행정권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당략적 이해에 치우친 채 4천억원 비자금설을 흘려, 56공 세력의 발목을 붙잡고, 5.18 학살자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으로 학살자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행위는 부도덕한 국민 우롱행위"라며 "5.18 학살

과 4천억 비자금 조성에 대한 56공 세력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만큼 김영삼정부는 단호히 관련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한열 열사 부친 운명

20일 오전 10시 이한열 열사의 부친 이병섭(60)씨가 지병으로 운명하였다. 이씨의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지며, 발인은 22일(일) 오후 1시, 하관식은 오후 1시30분 망월동묘역에서 갖는다.

전화번호: 062-232-2995

박용길장로 방북비디오 판매
「통일맞이칠천만겨레모임」은 지난 6월말 김주석 조문차 방북한 박용길 장로의 방북활동 비디오편을 판매했다. 가격은 2만원. 문의 313-8201.

외국인노동자문제 청원운동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 10월 공동행사위원회」는 25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외국인노동자 제도개선 청원운동」에 들어간다.

◇ 인권간행물 ◇

□ **인권활동가를 위한 제1기 인권운동사랑방 공개강좌 자료집**(☎715-9185)

· 주요내용:인권의 역사(서준식)/행형법(박찬운)/노동법(김선수)/제51차유엔인권위원회보고(이성훈) 등. 294쪽.

□ **「여성의 눈으로」 참간호-여성의 전화**(☎269-2962)

· 주요내용:칼럼-성희롱은 강자지배논리의 축소(조성숙)/해의여성소식-개발정책에 희생되는 아시아여성 인신매매, 에이즈로 나타나(마쓰이 야요리) 등. 64쪽, 값 2천원.

□ **여성상담과 여성복지-여성의 전화**(☎269-2962)

· 주요내용:한국사회와 여성상담(이상덕)/청소년의 성(윤양현)/구타상담의 실제(이문자)/여성관련법(배금자)/우리나라 여성복지의 현황과 과제(서명선) 등. 204쪽.

□ **자료집-고용보험법과 여성의 고용안정-여성단체 연합**(☎274-2883)

· 주요내용:고용보험법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이철수)/고용보험제도와 여성(서명선)/고용보험법의 활용방안(윤우현)/고용보험법과 여성고용안정(이광택)/여성의 고용안정과 고용보험법 개선방향(왕인순) 등. 61쪽.

□ **자료집-대구대학교가 다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대구대 총장직선제 실현을 위한 고수모임**(☎053-850-6712)

· 주요내용:대구대학교 사태요약/구재단 복귀활동 개요/경북실업전문대학 사태 요약 및 일지 등. 61쪽.

□ **자료집-사학비리구조와 그 개혁방안-민교협**(☎888-3683)

· 주요내용:사학비리의 구조와 그 개혁방안(김선중)/대구대학교 사태보고(최병두)/목원대학교 학내사태(이왕기)/상지대 김찬국 총장 해임의결 사태의 전말과 그 배경(우영균) 등. 42쪽.

□ **「한울노동법강좌」 11호-한울노동문제연구소**(☎593-6501)

· 주요내용:주요판례모음-과로가 간질환 악화시켜 사망하면 산재, 해고자 복직건도 단체협약 대상이다, 해고절차 위반해도 사유에 영향없다/노동법교실-경계의 사유와 절차/판례해설-노사간 정계협의조항의 효력 등. 70쪽.

□ **월간「국제인권보」-국제인권연맹한국지부**(☎776-4733)

· 주요내용:정부 북한난민특별법 제정검토/인권보장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제(조홍식)/북한 그들의 '우리식 인권' 개념(제성호) 등. 4쪽.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대균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경기대 ‘자술서’ 베껴 쓰라고 강요당해”

‘충남대 자주대오 사건’ 구속자 가족등, 조작 주장

「민족총대 활동가조직 조 작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영덕등 3명, 공동 위)는 24일 오전 11시 충남대학교에서 경찰의 「민족총대 활동가조직」 사건 발표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공동위는 “이번사건은 정권이 위기에 부딪치거나 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조작사건 중 하나”라며 “경찰이 말하는 활동가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동위는 “경찰의 수사발표에 여러 조작의 흔적들이 보인다”며 여러 예를 제시했다.

경찰은 수사발표 중 “지난 해 8월 조직을 결성하고 북한영화촬영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 “충남대에서 93년 가을학술대회에서 북한바로알기운동의 하나로 북한문화영화인 ‘낙랑공주와 호동왕자’를 상영했다”며 94년 8월 결성된 조직이 어떻게 93년에 북한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냐고 반박했다.

또한 ‘김일성 사망에도 대자보’ 부분에서도 “김일성이 사망한 것은 7월로 조직 결성도 되지 않은 시기”이고 “수사과정에서 연행자들을 감도 채우지 않고, 자술

서 작성시에는 ‘경기대 자주대오사건’의 자술서를 베껴 쓰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구속자 가족들은 이날 군인구속자들이 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 거여동 기무사앞에서 이들의 면회를 요구하며 상경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근로자파견제 철폐 촉구 민교협 성명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공동의장 김상곤 등, 민교협)는 23일 성명을 발표, “편법적 노동관계법 개악과 노동운동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교협은 “중소기업 육성을 구실로 추진되는 근로자 파견가을학술대회에서 북한바로알기운동의 하나로 북한문화영화인 ‘낙랑공주와 호동왕자’를 상영했다”며 94년 8월 결성된 조직이 어떻게 93년에 북한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냐고 반박했다.

민교협은 “중소기업 육성을 구실로 추진되는 근로자 파견가을학술대회에서 북한바로알기운동의 하나로 북한문화영화인 ‘낙랑공주와 호동왕자’를 상영했다”며 94년 8월 결성된 조직이 어떻게 93년에 북한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냐고 반박했다. 또한 ‘김일성 사망에도 대자보’ 부분에서도 “김일성이 사망한 것은 7월로 조직 결성도 되지 않은 시기”이고 “수사과정에서 연행자들을 감도 채우지 않고, 자술

단할 것을 요구했다.

각계원로 헌법재판소에 오늘 5.18 의견서 제출

계훈계 전국연합 고문, 박순경 민족회의 공동대표, 변형운 전 서울대 교수 등 각계원로 38명은 23일 오후 2시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에 5.18문제에 관한 의견서를 24일 중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각계 원로들은 이 의견서에서 “헌법과 헌정질서 자체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처벌하지 못한다면 검찰과 사법부의 존재의의를 찾을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는 파렴치한 헌법

파괴범죄를 비호하는 행정당국을 헌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다스려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결정을 내림으로써 “국민주권은 권력의 자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의 규범의식을 토대로 함을 증명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교인권위 인권학교 28일부터 일주일간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등)는 오는 28일부터 11월3일까지 주일동안 제1기 인권학교를 연다. 인권운동의 폭을 넓히고자 개설되는 이번 인권학교에서는 불교사상과 인권, 인권운동의 방향, 한국의 인권문제 등으로 진행된다. 강의는 매일 오후 6시 2시 간씩 진행되며, 불교신자가 아니라도 인권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수강료는 2만원이다. 문의 전화 734-6401

◎ 주요 공판 안내 ◎

- 24일(화)
 - 이진영, 국보법위반, 서울형사지법 2부, 422호, 10시, 선고
- 25일(수)
 - 최승기, 국보법위반, 서울형사지법 5부, 422호, 10시, 선고
 - 박지연의 1명(선고), 국보법위반, 서울형사지법 22부, 425호, 10시
 - 박치현, 집시법위반, 서울형사지법 6단독, 321호, 10시
 - 정봉철의 1명(선고), 국보법위반, 서울형사지법 22부, 425호, 2시
- 박용길, 국보법위반, 서울형사지법 4단독, 421호, 4시
- 26일(목)
 - 안호상의 1명, 남북교류협력법위반, 서울형사지법 10부, 318호, 3시
- 27일(금)
 - 전철순(선고), 폭력법위반, 서울형사지법6단독, 321호, 10시
 - 조두현, 국보법위반, 서울형사지법 10부, 318호, 2시
 - 강중수, 국보법위반, 서울형사지법 9단독, 317호, 3시

25일까지 구독료

남부름!

지로번호:

7618848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25일까지 남부름!

지로용지를 못 받으신 독자께서도 전국 어느 은행이든지 지로 창구에서 아래의 지로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지로번호: 7618848

노씨 비자금 규탄 한 목소리

5,6공 비자금, 5.18특별법 제정 촉구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 문제가 드러나자 각계각층의 분노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23일 성명을 내고, "5.18 불기소처분과 비자금 진실규명은 때 등으로 일관해왔던 김영삼 정부는 차제에 5,6공 세력과 단호히 결별해야 한다"며 "정부는 비자금에 쓸러 있는 국민적 의혹을 날달이 해소하는 것과 더불어 5.18특별법을 제정하여 반드시 5,6공 세력을 단죄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공동대표 권영길등)도 "이번 일을 계기로 정경유착에 의한 검은 돈의 거래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노태우 등 판관자들을 엄중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진보정치연합」(공동대표 김철수 등)도 "6공 비자금 뿐만 아니라 5공 비자금, 92년 대선자금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 공개하라"며 노씨의 소환조사와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했다.

사민청에 난데없는 프락치 소동

프락치 판명 김주광씨 나타나

지난해 8월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사민청) 회원 12명 구속사건 과정에서 안기부 프락치로 밝혀진 김주광(32)씨가 사민청 회원을 프락치로 포섭하려 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김씨는 지난 10일 사민청 회원으로 2개월전 군복무를 마친 서아무개(전 연대사업국장)씨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와 할말이 있다며 서씨의 집근처에서 만났다. 김씨는 서씨에게 "내가 사민청에서 프락치로 물렸다는 걸 아느냐"고 물은 뒤 서씨가 "그때 군대에 있어 잘모른다"고 하자 "사민청은 요즘 어떤 활동을 하느냐,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지내나"는 등 최근 사민청의 근황을 질문했다.

서씨가 프락치 사건에 대해 잘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하자 김주광 씨는 "간첩 잡아 볼 생각 없느냐, 사민청에도 간첩이 있다" "경찰에 협조하라"며 서씨에게 프락치가 될 것을 제의해 왔다. 서씨가 "무슨 얘기냐, 그럴 생각없다"고 하자 "경찰입장에서 보면 협조고, 운동권에선 프락치다"며 노골적으로 말하고 "경찰에 협조하면 니 인생은 필꺼다. 프락치를 하면 너의 활동은 보호받을 수 있다. 앞으로 운동을 계속할거 아니냐"는 회유의 이야기도 했다. 서씨는 "이제 운동을 그만 돌려고 한다. 관심없다"며 자리를 떴다고 한다.

김씨는 91년 사민청이 운영하는 정치학교에 가입, 사민청의 맹원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구속사건으로 프락치로 의심받자 종적을 감췄다.

안기부는 지난해 사민청 유초하(사민청 정치학교 교장) 교수등 회원 10명을 이적단체 구성등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 사건은 당시 구속자들이 2달만에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남에 따라 대표적 '운동권 기적이기' 사건으로 지적받았다. 현재 서세경(29, 사무처장), 김경란(29, 민중교육위원장)씨는 아직도 수배중에 있다.

주/간/인/권/호/름

(95년10월16일부터 22일까지)

<16일>(월)

한충련, 대학생 13명 민자당사 점거 "5.18학살자 비호 김영삼정권 민자당 심판" 주장/동대문경찰서, 민주노총(준) 사무실 난입, 수배자 오인 김승호씨 불법연행/민변, 변호사 1백명 5.18 특별법 제정 촉구 거리시위/인도의 인권단체들, 인도 북서부 편잡주에서 경찰이 시크교도 최소한 3천명을 고문살해했다고 주장/미국 워싱턴에서 '백만인대행진', 흑인 차별철폐 주장

<17일>(화)

서울시의회 1백명, 5.18특별법 제정 촉구 시한부 농성 돌입/경찰청, 민주노총(준) 수배간부들에 대한 일제검거명/의사 2천3백여명, 5.18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방글라데시 총파업 관련 3명 사망, 2백50명 부상했다고 경찰 발표

<18일>(수)

민자당, 집시법·도로교통법 등 41개 법률 관련 범죄 일반 사면키로/교육부, 5살 어린이가 국교입학 생년월일순 허용 결정/대법원, 김동진 합참의장등 5.18 관련 현역 군인들에 대한 재정신청 심리 착수/충남지방경찰청·기무사, 충남대출신 군인·학생 12명 충남대 자주대오 사건으로 긴급구속

<19일>(목)

충남경찰청, 충남대 자주대오 사건 피의자 변호인 접견 차단, 농성 8시간만에 허용

<20일>(금)

서울경찰청,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이찬형씨의 도서출판 열린세상 대표 손승호씨 이적표현물 제작 혐의 구속/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인제 부장판사), 의붓딸을 성폭행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 선고받은 조아무개씨 공소기각 석방/박용길 장로 일시 석방

<21일>(토)

민가협 주최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 환영의 밤 행사, 경찰의 원천봉쇄로 장소 옮겨 고려대서 개최, 김선명씨등 장기수 참석 못해/고용평등추진본부 발대식 가져/공공부문 노동조합대표자회의 3천여명, 용산역 광장에서 정부의 노조 전임자 수 축소, 근로자 파견법 제정 방침 규탄 시위/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학교수 1백27명 서명 받아 5.18 불기소 법리상 오류라는 의견서 헌법재판소에 제출/일본 오키나와 현의회 주최 미군 성폭행 항의 집회, 주민 8만명 참석/칠레 정부, 마누엘 콘트라레스 전 비밀경찰총수 수감, 대법원 7년형 선고 5개월만에 집행

<22일>(일)

서울대 근처 고시준비생 2천67명, 5.18특별법 서명/민주노총(준), 전국에서 민주노총 건설 결의 등반대회 가져

<해설>

지난주에는 마치 공안탄압을 예고하는 듯한 불길한 조짐들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올해 들어 네번째로 충남대 자주대오사건이 터진 것은 아마도 그 직접적인 징후가 아닐까 싶다. 남북관계의 경색, 무장공비의 출현, 검찰의 정간물 내사실, 경찰청의 민주노총 수배 간부들에 대한 검거명, 민가협 주최의 김선명씨 환영행사 원천봉쇄 등에서 보여지는 공안당국의 태도는 일시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내년초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재야단체와 비판세력에 대한 탄압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기도 하다. 정부는 자신들의 총선에서의 득표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사표현의 자유 좀 쉽게 무시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현명한 대처방법이 필요할 때다.

<이달의 주제-불처벌>

과거 인권침해의 해결에서 완전한 진실의 규명없는 처벌은 자의적 복수일 뿐이고, 진상규명없는 관용은 면책의 특례를 부여할 뿐이다.

-조세 잘라케(Jose Zallaquett)-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균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조작간첩 고통스런 삶 영상으로 증언

천주교조작간첩대책위, 다큐멘터리 제작

「천주교 조작간첩 진상규명 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승훈신부 등 5명, 조작간첩대책위가 조작간첩 다큐멘터리를 기획·제작, 24일 명동성당 문화관에서 시사회를 가졌다(관련기사 2면). 시사회에 앞서 가진 조작간첩 사례발표회에는 지난 6월17일 15년간의 옥살이를 마치고 만기출소한 신귀영씨가 나와 간첩으로 조작되까지의 과정을 담담히 말했다. 신씨는 "내 사건 뿐만 아니라 다른 조작간첩사건까지 모두 해결될 때까지 싸우겠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대책위는 다큐멘터리 제작의도를 "조작간첩 사건의 진상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문민정부에서 여전히 억울한 옥살이를 계속 하고 있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스런 삶을 되짚어 보기 위해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 다큐멘터리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금기였던 간첩사건이 공안당국의 시각이

아닌 피해자 입장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영화라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영화의 제작비 2천여만원이 전적으로 모금에 의한 것에서 더 뜻이 깊다. 조작간첩대책위는 지난 93년부터 조작간첩사건에 관심을 갖고 조사활동을 펼친 「천주교인권위원회」가 보다 폭넓은 조사를 위해 94년 새가 나와 간첩으로 조작되까지의 과정을 담담히 말했다. 신씨는 "내 사건 뿐만 아니라 다른 조작간첩사건까지 모두 해결될 때까지 싸우겠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대책위는 다큐멘터리 제작의도를 "조작간첩 사건의 진상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문민정부에서 여전히 억울한 옥살이를 계속 하고 있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스런 삶을 되짚어 보기 위해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 다큐멘터리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금기였던 간첩사건이 공안당국의 시각이

피고측 증인 "모른다" 일관
문국진씨 항소심

서울고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2시 고문피해자

문국진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을 열어 86년 청량리경찰서 보안과 경장으로 근무했던 오경덕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가졌다. 오씨는 대부분의 질문에 모른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오씨는 보임다산사건으로 문씨와 함께 수배중이던 백원담씨가 수배자 명단에 없었다고 거짓증언했다. 다음 재판은 11월21일 오전10시.

친부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14명등 이용 성폭력 피해자 피난처 열림터 개설 1주년

계속되는 성폭력 속에서 헤어나올 방법을 찾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쉼터 「열림터」(시설장 장영복)가 개설 1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가 피해여성들을 상담하던 중 성폭력을 당하고도 그 충격을 최소화하고 치유할 마땅한 자리를 갖지 못하는 여성들과 가해자와 같은 거주지나 이웃에 살면서 지속적으로 성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이 심리적, 신체적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에서 문을 연 것이다.

1년동안 열림터를 거쳐간 사람은 모두 20명이다. 이 중에는 10세 이하가 3명, 10-15세가 8명으로 대부분이 15세 이하의 나이이다. 또한 친아버지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가 14명으로 가해자와 격리되어야만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열림터에는 경험이 많은 상담원 7명으로 이루어진 운영위원들이 주 2회 개별상담을 하며 피해 후유증 극복을 돕고 있다. 그 밖에도 서로의 경험을 드러냄으로써 고립감, 이질감, 자기비하감 등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집단상담, 의료상담, 비디오관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 내담자들은 보통 15일 정도 열림터에 머무르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친척집이나 보호시설을 찾아 새생활을 시작한다.

최영애 소장은 "열림터를 운영하며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있던 어린 피해자가 웃음을 되찾고 어리광도 부리면서 닫혔던 마음을 열때가 제일 감격스러웠다"며 지난 1년을 실험 단계라고 말했다.

한편을 지난 열림터는 앞으로 더 바빠진다. 전문적인 상담방법과 기술개발과 상담전문가, 정신과 의사, 여성학자 등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또 피해자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인간성 회복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프로그램의 운영도 준비하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25일까지 납부를!

지로용지를 못 받으신 독자께서도 전국 어느 은행이든지 지로 창구에서 아래의 지로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지로번호: 7618848

근로자파견법 입법저지 철야농성 돌입키로 민주노총(준), 25일부터 비상대표자회의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공동대표 권영길등, 민주노총(준))은 오늘부터 전국 각 지역에서 근로자파견법 입법저지를 위한 철야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한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공청회를 시작으로 근로자파견법에 대한 상임위의 심사가 본격화되리라는 예상에 따라 11월 1일 오전 10시 전국의 단위 노조 위원장이 참여하는 전국단위노조대표자 비상결의대회를 열어 이후 투쟁방침을 결의하기로 했다. 이 와 함께 해당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항의전화, 팩스를 보내기로 하고 근로

자파견법 관련 공청회를 오늘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강당에서 갖는다. 민주노총(준)은 지난 18일 열린 제12차 대표자회의에서 근로자파견법 입법저지와 관련한 당면 투쟁방침에 대해 위와 같이 결정했다. 그리고 민주노총 규약과 관련 현총련의 제안을 받아들여 '민주노총 가입을 결의한 그룹조직을 민주노총의 가맹단위로 인정한다'는 제14차 운영원칙회의의 규약수정안을 표결로 확정하였으며, 창립 대의원대회의의 대의원 배정은 가입 당시 각 조직별 재적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하기로 하였다.

노태우씨 집 항의 방문 오늘, 전국연합등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준비위원회」(공동대표 권영길등)의 주요간부 50여명은 오늘 낮 12시30분 연희동 우정스포츠허브 앞에 모여서 노태우씨 자택에 항의방문을 간다. 두 단체는 6공비자금의 실체와 조성경위 등에 대해 노태우씨가 직접 국민 앞에 공개하고 법의 심판에 응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학생들이 연희동 전·노씨의 집에 항의하러 간 적은 있어도 재야단체의 간부들이 노태우씨 집에 항의하러 가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6공 비자금 알고도 은폐 전 검찰총장등 고발 참여연대, 직무유기로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등, 참여연대)는 24일 박종철·김도연 전 검찰총장, 송중의 전 대검차장, 김영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이원성 전 대검 중수부장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불법적으로 천문학적 규모의 정치자금을 조성·사용한 6공 정권의 부정비리를 수사할 통해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 범인을 은닉하고 직무를 유기하였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정책결정에 참여 보장 장애인 2% 공천 요구 장애인복지공대위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상임대표 김성재, 장애인복지공대위)는 24일 성명 발표하고, 각 정당에 총선 공천시 2%를 장애인의 몫으로 할당할 것을 요구했다.

장애인복지공대위는 "4백만 장애인과 1천2백만 장애인 가족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으로부터 차별과 소외, 그리고 편견으로 힘겨운 삶을 꾸려가고 있다"며 "제대로 된 장애인 관련 법이나 제도조차 없는 이유는 정책결정 과정에 장애인의 참여가 완전 배제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농아복지회」, 「한국맹인복지연합회」 등 장애인 3개 단체가 지난 4일 선언문을 발표하고, 「국회의원정족수의 2% 장애인 공천」을 요구하며 이의 관철을 위해 1백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간첩이 되기까지 전과정 세밀하게 추적

-조작간첩 다큐멘터리 주요내용-

「조작간첩 다큐멘터리」는 대표적인 일본관련 조작간첩 신귀영, 강희철, 이장형씨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들의 조작사건이 만들어진 역사·사회적 배경을 설명하고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보는 형식으로 취하고 있다. 전체 내용을 설명하고 이끌어가는 해설은 벨런트 유인촌씨가 맡았다.

영화는 한 사물을 보는데 있어서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사물의 형태는 정반대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화두로 시작한다. 맹목적인 반공이데올로기에 눈이 멀어 붉은 색으로 덧칠해 보면 여기 소개되는 주인공들은 그 행위의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간첩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한겨울만 벗겨보면 이들이 사실은 간첩과는 전혀 무관한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어느날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는 채 정보기관의 밀실로 끌려가 피투성이의 간첩누명을 쓰고 나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신귀영씨 가족이 간첩행위를 한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증언한 박용규씨는 15년이 지난 후에도 쉽게 진실을 밝히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결국 자신의 증언은 고문에 못이겨 지어낸 거짓이었음을 밝혔다. 박씨는 "시대는 변했어도 아직까지 사람(당시의 고문 경찰)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대한 두려움을 떨쳐 버리지 못한 듯 자꾸 몸을 움추리며 힘겹게 인터뷰에 응했다.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아직도 군사독재 시대의 유산을 전혀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부끄럽고 우울한 자화상을 발견하게 된다.

86년 구속되어 무기수로 살고 있는 강희철씨의 경우, 강씨 사건의 대법원 주심판사였던 박우동 전 대법관(현재 변호사)은 최근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이 사건이 조작의 혐의가 큰 사건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박변호사는 이 영화의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거듭되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인터뷰를 고사한 박변호사는 강씨의 재심변호인에게 "내 판결이 오판이었음을 밝혀달라"고 부탁했다.

모든 조작간첩 피해자들이 매우 평범한 사람에서 갑자기 간첩으로 뒤바뀌지만 이장형씨의 경우를 보면 우리는 역사의 아이러니 앞에서 망연자실해진다. 예비군 중대장으로 한국 전쟁때는 해병장교로 참전해 금성무공훈장까지 받은 철저한 반공주의자 이장형씨는 반공이데올로기의 피해자가 되었다.

이 다큐멘터리에는 윤공회 대주교, 김창렬 주교등 천주교 지도자들이 인터뷰를 통해 조작간첩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달의 주제-불처벌>

과거 인권침해의 해결에서 완전한 진실의 규명없는 처벌은 자의적 복수일 뿐이고, 진상규명없는 관용은 면책의 특혜를 부여할 뿐이다.
-조세 팔라케(Jose Zallaquett)-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균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근로자파견제 '현대판 노예노동' 합법화 민주노총(준) 공청회 열고 성토

근로자파견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와 이를 반대하는 노동계의 대립이 첨예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잇따라 공청회를 열고 이를 반대하고 있다. 24일 한국노총이 이에 대한 공청회를 연 데 이어 25일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

연맹준비위원회」(공동대표 권영길등, 민주노총(준))가 전경련회관에서 「파견근로의 실태와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이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조순경(이화여대, 여성학)교수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진행한 설문조

사 결과를 토대로 파견근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설문지 1천5백부를 배포, 이중 5백53부를 회수하여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파견근로자의 주평균 근무일수는 5.9일, 주 평균근로시간은 58.2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 44시간을 훨씬 초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본급, 상여금, 통상수당, 시간의 수당 등 제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총액은 75만8천만원이었고, 실제 파견노동자가 수령하는 월급여액은 71만원 정도로 정규직 노동자의 6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여성의 월급여 총액은 59만원으로 남성 84만원의 약 70%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노동자의 근무시간은 남성보다 16% 더 긴 것으로 밝혀졌다.

속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이 갖추어지지 못한 점 △파견근로자 문제에 대한 연구도 미흡하며, 정부법안의 내용도 논리적 모순이 많은 점 등을 들어 근로자파견법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권용목 민주노총(준) 공동대표는 "근로자파견제는 중간착취, 고용불안, 근로조건 전반적인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자본가들의 이윤추구만 보장하는 근로자파견제는 현대판 노예노동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준)은 25일 밤부터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근로자파견제 도입 반대 철야농성'에 들어갔다(다음호에 관련 자료 게재).

박용길장로 재판 무기연기
25일 열린 예정이던 박용길장로 2차공판이 박장로의 건강문제로 무기연기되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던 박장로는 지난 20일 허혈성심장질환이 심해져 치료를 위해 11월30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조치를 받았다. 현재는 심지 못하고 있는 점 △불법적인 파견근로를 감독, 단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 요구 외국인노동자 공대위, 29일 한마당 행사도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10월 공동행사위원회」(공동대표 권영길 등 11명, 행사위)는 25일 오후 3시 변호사회관 서초별관에서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사례발표에 나선 김혜성(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회장)목사는 "현재의 산업연수제도는 기술이전이나 교육 목적으로 실시하는 제도가 아니라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한 편법적인 인력 수입정책"이라며 "산업연수제도의 철폐와 내국인과 동등한 노동법 적용"을 주장했다. 그는 "외국인력수입은 편법이 아닌 정당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고, 인력수입에 앞서 노동관계기관과 국민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외국인노동자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벌금등의 전면사면 조치와 새로운 제도를 통한 재취업

의 보장을 주장했다. 나아가 외국인노동자에게 의료보험, 산재보상 등 사회보험 적용을 주장했다.

주제발표에서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소장은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외국인노동자보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며 시안을 발표했다. 이 시안에 따르면 △노·사·정 3자로 구성된 공의기관에서 외국인노동자 도입과 관리를 맡을 것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과 노동3권 보장 △인어교육과 기술교육, 적응교육 실시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행사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이 법안을 구체화해 국회에 입법청원할 예정이다.

한편, 행사위는 오는 29일 아시아 7개국의 풍물을 소개하고, 한국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다지는 '외국인노동자한마당' 행사를 연세대에서 연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이달말까지 납부!

지로용지를 못 받으신 독자께서도 전국 어느 은행이든지 지로 창구에서 아래의 지로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지로번호: 7618848

<손종규씨 손배소송 관련 자료>
제3자개입금지 국가상대 손배소송 제기
유엔 인권이사회 결정문 공시도 요구

<편집자주> 지난 7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전 금호노동조합위원장 손종규(40)씨의 제소에 대해 한국 정부가 유엔 자유권조약 제19조 2항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 것이라고 최종결정을 내렸다. 손씨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26일 국내 처음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첫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제기한다. 아울러 법무부장관에게 유엔인권이사회의 최종권고를 기사화했던 5대 일간신문에 결정문의 주요내용을 요약·공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손씨의 소장 제출에 맞춰 민변과 민주노동(준)이 정리한 자료를 소개한다.

제3자개입금지 관련, 91년 「연대를 위한 대기업 노동조합회의」(연대회의)를 구성하여 활동하던 당시 주식회사 금호노동조합위원장 손종규씨는 92년 7월7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자유권조약) 및 그 선택의정서에 따라 인권이사회에 통보(개인제소절차)하였다. 인권이사회는 손종규씨가 위 사건을 통보한 이래 약 3년에 걸친 심리끝에 95년 7월19일 대한민국이 대우조선 노조의 파업을 지지한 연대회의 사건에 대해 제3자 개입금지규정으로 손종규씨를 처벌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자유권조약 제19조 제2항을 위배한 것이라는 최종결정을 채택하였다(<인권하루소식>9월 15,16일자 참조).

정부, 국제사회에 무책임한 거짓말
 이 최종결정문에서 인권이사회는 한국 정부가 "손씨에게 금전 배상을 포함한 실질적인 구제조치를 제공하고 제3자개입금지규정을 제정하여 장래에 이러한 위반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9월19일 "한국정부가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91년 4월 비준한 상태로 우리 정부의 조치내용을 전달할 도덕적 의무는 있지만 이를 따라야 할 법적 구속력은 없다"며 제3자개입금지

규정의 개정의사가 없음을 발표했다. 그러나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 규정을 인용해서는 아니된다"는 국제법의 원칙(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Treaty, 1980.1.22. 조약 제697호)과 국제법을 지키는 것이 헌법의 기본정신의 하나라는 점, 비준·공포하여 효력이 발생한 조약을 위반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인 동시에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권이사회의 권고를 무시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어느 모로 보아도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명백하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그동안 인권이사회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에 대한 답변에서 "대한민국의 국회 등 국가기관은 위 국제규약 등 국제법과 위반되는 법률을 결코 제정할 수 없으며 국내법은 국제규약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제법이 국내법보다 상위에 있거나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해 왔다.

ILO등 노동법 개정 요구 목적

그러므로 위와 같은 노동부의 발언은 세계화를 앞세우면서도 한국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무책임한 거짓말을 늘어놓았음을, 그리고 노동권을 탄압할 때는 '도덕적 의무'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한국정부의 이중적인 잣대를 자인하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들어 단병호 전 전노협위원장과 윤계건 현대중공업노조위원장이 제3자 개입금지규정으로 구속된 바 있고, 권영길, 양규현 민주노동(준) 공동대표, 박용선 대구노동조합연맹의장 등이 위 규정으로 수배중이며 그밖에도 제3자 개입금지 규정으로 인한 구속이 잇따르고 있는 사실은 스스로 받아들인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한국정부의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이러한 현실은, 노동권에 제3자 개입금지규정을 둔 국가가 전세계적으로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몇 개국 등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

을 생각할 때, 국제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의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을 입증한다. 이에 따라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이미 여러 차례 한국의 제3자 개입금지규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결사의 자유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을 밝히고 이를 개정하라고 한국정부에 권고했다. 최근에는 한국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지난 9월14일, OECD 산하 노동조합자문기구 역시 한국의 노동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그 밖에도 저명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의 권고 등은 한국의 노동현실이 국제사회에서 어느 수준인지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에서는 "손씨에게 금전 배상을 포함한 실질적인 구제조치를 제공하고..."라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한국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는 바이다. 그리고 이 청구소송을 통해 다시 한번 한국의 노동악법개정과 제3자 개입금지규정으로 인한 구속자들의 석방과 수배자들의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한다. 비준이라는 법률행위를 통하여 받아들인 국제조약들을 성실하게 집행할 법적 의무가 있는 정부가 더 이상 국민과 국제사회를 속이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행사를 지지하고 지원하려는 일체의 움직임을 '제3자 개입'이라는 이름으로 처벌하고 또 '불순한' 행위로 선전, 매도하는 제3자 개입금지규정을 즉각 폐지해야 할 것이다.

인권활동가를 위한 제2기 공개강좌(6회)

한국노동문제의 유형과 내용(총괄)

- 강사: 하종강(한울노동상담소 소장)
- 일시: 10월28일(토요일) 오전 11시-오후1시
-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 문의: 인권교육실 김수경 간사 (전화:715-9185)

<이담의 주제-불처벌>

과거 인권침해의 해결에서 완전한 진실의 규명없는 처벌은 자의적 복수일 뿐이고, 진상규명없는 관용은 면책의 특혜를 부여할 뿐이다.
 -조세 잘라개(Jose Zallaquett)-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균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5.18 특별법 국민항쟁으로 제정 결의
범국민비대위 결성, 3백여개 단체 총망라

광주 학살자 처벌을 위해 전국 재야 사회·시민단체가 총망라된 「5.18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공동상임대표 김상근등, 5.18비대위)가 26일 결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5.18비대위측은 5.18 국민위원회의 개인인사 중심의 한계성과 5.18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의 대표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국민적 운동체를 탄생시켰다고 밝혔다. 사상 최대의 이 단에는 전국연합, 민변, 민교협, 참여연대, 경실련, 환경련, 민주노동(준) 등 전국 3백여개 단체가 참가했다. 5.18비대위는 앞으로 5.18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집회 등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5.6공 군부세력 부정부리 청산사업을 주내용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결성식 전에 가진 대표자 회의에서는 공동대표로 정해석 전교조위원장 등 40여명, 공동상임대표로 김상근 5.18 한교협 인권위원회 위원장 등 8명, 고문으로 계훈제 전국연합 고문 등 12명, 집행위원장 이미경 여연 공동대표 등 3명, 대변인으로 박노현 방송대 교수를 선임했다. 또한, 규약안에 있던 "비폭력, 평화적인 방법"이란 어귀를 논란 끝에 삭제해 5.18 학살자 처벌을 위한 표현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김상근 목사는 대회사에

서 "16년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정의를 요구하던 국민의 목소리를 억누르다 정권내 갈등이 증폭돼 10.26으로 무너졌다"며 "5.18 광주주민항쟁을 계승하여 학살자들을 처벌하라는 국민의 요구는 정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계훈제 고문은 "지금은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호기다.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 부정, 비리로 얼룩진 정권을 타도하자"고 격려했다.

5.18비대위는 결성선언문에서 "문명정부가 출범한지 2년반이 지난 지금까지 눈만 뜨면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부패와 부정, 전도된 가치관, 반인륜적 범죄, 각종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집회 등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5.6공 과거청산의 실패 등으로 말미암은 '타'이라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기구의 설치 △특별회의에서의 공동대표로 정해석 전교조위원장 등 40여명, 공동상임대표로 김상근 5.18 한교협 인권위원회 위원장 등 8명, 고문으로 계훈제 전국연합 고문 등 12명, 집행위원장 이미경 여연 공동대표 등 3명, 대변인으로 박노현 방송대 교수를 선임했다. 또한, 규약안에 있던 "비폭력, 평화적인 방법"이란 어귀를 논란 끝에 삭제해 5.18 학살자 처벌을 위한 표현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김상근 목사는 대회사에

서 "16년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정의를 요구하던 국민의 목소리를 억누르다 정권내 갈등이 증폭돼 10.26으로 무너졌다"며 "5.18 광주주민항쟁을 계승하여 학살자들을 처벌하라는 국민의 요구는 정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계훈제 고문은 "지금은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호기다.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 부정, 비리로 얼룩진 정권을 타도하자"고 격려했다.

철거폭력 또 발생
무악동 주민 30명 부상

지난 25일 「무악1동 세입자대책위원회」(세대위) 주민 30여명이 철거용역반원들에게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했다. 현재 고막과 허리 등에 큰 상처를 입은 주민 14명이 적십자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며, 나머지 주민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세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재개발추진조합」(조합장 엄무섭,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세대위와 재개발조합이 명도소송 취하에 관한 협상을 벌이던 중 난항을 겪자 오후3시경 적준개발 용역반원 60여명이 쳐들어왔다고 한다. 용역반원들은 협상중이던 주민 60여명을 사무실에 갇금시키고 마구 폭행한 뒤 머리카락을 잡고 밖으로 집어던 연장·배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결의했다.

5.18비대위는 첫 사업으로 오는 11월4일을 국민행동의 날로 선포하고, 전국에서 국민대회를 갖는다. 또, 5.18비대위는 노태우씨 불법비자금과 관련한 성명에서 정부에 대해 5.6공세력의 단죄와 비자금 의혹의 전면적 해소를 주장했다. 한편, 26일로 5.18특별법 제정을 위한 5월단체들의 명동성당 천막농성이 1백일 을 맞았다.

노인과 힘없는 여자들만이 있어 아무런 반항도 못한 채 무방비 상태에서 폭행 당했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김씨는 "용역원들은 주민들이 모두 밖으로 끌어낸 뒤 무릎을 꿇리고 머리를 숙이라며 머리와 목을 때렸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상황을 알리기 위해 탈출을 시도한 주민 허우순(32)씨는 용역반원들에게 붙잡혀 각목과 쇠파이프로 집단폭행을 당해 종팔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다. 또 소식을 듣고 달려온 주민 김기환(38)씨도 용역반원 10여명에게 맞아 고막이 터지는 등의 심한 상처를 입었다.

한편, 주민들은 현장에 무악파출소 소장, 정보과 형사, 경찰관등이 있었으나 "그만 때리지"라는 식의 말만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또 "허리를 심하게 다쳐 주민을 병원으로 옮겨 달라고 부탁했는데도 경찰은 웃고만 있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이날 오후10시 관할 경찰서인 서대문경찰서 앞에서 "방조한 경찰의 처벌과 용역장패의 즉각 구속"을 주장하며 항의시위를 벌였다.

인권활동가를 위한 제2기 공개강좌(6회)
한국노동문제의 유형과 내용(총괄)

- 강사: 하종강(한울노동상담소 소장)
- 일시: 10월28일(토요일) 오전 11시-오후1시
-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 서울역 하차 10분 거리)
- 수강료: 1강좌당 5천원
- 문의: 인권교육실 김수경 간사 (전화:715-9185)

병역특례 해고 노동자 군문제 해결 촉구

「전국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지원대책위원회」(공동대표 이소선등, 해고노동자원상회복지대위)는 25일부터 정계인사들에게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군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서를 보내기 시작했다. 해고노동자원상회복지대위는 "방위산업체에서 병역특례자로 5-6년 동안 근무하고 2년 10개월에서 4년7개월 가량

특례의무로 복무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된 사실만으로 재판받을 기회조차없이 군에 징집되어야 하는 것은 억울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각 정당대표, 청와대, 국방부, 병무청,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등에게 건의서를 보낼 예정이다. 이에 맞춰 각 단체에서도 건의서 발송, 성명서 발표 등으로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원해 줄 것을 부탁했다. 문의: 784-6037

근로자파견제는 노동자 판매사업

요즘 각 기업체에는 어느 용역회사에서 보급한 '번영의 파트너로 삼지 않으시렵니까?' 라는 책자가 나돌고 있다. 이 책은 "노동자를 파견하고 있으니 회사의 번영과 인건비 절감을 위해 사겠느냐?"며 "나이는 몇살이고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고 기능은 있으며 외모나 성품은 어떻다"라며 고르라 하곤 "일마 정도면 파견할 수 있으니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선전하는 노동자 판매책자이다. 이 책에 나온 것처럼 근로자 파견법은 노동자를 팔고 사는 것을 법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국회가 근로자파견법을 통과시키면 노동자에게 미칠 영향은 엄청나다. 어느 건설회사의 계약직 여성노동자(사무직)는 "언제든지 회사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회사측의 눈치만 살피야 한다"고 말한다. 또 강남 어느 병원에서 청소를 하는 아주머니는 용역회사 파견 노동자인데 새벽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을 하고 월급은 고작 30여만원을 받는다. 중간에서 용역회사가 병원으로부터 받은 임금을 공제하고 주기 때문이다.

이렇듯 근로자 파견제가 도입되면 현재의 특검업무(청소 혹은 특수직)에 한정되어 있던 용역이 직종 전반에 확대하는 것을 법으로 인정해 주게 되는 것이다.

근로자 파견법이 도입되면 첫째, 기업주가 언제든지 노동자를 해고시킬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충당할 수 있어 노동자의 생활을 파괴하고 고용불안을 가져올 것이다.

둘째, 노동자파견 용역회사에 의해 중간 착취(대략 25~30%)가 자행되고 파견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시달려야만 한다.

고용불안과 저임금, 이것이 근로자파견법의 본질이다. 그 외에도 열악한 노동조건, 노동강도의 강화, 빈번한 산재발생은 말할 것도 없다.

이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전국 각계각층의 민주인사들은 '근로자파견법 저지 공동대책위'를 구성하여 국회의장의 시위, 철야농성, 단식농성 등을 계획하고 근로자 파견법을 '현대판 인신매매'로 규정하여 강력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근로자 파견법,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우리에게 닥칠 현실이다.

-<민주항해>(현대증권업노조 노보) 987호 10월24일자

한통 노조 무기한 단식 회사, 농성장 폭력침탈

「한국통신 노조」(위원장 유덕상) 위원장단 12명이 23일 밤부터 회사측의 부당한 부서이동과 노조 전임자 수의 축소 등에 항의,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24일과 26일 아침 청원경찰을 동원해 천막을 부수고, 노조간부들을 폭행했다. 한편, 26일 농성장에 들른 종로경찰서장은 "이곳에 간첩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망발을 해 노조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 행사와 동정 ○

□ 토론회-노동자 정치세력화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27일(금) 오후3시 · 장소:기독교연합회관 중강당
· 주제발표:현정세와 사회운동세력의 대응(정대화)/민주노총 창립과 노동자의 정치세력화(김영대)
· 주최:민주노총준비위(☎765-2010)

□ 윤금이씨 3주기 추모제 및 제3회 민족자주의 밤
· 일시:28일(토) 오후6시 · 장소:기독교회관 2층
· 주최: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744-1211)

□ 전국연합 민주와 통일을 위한 기금마련 하루주점
· 일시:28일(토) 오후12시 · 장소:종로2가 파노라마(구 우미관 2층) · 문의:747-4364

□ 산재노협사무실 기금마련 하루주점
· 일시:28일(토) 오후12시
· 장소:구로 산재회관(☎667-2037)

□ 민주노총 창립축하대공연-우리 큰 걸음으로
· 일시:28일(토)-29일(일) 오후5시/ · 장소:연세대학교 노천극장
· 입장료:8천원 · 주최:민예총, 연세대 총학생회(☎ 326-1275)

□ 서울북부지역 자전거타기 한마당
· 일시:29일(일) 오후1시30분
· 출발장소:수유전철역 강북구청 앞
· 주행코스:강북구청앞-도봉로-쌍문사거리-노원역-방학로-도봉역-한천로-쌍문중학교
· 참가비:3천원(음료수, 기념티셔츠 포함)
· 주최:녹색교통운동 자전거사랑 시민의 모임(☎720-7879)

□ 외국인노동자 문화한마당
· 일시:29일(일) 오후2시 · 장소:연세대학교 강당
· 주최:외국인노동자 인권 10월공동행사회(☎032-668-0077)

□ 전국지역의보노조 창립1주년 기념행사
· 일시:11월2일(목)-3일(금) · 장소:경주 유스호스텔

□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대회
· 일시:28일(토) 오후2시 · 장소: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 주최:전국연합(☎ 747-4364)

□ 심포지엄-분단50년과 국가보안법
· 일시:11월1일 오후2시 · 장소: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
· 행사내용:국가보안법의 역사와 구조(리영희)/국가보안법과 군사문화(김훈)/국가보안법과 노동문제(허명구)/국가보안법 체제의 심리구조(조수성)/국가보안법과 북한보도(정일용)/국가보안법 현상과 마녀재판(박원순)
· 주최:한국인권단체협의회(☎ 715-9185)

□ 올바른 교육관계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 교육관계법 어떻게 개정해야 하나
· 일시:31일(화) 오후2시 · 장소:국회의원회관 사회의실
· 주제발표자:이영수(경기대교수)/김선경(대학강사노조 위원장)/김현준(전교조 정책위원장)
· 주최: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한 범국민연대회의(☎675-6181)

<이달의 주제-불처벌>

과거 인권침해의 해결에서 완전한 진실의 규명없는 처벌은 자의적 복수일 뿐이고, 진상규명없는 관용은 면책의 특례를 부여할 뿐이다.
-조세 잘라케(Jose Zallaquet)-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균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국민우롱', 노태우씨 사과 비난 빗발쳐 구속수사, 특별검사제 도입 촉구

노태우 전대통령이 27일 오전11시 비자금 5천억원을 조성하여 1천7백억원이 남았다며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자 이를 비난하는 각계 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5.18특별법국민비상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김상근등)는 "노씨는 유혈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강탈했던 5

공 쿠데타정권의 제2인자"라며 "신군부 쿠데타 세력이 엄청난 물리적 탄압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 여파로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회적으로 그늘진 사람들'에게 사죄는 커녕 자신의 속죄양으로 삼으려 한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지체없는 구속

수사를 통해 불법비자금과 전연비자금의 액수 및 사용처를 철저히 규명할 것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모든 예우를 중단할 것 △92년 대선자금문제와 해외은닉혐의에 대해서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준비위원회」(공동대표 권영길등)는 "대국민사과문 발표는 또 한번의 국민기만행위이다. 사과문 발표에 관계없이 즉각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경유착에 의한 검은 돈의 거래근절과 정상적인 기업활동의 장려, 그리고 법의 형평성에 대한 노동자들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돈을 받은 노태우씨는 물

엄격한 사법처리를 보장"할 것과 "돈세탁 방지를 입법화하여 불법자금의 조성, 유입, 사용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하자금의 세정을 예방, 추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의장 이창복)은 "노씨가 국민들의 진상공개요구에 대해서 자기변명과 불성실로 일관한 채 몇마디 심정적 수사로 그친 것은 다시 한번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사리사욕과 당리당락을 충족시키기 위해 조성한 불법적인 자금을 정상적인 통치행위에 사용했다고 미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또, 92년 대선자금에 대한 언급 회피는 현정부와의 목적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체없이 구속수사하고, △국회 국정조사권 발동 △국회청문회 개최 등 5,6공

부정비리에 관한 전면 재조사와 함께 정경유착을 청산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등)는 "이번 기회에 특별검사제를 도입, 정치권 핵심의 비리와 범죄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

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인권하루소식>의 긴급제언

노씨 전재산 몰수, 인권피해자 위해 써라

27일 노태우 전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여 운영하였음을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노씨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후 구속·수사와 더불어 엄중처벌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노씨에게 '성금'을 상납한 기업에 대한 조사, 92년 대선자금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노씨의 전재산을 몰수할 것과 국민의 혈세로 범죄자인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한다. 그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정치비자금을 조성한 것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며, 따라서 이를 자진헌납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런 불법비자금은 어디에 쓰여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국고에 헌납되어 또 다른 정치자금으로 쓰여지도록 할 것인가?

5, 6공 시절 정치탄압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양심수들과 그 가족들, 고문으로 인해 지금껏 고통당하는 고문피해자들, 부당한 정부에 대해해 민주주의를 외치며 산화해간 열사들과 유가족들, 그리고 재벌기업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었던 수많은 노동자들과 피해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한다. 이들에 대해 정부가 어떤 보상도 도움도 주지 못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위로와 제할을 위한 기금을 조성한다면 더럽게 모여진 돈이라도 깨끗하게 쓰여질 것이 아닌가.

오늘도 사회 곳곳에서 불우한 이웃들이 기본적인 권리조차 갖지 못하며,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고 있다. 또한,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 부상자들이 지금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원망을 하고 있다. 이들을 위해 노씨의 전재산은 몰수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제안한다.

인권활동가를 위한 제2기 공개강좌(6회) 한국노동문제의 유형과 내용(총괄)

강사: 하종강(한울노동상담소 소장)
· 일시: 10월28일(토요일) 오전 11시-오후1시
·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 서울역 하차 10분 거리)
· 수강료: 1강좌당 5천원
· 문의: 인권교육실 김수경 강사 (전화:715-9185)

충무로 미군난동사건 피해자 조정국씨 애국시민상 수상

지난 5월 충무로 지하철 미군난동사건 당시 미군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조정국(31)씨가 95년 애국시민상을 수상한다. 당시 조씨는 미군범죄 피해자로는 최초로 미군당국의 사과를 요구하며 지난 6월 용산 미군사령부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미군난동사건 당시 미군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조정국(31)씨가 95년 애국시민상을 수상한다. 당시 조씨는 미군범죄 피해자로는 최초로 미군당국의 사과를 요구하며 지난 6월 용산 미군사령부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노태우 사과하자, 간첩 잡혀” 하이텔에 올라온 ‘간첩의혹’ 발언

<편집자주> 최근 ‘무장공비’가 출현한 이후 컴퓨터 통신 하이텔에는 이를 못믿겠다는 의견이 많이 올라왔다. 이를 보면서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했던 목동 이야기가 생각난다. 이번 간첩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정확한 진상을 ‘알 권리’가 있다. 이에 하이텔 큰마음에 올라와 있는 의견 중 대표적인 것을 소개한다.

□ 노태우 사과하자 간첩이 사살되었다! 역시!!! 어떻게 타이밍까지 정확히 맞추면서...

· 일련의 방송: 11시 경 (노태우 사과 시점) 1. 간첩 사살되었다. 몇분(10분) 지나서 2. (사살된 것이 아니라) 총격전 중이다. 몇분(10분) 지나서 3. 총탄 3발을 맞고 이송 중이다.

벌써 사진(녹화?)이 나온다. 이번에도 첫번째 눈을 잡을 때와 마찬가지로 얼굴은 확실하게 가리는 구만. 총 3발을 맞았다는 눈을 자세까지 180도 바꾸면서. -허경희(900548)

□ 무장공비는 잡을 수 없다. 연희동 제 집에 버젓이 앉아있는 도둑놈도 잡아들이지 못하는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사방팔방으로 도주하고 있는 그를 잡겠다는 것인가? -김경아(KAFF89)

□ 박정권 때 가장 흔히 써먹던 수법이 무장공비 수법이지요. 민심이 동요를 일으키고 정권이 불안해진다 싶으면 멀쩡한 사람 간첩 만들기도 하고, 없는 간첩 만들어서 쓸 때 없이 균경 합동 수색이다해서 엄청난 국가 예산 낭비했다는 사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인데... 어떻게든 지금 가뜰이나 현 정권의 신뢰성이 완전히 땅이 아닌 지하 깊숙이 떨어질 것 같으니깐 궁여지책으로 옛날의 그 유서한 수법을 써먹는 한심한 꼴이라니... 그래도 이런 뉴스에 아직도 속은 우리 불쌍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언제나 사람대접을 받아 불려는지.

북한이 뭐가 답답해서 돈 들어가며 무장간첩을 보내겠습니까? 그것도 남자가 직접 말입니다. 지금도 하루에 수백명씩 밀입국자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쉬운 방법을 놔놓고 뭐가 답답해서 밤중에 도둑 고양이처럼 들어올까? 정말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네요...

-황성수 (dosa21)

운동본부는 “조씨의 활동은 미군범죄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미군범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회복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며 수상이유를 밝혔다. 운동본부에서는 조씨에게 오늘 오후6시부터 기독교회관에서 열리는 ‘윤금이씨 3주기 추모제’에서 상을 수여한다.

봉천동 성폭력 피해자 전철순 집행유예 선고

서울형사지법 6단독(재판장 권순일)은 27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봉천6동 철거민대책위 위원장 전철순(40)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 5월 철거민대책위 사무실에 찾아온 관악경찰서 소속 김성식, 김재홍 순경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한편, 전씨는 지난 4월 철거민대책위 사무실에 연탄재를 집어넣는 성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당시 전씨와 ‘전국철거

민연합회’, ‘전국연합’ 등은 철거용역회사인 적준용역(대표 정숙중)을 폭행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관악경찰서는 지난 8월 “적준용역이 폭력을 휘두른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리해 서울지검에 송치했다.

시민권리헌장 선포 사법의 공정성 감시 선언

「한국사법정의연구소, 「법률소비자연맹, 「소비자 연구를 위한 시민모임」 등 6개 단체는 27일 오후2시 소비자보호원 대강당에서 ‘시민권리헌장’ 선포식을 갖고 사법부 등의 시민감시를 선언했다.

이들은 시민권리헌장 전문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명예까지 좌우하는 사법의 현실은 공정성 보장을 위한 주권시민의 감시와 참여가 원천봉쇄되어 있다”며 이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고조되고 사법정의는 실종되어 총체적 부정부패를 촉발하였다”고 지적했다.

◇ 인권간행물 ◇

□ 자료집-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 주요내용:국내 외국인 인력상황의 문제와 그 대책/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시안

□ 자료집-파견근로의 실태와 정책방향-민노총준비위 (☎765-2010)
· 주요내용:파견노동의 신화와 현실/사무직 파견근로등 비정규고용실태. 82쪽.

□ 『사형제도금지운동자료집 2-사형·오판』-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인권위원회(☎741-4377)
· 주요내용:세계사형제도폐지현황/사형에 대한 윤리적 고찰/한국과 북한의 사형비교/고문/살인의 유형 등. 455쪽. 값 7천원.

□ 자료집-내일을 여는 열림터-성폭력상담소(☎576-7128)
· 주요내용:열림터 내담자의 심리적 상태와 운영실태/근친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후유증과 접근방법/성폭력 피해상담의 여성중심적 접근방법과 열림터의 필요성/집단상담의 효과와 외국 쉼터의 운영실태 등. 38쪽. 값3천원.

□ 자료집-진정한 노동해방은 산재추방으로부터-산재노협 (☎868-2379)
· 주요내용: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의 변화/직업병의 유형과 문제점/파로사 문제와 산재인정 투쟁/사고성 재해의 유형과 문제점 등. 60쪽.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균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영광 주민들, 핵발전소 감시 나서 방사능 계측기로 측정, 위험시 주민에 통보

「영광핵발전소 3,4호기 가동중지 및 5,6호기 추가건설 저지 결의대회」가 29일 오후4시 전남 영광 원자력발전소 정문 앞에서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신도, 「핵발전소·전남대책회의」, 「영광핵발전소 추방협의회」 등의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참석자들은 「영광핵발전소 감시단」(단장 박재완 신부) 발대식도 함께 가졌다.

대회 참가자들은 “영광 4호기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광4호기의 상업운전을 앞당기고 영광5,6호기의 연내 착공을 발표한 한편의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며 영광 3,4호기의 가동중지와 5,6호기의 추가건설 계획을 철회할 것을 한전과 정부에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집회 2부에서는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방사능 계측기인 가이거계수기를 감시단에게 증정했다. 감시단은 30일부터 원전 주변 방사능 수치와 영광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방사능 수치를 측정, 이상 발생시 주민과 언론에 알릴 계획이다. 영광핵발전소 감시단장 박재완(35, 천주교 영광성당 주임신부) 신부는 “영광 원전 4호기의 연로봉 사고는 원전 내부 핵심계통의 이상으로 대형 핵재앙을 일으킬 수 있다”며 “4호기

연로봉 복구과정에서 기술적 인 문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대량의 방사능 누출가능성이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인권하루소식> 10월4일자 참조). 이날 대회에는 광주지역의 천주교 신도와 환경단체 회원 등 5백여명이 광주 무등경기장에 모여 버스와 승용차편으로 영광으로 이동하여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또, 지난 1년간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 투쟁을 전개해온 굴업도 주민이 참석, 정부의 핵정책을 성토했는데 눈길을 끌었다.

실명제 개정 청원 ‘검은 돈’ 추적 쉽게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등, 참여연대)는 30일 오후 재정경제원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 개정청원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청원서에서 “긴급명령 제4조가 금융기관 또는 그 종사자들의 비밀유지의무를 지나치게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검은 돈’을 오히려 보호하고 있다”며 “불법자금의 추적을 쉽게하고, 불법자금의 배제와 금융기관의 신뢰회복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3년 8월13일자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를 발동, 금융실명제를 도입하였다.

비전향 장기수 복송 논의 복한, 판문점 회담 환영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위원장 박태호)는 남한의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승려 등)가 제안한 비전향 출소 장기수들의 송환을 위한 판문점 예비회담을 환영한다

측에 팩스로 보내왔다. 불교인권위는 지난 1월17일부터 비전향 장기수 김인서, 함세환, 김영태씨의 복송을 위한 불교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 9월26일에는 이들의 복송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불교도들의 판문점 회담을 제안하였다.

<알림>
매주 화요일자에 실리는 주간인권흐름과 주요공판안 내는 10월호 색인을 신개편 판례로 다음호에 게재합니다.

<광복 50주년 기념 인권 심포지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

· 일시: 95년 11월1일(수) 오후2시-8시
·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
· 주최: 한국인권단체협의회/성공회정의실천사제단/실천불교전국승가회/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민노총준비위/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 문의전화: 522-7284

사회: 이미경(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기조발제>(오후2시-2시50분)
자유·민주·진보·통일의 축세 국가보안법
-리영희(한양대 교수)

<주제발표>(오후3시-6시30분)
국가보안법이 우리 사회와 시민생활에 끼치는 영향

1부 국가보안법과 문화:악압과 이탈-김훈(<시사저널> 편집국장)/가부장적 군사문화가 여성의 삶에 미친 영향:변화순(사회학박사, 한국여성개발원 책임연구원)/국가보안법과 적색공포-오수성(전남대 심리학과 교수)/서양의 마녀재판과 국가보안법 현상-박원순(변호사, 참여연대 사무처장)

2부 국가보안법과 사회복지-김연명(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한국정치문화의 발달과 국가보안법-손혜적(정치학 박사)/국가보안법과 노동운동-허명구(<사람과 일터> 주간)/북한보도와 국가보안법-정일용(<연합통신> 기자)/국가보안법과 남북 인적교류상의 법적 장애-이장희(외대 법학과 교수)

<종합토론>(오후6시50분-8시)
국가보안법, 어떻게 할 것인가

<인권하루소식> 95년 10월분 총목차(496-515호)

호	월일	면	기 사 제 목
496	10/4	1	핵발전소 생존권 위협, 전남 영광 주민들 핵발전소 추방결의/10월 5.18 파고 더 거세진다, 내년 총선까지 지속적으로 정치쟁점화/한국여성의 전화등, 가정폭력방지 바자회/성희롱시민연대 결성, "잘못된 성문화 바로잡자"
		2	<자료>보안사 정치사찰은 위험, 서울지법 판결문 요약/주간인권호름
497	10/5	1	번3동 철거현장, 중앙서 경찰 대학생에 총기난사/여성단체 고용평등의 달 다양한 행사, 여성평생평등고용 확보 목표/박용길 장로 첫 재판 거부, "국보법으로는 재판 받을 수 없어"
		2	ARRC 태국에서 인권교육이 워크샵 진행, 참여자 중심의 인권교육 공동훈련/아디다스 인권교육 방법이란
498	10/6	1	외국인노동자 88명 산재보상 청구, '귀향모임' 1년여동안 피해 사례수집 결실/박장로 석방대책위 농성/전교조 충남지부, 자민련에 항의서한
		2	<자료>대한변협 서명운동 취지문-특별법 제정촉구 서명운동 동참을 바라며/상명여대 교수 5.18 특별법 성명
499	10/7	1	한국NGO위원회 북경세계여성회의 보고회, "여성의 평등실현 전략 마련"/할당제 여성연대, 2천년까지 여성고용 30% 실현요구
		2	<현장스케치>80일 맞은 5월단체 명동성당 농성장-특별법 제정때까지 무기한 농성/인권간행물
		3	<자료>북경 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 주요내용/제일교포 이성우씨 석방/전국연합, 5.18 국회위중수사 촉구/전해투, 국방부앞 시위
500	10/10	1	세계주거권회의의민간위원회 결성, 인간중심의 도시화와 주거권 확립 노력/미군군 주민물어, 미군처벌 성명 잇따라/5.18서명교수모임, 박교육부장관 발언 항의
		2	천주교인권위, 총회서 신자 대상 인권교육 결의/엠네스티 박용길 장로 석방 요구서철연 창립기념대회, 생존권 위협 단호대처/전철연, 5.18 투쟁 천명/주간인권호름
501	10/11	1	민변 검찰 5.18위중 불기소 결정 반박, 국회위중죄 국회고발없어도 기소 가능/석파이프 구속학생 구속적부심서 석방/여성고용할당제 기피 세추위안에 여연 반발/방위비 삭감 운동전개, 국회의원에 엽서 보내기
		2,3,4	<인권하루소식>5백호 발간 기념 좌담-인권과 인권운동의 현실을 진단한다
502	10/12	1	노태우씨 망언에 분노·규탄, 학살 면죄부 헌정권에도 책임/박창희교수 "전혀적 간첩" 검찰 무기징역 구형/인른계 6천4백여명, 5.18특별법제정 선언
		2,3,4	<인권하루소식> 5백호 발간기념 좌담-인권과 인권운동의 현실을 진단한다
503	10/13	1	유아교육 연대회의 결성, 유아교육 정부가 책임져야/전국 백여곳에서 5.18서명운동전개/민변, 최초로 가두시위 갖기로/총무로 폭행미군 첫 공판
		2	<함께걸음 통합교육 한마당 스케치>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504	10/14	1	서울등 전국 5곳 대규모 국민대회, 민주개혁 공동투쟁 결의다짐/김종태열사 묘지 망월동이장/전국연합, 노씨사과 학살책임 인정요구/이부영 의원 5년구형, 국보법 집시법등 결심
		2	참여연대 인도네시아 현지 조사결과 발표, 해외진출 한국기업 인권침해 심각하다/인권간행물
505	10/17	1	민변 5.18 특별법 제정 거리시위, 변호사단체 시국관련 최초 집단행동 서명운동도/한총련 학생 13명 민자당사 점거농성, 학살자 처벌 정권퇴진 주장/전정연, 명동성당서 시국기도회 촛불시위
		2	민주노총 사무실에 경찰 불법난입, 수배자 오인 자총련 김승호씨 연행/민교협·사교련, 비리사학 경영주체 바꿔야/주간인권호름

<인권하루소식> 95년 10월분 총목차(496-515호)

호	월일	면	기 사 제 목
506	10/18	1	여성단체 5.18 헌법소원·민자당사 시위, 의사2천3백여명 특별법 제정 촉구선언/전국연합, 김대통령 입장 반박, 국보법 철폐 주장
		2	<자료>5.18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학교수의견서(요약)-공소시효로 헌법적 파괴를 용인할 수는 없어/대전고법, 비전향장기수 변호인 집견처분취소 청구 각하/김승호씨 5시간만에 풀려나, 동대문서 수배자로 오인
507	10/19	1	인권협 국보법 국제심포지엄 11월22일 열어, 엠네스티·유엔특별보고관 등 세계적인 전문가 한자리에/충남대 자주대오 사건 12명 연행, 구금장소 안 밝혀져/민주노총(준), 경찰청 수배자 검거령 강력 비난
		2	<특별장의> 동양사상과 인권(신영복) ①-인권의 문제는 억압으로부터 출발한다/여연 고용보험법과 여성의 고용안정 토론회, 여성고용 안정위해 고용보험 적용범위 넓혀야
508	10/20	1	5세아연대회의, 5세아 입학은 아동에게 부담만 국민학교 빈자리 채우기 일뿐/포천주민대표, 군수면담중 연행돼/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더그망언 항의성명/충남대 자주대오사건 대공분실과 기무사에서 조사중
		2	<특별장의> 동양사상과 인권(신영복) ②-자유의 최고치는 평등
509	10/21	1	고용평등추진본부 발족 현장모니터 고발센터 운영, 시민단체 고용불평등 감시 나선다/박창희교수 징역 7년 선고, 학문 목적 접촉은 무죄
		2	박용길장로 일시 석방, 11월30일까지 삼성의료원 치료/위안부민간기금 모집활용 일본 자치노 홍보물 수거/5.18 4천여 수사촉구/이한열 열사 부친 운명/인권간행물
510	10/24	1	충남대 자주대오사건 구속자가족 조작 주장, "경기도 자술서 배겨 쓰라고 강요당해"/민교협, 근로자파견제 철폐 촉구 성명/각계원로 헌법 재판소에 5.18 의견서 제출/불교인권위 인권학교, 28일부터 일주일간 열려
		2	노씨 비자금 규탄 한 목소리, 5·6공 비자금 5.18특별법 제정촉구/사민청에 난데없는 프락치 소동, 프락치 판명 김주광씨 나타나/주간인권호름
511	10/25	1	천주교조작간첩대책위 다큐멘터리 제작, 조작간첩 교통스런 삶 영상으로 증인/문국진씨 항소심, 피고측 증인 "모른다" 일관/성폭력피해자 피난처 열림터 개설1주년, 친부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14명등 이용
		2	민주노총(준), 근로자파견법 입법저지 철야농성 돌입키로/조작간첩 다큐멘터리 주요내용-간첩이 되기까지 전과정 세밀하게 추적/전국연합, 노태우씨 항의방문/참여연대 전 검찰총장등 직무유기로 고발, 6공 비자금 알고도 은폐/장애인복지공대위 정책결정에 참여보장, 장애인 2% 공천 요구
512	10/26	1	민주노총(준) 공청회, 근로자파견제 '현대판 노예노동' 합법화/외국인노동자 공대위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요구, 29일 한마당 행사도/박용길장로 재판 무기연기
		2	<손종규씨 손배소송 관련 자료>제3차개입금지 국가상대 손배소송 제기, 유엔 인권이사회 결정문 공시도 요구
513	10/27	1	범국민비대위 결성, 5.18 특별법 국민항쟁으로 제정결의/철거폭력 또 발생, 무악동 주민 30명 부상
		2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군문제 해결촉구/한동노조 무기한 단식, 회사 농성장 폭력침탈/근로자파견제는 노동자 판매사업
514	10/28	1	'국민우롱' 노태우씨 사과 비난 빗발쳐, 구속수사 특별검사제 도입 촉구/<인권하루소식의 긴급제안> 노씨 전재산 몰수, 인권피해자 위해 써라
		2	총무로 미군노동사건 피해자 조정국씨, 애국시민상 수상/하이텔에 올라온 '간첩의혹' 발언, "노태우 사과하자, 간첩 잡혀"/봉천동 성폭력피해자 전철순씨, 집행유예 선고/시민권리현장 선포, 사법의 공정성 감시 선언/인권간행물
515	10/31	1	영광 주민들, 핵발전소 감시 나서-방사능 계측기로 측정, 위험시 주민에 통보/실명제 개정 청원,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북한, 비전향 장기수 복송 논의 판문점 회담 환영
		2,3	<인권하루소식> 10월 총목차 496-515호

(국립중앙도서관) 도서목록

번호	도서명	권수	비고
10001	조선사	10권	
10002	한국사	10권	
10003	중국사	10권	
10004	일본사	10권	
10005	서양사	10권	
10006	세계사	10권	
10007	한국문학	10권	
10008	중국문학	10권	
10009	일본문학	10권	
10010	서양문학	10권	
10011	세계문학	10권	
10012	한국역사	10권	
10013	중국역사	10권	
10014	일본역사	10권	
10015	서양역사	10권	
10016	세계역사	10권	
10017	한국문화	10권	
10018	중국문화	10권	
10019	일본문화	10권	
10020	서양문화	10권	
10021	세계문화	10권	

인권하루소식

95년 11월

(제516호 - 제537호)

<이달의 주제-불처벌>

과거 인권침해의 해결에서 완전한 진실의 규명없는 처벌은 자의적 복수일 뿐이고, 진상규명없는 관용은 면책의 특례를 부여할 뿐이다.

-조세 잘라케(Jose Zallaquett)-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민가협, 내무부장관·경찰청장 고소

“김선명씨 환영행사 원천봉쇄는 집시법 위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안옥희, 민가협)은 지난 21일 오후5시 경희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씨 환영의 밤' 행사를 경찰이 원천봉쇄한 것과 관련하여 김용태 내무부장관, 박일룡 경찰청장, 안병욱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집시법 위반, 불법체포 감금 등의 혐의로 31일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민가협은 고소장에서 “경찰이 집회 신고가 필요없는 순수한 문화예술행사를 단지 시위로 변질 우려가 있다는 자의적 판단으로 집회를 원천봉쇄한 것은 집시법 제3조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선명(70)씨를 자택에 감금하였고, 출소 장기수 한장호(73), 이두균(68), 권낙기(48)씨등을 연행, 납치해 경기도 등지를 끌고 다니다가 가택연금한 것은 경찰이 직권을 남용한 형법상 불법체포,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선명씨 집을 찾아간 고소인 이덕우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이를 가로막고 강제로 끌어낸 것도 직권을 남용하여 폭행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쇄하였고, 김선명씨 집 주변에도 수백명의 경찰을 동원해 20일부터 외부인의 접근과 김씨 집에 거주하는 출소 장기수들의 출입을 막았다. 민가협은 경찰이 행사장을 원천봉쇄하자 고려대로 옮겨 약식으로 행사를 가졌다.

고용평등법 개정 촉구, 근로자파견법 반대

여성단체, 여의도 집회·민자당사 항의집회

「남녀고용평등법내 간접차별, 직장내 성희롱 금지조항 신설과 근로자파견법 제정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이미경 등 3명, 공동위) 소속 회원 30여명은 31일 오전12시 여의도 국회앞에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촉구하고 근로자파견법 제정을 반대하는 시위를 가졌다.

인문계가 아닌 기업의 문제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에 책임을 지는 성희롱금지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집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가 파견법 제정을 강행하거나 고평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여성·노동계의 엄청난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고영구)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31일 내무부장관, 경찰청장, 관악경찰청장 앞으로 항의서한을 발송했다. 경찰은 행사 전날인 지난 20일부터 6천8백여명을 동원해 경희대 주변을 원천봉쇄하였고, 김선명씨 집 주변에도 수백명의 경찰을 동원해 20일부터 외부인의 접근과 김씨 집에 거주하는 출소 장기수들의 출입을 막았다. 민가협은 경찰이 행사장을 원천봉쇄하자 고려대로 옮겨 약식으로 행사를 가졌다.

5.18특별법 제정 촉구 한국교회협의회 특별기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오충일, 한교협)는 31일 오후 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에서 목사, 신도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18 특별법 제정 및 노태우씨 구속처벌을 촉구하는 특별기도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5.18특별법 제정 △민주화와 정의, 평화통일 △비자금 완전규명을 요구하며, 종로3가 탑골공원까지 거리행진을 했다.

한편,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소속 회원 50여명은 연희동 우정스포츠센터 앞에 모여 노태우씨 집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무산됐다.

주요 공판 안내

- 1일(수)
 - 류방상, 업무방해, 서울지법 형사 3단독, 317호, 10시
 - 황인성, 국보법위반, 서울지법 형사 3부, 319호, 4시
- 2일(목)
 - 정승우(법명 일력, 소쩍새마을), 재산국외도피, 서울지법 형사 21부, 311호, 10시
 - 이순덕, 국보법위반, 서울지법 형사 23부, 319호, 10시(선고)
 - 이부영, 국보법위반, 서울지법 형사 3부, 319호, 10시(선고)
- 3일(금)
 - 정미숙, 국보법위반, 서울지법 형사 23부, 311호, 10시
 - 이재훈, 국보법위반, 서울지법 형사 23부, 311호, 2시
 - 콜리나프랭크 외 1명(충무로폭행미군), 폭력법위반, 서울지법 형사 7단독, 421호, 2시

금융노련 박종에 여성정책실장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신인사제도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에 여성을 채용해 승진·임금등에서 간접적인 차별을 명시화 하고 있다”며 “남녀고용평등법(고평법)내 신인사제도, 비정규직 채용등의 간접차별 금지조항을 신설, 여성의 고용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녀고용평등의 달 마지막 날을 맞아 열린 이 집회에는 회사 유니폼등을 입은 직장인 30여명이 참가, 두 법안에 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집회를 마친 이들은 민자당사 앞까지 행진을 벌였다.

경찰은 행사 전날인 지난 20일부터 6천8백여명을 동원해 경희대 주변을 원천봉쇄하였고, 김선명씨 집 주변에도 수백명의 경찰을 동원해 20일부터 외부인의 접근과 김씨 집에 거주하는 출소 장기수들의 출입을 막았다. 민가협은 경찰이 행사장을 원천봉쇄하자 고려대로 옮겨 약식으로 행사를 가졌다.

또한,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최영애씨는 “여성들이 직장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직장내 성희롱”이라며 “이는 성희롱이 개

한편, 이미경씨등 공동대표들은 국회의원 홍사덕(노동환경위원회)씨를 만나 근로자파견법 제정 반대와 고용평등법 개정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스스로 하라
불의는
(호기심 - 호기심)

교육의 목적은 민주시민 양성 학생등 교육주체 권리 명시 요구

교육단체등, 교육개혁법 공청회 열어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한 범국민연대회의」(연대회의)는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수, 대학생등 1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올바른 교육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교육관계법의 문제점과 개정안을 제시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현행 교육법의 문제점으로 △헌법외법 구현 미흡 △교육권 개념의 미정립 △법률체계와 구조혼란을 지적했다.

주제발표에서 이영수(경기대 교육학과)교수는 "그동안 교육관계법 개폐는는 주로 학원단압과 통제, 정권의 정당화를 위해 정부·여당이 주도해 왔다"며 "현재 교육개혁의 목소리는 교육이 위기와 황폐화를 막을 수 있는 치료제"라고 교육법 개정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김현준(전교조 정책위원장)씨는 "교육관계법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부가 주도하는 입법이 아닌 교사, 학부모, 학생등 교육 당사자들의 토론을 통한 합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은 △교육목적은 민주시민 양성으로 할 것 △교사, 학부모, 학생의 권리 보장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강화 △유치원 1년교육 의무화 △대학 총(학)장은 대학교수협의회가 선출 △대학교수 제임용제 폐지 △사립학교 제정의 공개 △초·중등학교 장의 교무회의 추천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서대문경찰서장등 고소 전국연합, 불법감금 혐의

전국연합의 박기학(40, 정책실장)씨 등 실무자 6명은 31일 서대문경찰서장, 경비과장, 형사계장 등 25명을 폭력과 불법감금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박씨등은 지난 8월17일 서대문경찰서에 전날 있던 장충단공원 3차 국민대회 폭력진압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 경찰에 의해 28시간동안 감금 당했다. 이들은 다음날 경범죄, 도로교통법 위반등의 혐의로 즉심에 넘겨져 재판을 받았다.

<광복 50주년 기념 인권 심포지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

- 일시: 95년 11월1일(수) 오후2시-8시
-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
- 주최: 한국인권단체협의회/성공회정의실천사제단/실천불교전국승가회/전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민주노총준비위/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 문의전화: 522-7284

<기조발제>(오후2시-2시50분)
자유·민주·진보·통일의 축적 국가보안법
-리영희(한양대 교수)

<주제발표>(오후3시-6시30분)
국가보안법이 우리 사회와 시민생활에 끼치는 영향

<종합토론>(오후6시50분-8시)
국가보안법, 어떻게 할 것인가

주/간/인/권/호/름

(95년10월24일부터 29일까지)

<23일>(월)

신창균, 계훈제씨등 각계 원로 38명 헌재에 5·18의전서 제출 /민교협, 근로자파견제 철폐 촉구 성명 발표/서울·경기 78개 시민단체, 남부저유소 설치반대공사중단 허가취소등 청원

<24일>(화)

금호그룹, 국내 첫 성희롱예방 위해 처벌사규 시행/「국경선 없는 기자들」 창립10년, 구속연론인 석방운동 등 전개 /금호 노조위원장 손종규씨 '3자개입' 표현자유 침해 국기상대 첫 손배소송/부산 고신대 이동규 교수, "병원 절반이상 바뀌벌레 서식 병실 하나당 평균 16마리꼴" 논문 발표/참여 연대, 김도연 전 검찰총장등 비자금 은폐축소 고발/전국 3천2백여명의 방범원, 처우개선과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집단행동 결의/천주교조직원총회, 조작간첩 다큐멘터리 시사회 가져

<25일>(수)

기독교계 3만여명 '5·18특별법' 서명/철거반원 무악1구역 재개발조합 사무실 난입 세입자 폭행, 30여명 부상/검찰, 민변의 국회위증죄고발사건에 '공소권없음' 결정/민주노총(준), 근로자파견법 저지를 위한 철야농성 돌입

<26일>(목)

통계청 '94년 사망원인 통계' 발표, 국민 사망을 4년만에 증가 40대 남자 사망을 여자의 3배/전국 3백여개 재야시민단체 연대 5·18범국민대책위 발족, 특별법 제정 촉구

<27일>(금)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경기·인천 지역총학생회연합 의장 김명옥(26,아주대 기계4)씨 긴급구속/전국연합, 검찰위증죄 공소권없음 결정에 항의 성명 발표

<28일>(토)

도시빈민·농어촌 25개 공부방 중고생 1백36명 조사 가난한 중고생 68% "자살 충동"느낀다고 /민변등 37개 사회단체 참여한 '공동행사위', 외국인 노동자 '보호법' 입법청원/제주 일부학교 5·18서명 교사에 경위서 요구 교사들 반발/대한변협, 5·18 공소시효 적용할 수 없다고 발표/전남대 오성복씨, 비자금 규탄 시위도중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중상/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제3회 윤금이 추모제 가져/미 <뉴욕타임즈>, 필리핀 정부 마르코스 전 대통령 스위스은행 예금 비자금 인권희생자 배상 방침 보도

<29일>(일)

서울 연세대에서 외국인노동자 1천여명 참여, 한마당 행사 가져/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유족 3백여명, 서울시의 보상문제 적극적인 태도 합의 3일간 농성 풀어

<해설>

지난주는 온통 노태우씨의 비자금 문제로 전국이 떠들썩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중요한 외신 하나를 접할 수 있었다. 즉, 필리핀 정부가 독재자 마르코스가 스위스 비밀계좌에 숨겨놓은 5억분의 비자금을 스위스 은행으로부터 회수받아 그중 상당 부분을 마르코스 치하에서 좌익 등의 혐의로 검거돼 고문받았던 1만여명의 희생자들을 위해 쓸 방침이라는 것이다. 어찌 이런 일이 남의 일인가. 5·6공 치하에서 인권침해자가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가. 필리핀의 인권운동가와 정부가 독재자의 비자금을 찾기 위해 스위스은행까지 뒤흔치는 동안 우리는 검찰의 뻔한 수법의 늪에 돌아다니지는 않았는가 돌아볼 일이다.

<이달의 주제-벌치벌>

과거 인권침해의 해결에서 완전한 진실의 규명없는 처벌은 자의적 복수일 뿐이고, 진상규명없는 관용은 면책의 특례를 부여할 뿐이다.

-조세 잘라케(Jose Zallaquett)-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오는 4일 국민행동의 날

5.18비대위, 5.18 특별법·노태우 구속 촉구

노태우씨가 1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두, 조사받고 있는 가운데 10월 한달 동안 주춤했던 재야 사회단체들이 오는 주말 대규모 행동을 펼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의 2백98개 사회·시민단체가 모여 결성된 '5.18 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김상근 등, 5.18 비대위)는 1일 오전 10시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4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도시에서 '노태우 구속, 대선자금 공개와 5.18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행동의 날' 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5.18 비대위는 4일 오후3시부터 차량의 경적을 울리고 거리와 건물의 시민들은 손수건을 흔들거나 손뼉을 치면서 행진하여 오후4시 각 도시의 집회장에 집결할 것 등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국민행동의 날 선포문'에서 5.18비대위는 "노태우 부정축재사건으로 그 병산의 일각이 드러난 5·6공 쿠데타 학살세력들의 전대미문 규탄의 권력형 부정부패는 근본적으로 이들의 원죄인 유혈쿠데타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며 "5.18 유혈쿠데타의 진실을 규명하고 죄파를 엄정히 묻는 작업이 진행되기 전에는 역사의 왜곡을 바로잡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정권이 이들 5.18학살자들의 범죄에 대해 계속적으로 불기소 처분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직접적인 행동으로 노태우 구속, 대선자금 공개는 물론 5.18특별법 제정을 통해 5, 6공 군부정권의 청산과 민주개혁으로 가는 물꼬를 트자"고 호소했다.

또한, 5.18비대위는 이날 발표한 '노태우씨의 권력형 부정축재사건의 처리에 관한 우리의 견해'에서 △김영삼정권은 각종 6공비리를 축소, 은폐한 것을 국민에게 사과할 것 △수사사건, 동화은행 사건 등 6공 비리사건들을 전면 재조사할 것 △노태우씨의 부정축재 재산과 92년 대선자금을 확실히 공개할 것 △전두환, 노태우씨에 대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할 것 등을 주장했다.

들의 범죄에 대해 계속적으로 불기소 처분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직접적인 행동으로 노태우 구속, 대선자금 공개는 물론 5.18특별법 제정을 통해 5, 6공 군부정권의 청산과 민주개혁으로 가는 물꼬를 트자"고 호소했다.

또한, 5.18비대위는 이날 발표한 '노태우씨의 권력형 부정축재사건의 처리에 관한 우리의 견해'에서 △김영삼정권은 각종 6공비리를 축소, 은폐한 것을 국민에게 사과할 것 △수사사건, 동화은행 사건 등 6공 비리사건들을 전면 재조사할 것 △노태우씨의 부정축재 재산과 92년 대선자금을 확실히 공개할 것 △전두환, 노태우씨에 대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할 것 등을 주장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1일 오후3시부터 서울 서소문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태우씨의 구속, 92년 대선자금의 공개와 5.18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는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농성에는 이창복, 천영세 전국연합 의장을 비롯, 계훈제, 신창균 고문, 정해숙 전교조위원장, 이수금 전농의장 등 전국연

합 지도부 50여 명이 함께 했다.

전국연합은 오는 3일 낮12시 탑골공원에서 노태우씨의 구속, 대선자금의 공개와 5.18 특별법 제정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벌인다. 또한, 4일에는 5.18비대위가 주최하는 국민행동의 날 행사에 적극 참가하고, 11일에는 독자적으로 대규모 규탄집회를 갖기로 했다.

근로자파견법 반대 노태우씨 구속 촉구 민주노총 비상결의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공동대표 권영길 등 3명, 민노총준비위) 소속 단위노조 대표자 3백여 명이 1일 오전10시 국회 앞에 모여 '노태우씨 구속 수사 및 근로자파견법 제정 저지를 위한 비상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대표적인 권력형 부정축재자인 노씨는 물론 뇌물을 제공한 30대 재벌의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기업인들은 노씨에게 제공한 자금내역을 공개해 검은 돈 거래를 통한 권력유착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활동가를 위한 제2기 공개강좌(7회) 한국노동문제의 유형과 내용(각론)

강사: 허종강(한울노동상담소 소장)
· 일시: 11월4일(토요일) 오전 11시-오후1시
·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 서울역 하차 10분 거리)
· 수강료: 1강좌당 5천원
· 문의: 인권교육실 김수경 간사 (전화:715-9185)

부정축재자인 노씨는 물론 뇌물을 제공한 30대 재벌의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기업인들은 노씨에게 제공한 자금내역을 공개해 검은 돈 거래를 통한 권력유착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우협 의장등 긴급구속 홍제동 대공분실 조사

경찰청 보안국은 1일 오후4시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노우협) 김영곤(46) 의장과 박용식(33) 편집부장을 각각 집에서 연행, 긴급구속했다. 또, 전노협 문성현 사무총장은 오후2시30분경 민주노총(준)이 주최한 여의동 집회가 끝난 직후 연행되었다.

이들은 현재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노협과 노우협 회원 50여명은 이날 저녁 대공분실 앞에서 항의농성을 벌였다.

이들의 긴급구속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노우협 의장 김씨는 지난 6월 한국통신 노조 사태의 배후로 지목되어 구속되었다가 8월 집행유예로 풀려난 바 있다.

<지상중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1)

적색공포 조장, 인간정신의 불구성 심화

그동안 법적인 관점을 중심으로 논의 되어 왔던 국가보안법이 우리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여러 각도에서 조명해 보는 토론회가 1일 오후2시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한국인권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9개 단체 공동주최로 열린 광복 50주년 기념 인권심포지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는 여성, 정치, 노동,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 국가보안법이 피해자 개인에 미친 영향을 넘어 사회전체에 끼친 영향을 진단했다.

기조발제에서 리영희(한양대)교수는 "국가보안법은 특정 집단·계층·개인이 자신들의 통치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이는 과거 중세의 왕권통치와 같은 야만성을 보여주는 민주주의의 족쇄"라고 표현했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사람의 머리를 열고 그 안에 있는 사상을 재단해 스스로 자유롭게 생각하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사정시켰다고 말했다.

이교수는 국가보안법이 우리사회 최고의 가치를 반공으로 만들고, 심지어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복종을 미덕으로 삼게하고, 나눔의 아름다움보다 싸워서 쟁취하는 풍토를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연합통신 정일용 기자는 "북한관련 기사를 쓸 때마다 국가보안법이 뒷목을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어 제대로 쓸 수가 없었다. 또 북한과 관련해서는 기사의 기본인 사실확인이 불가능해 철벽 앞에 선 것 같다"며 기자로서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느낀 어려움을 토로했다.

박원순(참여연대 사무처장)변호사는 중세 마녀사냥과 국가보안법을 비교해 "마녀사냥의 피해자가 약한 여성이었다면, 국가보안법의 주된 피해자는 한 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일본교포나 가난한 남북이부들이었다"며 이들은 시대를 초월해 그대로 답답하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이번 토론회는 지금까지의 국가보안법 논의와 다르게 국민의 생활면에서 조목조목 짚었다"며 매우 유익한 자리로 평가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의를 일반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심포지

엄과 같은 전문가 중심의 행사가 아닌 대중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 심포지엄의 주요 내용을 2회에 나눠 실는다.

□ 억압과 이탈

-김훈(〈시사저널〉 편집국장)

최근 경기도 고양시 금정굴 유해 발굴 사건에서 보듯이 우리사회는 무고하게 학살당한 사람들에 대해 그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접어두고서라도, 심지어 산자가 죽은 자에 대해 배풀어야 하는 최소한의 의전적인 예우조차 수행할 수가 없다. 그들의 사체에 대해 문명사회로써 어떤 최소한의 의견을 표시하는 일조차 '우익단체의 반발'을 우려해 불가능하고, 그들의 유골을 결국 야산에 방치될 수 밖에 없는 이 사태의 무력함은 끔찍하다.

우리사회는 과거의 학살과 오늘의 침묵, 그 밑에 깔린 인간정신의 불구성에 관하여, 그리고 인간정신의 자랑인 문화전체의 불구성과 무기력에 관하여 아직 충분한 자기성찰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문화의 불온성이란 그 불온의 내용이 현실의 제도나 지배적 가치나 표현양식을 부인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불온은 현실의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 속의 삶을 더욱 역동적으로 긍정할 수 있게 되기를 꿈꾸는 불온이다.

국보법의 반세기는 현실에 대한 인간정신의 긍정과 부정의 상호작용을 파괴했고, 그 두 개의 국면을 적대적으로 분립시켜 놓았다.

국보법은 인간정신과 현실을 적대적 이분법으로 구획하고 있으며, 것처럼 구획된 인간관과 현실관을 인간의 정신작용에 적용해 왔다. 즉, 국보법은 화폭 속의 구도와 표상물 혹은 색깔들과 현실의 구도를 혼동하고 있었다.

이로부터 나타나는 문화현상이 억압과 이탈이다.

국보법이 상정하고 있는 세계관은 관측소 중심의 세계이다. 국보법의 체계는 방카의 구도와 흡사하다. 그

것은 좁은 관측구를 통해 세계 전체를 관찰하려 한다. 그 관측구멍을 통해 관측된 세계는 관측구의 논리와 가치를 통해서 재단되는 것이다. 한 점의 관측구와 관측대상이 되는 여타의 세계는 분리·단절되고 만다. 방카는 임시로 구축된 가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강고하고도 완강한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인간이 방카를 토대로 해서 역동적인 문화를 건설할 수는 없다.

문화는 그 방카를 문화자신의 힘으로 철거해낼 수 없을 때 방카의 관측권으로부터 스스로 이탈하려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 이탈의 문화적 현상을 현실에 대한 무관심, 무기력 그리고 퇴폐라고 생각한다.

국보법 적용의 50년 역사는 거기에 저항하려는 인간의 정신을 강화시켜 나간 측면이 있지만, 그로부터 이탈하려는 문화현상을 더욱 광범위하고도 보편적 현상으로 조장해 놓았다.

국보법의 여러 조항의 바탕에 깔린 인간관은 "너는 누구의 편이나"라는 질문제기방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국보법이 상정하고 있는 질문의 방식을 "너는 누구의 편이나"에서 "이같은 질문은 인간에게 타당한 것이냐"로 바뀌어야 한다. 그것이 문명한 사회를 염원하는 모든 자유인의 열망이기 때문이다. 또 그것은 질문이 지배하는 시대에서 인간의 정신은 현실에 대한 긍정과 부정을 조합함으로써 역동적인 문화를 건설해 나가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국보법과 적색공포

-오수성(전남대 심리학과 교수)

국보법은 반공이데올로기의 가장 강력한 물리적 담보이자 가장 효율적인 확산수단이었다. 그러나, 반공이데올로기가 이완되고 약화되는 현상을 보이면서 국보법 역시 개개의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국보법의 남용이 스스로의 목을 조르면서 반공이데올로기의 약화에도 기여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졌다.

(뒷면에 계속--->)

<지상중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1)

그러나 아직도 반공이데올로기는 여전히 맹목적인 반공과 반북·안보의식의 꽃을 피워내고 있으며 국보법은 무디어진 칼로 다수 국민의 가슴에 생채기를 내고 있다. 온 국민의 집단 무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 반공이데올로기는 자리잡고 있다.

전쟁 이전세대나 이후세대 모두에게 빨갱이라는 개념은 하나의 공포로 작용하고 있다. 30년에 걸친 군사정권이 자기의 정권유지 수단으로 반공이데올로기를 강화하면서 적색공포는 하나의 콤플렉스로 작용하게 되었다. 또한 우리의 정신구조의 모순과 긴장이 첨예하면 할수록 내적 적개심은 적색공포로 심화되어 갔다.

이는 '회색양이론'으로 설명된다. 이 이론은 어떤 집단이나 대상을 가상적인 적으로 상정하여 그들을 회색양으로 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통합성이 생기는 효과를 얻으려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대 통치자들은 북한 또는 북한 사람들을 회색양으로 상정하여 한국전쟁의 아픈 상처를 가진 남한 사람들에게 적색 공포를 조장함으로써 반공이데올로기를 창출하여 통합의 기제로 사용하였다.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회색양을 통해 좌절과 갈등의 돌파구를 찾고 정서적 긴장을 해소할 수 있다. 개인의 무의식에 적색공포가 잠재되어 있어 사람들은 회색양에 대해 내적 적개심을 투사하면 정서적 균형을 얻게 된다. 이것이 오랜 세월 지속되면서 또는 반

공 교육을 받게 되면서 하나의 공포로 작용하여 집단 무의식의 내용을 이루었다는 정도도 해 볼 수 있다.

반공이데올로기와 적색공포의 올바른 이해없이는 남한에 정착된 분단체계의 심층구조를 이해할 수 없다. 적색공포는 내면화되면서 냉전체제가 강제한 상호적대감의 삶의 존재양식을 형성해왔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 속에 그어진 휴전선을 우리 스스로 거둘 때 진정한 심리·정서적 통일의 기반이 만들어질 것이다.

□ 한국정치문화의 발달과 국보법

-손혁재(21세기프론티어, 정치학 박사)

국보법은 작게는 국민 개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로부터 시작하여 크게는 정상적인 정치활동까지 통제해 왔다. 그러므로 국보법은 국가안보보다는 실질적으로 정권을 반대세력으로부터 지켜주는 정권안보법의 역할을 더 충실히 했다. 국보법을 남용하여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적색혐오증(red complex)의 팽배로 정치활동은 위축되었으며, 보수·혁신 양당 구조의 정착을 억눌러 왔다. 결국 국보법의 남용은 용공음해와 한 쌍을 이루었다.

이승만 정권 시절 48년에 발생한 국회프락치사건이러든가, 58년의 진보당 사건은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기 위해 국보법이 적용된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만, 이때의 국보법 구속자 통

계는 부분적으로만 남아 있다.

61년부터 80년까지 국보법 위반자가 1천9백68명인데 비해 반공법 위반자는 무려 4천1백67명에 이른다. 이는 박정희 정권이 군사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이후 61년 새로이 강화된 반공법을 제정했기 때문이다. 또, 62년 국보법이나 반공법의 위반 사례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정치활동정화법을 만들어 정치인들을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며, 75년 이후 상대적으로 국보법으로 구속된 수가 줄어든 것은 긴급조치로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80년 신군부의 등장 이후 국보법은 반공법과 통합되어 보다 강력한 위력을 떨치게 된다. 80년부터 94년까지 국보법으로 구속된 이들은 3천6백3명으로 90년을 기점으로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된 자보다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된 수가 더 많아 역전되었다.

국보법의 적용은 선거 시기에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선거 시기에 일반적으로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이나 국민에 대한 직접적 통제를 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국보법 사건을 터뜨려 적색 공포증을 유발시킴으로써 사회의 전체적 분위기를 보수화시켜 선거에서 여당의 승리를 도와주는 구실을 하곤 했다. 이런 적색공포증을 유발하여 정적을 깨뜨리려는 행태는 현 정부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다. 광주시 이윤정 시의원과 오종렬 시의원 구속이나 외국어대 박창희 교수 사건, 6.27 지방선거 당시 조순 서울시장 후보의 좌익활동설 등의 유포가 그것이다.

국보법은 반민주악법의 상징으로서 집권자의 자의적 운용에 의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무단히 제약, 유린하였으며 고문과 용공조작을 일상화시켰다. 또, 불고치되는 국민들간의 상호감시, 밀고체제를 조장하여 인륜을 파괴하고 민족공동체적인 삶을 파괴시켜 왔다. 또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실제로는 체제와 정권의 유지, 확대를 위해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무소불능의 탄압도구로 악용되어 왔다.

대부분의 국보법 위반사태는 참혹한 고문등에 의한 조작사건이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국보법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독재를 지켜왔다는 사실을 이제 국민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

인권하루소식>의 긴급제언

노씨 전 재산 몰수, 인권피해자 위해 써라

1일 노태우 전대통령이 부정축재 혐의로 조사받기 위해 대검찰청에 출두했다. 그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 보다 단군 이래 최대의 도적답게 매일 축재를 위한 방법을 짜내기에 골몰했던 것 같다.

최근 외신보도에 따르면, 필리핀에서는 과거 독재자 마르코스가 스위스 은행에 감춰둔 5억달러를 환수하여 인권피해자들을 위해 쓸 계획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는 노태우씨가 부정축재한 재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5.6공 시절 정치탄압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양심수들과 그 가족들, 고문으로 인해 지금껏 고통당하는 고문피해자들, 부당한 정부에 대항해 민주주의를 외치며 산화해간 열사들과 유가족들, 그리고 재벌기업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노동자들과 피해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한다. 이들에 대해 정부가 어떤 보상도 도움도 주지 못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위로와 재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한다면 더럽게 모여진 돈이라도 깨끗하게 쓰여질 것이 아닌가.

이들을 위해 노씨의 전 재산은 몰수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제안한다.

<이달의 주제-불처벌>

과거 인권침해의 해결에서 완전한 진실의 규명없는 처벌은 자의적 복수일 뿐이고, 진상규명없는 관용은 면책의 특혜를 부여할 뿐이다. -조세 잘라케(Jose Zallaquett)-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대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법무부, 19명 사형집행

엠네스티 한국지부, 비난성명

법무부는 2일 오전 8시 사형선고를 받고 대기중이던 김기환(27), 강동근(23) 씨 등 '지존파' 6명과 은보현(38)씨를 포함한 19명을 사형집행했다. 이번 사형집행은 작년 10월6일 15명 사형집행 후 현정권 들어 두 번째다(아래 표 참조).

법무부는 "이들 주요 강력 사건 범인을 사형집행함으로써 범죄자들에게 법의 엄정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사회기강을 새로이 확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은 국민을 경악케 한 '지존파' 등 중요 강력사건의 범죄자로 죄질이 특히 극악 무도하여 집행을 보류·연기할 사유가 없는 흉악범을 사형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사형집행은 서울구치소에서는 오전 8시부터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광주교도소에서는 오전10시부터 집행되었다.

한국의 연도별 사형집행 인원을 보면 62-80년에는 매년 평균 19.5명이, 81-94년에는 11.2명이 사형되었

다. 이번 사형집행으로 남아있는 사형수는 43명이다. 한편,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신부)는 19명을 사형집행한데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사형제도는 세계인권선언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범죄예방의 기능도 가지지 못하고, 사형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비인간화시키며 오판의 가능성을 예방하지 못한다"며 사형제도의 폐지를 요구했다.

이번 사형집행은 노태우 씨의 비자금문제로 전국이 시끄러운 가운데 진행되어 정부가 사형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사형제도는 약 97개국(94년 12월 현재)이 폐지했고, UN이 이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어 계속 감소추세에 있다. 필리핀, 벨기에, 세네갈 등 사형은 존치하나 최근 10년간 집행하지 않은 국가는 21개국에 이른다.

형집행 장소 및 명단

집행장소	집행대상자
서울구치소	박성규(31) 이근호(45) 신민철(36)
	배진순(24) 김철우(24) 송정호(36)
	이두유(27) 이호성(35) 은보현(38)
	김기환(27) 강동근(23) 김현양(23)
	강문섭(21) 문상록(21) 백병욱(21)
	최명복(38)
부산구치소	김동식(33), 지춘길(52)
대구교도소	서혁빈(35)

민자당, 파견법 유보발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공동대표 권영길 등 3명, 민주노총(준))는 2일 민자당의 '파견법도입 유보발표'에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논평을 냈다.

민주노총(준)은 "이번 유보발표는 그동안 노동계와 여성계, 시민사회단체가 전개해온 강력한 투쟁과 반대 여론에 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근로자 파견법 강행을 주장해온 민자당이 최근 지구당에 배정받아 내년 총선에 나선 한국노총 박종근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도입유보를 발표한 것은 총선 지원을 위한 전략적 야합"이라고 비난했다.

인천연합,

부평경찰서 고소 예정

「민주주의민족통일인천연합」(인천연합)은 10월31일부터 11월3일까지 부평역 광장에서 「노태우 구속처벌과 518 특별법제정을 위한 무기한 농성」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부평경찰서측의 집회 불허로 진행하지 못했다. 경찰측은 「집회 및 시위를 들어 "천막을 설치하면 옥외집회라고 볼 수 없다"고 불허 이유를 밝혔다.

이에 인천연합은 "경찰의 논리대로라면, 천막을 치면 옥내가 되기 때문에 집회신고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며 "천막은 단지 농성을 하기 위한 시위 준비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에서 말한 '농성'이라는 용어는 시행령에 나오는 연좌시위와 거의 같은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금지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행사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명백한 위법"이라며 부평경찰서를 상대로 고소장을 준비중이다.

논리대로라면, 천막을 치면 옥내가 되기 때문에 집회 신고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며 "천막은 단지 농성을 하기 위한 시위 준비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에서 말한 '농성'이라는 용어는 시행령에 나오는 연좌시위와 거의 같은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금지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행사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명백한 위법"이라며 부평경찰서를 상대로 고소장을 준비중이다.

참여연대, 국회청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 참여연대)는 2일 오후2시 국회 사무처 청원관에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청원했다.

개정안에는 △범죄의 사실이 드러나 사법처리되거나, 반드시 사법처리되어야 할 사람에게 「전직」을 이유로 예우하는 현행법은 개정되어야 하며 △대통령 재임중 작성되거나 취임한 직무관련 문서와 자료가 공적으로 관리되지 않으므로 해서 야기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이러한 문서와 물건은 모두 공적으로 관리·보존될 수 있도록 법조문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이 퇴임후에도 국가의 원로로서 그에 마땅한 예우를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69년 1월 22일 법률 제2086호로 제정되어 시행되어 온 바 있다.

<지상중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2)

국보법 문제-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의 질과 직결

□ 북한보도와 국보법-정일용(<연합통신> 기자)

북한 보도 이미 한계상황에 도달

북한에 대한 보도는 앞뒤 맞지 않는 보도, 미확인 보도, 출처를 밝히지 않는 소식통 인용보도, 작문성 보도 등 엄밀히 말해 기사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갖가지 기사들이 거의 매일처럼 등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 북한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것처럼' 써야 하는 데서 무리한 기사들이 생산되고 이것이 독자들을 혼란 속으로 빠뜨리는 것이다.

언론사들도 북한 관련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그러나 폐쇄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이라는 외부적 요인과 '북한이라는 말만 나오면 신경을 한번 더 쓰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국보법, 북한에 대한 언론 내부의 고질적 편견 등 내부 요인이 겹쳐 언론사의 대북 정보 획득능력,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는 이미 한계상황에 도달해 있다는 문제가 있다. 언론이 다루는 북한의 정보는 내외통신, 국내 정보기구, 외신 보도, 해외교포 등으로부터 획득되는데, 간접 취재이기 때문에 이미 그 안에 한계가 내재되어 있다.

북한 핵문제, 김주석 사망, 김정일 권력승계 이상설 등은 우리나라 언론의 한계를 지나라하게 드러내 보인 것이다.

적대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객관과 주관, 공정과 편견이 종종 뒤바뀌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국보법이 강요하는 대북 적대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정확한 북한 보도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국보법 체제와 노동운동-허명구(<사람과 일터> 주간)

국보법은 법 이전에 하나의 체제라고 불러야 할 만한 것이다. 지배세력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상과 활동을 정치군사적 대립구조로 연결시켜 극도로 억압했기 때문이다.

전쟁과 분단의 체제를 집약적으로 표현한 것이, 적개심과 비이성과 맹목의 정념이 여과없이 법의 얼굴로 표현된 것이 국보법이다. 그것은 남한에서 '잡초'를 뽑아내어 북한에 대해 남한을 순백(純白)의 반대물로 만들고자 한 '배제(排除)'의 장치였다. 그런 점에서 비틀어진 분단한국의 특수 체제를 표현하는 말로 국보법 체제만큼 적절한 것이 달리 없을 것이다.

국보법이 노동운동 굴복시켜

이것은 사회구조의 모순 위에서 성장하는 노동운동에 중요한 장을 조성하였다. 왜냐하면 국보법적인 논리는 남한의 노동운동에서 특정인물, 특정조직과 특정노선을 철저히 배제하여 노동운동을 철저한 관제 반공 어용의 조직을 만드는 논리였기 때문이다.

60~80년대 노동조합원 중에서 국보법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국보법이 노동운동과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보법이 노동운동을 철저하게 굴복시켜 왔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48년 12월 국보법의 제정으로 노동조합평의회는 말살되었고, 58년 국보법 대폭적으로 강화된 뒤 노동운동 내부에서 대한노총에 도전하여 59년 전노협이라는 새로운 노동조합단체가 등장할 준비하고 있었다. 51절도 단지 공산주의자들이 축하하는 날이라는 이유로 폐지되었다.

60년 4.19로 국보법이 다소 완화되었을 때 대한노총은 해산되고, 한국노련이 결성되고, 교원노조 등 새로운 노동조합들이 결성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61년 5.16 군사쿠데타로 한국노련은 해체되고 한국노총과 산별노조가 만들어졌다. 전대일열사의 분신 이후 민주노조운동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YH 노동자들의 농성으로 박정희정권이 무너졌다.

80년 봄, 한국노총이 흔들리고 민주노조운동의 세력이 힘을 얻어갈 때 5.17 군사쿠데타가 일어났다. 이후 국보법은 반공법을 흡수, 대폭 강화되었다. 이 개정 국보법은 특별히 제17조에 국보법위반혐의자는 노동쟁의 중이

라도 체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6월항쟁 이후 국보법체제는 흔들리기 시작했고, 국제적으로도 냉전체제가 해체되면서 국보법체제의 정당화 논리도 약화되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득권 세력에게 위협적인 사회적 힘은 무엇보다도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노동운동이라는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국보법은 역설적으로 노동운동과 같은 실체적 힘을 갖는 운동을 단속하는 것이다.

국보법의 극복에 있어 핵심중 하나는 국보법의 최대 희생자인 노동운동의 이념과 노선 조직에 있어서의 자유, 노동운동을 옥죄어 온 국보법체제적 노동관계법령의 폐지, 노동운동에 대한 국보법적 피해의식을 넘어서는 일일 것이다.

□ 서양 마녀재판과 한국의 국보법 현상-박원순(변호사)

중세 서양인들이 마녀의 실체를 믿고 이들을 화형에 의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공동체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고 믿었듯이, 이 땅에서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빨갱이'의 존재와 이들의 사회에 대한 위협성을 믿고 이들이 국보법 때문에 처단되는 것을 지지하거나 방관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이러한 신념과 태도 때문에 수많은 동시대인들이 '빨갱이'로 몰려 '마녀재판'의 희생양이 되었다.

마녀재판과 국보법 재판의 대상은 주로 가장 약한 계층

① '중죄'의식과 공정절차의 실종-국보법이란 마녀사건이든 체제 자체를 부정하고 전복하는 중죄라는 생각은 바로 대량의 희생자와 극단적인 피해를 초래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정당한 재판절차마저 유린하는 근거와 배경이 되었다.

② 고문의 상용-마녀라고 자백한 경우는 많지만, 그 자백은 고문에 의한 것이다. 국가보안법 피해자에게도 늘상 고문이 가해졌다. 그 고문은 자백을 낳고 자백은 무고한 가족과 동료의 연쇄적 구속을 가져왔다.

(뒷면에 계속---->)

<지상중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2)

이른바 불고지죄까지 쳐서 한 간첩사건은 수명에서 수십명의 구속을 불렀다.

③ 수사관의 협박과 법정외 진술-수사관은 고문으로 마녀 또는 간첩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국보법 관련자의 경우 안기부 수사관이 검사실예까지 쫓아와 협박한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으리라는 희망도 포기해야 한다.

④ 이단 심문소와 정보부 또는 안기부-마녀제판을 담당한 이단심문소에서 적법절차나 피의자 권리가 존중되기를 바랄 수 없는 것처럼, 국보법을 다룰 수 있는 실질적인 상위기관인 안기부 통제 아래 사법부가 놓이게 되었다.

⑤ 연약한 계층의 피해자-마녀제판의 대상은 주로 어린 소녀나 중노년의 여성이었다. 국보법 피해자 역시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계층 출신이 많았다.

국보법은 현재진행형의 비극

⑥ 중형의 선고-마녀와 국보법 위반은 다 함께 체재유지에 위해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중죄로 간주되었고 중형으로 다스려졌다. 국보법 사건의 사형 선고 인원과 반공법 사건의 사형선고 인원이 60년부터 87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선고된 전체 사형선고 인원의 17.1%, 5.6%를 각각 차지함으로써 그 비중이 절대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사형이 아니더라도 무기, 징역 10년 이상의 장기형이 쉽게 선고되었다.

광기와 광란의 시대는 그로 인한 희생자를 낳게 마련이다. 집단적 히스테리에 빠진 사회와 국가가 그 구성원을 해칠 수 밖에 없다. 바로 서양의 마녀제판과 우리의 국보법 소동이 바로 그러한 사실을 증명한다. 서양의 마녀제판이 오랜 과거의 일임에 비하여 국보법 재판은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바로 우리의 비극이다. 과거 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의 비극이다. 서양에서는 마녀제판을 통해 선진적인 사법제도를 이룰 수 있었다. 이제 우리도 야만적인 주술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

□ 냉전, 국보법, 사회복지 김연명(상지대 사회복지학과) 한반도에서의 냉전체제는 남한의 국

보법을 잉태했고, 국보법은 냉전체제를 강화·지탱하는 도구 작용했으며, 이러한 상호작용의 과정이 남한에서 사회복지의 저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첫째, 한반도의 냉전체제는 남북한에게 군비경쟁을 유발시킴으로써 경제규모에 비해 과도한 국방비 부담을 수십 년간 지속하게 만들었고, 이러한 과도한 국방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사회복지비에 투여될 수 있는 재정을 극도로 제약해왔다. 한국전쟁 이후 남한에서 생성된 경제여여의 너무나도 많은 부분이 군사비로 투여되어야 했으며, 이것이 사회복지등 인간의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국가예산을 만성적으로 제약하는 핵심적 원인으로 수십 년간 작용해 왔다.

의료보험 도입마저 불온시 당해

둘째,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냉전체제는 남한에서 사회복지가 성장할 수 있는 이념적 토대를 제거하는 기능을 해왔다. 예를 들어 70년대까지만 해도 의료보험을 도입하자는 주장조차도 매우 '불온시' 당한 것이 현실이다.

셋째, 냉전체제는 남한에서 노동운동을 비롯한 진보적인 사회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정치적 조건을 박탈해 버림으로써 서구에서 나타나는 사회복지 확대의 중요한 경로, '즉 노동운동의 활성화-->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사회복지의 확대'라는 경로를 40년 가까이 차단시켜 옴으로써 사회복지의 발전을 저해해 왔다.

국보법 문제의 해결은 분명 우리 사회에서 냉전체제의 강고한 벽을 결정적으로 허무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냉전의 해체는 방위비 감축의 실제화, 사회복지 이데올로기의 확산 등을 통해 사회복지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형성시켜 줄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가 좀더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반 사회적, 물질적 조건을 형성시켜 줄 가능성이 상당부분 담보해줄 것이다. 즉, 국보법의 문제는 단순한 인권의 문제가 아닌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인 것이다.

기사재보는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로

○ 행사와 동정 ○

- 한국도시연구소 개소 1주년 기념 심포지엄-전환기의 도시, 새로운 방향의 모색
 - 일시:3일(금) 오후2시
 - 장소:여의도 중소기업회관 대회의실
 - 주제발표:위기에 처한 한국도시(권태준) 등
 - 문의:701-9004
- 95년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역사기행
 - 일시:4일(토)-5일(일)
 - 출발장소:신촌지하철역 그랜드마트 앞
 - 오후3시
 - 회비:4만원
 - 문의:763-2606
- 전태일열사 25주기 추모식
 - 일시:5일(일) 오전12시
 - 장소:마척 모란공원 전태일열사 묘소
 - 출발지:5일(일) 오전 9시30분 동대문운동장 앞
 - 문의:765-2010
- 민주노총 건설과 청소년 노동자 특별법 제정을 위한 '95청년문화제 - 일어나라 전태일
 - 일시:5일(일) 오전12시
 - 장소:동국대 학림관
 - 내용:작은하늘 콘서트/청년음악경연대회/청년의 선언 등
 - 주최:진보민청(☎ 822-5817)
- 참여연대 국제연대포럼-아태시대는 오는가
 - 일시:6일(월) 오후7시
 - 장소:참여연대 회의실
 - 주제발표:APEC의 현황과 문제, 전망(김기환)/APEC과 연관된 아-태시민주의 동향
 - 문의:796-8364
- 우리농업지키기 기금마련을 위한 작은 자리
 - 일시:4일(토)-5일(일)
 - 장소:건국대 학생회관
 - 주최:전국농민회총연맹(☎ 529-6347)
- 심포지움-지방자치선거와 여성운동
 - 일시:10일(금) 오후2시
 - 장소:한국여성개발원 회의실
 - 주제발표:지역활동과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이경숙) 등
 - 주최:한국여성민우회(☎ 269-5763)
- 통일맞이 자료실 개소식
 - 일시:11일(토) 오후5시
 - 장소:기사리 빌딩 1층
 - 내용:자료실 취지 및 소개/박용길 장로 방북 비디오상영
 - 문의:313-8201
-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직원 공채 녹색교통운동이 날로 심화되는 교통문제를 풀어나갈 의욕적인 일꾼을 찾는다. 정보통신을 담당할 사람도 찾고 있다. 관심 있는 사람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해 11월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720-7879.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태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이부영 의원 의원직 상실

국보법 실행 선고, 상고 포기

서울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이우근부장판사)는 3일 국가보안법(찬양, 고무 등) 위반 혐의로 파기환송된 정역5년에 자격정지5년이 구형된 민주당 이부영 최고위원에 대해 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상고를 하지 않을 경우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선거법 12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피고인이 국가보안법, 집시법, 정간물등록에 관한 법,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죄로 기소돼 이중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받았을 뿐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만큼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이외의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심리할 수 없다"고 전제 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자사에 사실조회를 의뢰, 새로운 증거를 확보, 제출하자 했으나 이 기관에서 제출한 증거가 피고인의 혐의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대법원의 판단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년여 동안 복역한 점과 국회의원의 딱딱한 일경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는 등을 감안, 원심의 자격정지 부분을 파기하고 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야인사인 김근태, 장기표씨등은 물론 부정비리관련자에 대해서도 사면복권이 이루어진 만큼 본인을 사면복권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정식으로 사면복권을 요구했다. 또 이 의원은 "사면복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정치 보복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김영삼 대통령은 하루속히 낡은 냉전 시대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함과 아울러 빠른 시일내에 이부영의원을 사면복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민련 의장으로 제임하던 지난 89년 범민족대회 추진, 현대중공업 노사분규 개입, <전민련 신문> 발행 등의 활동 때문에 의원등 국회의원 10여명이 참석, 재판을 방청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12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바 있고, 이번 재판부의 판결을 검히 수용해 항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에 당당히 사면복권을 요구하

전국에서 '학살자 처벌' 시위

5.18비대위, 오늘은 국민행동의 날

'5.18학살자 처벌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가 선포한 국민행동의 날을 하루 앞둔 3일 전국에서는 학생과 사회단체들의 집회, 서명운동 등이 잇따라 열렸다. 성균관대에서는 4천여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오후 4시부터 한총련 주최의 '학생의 날 기념식'이 열

렸다. 학생들은 '학살자 처벌', '노태우 구속' 등을 외치며 오후7시30분부터 종로 일대에서 2시간 가량 거리시위를 벌였다. 또 전국연합, 경실련, 민주수호뿌리회 등이 집회와 서명운동을 벌였다.

광주에서도 학생 3천여명이 오후 5시부터 금남로 일대에서 시위를 벌였다.

국민행동의 날 집회장소

지역	개최장소	지역	개최장소
서울	종로공원	광주	도청앞 광장
인천	부평역 광장	목포	목포역 광장
부산	부천역 광장	대구	대구백화점 앞
성남	성남시청앞 광장	진주	진주성문 앞
수원	수원역 광장	마산	삼성생명 앞
안양	안양역 광장	울산	주리원백화점 앞
청주	중앙공원	부산	천우장 앞
대전	대전역 광장	제주	관덕정 앞
전주	다가공원		

인권활동가를 위한 제2기 공개강좌(7회) 한국노동문제의 유형과 내용(각론)

강사: 하종강(한울노동상담소 소장)
· 일시: 11월4일(토요일) 오전 11시-오후1시
·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 서울역 하차 10분 거리)
· 수강료: 1강좌당 5천원
· 문의: 인권교육실 김수경 강사 (전화:715-9185)

엠네스티 긴급행동

19명 사형 한국정부에 항의

한국정부가 2일 사형수 19명을 사형시킨 것과 관련하여 '국제엠네스티'(엠네스티)는 3일 한국정부를 강력히 비난하고, 회원들에게 항의편지를 쓸 것을 요청, 긴급행동에 들어갔다.

엠네스티는 "한국정부가 어떤 경고도 없이 사형집행을 단행했다"며 "특히 19살에 언행되어 24살에 사형집행된 김철우씨는 경찰수사 중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 그의 불공정 재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다. 또 "한국에는 50명의 수감자가 사형대기중이었으며, 이들은 수감을 찬 채 24시간 생활하고 언제 사형 당할 지 모르는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엠네스티는 회원들에게 "김영삼대통령과 안우만 법무부장관에게 특히 19세 수감자의 사형집행에 항의하고, 사형제도의 폐지를 촉구"하는 내용을 편지나 팩스로 긴급하게 보내라고 요청했다.

한편, 2일 사형이 집행된 19명중에는 21세인 강문섭 씨를 비롯 20대가 9명이나 포함되었다.

<5.18문제와 관련한 김영삼 대통령의 발언들>

검찰 믿을 수 없어 특별검사제 도입돼야

<편집자주> 김영삼 대통령은 야당 총재 시절 5.18 문제 해결을 천명곤 했다. 그는 심지어 89년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5공문제를 검찰에게 믿고 맡길 수 없다"며 '특별검사제' 도입까지 주장했다. 최근 노태우씨의 부정축재 문제와 함께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5.18문제와 관련, 김대통령의 발언을 추적해 본다.

□ 앞으로 다시는 전제같은 사람이 이 나라에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이런 엄청난 일을 해놓고는 그냥 못 넘어간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겨야 된다. 또 누가 보든지 5공비리와 광주문제에 핵심적으로 책임있는 사람이 책임져야지 그것이 안되고는 절대 '안정'이 될 수 없다.

-민주당 총재시절 중앙일보(89.3.13)

□ 5공청산은 광주문제, 5공비리등 5공정권이 공권력의 남용, 부정행사로 양산한 온갖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리를 의미하며 이는 대통령의 기본적 직무다... 현정권이 만약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도 5공청산을 하지 않을 경우 헌법 제65조에 의거, 대통령 직무수행상의 모든 법률위반을 들어 탄핵소추 발의를 준비할 것이다.

- 민주당 총재시절 부산 기자회견(89.9.3)

□ 정부는 특별검사제가 3권분립에 위배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제까지 검찰의 수사결과를 보면 도저히 검찰을 믿고 맡길 수가 없다... 5공청산을 위해서는 특별검사제가 도입돼 전국민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 민주당 총재시절, 일요신문 신년인터뷰(89.1.1)

□ 한국의 민주주의가 숨쉬고 있는 광주에 와서 맨 먼저 저 망월동에 누워 있는 우리의 아들딸과 형제 자매의 고귀한 민주주의 정신에 고개를 숙인다

- 92년 대통령 후보로 유세차 광주에서(92.12.3)

□ 80년 5월 광주의 유혈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오늘의 정부는 광주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있는 민주정부다.

- 5.18관련 대통령 특별담화(93.5.13)

노동운동 탄압 중단 촉구 노운협, 3일 성명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노운협)는 3일 이 단체의 김영곤의장, 박용식 전 편집부장, 문성현 전노협 사무총장의 구속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노운협은 △군사사건을 조작하여 노동운동을 탄압하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할 것 △군사독재의 잔재인 국가보안법, 노동악법 등 제반악법을 철폐할 것 등을 촉구했다.

김씨들은 지난 1일 경찰청 형사들에 의해 긴급구속, 3일 국가보안법과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들은 노운협 기관지인 월간 <노동운동>에 게재한 글과, 노운협의 강령, 92년 북한 직업총동맹에서 일본의 군국주의와 관련하여 보내는 팩스전문,

한국통신 사태등 노사분규의 배후조정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창원대 총학생회장 연행 경남도경, 국보법 위반혐의

지난 10월30일 마산창원지구총학생회연합(마창총학생연합)의장 홍승준(26세, 창원대 총학생회장)씨가 마산 합포구에서 도경대공분실 소속 경찰들에 의해 연행, 구속되었다. 홍씨는 사전구속영장이나 수배가 내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창원대총학생회는 불법연행이라고 항의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북한에 '통일방안'에 대한 팩스들 전송한 문제와 9월29일 5.18총력기 투쟁때 화염병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두고 조

◆ 인권간행물 ◆

- 「더불어 사는 세상」-시드니 민족교육문화원
 - 주요내용:이민자들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호주속의 한인사회, 그 위상 강화를 위한 출발 등. 42쪽.
- 자료집-교육관계법 어떻게 개정해야 하나
 - 주요내용:교육관계법, 어떻게 해야하나(이영수)/교육관계법 개정안/교육관계법 대학부분 개정안 등. 41쪽.
 - 주최: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한 범국민연대회의
- 「국제엠네스티」 10월호-AI한국지부 (☎053-426-2533)
 - 주요내용:광복50주년 기념 한·일 인권세미나/제22차 국제대의원총회 결의사항/정의를 위해 국제형사재판소를 설립하자/일본의 사형제도(2)/남북한에 대한 엠네스티의 관심/인권교육을 위한 게임 등. 19쪽.
- 자료집-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 (☎715-9185)
 - 주요내용:국가보안법과 문화·역사와 이탈(김훈)/국가보안법과 적색공포(오수성)/서양의 마녀제판과 국가보안법 현상(박원순)/북한보도와 국가보안법(정일용) 등. 125쪽.
 - 주최:한국인권단체협의회, 민교협, 여연, 참여연대 등
- 「우리네아이들」-지택연(☎275-8505)
 - 주요내용:긴급논단-만5세가 조기입학, 어떻게 할 것인가/지상강연-아이들을 살려야 한다(이오덕) 등. 55쪽.
- 자료집-한국사회발전과 노동조합의 과제
 - 주요내용:세계화시대, 한국의 노동권(이광택)/노동운동과 사회적 관심(조돈문)/더욱 강조돼야 할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임삼진)
 - 주최:YMCA, 경실련, 녹색교통운동, 민변 등.

<이달의 주제-불처벌>

과거 인권침해의 해결에서 완전한 진실의 규명없는 처벌은 자의적 복수일 뿐이고, 진상규명없는 관용은 면책의 특혜를 부여할 뿐이다. -조세 잘라케(Jose Zallaquet)-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경찰, 전 전대협 간부등 3명 긴급구속 "부여 간첩 만나고도 신고하지 않아"

북한에서 납파된 간첩을 만났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전 전대협 간부등이 긴급구속됐다. 서울경찰청은 5일 저녁과 6일 오전 8시경 '자주평화통일 민족회의' 전 조직부장 함운경(32)씨, '전대협동우회' 회장 이인영(31, 전 고려대 총학생회장)씨, '청년정보문화센터' 소장 이상호(33, 전 연세대 총학생회장)씨 등 3명을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 혐의로 긴급구속, 장안동 대공분실에서 조사 중이다.

6일 오후 이들은 접견한 임종인 변호사는 "한 청년이 전화를 걸어와 다방 등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그가 북한을 잘 안다고 해서 이상한 사람이라고 해 채 5분도 만나지 않고 일어서 나온 적이 있다"며 "이들이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이라고 생각할 수 없어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반해 경찰은 "지난달 충남 부여에서 군경과 총격 김동식(33)을 조사한 결과, 김이 이들과 만나 자신의 신분을 밝혔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9월2일경, 함씨와 우씨는 9월26일과 10월초에 각각 약 5분에 걸쳐 김씨를 만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앞서 지난주에는 노운협의 김영곤의장등 3명이

국가보안법등으로 구속되었고, 3일에는 권영해 안기부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의 답변에서 "부여 무장간첩이 재야 운동권 인사들을 만나 신분을 밝혔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다"며 재야인사들을 조사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재야운동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지난 92년 남부조선노동당 사건과 같이 대규모 조직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한편, 6일 오후 민가협 회원 5명과 전대협동우회 회원 10여명은 장안동 대공분실 앞에서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민가협 회원들을 경찰차에 태워서 망우리에 내려놓기도 했다.

또, 경찰은 이날 저녁 이씨의 집과 우씨가 소장으로 있는 청년정보문화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이씨의 집에 서는 약 2시간 동안 수색을 벌였으나 증거가 될 물건을 못 찾고 빈손으로 돌아갔으며, 청년정보문화센터에서는 회지 <새날열기>와 회의문건등을 압수해갔다.

전대협동우회 오영식(30)씨는 "공안당국이 청년운동의 지도자들을 북한과 연계시켜 이미지를 훼손하려 한다"며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매년 이런 공안사건을 터뜨리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청년단체들은 오늘 오후 2시 세실레스토랑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장안동 대공분실에 항의하러 갈 예정이다.

전태일 25주기 추모식 이번주 영화 시사회

지난 5일 전태일열사 25주기 추모식이 마석 모란공원에서 유가족, 청계피복노동, 민주노총(준)등 1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특히 이날 추모식에는 전태일열사 묘소에 최근 완성되어 개봉을 앞둔 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필름과 포스터가 봉헌되어 눈길을 끌었다.

전태일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는 "25년동안 소원해오던 영화가 완성되어 기쁘지만 한편으로 조금이라도 잘못되어 기다려준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영화를 위해 힘써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또한 열사와 고락을 같이한 삼동회 회원

들과 최종인씨등 역대 청계피복노동 위원장들이 참가, 어려웠던 당시를 회상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준)은 전태일열사 25주기를 맞아 결의문을 발표하고 "전태일 정신은 25년이 지난 지금 민주노총건설의 정신으로 새롭게 살아 오고 있다"며 민주노총 건설, 사회개혁 쟁취, 근로자 파견법 저지 등을 결의했다.

한편, 우리나라 최초의 국민성금으로 제작, 1년6개월 만에 완성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시사회가 오는 7-9일 오후8시 씨네하우스, 13일 오후2시 피카디리극장 소극장에서 열린다. 박광수 감독이 연출하고 홍경인, 문성근씨가 주연한 이 영화는 오는 18일 전국 동시 개봉된다.

주거권 쟁취 국민대회 개최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회원 7백여명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고수부지에서 '95 주거권 실현 국민대회'를 열고 △강제철거 중단 △세입자 주거권 보장 △주택예산 35% 이상 증액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 주요 공판 안내 ●

- 8일(수)
 - 정봉철 외 1명, 국보법위반(계급투쟁동맹), 서울형사지법 22부, 425호, 10시, 선고
- 9일(목)
 - 안호상 외 1명, 남북교류법위반, 서울형사지법 10부, 318호, 3시
- 10일(금)
 - 문순덕 외 6명, 국보법위반(계급투쟁동맹), 서울형사지법 23부, 311호, 10시, 선고
 - 강종숙, 국보법위반, 서울형사지법 9단독, 317호, 4시

<특별기고>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한국정부
범죄자와 무엇이 다른가?

오완호(국제엠베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참담한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한국정부는 인명경시의 측면에서 범죄자와 다른 것이 없는 것 같다. 방송을 통해 '지존파 등 19명 사형 집행'이란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리에 수많은 물음들이 떠올랐다. 왜 비밀리에 사형집행시켰는가? 무엇을 두려워 하였는가? 법무부장관은 심지표를 해서 사형 대기자 50명중 19명을 선택한 것은 아닌가?

많은 인권단체들이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사형의 잔인함과 비인간성을 한국정부에 지적하였음에도 19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불시에 사형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국제인권기준과 국내의 여러 경험과 연구결과에 근거해 볼 때 사형은 세계인권선언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형벌이다. 사형은 결코 범죄 예방의 기능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오판의 가능성도 예방하지 못한다. 또한 사형집행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비인간화시키며, 정치적 또는 사회적 목적으로 정부에 의해 이용되는 측면이 많은 형벌이라고 거듭 충고하였음에도 한국정부는 이례적으로 많은 숫자를 사형시켰다. 법을 수호하기 위한 이유도 아닐 것이다.

도리어 난 묻는다.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는 사형을 집행했는가를 말이다. 노태우씨의 비자금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19명의 목숨을 끊어버린 이유는 진정 무엇인가 말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사형으로 현 시국에 풀린 국민적 관심사를 희석시키려 했을까?

아니면, 국민들을 향해 함부로 까불면 안된다는 경고를 하려 한 것일까?

94년 12월 현재 사형은 세계의 절반인 97개 국가에서 이미 폐지되었으며, 사형폐지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UN인권위원회의 이사국이자 UN안전보장비상임이사국이 되기를 희망하는 한국정부가 사형폐지를 향한 UN의 권고사항을 계속해서 무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도 대통령이 기독교인이어서 사형집행에 신중을 기할 줄 알았는데 이른바 문민정부라서 생명을 귀히 여길 줄 알았는데 과거 정부와 아무런 차이도 없다. 눈에는 눈, 귀에는 귀로 통하던 구약시대도 아니고, 중세시대도 아니다. 20세기 말의 한국은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인간을 동아줄에 목매달아 죽이는 것 외에 다른 형벌을 부과하는 방법을 몰랐다는 점을 우리들의 후손들은 어떻게 이해할까?

아버지를 살해한 교수 아들들은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같은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돈없는 사람들이 유독 사형 집행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광주에서 시민을 수없이 학살한 자들은 어떤 재판도 받은 바도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너무나 참담하다. '사회가 답다'라는 지존파의 독설이 나를 전율하게 한다.

<알림>

4일자 2면에 실린 <5.18문제와 관련한 김영삼 대통령의 발언들>은 <뉴스플러스> 창간호에서 인용했음을 밝힙니다.

주간/인/권/호/름

(95년10월30일부터 11월5일까지)

<10월30일>

경남경찰청, 창원대 총학생회장 홍승준씨 국보법 위반으로 긴급구속/참여연대, 부정자금 추적 가능하도록 금융실명제 긴급명령 개정 청원/중국, 공안요원 15만명 증원계획 발표/일본 도쿄지방재판소, 음 진리교 해산 명령

<10월31일>

북한 불교연맹, 불교인권위의 출소 비전향 장기수 3명 송환 판문점 회담 제의 환영/재정경제원과 내무부, 전자주민카드 98년부터 17세 이상 전국민에 확대키로/기독교계 1천5백명 특별기도회, 노태우씨 구속·5.18특별법 제정 촉구/민간, 김선명씨 환영행사 원천봉쇄 관련 내무부장관·경찰청장 등 고소/나주농민 50여명, 수배확대 요구 전남도청앞 차량시위/나이지리아 군정 정부, 환경파괴와 인권탄압에 맞서 싸워온 반정부 지도자 9명에 무더기 사형선고

<11월1일>

노태우씨, 검찰 출두 16시간 동안 부정축재 관련 조사/전남경찰청, 북한 학생과 팩스로 편지 주고받은 광주대 학생회 간부 백형훈씨 구속

<11월2일>

법무부, 지존파등 19명 일제히 사형집행/서울 동대문경찰서, 민주노총(준) 계파 압수수색/경찰청, 노우협 문성현 지도위원, 김영근 의장 등 3명 국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민자당, 근로자파견법 유보키로/유엔총회, 미국의 대쿠바 금수조치 해제결의안 가결/국제엠베스티, 19명 사형에 대해 한국정부에 항의 긴급행동 돌입

<11월3일>

작곡가 윤이상씨 독일 베를린에서 향년 78세로 운명/한미안보회의, 내년 주한미군 방위비 증가율 10% 증액 합의/노동부, "민주노총은 법외단체", 신고서 반려 방침/서울지법 형사 항소3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 이부영의 원에게 국보법 위반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전국 53개대 학생의 날 맞아 노태우씨 구속, 5.18특별법 제정 등 촉구 집회와 시위/권영해 안기부장, 국회 정보위에서 재야운동권 부여 무장간첩 전속 혐의, 재야인사들에 대해 국보법상의 불고지죄로 조사중이라 밝혀

<11월4일>

5.18비대위 주최 국민행동의 날 집회 전국서 열려, 노태우씨구속·5.18특별법 제정 촉구/이탈리아 검찰, 부정비리 혐의 크락시 전총리에 8년형 구형/일본 오키나와현 오타지사, 미군기지 재계약 불가 입장 총리 담판에서 밝혀

<11월5일>

이스라엘 라빈 총리 유태인 극우파 청년에 피살돼

<해설>

지난 3일 안기부장은 국회에서 부여에서 생포된 간첩과 접촉한 재야운동권 인사들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안기부장의 이 말은 간첩과 연결하여 공안사건을 만들 것임을 예고 하는 것이었다. 부여에 나타난 간첩이 생포된 이후 운동권과의 관련성이 노태우씨의 부정축재 문제로 떠들썩한 상황에서 그 틈을 비집고 가끔씩 얼굴을 내비치더니 경찰은 노우협의 간부들을 구속했고, 어제는 전 전대협 간부들을 긴급구속했다. 당국이 정치적인 위기를 공안사건으로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이처럼 정권의 위기가 도래할 때마다 터졌던 과거의 간첩사건들을 생생히 기억하기 때문이다.

<이달의 주제-불처벌>

과거 인권침해의 해결에서 완전한 진실의 규명없는 처벌은 자의적 복수일 뿐이고, 진상규명없는 관용은 면책의 특혜를 부여할 뿐이다.

-조세 잘라케(Jose Zallaquett)-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이적성 수사에 강력 항의

민주노총(준), 명동성당 무기한 농성돌입

11일 공식출발을 앞두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공동대표 권영길 등 3명, 민주노총(준)에 대해 당국이 문성현(운영위원)씨를 구속하고 은행계좌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적성 수사를 내세우는 등 탄압강도를 높이고 있어 큰 마찰이 예상된다.

6일 경찰청은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노우협)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이 단체가 "민주노총 결성을 주도해 왔다"며 민주노총(준)의 이적성 여부에 대해 수사를 할 것을 밝혔다. 또 노동부, "민주노총은 법외단체", 신고서 반려 방침/서울지법 형사 항소3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 이부영의 원에게 국보법 위반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전국 53개대 학생의 날 맞아 노태우씨 구속, 5.18특별법 제정 등 촉구 집회와 시위/권영해 안기부장, 국회 정보위에서 재야운동권 부여 무장간첩 전속 혐의, 재야인사들에 대해 국보법상의 불고지죄로 조사중이라 밝혀

이와 함께 경찰청은 노우협이 지난해 8월 민주노총(준) 간부수련회등을 통해 "기업법 노조를 철저히 청산해 계급적 단결을 실현하자" 등의 반제·반자본주의 혁명론을 이념노선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일에는 민주노총(준)이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1인당 1만원 모금하고 있는 건설기금은 기부금품 모집법 위반이라며 은행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민주노총(준)은 이에 대해 "민주노총이 마치 불순단체의 수주를 받고 있는 것처럼 꾸며 국민적으로 음해하고

탄압하기 위한 구태의연한 술책"이라며 경찰청장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경찰의 이러한 움직임으로 불매 창립대회 봉쇄 등 전면적인 탄압이 예상된다"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건설기금 모금, 창립대회, 노동자대회는 강행할 것"을 결의했다.

노우협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노우협은 노동운동단체들의 협의체로 노동조합연합체인 민주노총과는 아무런 조직적 관련이 없다"며 경찰은 노우협이 민주노총 결성을 주도했다는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어 "경찰이 7년전부터 공개적으로 활동해온 단체를 민주노총 창립일을 얼마 앞둔 시점에서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이 단체 활동도 중지한 문성현씨를 구속한 것은 조직임을 뚜렷이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노총(준) 간부 40여명은 7일 오후2시 최근 당국의 △민주노총 탄압중지 △노태우씨와 뇌물제공 기입인 구속 △5.18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 노동조합을 보호·육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이를 탄압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이들은 9일, 농성중인 명동성당 앞에서 정부의 탄압

에 항의하는 대중집회를 여는 한편 경찰청, 검찰청 항의방문도 계획하고 있다. 이날 노우협도 "경찰의 발표는 명백한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민주노총(준)의 농성에 합류했다.

한편, 민주노총(준)은 지난해 11월 조직되었고, 현재 9백50여개 단위노조가 가입했다. 이들 단위노조 가운데에는 한국통신, 현충리, 대노련 등 굵직한 대규모 노조들도 포함돼 있다.

불고지죄 구속 정치공작 청년단체들 철야농성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의장 유기홍) '전대협동우회'(회장 이인영) 등 10개 청년단체들은 7일 오후2시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고지죄로 긴급구속된 우상호씨등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연행된 3명이 부여간첩이라는 김동식씨를 만난 사실은 있지만, 모두 김동식에 대해 '이상한 사람 또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기관원'등으로 의심하여 곧바로 자리를 뒀다"며 "경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김씨를 주장하는 것처럼 김씨를 발표하고, "우상호씨등 3명을 연행한 것은 국민들의 노태우씨 부정축재 파문에 대한 공분과 5.18특별법 제정 요구 등을 외면하고 사회적 시선을 다른 곳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찰이 권영해 안기부장의 발언 직후 전격적으로 이들을 연행한 것은 짜맞추기 수사"라고 비난했다.

이들이 김동식씨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내년 4월 총선과 노태우 부정축재 사건으로 여야 정치권 모두가 국민의 비판대에 올라있어 집권세력들이 정치적 수세에 몰려 있다"며 "청년세대와 청년운동에서 지도적 역할을 해왔던 사람들을 불고지죄라는 혐의로 연행한 것은 성장하고 있는 청년운동에 대한 정치공작의 일환"이라고 비난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청년단체 회원 50여명은 오후3시50분 부터 1시간여동안 장안동 대공분실 앞에서 정치공작 분쇄 등의 구호를 외치며 피켓팅을 벌였다.

한편, 청년단체들은 전대협동우회 사무실에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7일 밤부터 항의농성에 들어갔으며, 오는 10일경 청년단체 연대대규모 항의집회를 갖는 등 지속적으로 집회와 경찰청 항의방문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과 '불고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등)는 7일 성명을 발표하고, "우상호씨등 3명을 연행한 것은 국민들의 노태우씨 부정축재 파문에 대한 공분과 5.18특별법 제정 요구 등을 외면하고 사회적 시선을 다른 곳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찰이 권영해 안기부장의 발언 직후 전격적으로 이들을 연행한 것은 짜맞추기 수사"라고 비난했다.

<특별기고①>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군 징집문제 빨리 해결되어야
박종석(대우중공업 조선부문 인력2부)

국방의 의무와 병역특례제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20대 젊은이는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병역의무는 사회적인 신분을 획득하기 위한 통과례로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 왜 군대갔다와야 사람된다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한편에서는 고의적으로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이도 적지 않으나 병역기피라는 장기간의 수배생활과 고통받고 있는 병역특례 해고노동자들은 고의적인 군기피자가 아니다. 병역특례제도는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군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일정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서 3년간(93.1.1이전 5년간) 근무하면 군복무를 대신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하에서 병역특례자들은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가 해고되면 군대가야 하는 병역특례자의 신분을 악용한 회사측에 의해 생존권보장,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다가 해고되고 동시에 현역병 징집영장을 받기 받았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3D업종기피로 인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전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병역특례자는 항상 해고의 위협속에서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박탈, 유린당하고 있다 할 것이며, 실제로 5.6공 정권하에서 해고된 사람은 80여명에 이르며, 그중 강제징집된 사람은 15명 가까이 된다.

특혜인가? 강제노동인가?

현재 군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병역특례해고자는 모두 11명으로 대우정밀 8명, (주)풍산 3명이다. 이들은 해고되기전 회사에서 5-6년간 일했으며, 특례의무복무기간도 2년 10개월에서 4년 6개월 가량 마쳤다. 하지만 해고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동안 일했던 부분은 쟁그리 무시되고 징집되어야만 한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며 임연연기요청도 해보았지만 병력수급계획상 차질이 생길 뿐만 아니라 임연연기사유가 안된다며 거부당했다. 이에 군기피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들은 장기간 사회로 부터 격리되어 4-6년이상이라는 기나긴 군기피의 수배생활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보통사람의 시각에서 보자면 병역특례자들은 군 복무대신 월급도 받으면서 자신을 일을 계속할 수 있으니 특혜를 받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해고되었으면 군대가야지 군대갔으면 벌써 재대했지 않겠느냐고 안타까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해고되면 군대가야 하는 병역특례제도는 본래의 취지인 기술인력의 활용이라는 당초의 목적과는 반대로 오히려 자본가에게 통제가능한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노동력을 사용자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한국정부의 전투경찰 차출은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한 사실을 놓고 볼 때 병역특례자들은 결코 특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노동과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헌법상 국민의 병역의무와 강제근로금지, 노동삼권이 조화되지 못한 군사적인 노예로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보복적인 해고와 징집영장

조수원씨 그는 군기피자다. 학교에 다닐때 기능올림픽에도 참가하는등 조국 근대화 기수라는 구호아래 열심히 기계와 기름과 씨름하며 기능을 익혔고, 결국은 가정의 어려운 조건 때문에 월급도 받으면서 군복무를 대신할 수 있는 방위산업체인 대우정밀에 입사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조수원씨는 91년 6월 노동조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한 뒤 군기피자로 전락하고 말았고, 당시 회사근속년수는 5년 9개월, 특례의무복무기간 4년 6개월가량 마쳤다. 6개월만 더 근무하면 군복무를 마칠수가 있었던 상태였다. 조수원씨외에 함께 근무했던 사람들중 생존권보장과 근로조건 개선요구를 하다가 무려 17명 해고, 1백여명이 넘게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당했다. 한편 89년 1월 풍산금속 안강공장에서 병역특례자로 일하던 한규식씨는 특례보충역 만기 2일을 앞두고 해고되어 징집영장이 발부되

었고, 같은 회사 김성철씨는 89년 1월 30일 회사로 부터 해고당했으나 해고통지서는 그해 2월 4일날 수령했는데 징집통지서는 2월 3일날 먼저 집에 와 있었다.

가족들의 고통은 이제 그만

황용범씨, 역시 군 기피자로 수배생활중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렇지만 경찰의 위협 때문에 돌아가신 아버님을 뒤로 하고 눈물을 삼킬 수 밖에 없었고, 신이철씨는 이미 허약해져대로 약해진 몸으로 병원문을 수도 없이 두드리지만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대부분이 나이도 27세-30세 가량되어 임연적령기는 물론 취업연령도 초과되어 군에 징집될 경우 사회에 적응하기란 엄청난 시간과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요즘 경찰들은 시골집에 가족들을 찾아가 '아들들 군대에 빨리 보내라'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와라' '군대에 안가면 가족이 처벌 받는다' 등으로 위협하면서 강제적, 보복적으로 병역특례 해고자들을 징집시키려 하고 있어 현 정부의 도덕성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호에 계속)

홍중희 이감 서명운동 전개
원주 교회협 인권위, 민주정년회

지난해 6월 구국전위사건으로 구속, 징역 3년6월의 형을 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인 내일신문 원주지국장 홍중희씨의 이감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원주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원주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와 '원주민주정년회'는 "전주교도소로 면회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시간과 10여만원의 경비가 필요한데, 전자제품 대리점 주부사원으로 일하며 3살난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부인 홍순애씨에게는 극심한 고통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홍씨 가족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하루만에 면회를 다녀올 수 있는 곳으로 이감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지역주요 인사 1백여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영화 전태일 시사회 연기

7일부터 3일동안 시내하루스에서 열릴 예정이던 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시사회가 공론의 심의가 끝나지 않은 관계로 일주일 연기되었다.

<이달의 주제-불처벌>

과거 인권침해의 해결에서 완전한 진실의 규명없는 처벌은 자의적 복수일 뿐이고, 진상규명없는 관용은 면책의 특례를 부여할 뿐이다.
-조세 잘라케(Jose Zallaquett)-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균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기업별 노조 극복 산별노조체계로

민주노총 11일 창립대회 준비 완료

한국 노동운동 역사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준))이 갖는 의의는 매우 크다. 87년을 거쳐 꾸준히 성장해온 노동조합이 투쟁성과 자주성, 민주성과 평등성을 바탕으로 노동자대중조직으로 탄생하는 것이다. 이제 민주노총은 87년 노동자 대투쟁, 90년 전국노동조합협의회 결성과 임종회의, 91년 대기연대대회, 93년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등을 거쳐 작년에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1년여 만에 공식 출범하게 된다. 지난 5월까지 민주노총에 가입된 노조를 보면 전교조·사무노련 등 15개 업종조직 6백74개, 11개 지역조직 4백79개, 현충련·대노협·기아노련 3개 그룹조직 50개 총 가입노조수 9백7개, 가입조합원은 40만3백15명에 이른다.

대규모 노조 거의 가입

민주노총의 전신인 전노대 소속 노조는 7백71개였다. 이 노조들이 그대로 민주노총에 가입했다해도 지난 1년동안 새로 가입한 노조는 1백36개로, 40%의 높은 조직신장률을 보였다. 나아가 오는 11일 출범을 전후로 가입노조가 확대돼 올해말까지 조합원 5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한국노총에 가입한 노조는 4천4백26개로 전체 노동조합의 69.7%에 달하고 있고, 어디에도 가

입하지 않은 중립노조는 1천8백35개이다. 출범을 앞둔 민주노총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재정자립이 필수라고 보고 50억원을 목표로 조합원 1인당 1만원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오랜기간의 준비와 탄탄한 밑받침을 받고 출범하게 될 민주노총의 미래와 사업방향을 결정할 강령과 규약, 조직체계는 11일 창립대회의 대회에서 결정된다.

기업별 노조에서 산별노조로

민주노총은 출범후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조직운영을 첫째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과제는 지금까지의 기업별 노조체제를 산별노조체제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산별체제로 가기 위해 먼저 노동법 개정투쟁을 벌여 제3차개입금지, 복수노조금지 조항등의 철폐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러한 민주노총 창립에 대해 정부는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민주노총의 조직대상이 한국노총과 중복돼 노조신고증을 교부할 수 없다"며 법외단체로 규정했다. 또한 경찰도 "민주노총 출범을 앞두고 불법 노사분규와 관련해 수배된 노조간부 등이 각종 노사분규에 개입해 노사갈등이 우려된다"며 권영길 민주노총(준)

공동대표와 이승필 마창노련 의장 등 소속 노조원과 간부 등 수배자 19명에 대한 검거령을 내린 바 있다. 또 지난 1일에는 문성현 운영위원을 국가보안법과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정부 탄압 극복 선결과제

심지어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전노운협)를 이적단체로 몰고 이 단체가 민주노총 결성을 주도해 왔으며 민주노총의 이적성 여부를 대해 수사할 것을 밝혔다. 민주노총을 과격, 불순, 국가전복 단체로 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 관계자들은 민주노총이 수적으로는 한 국노총에 뒤져있을지 모르나 조합원 3만명이 넘는 대 기업노조들이 참여하고 있어 그 영향력은 누구도 쉽게

게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민주노총은 출범과 함께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내고 국제자유노련(ICFTU)에 가입, 국제적 지위를 인정받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동법 개정 투쟁과 사회개혁 투쟁 등 지금까지 벌여왔던 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정부가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등 탄압이 계속하더라도 "강화된 단위의 노조의 조직력을 바탕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합법성 쟁취투쟁을 전개하겠다"는 결의를 밝히고 있다.

노동탄압 연대성명
철거민연합 제안

'전국철거민연합'은 8일 민주노총의 출범을 앞두고 노운협 소속 간부들을 국가보안법과 노동쟁의조정법으로 3명을 구속하고, 5명을 수배한 것은 명백한 노동탄압이라며 이에 대한 재야단체 연대 성명을 제안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766-5564로 연락하면 된다.

인권활동가를 위한 제2기 공개강좌(8회)
동성애자의 인권

-동성애란? 동성애의 실태, 그리고 인권문제
강사: 서동진(천구사이, 회장)
· 일시: 11월11일(토요일) 오전 11시-오후1시
·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 서울역 하차 10분 거리)
· 수강료: 1강좌당 5천원
· 문의: 인권교육실 김수경 간사 (전화: 715-9185)
* 강사의 사정으로 취소되었던 '판례로 본 국가보안법' 강좌가 오는 12월23일 마지막 강의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강의는 조용환 변호사가 하게 됩니다.

<특별기고②>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3년 농성 해결기미 안보여

박종석(대우중공업 조선부문 인력2부)

복직합의가 되어도 복직할 수가 없다 병역특례 해고노동자들은 93년 9월부터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특히 목숨을 건 38일간의 삭발·단식농성등을 통해 삶의 희망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실패로 돌아 가고 지금은 극도로 쇠약해진 몸을 이끌고 또다시 원상회복을 위한 몸부림을 펴고 있다. 해고되고 수배된지 4-6년이 흘러간 지금! 무엇보다도 희망으로 다가오는 것은 회사와의 복직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대우정밀 병역특례 해고노동자들은 회사와 지난해 94년 5월 복직합의를 하고 대우중공업 조선부문 특수선사업부로 인사발령을 받았다. 처음엔 복직합의서를 쥐고 이젠 됐구나 싶었더니 병무청에서는 해결불가 입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복직합의서에 희망을 실었던 병역특례 해고노동자들은 또 한번 목매어 울고 말한다.

병역법시행령 개정 청원 제출

이러한 상황에서 병역특례 해고노동자들은 95년 4월24일 박형규(제일교회)목사의 사회각계인사 4백98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의원 정대철, 이철의 13인의 소개로 「병역법 시행령 136조의 개정을 통한 병역특례 해고노동자의 제2국민역 편입에 관한 청원」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현재 청원은 국방위원회에 계류중이다. 구체적인 해결방안으로는 병역특례의무복무 3년 이상자는 제2국민역에 편입시켜주고, 3년 미만자는 잔여기간 근무 후 제2국민역에 편입시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10월6일 병무청 국정감사때 이철 국회의원은 병역특례 해고노동자는 그 수가 소수라 하여도 구시대적 피해자를 원상회복시키는 차원에서 학생징집대상자들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학생징집대상자 징집문제 해결

이미 94년초 학생징집대상자(4백여명)들은 병역법시행령 136조, 부칙 8조의 부분개정을 통해 수행기간, 나이, 학교졸업년도 등의 기준을 적용

하여 정상적 사회복귀, 대국민화합차원에서 정부의 노력으로 징집문제가 해결되었다.

3년여 넘게 군 문제 해결 촉구 농성 현재 병역특례 해고노동자들은 민주당사에서 무려 3년여동안 군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며 단식농성, 서명운동, 탄원서제출, 국회청원 등 여러방법을 동원하여 노력하였다. 또다시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자며 서로를 달래고 있으나 가중되는 고통의 나날은 연속되고 있다. 최근엔 주위의 해고노동자들과 함께 일했던 지역의 직장동료들이 연일 민자당사 앞에서 피켓시위 등을 벌이고 있고, 각 사회·민중단체에서 엽서, 편지, 건의서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대책과 해결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현 정부의 조속한 결단만이

이제! 현 정부가 진정한 문민정부라 자칭한다면 과거정권하에서 발생한 피해자들의 조속한 원상회복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해야 한다. 결코 짧지 않은 기간간 수배생활동안 대부분 혼기를 놓치고 부모의 임종도 보지 못하는 등 고통과 건강상상태도 상당히 쇠약해진 상황에 처해 있는 병역특례 해고노동자들의 군문제를 문민정부하에서도 그대로 방치한다면 진정한 개혁은 물거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현 정부는 더 이상 병역특례 해고노동자들의 징집문제 해결을 미루어서는 안된다.

문제많은 병역특례제도에 대해서도 병역특례자가 해고되더라도 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송기간동안엔 징집을 연기하여 쌍방간의 올바른 변론과 더불어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리를 주어야 할 것이며, 회사측과 복직합의가 되면 곧바로 현장으로 복귀시키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유독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 냉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현 정부는 병역특례 해고노동자들에 대해서도 해고되기전 근무기간, 특례의무복무기간, 나이, 복직합의 등을 감안하여 법리적인 재단보다는 정치적으로 고

려되고 과거청산, 대국민화합,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들이 그토록 보고 싶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생산현장에서 땀흘리며 열심히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조속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끝-

11일 전국에서 2차 국민행동 돌입 5.18비대위, 비자금·5.18문제 결함

「5.18 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 (상임공동대표 김상근등, 5.18비대위는) 지난 4일 1차 국민행동을 한데 이어 오는 11일 오후3시 전국에서 제2차 국민행동의 날 행사를 갖기로 했다.

5.18 비대위는 지난 4일 1차 국민행동의 날이 전국의 17개 지역에서 진행되었고, 예전과는 달리 사전 홍보로 많은 시민들이 참가했다고 자체 평가하고, 노태우씨의 권력형 부정비리 문제와 5.18 문제를 적극 결합시키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행동을 하기로 했다.

서울의 경우는 11일 오후 1시30분부터 집회장인 종로공원 일대에서 사전 홍보 활동을 하고, 이번에는 명동성당까지 행진을 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10일 낮12시에는 종로 YMCA 회관 앞에서 제2차 국민행동의 날을 알리는 활동을 벌인다.

한편,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서울대교구는 오는 16일 오후7시 명동성당에서 시국기도회를 갖기로 했다.

부여간첩 불고지 허인희씨 긴급구속

서울경찰청은 지난 5일과 6일, 긴급구속된 3명을 7일 구속한데 이어 이날밤에는 허인희(31, 현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 전 고려대 총학생회장)씨 마저 긴급구속하여 조사중이다. 경찰은 "허씨가 9월 중순경 부여간첩 김동식(33)씨를 9월중순경 두차례나 만났으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허씨는 이를 완강히 부인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씨의 이번 긴급구속으로 인해 이번 부여간첩 불고지 사건은 정치권에 까지 파장을 미치게 되었다.

<이달의 주제-불처벌>

과거 인권침해의 해결에서 완전한 진실의 규명없는 처벌은 자의적 복수일 뿐이고, 진상규명없는 관용은 면책의 특혜를 부여할 뿐이다.

-조세 잘라케(Jose Zallaquett)-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균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북한 공작원? 정보기관의 공작?

불고지 사건 구속적부심서 간첩 인지 강력 부인

부여간첩 불고지 사건으로 구속된 함운경씨등 3명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9일 오전10시 서울지법 320호 법정에서 이우근 부장판사(형사 항소3부)의 심리로 열렸다.

함운경(32, 전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조직부장)씨는 부여간첩이라는 김동식(33)씨와 만난 일에 대해서 "사무실 근처 레스토랑에서 얘기를 하는데, 한 번도 북에서 내려왔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었고, 통일운동에 대해 관심이 많다"며 "민족회의와 통일원과의 비밀접촉 내용을 묻는 등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내용을 알고 있어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다음에 만나자고 하고 헤어진 게 전부"라고 밝혔다. 함씨는 이기범 검사가 "김동식이 분명히 북에서 왔다고 밝혔다"며 추궁을 하자 단호하게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경찰 제시한 사진과 달라 이인영(31, 전대협동우회 회장)씨는 "임아무개라는 사내가 전대협 동우회 사무실로 와서 '대전에 있는 선배 심부름왔다'고 해 기독교연합회관 2층 다방에서 만났다"며 "임아무개라는 자가 대전 선배의 심부름은 거짓말이고, 나는 북에서 왔다고 말해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너 미친 놈이지'라고 말했다. 너 미친 놈이지, 정보기관에서 나를 시험하는 거야. 너하고 이야기 하

고 싶지 않다'며 뛰쳐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임아무개와 만난 시간은 채 5분도 되지 않으며, 내가 만난 임이라는 사람은 안경을 쓰고 양복을 입었지, 경찰에서 보여준 사진처럼 안경도 안 쓰고 주리닝을 입지도 않았다"며 경찰이 말하는 인물과 같지 않다고 말했다.

과대망상증환자? 기관원?

우상호(33, 청년정보문화센터 소장)씨의 경우에는 "청년정보문화센터에 전화로 '월간 말지에 학생운동 관련 기사를 쓰고 싶다'고 전화해 '말지에 연락하라'고 하였으나, '취재를 위해서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다음날 오후2시경 브로드웨이극장 지하 다방에서 만났다"고 밝혔다. 우씨가 원고를 한 번 보자고 하니 그 남자는 "실은 나는 북에서 내려온 사람"이라고 신분을 밝히며 "변혁과 통일을 위해 노력하자"고 대뜸 말해 무척 당황했다고 말했다. 우씨는 과대망상증 환자나 기관원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나, "나는 북에 대해서 생각도 안해봤고 관심도 없다. 그리고 나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열심히 할 생각이야. 그러니 나한테 이런 식으로 공작하지 마라"라고 한 뒤 자리를 일어서었다고 말했다.

이기범 검사는 "간첩이 이들 3명의 평소 사상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접근하면 포섭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김동식이 북한에서 왔다고 했는데도 왜 신고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반해 임종인 변호사는 "김동식이라는 자가 만난 사람이라고 지목하는 이들이 마구 연행되고 있는 상태"라며 "진짜 그가 간첩인지, 수사관의 조작인지도 모를 정도로 의혹이 많다"고 말했다. 또, "전혀 도주의 우려가 없는 이들을 구속하는 것은 이들에게 치명적인 명예훼손을 입힌 것으로석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늘 오전 중으로 이들의 구속적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안기부, 수사확대 가능성 시사

한편, 권영해 안기부장은 9일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간첩 김동식이 구속된 4명 이외에도 더 많은 이들을 포섭하려 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계속 추궁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간첩 김이운동권 출신 30대 체야인사들을 포섭하려는 목적으로 남파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간첩불고지 사건으로 구속되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9일에는 전 포럼 2001 대표 김찬훈(32)씨에게 안기부 요원들이 찾아와 이 사건과 관련해 만나고 간 것이 확인돼 귀추가 주목된다.

'간첩' 말만 믿고 구속 불고지 구속 가족 증언 민가협 목요집회

9일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1백2번째 목요집회가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열렸다.

이번 목요집회에는 최근 '간첩불고지죄'로 구속된 이인영·함운경씨의 부인들이 나와 사건의 진모를 설명했다.

이씨의 부인 이도래(30)씨는 "간첩인 줄도 모르고 만났고, 만나서도 북한에 관한 이상한 이야기를 늘어놓아 5분만에 일어섰는데 어떻게 불고지죄가 성립되느냐"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함씨의 부인 김미정씨도 "검찰과 경찰이 모두 간첩 김동식씨의 말만 믿고 있다. 또 불고지죄로는 구속이 어렵게 되자 가택수사를 해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책을 문제삼아 불온서적소지죄로 억지구속하려 한다"며 간첩을 몇 개월씩이나 잡지 못한 경찰청장부터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고지죄란?>

【국가보안법 제10조】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 제4조(목적수행), 제5조 제1항(자진지원 또는 금품수수)·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제4항(제1항의 예비·음모)의 죄를 범한 자라거나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법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한다.

아시아위치, 국제기준준수 촉구 한국 정부의 노동탄압 강경 비난

아시아의 인권상황을 모니터하고 국제적 인권기준의 준수에 힘쓰는 국제적 인권단체인 「아시아위치」(Human Rights Watch/ASIA)는 8일 "한국-문민통치하의 노동권 침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정부의 노동운동 탄압을 강하게 비난했다.

아시아위치는 "한국에서 군사정권시절 인권을 침해해왔던 법원이 김영삼 정부에서도 변함없이 노동운동가와 정치적 반대자를 억압하는데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시아위치는 "40-50만명이 참여한 속에 11일 출범을 앞둔 민주노총의 시도는 한국정부가 일만큼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하는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아시아위치는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에게 한국정부의 OECD 가입 절차로써 OECD의 인권과 노동권 기준을 따르게끔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94년 6월에서 95년 6월 사이에 벌어진 주요한 4가지 노동분규, 즉 철도·지하철, 현대자동차, 한국통신, 전교조 등과 관련해 볼 때, 아시아위치는 인권준수에 관한 한국의 변화가 심각할 정도로 불충분하다고 결론 내릴 수 밖에 없다. 95년 5·6월 30년만에 처음 있는 지자체 선거에 편승된 고도의 위기감에 김영삼대통령은 도발적인 발언으로 긴장국면에 불을 붙였고, 현대자동차와 한국통신노동자들을 6.27선거에 앞서서 탄압했다.

신홍공업국으로서 지난 20년간 한국의 생산력은 놀

라운 정도로 성장해 왔고, 한국정부는 세계경제 무대에서 더 큰 역할을 하기를 갈망하고 있다. 국제경제력의 향상에 따라 김영삼대통령은 정책중심으로 '세계화' 전략을 내세웠다.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해놓고, 이제 한국정부는 자본의 세계시장확장과 경쟁력을 유지할 필요성을 부르짖으며 국내 노동활동가에 대한 억압을 정당화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억압적인 노동법규는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사회권위원회의 비난을 받아왔고, 유엔인권이사회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것을 권고해 왔다.

김영삼대통령은 93년 취임시 "보다 자유롭고 성숙된 민주사회"가 될 "신한국"을 약속했고, 집권초기 몇 달간 인권준수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몇 가지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아시아위치는 ILO의 권고를 즉각 이행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한다. 제3차개입금지지를 포함한 노동쟁의조정법과 복수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노동조합법을 철폐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정부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기 견해를 표현하였다는 이유로 제3차개입금지조항의 적용을 받아 투옥된 사람들을 모두 석방해야 한다. 또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되도록 국가보안법을 개정 또는 철폐해야만 한다.

아시아위치는 11월 오사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포럼(APEC)에서 가질 한미 쌍무회담을 포함한 모든 한-미간 고위급회담에서 기본적 인권과 노동권에 대한 존중을 문제제기할 것을 클린턴 행정부에 촉구한다.

민주노총 탄압 중단 요구 시민사회단체, 성명 발표

최근 정부가 출범을 앞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이적성 수사' 방침을 밝히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연합」, 「민가협」, 「전철연」, 등 18개 단체는 9일 성명을 발표, △노동운동 탄압 중지 △구속자 석방, 수배자 해제 △안기부 해제 △국가보안법, 노동악법 철폐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민주노총을 이적단체로 모는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더 이상의 공안사건조작과 탄압은 민주세력의 투쟁만 불러온다"고 경고했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세계화를 주장하는 정부가 유독 노동문제에 대해서만 구시대적인 통제를 하는 것은 정부의 세계화 정책이 정치적 수사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민주노총에 대한 이적성 시비와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항의농성 3일째를 맞은 민주노총은 9일 오후 12시 명동성당에서 정부의 탄압중단과 노태우씨 구속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허영구 집행위원장은 "김영삼 정부는 정당한 민주노총의 창립을 탄압하고 5천억원이나 되는 돈을 숨겨온 노태우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집회를 마친 1백여 명의 조합원들은 명동일대 시민들에게 민주노총의 창립을 알리는 홍보물을 나눠줬다.

○ 행사와 동정 ○

- 민주노총 창립기념 국제세미나-한국노동조합운동과 국제연대
 - 일시:10일(금) 오전9시-오후1시/· 장소:다위호텔
 - 주요내용:민주노총의 국제정책방향(이동진)/민주노총의 의의(양경규)/각국 노총의 입장발표 등.
 - 주최: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준)(☎765-2010)
- 민주노총 출범을 앞둔 최근 상황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10일(금) 오전10시/· 장소:세실 레스토랑
 - 주최:전국연합, 참여연대, 민변 등 8개 단체(☎796-8364)
- 지방자치선거와 여성운동
 - 일시:10일(금) 오후2시/· 장소:한국여성개발원
 - 주요내용:지역활동과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이경숙)/여성후보의 선거전술과 특징 등
 - 주최:여성민우회(☎279-6891)
- 제2기 바른의정을 위한 여성모임 발대식
 - 일시:15일(수) 오전10시-12시/· 장소:종로성당 3층 강당
 - 주최:여성민우회(☎279-6891)
- 제5기 치약사랑 청년학교
 - 일시:21-30일 매주 화목 오후7시/· 장소:원주 YWCA
 - 주요내용:총선과 민주변혁을 위한 원주시민의 과제(이창복)/우리시대 청년과 완전한 만남(김하기) 등
 - 주최:원주민주청년회(☎731-1364)
- 가족과 성상담소 이전
 - 여성민우회 부설 「가족과 성 상담소」가 사무실을 옮긴다. 또 노인 도봉지역에 상담소 지부를 개소한다.
 - 본부 주소는 양천구 신정동 1052-25, 전화 646-8858. 지부는 도봉구 창1동 662-69, 전화 991-3657이다.
- 월간 「사람과 일터」 이전
 - 월간 「사람과 일터」와 우리일터기회가 사무실을 확장, 이전했다. 주소: 용산구 원효로 1가 39-3, 전화: 706-8636.

경 축
노동운동의 새 장을 열
민주노총 출범!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국경하문 노조 국제연대운동 다짐 오늘 민주노총 출범, 내일 여의도서 노동자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민주노총(준))는 10일 다위호텔에서 민주노총의 국제연대 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가졌다.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여러 조건과 역량부족으로 국제연대를 노조의 일상활동으로 하지 못했다. 이제 실천적, 현실적, 조직적 의미에서 노조운동은 국경을 허는 운동을 강조했다. 또 최근 국제노동계의 최대 현안인 '노동기준문제'(블루라운드, Social Clause)에 대해 "저개발국 및 개발도상국 노동자의 기본인권을 보호하는 장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민주노총이 앞으로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문제와 국내 외국인노동자 문제, 제3세계국가의 노동문제 등에도 관심을 갖고 정보 교류와 연대활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 자리에는 국제공공노련(PSI), 일본전국의료노련, 독일금속노련(IGM) 등 산별

연맹과 스웨덴, 남아공, 브라질 등의 각국 노총대표가 참석했다.

외국대표들은 "세계노동자들의 90%가 국제경제시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제 노조운동에도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 초국적 자본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네트워크를 주장했다.

일본대표는 "최근 한국에서 문제가 된 근로자파견법은 일본에서 10년전부터 시행해 와 지금은 3백만명으로 추정되는 파견노동자가 정액식사의 50%임금을 받으며 인하고 있다. 근로자파견법은 적극저지해야 할 노동악법"이라며 한국과 개별적 사안의 직접적인 교류를 제안했다.

11일 대의원대회와 12일 노동자대회에도 해외출발 예정인 이들은 "정부의 방해가 없는 창립식이 되길 바란다"며 최근 정부의 발표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창립 후 국제자유노련(ICFTU)에 가

입, 국제적인 인정을 받을 계획이다.

민주노총 탄압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중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등 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오전 10시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노총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ILO와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등의 권고를 한국정부가 무시하고, "국제조약의 위반하여 무효가 된 국내법의 규정을 들어 민주노총의 설립 방해, 지도자들을 구속, 수배하는 것은 정치적, 도덕적 의무를 저버리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또, "정부는 민주노총

존재 자체를 불법시하고 한 노동단체와의 근거없는 연관성을 빌미로 이적성을 시비하는 것은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음해"라고 규정하고, 이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 음해에 대한 사과 △노동조합활동과 관련된 수배자의 수배해제, 구속자 석방 △민주노총 창립대회 보장 등을 촉구했다.

제2차 국민행동의 날 서울종묘공원 집회

「5.18 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김상근, 5.18비대위)는 오늘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종묘공원에서 「5.18 특별법 제정, 노태우 구속, 김영삼 대선자금 공개촉구 제7차국민대회」를 연다. 오늘 대회는 민주노총 창립대의원대회와 출범식 관례로 서울 지역에 버리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또, "정부는 민주노총 국민행동에 들어간다.

인권활동가를 위한 새2기 공개강좌(8회) 동성애자의 인권

-동성애란? 동성애의 실태, 그리고 인권문제
강사: 서동진(「친구사이」, 회장)
· 일시: 11월11일(토요일) 오전 11시-오후1시
·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 서울역 하차 10분 거리)
· 수강료: 1강좌당 5천원
· 문의: 인권교육실 김수경 간사 (전화:715-9185)
· 강사의 사정으로 취소되었던 「판례로 본 국가보안법」 강좌가 오는 12월23일 마지막 강의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강의는 조용환변호사가 하게 됩니다.

간첩 불고지 혐의 우상호씨 석방 허인회씨 구속영장

부여간첩 불고지 혐의로 구속된 우상호(33)씨가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되었다. 서울지법 형사 항소3부 이우근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우씨를 석방토록 했으나, 함윤경(32), 이인영(31)씨는 구속을 인정했다. 이 결정은 9일 오전에 열린 3명에 대한 구속적부심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이 창복)은 성명을 발표하고, 구속적부심 과정에서 "함씨 등 3명이 불고지죄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똑같은 혐의를 받은 우씨의 석방으로 분명해졌다"며 "구속된 함씨 등 2명을 조속히 석방하여 비자금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국민전환운동 단압과 30대 민주인사들에 대한 단압이라는 오해를 씻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서울지정 장안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아온 허인회(32)씨는 10일 법원으로부터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김귀정씨 사망 국가배상 대법원, 원심으로 확정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10일 오후 대법원 1호법정에서 김귀정씨 사망사건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으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1억3천9백만원의 유가족에게 배상하도록 원심을 확정했다. 사망 당시 상고심에 재학중이던 김귀정씨는 지난 91년 5월 25일 강경대 폭행치사 규탄 국민대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무리한 진압으로 시위현장에서 사망했으며, 이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국

가배상판결이 났으나, 검찰이 상고한 바 있다.

대우조선 정월화씨 자살 회사 업무과다로 고통

경남 거제도 대우조선 가전 생산부에서 반장으로 근무하던 정월화(47)씨가 지난 3일 오전 7시 30분경 제1도크 바닥에 떨어져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대우조선 노동조합에 의하면 정씨는 그동안 회사의 방위인 신경영전략에 따라 옆면과의 생산경쟁에서 뒤지고 있어 회사로부터 추궁을 당해왔으며, 노모가 병환으로 몸져 누웠음에도 회사 업무의 과다로 찾아보지 못하는 것을 괴로와했다고 한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부모, 처자식에도 0점, 회사에도 0점, 헤어날 수 없는 세상, 난 어떻게 해야 하나, 물량치리도 못하고 각 호선마다 문제투성이, 사람도 믿을 사람 없네, 일년초처럼 낙엽따라, 내 인생도 가야만 하네"라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정씨는 회사측의 신경영전략의 도입으로 동료간의 경쟁, 부서간의 경쟁을 못 견뎌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노조측은 회사에 바림직한 경영방침을 함께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으나, 회사측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태다. 올해 6월 분신자결한 박삼훈씨도 회사측의 신경영전략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정씨의 시신은 10일까지 회사와의 협상이 끝나지 않아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로 대우병원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다. 정씨의 유족은

로는 노부모와 처, 아들, 딸을 두고 있다.

"중국인권문제 개선하라" 엠네스티 한국지부 성명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 한국지부)는 10일 중국 강택민 주석의 방한에 즈음한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인권문제의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지부는 중국 정부에게 티베트의 독립을 요구한 이유로 구금되어 있는 수백명의 종교인과 반체제 인사들을 석방할 것 △종교,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수천명의 양심수를 석방할 것 △고문 및 가혹행위 그리고 사형집행을 중지할 것 △중국내의 인권문제를 국내외에 공개하고, 국제적인 인권단체의 조사활동을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강택민 주석과의 회담에서 중국의 인권문제를 제기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지부는 "국제엠네스티가 89년의 천안문 사태와 독립을 요구하는 티베트인들에 대한 단압 등에서 보여준 중국 정부의 반인권적인 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항

의해왔다"며, "특히 상시적으로 자행되는 것으로 알려진 고문등의 가혹행위와 94년 한해동안 중국내에서 1천7백91명에 대한 사형집행이 이뤄진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강택민 중국주석은 오는 13일 김영삼 대통령의 요청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4일 간 머물 예정이다.

직장폐쇄 철회 촉구 민언협, 문화일보에

「민주언론운동협의회」(민언협)는 11일자로 문화일보의 직장폐쇄에 대한 비난성명을 발표했다. 민언협은 "지난 7월 제벌기업의 대변지에서 진정한 국민의 언론으로 거듭나고자 시작된 <문화일보>의 언론노조 건설을 현대그룹은 부당전직이라는 구태로써 탄압하였고 지방노동위의 복직판정을 어기면서 불성실한 단체협상으로 악화시켜 왔다"며 △즉각적인 직장폐쇄 철회 △원직복직 △노조활동 보장 △인론사로서 <문화일보>의 독립권 보장 등을 국민 앞에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 인권간행물 ◇

- 민주노총 우리손으로 만듭시다 - 민주노총(☎765-2010)
· 주요내용:민주노총이 있기까지/민주노총, 이런 일을 합니다/왜 민주노총을 건설하는가 등. 32쪽.
- 민주노총 건설과 하반기 투쟁 승리를 위한 실천지침 - 민주노총(☎765-2010)
· 주요내용:민주노총 건설과 우리의 과제/문답으로 알아보는 민주노총/고용보험제 해설 등. 159쪽. 값2천원.
- 이 처참한 상황을, 구유고-국제엠네스티(☎053-426-2533)
· 주요내용:실종과 같은 일은 반드시 없어야/진리와 정의를 위한 투쟁/당국의 무반응/우리를 뭉치게 하는 것 등. 12쪽.
- 자료집-청소년의 권리행사와 권리침해 -한국청소년연구소(☎053-626-2599)
· 주요내용:청소년권리 주장에 대한 법률적, 이론적 근거-유엔아동권리조약을 중심으로(정도원)/청소년의 육구대 비추어본 청소년의 권리(배제현)/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이석우)/학생권리침해 사례발표. 82쪽.

<이달의 주제-불처벌>

과거 인권침해의 해결에서 완전한 진실의 규명없는 처벌은 자의적 복수일 뿐이고, 진상규명없는 관용은 면책의 특혜를 부여할 뿐이다.
-조세 잘라케(Jose Zallaquett)-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균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나이지리아 인권·환경운동가 9명 사형집행 한국 관련 민간단체들 강력항의

지난 10일 나이지리아 정부의 켈 사르위와(54)등 인권운동가 9명 교수형 집행을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 「인권운동사랑방」, 「민족문화작가회의」 등 7개 인권·환경·문화단체 소속 회원 20여명은 13일 오후 2시 한남동 나이지리아 대사관 앞에서 사르위와 씨등의 죽음을 예도하고 나이지리아 정부의 만행을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이번 사형집행은 아바차 정권과 다국적 석유기업의 횡포에 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나이지리아 아바차 군사정권의 퇴진할 것과 쉘 등 다국적 석유회사들은 독재정권과 결탁하여 인권억압,

환경과괴를 자행한데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집회를 마친 이들은 외무부를 방문,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한국정부의 강력한 항의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외무부는 "현재 정부는 아무런 입장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나이지리아 정부가 왜 사형을 시켰는지 이유도 모른다. 다른 국가들도 이 문제에 대해 말만 할 뿐 직접적인 행동은 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이후 상황을 보고 입장을 판단할 것"이라는 소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진보정치연합」은 이날 성명을 발표, "정부는 UN 안보리 이사국 진출에 걸맞는 조치를 취하고 주나이지리아 한국대사를 즉각 소환하라"고 주장했다.

국제적 비난 잇따라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각국 정부와 국제인권단체들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사르위와등을 양심수로 선정하고 석방운동을 펼쳐온 국제엠네스티는 "사르위와는 나이지리아의 소수민족문제와 환경과괴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사형되었다"며 나이지리아 정부는 국제적으로 거센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르위와의 형집행 소식을 접한 영국과 미국, 독일 등은 나이지리아에 대한 즉각적인 외교·군사적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넬슨 만델라 남아리카공화국 대통령은 나이지리아를 영국연방에서 추방할 것을 촉구했고, 미국은 라고스 주재 미대사를 소환하고 나이지리아에 대

한 군수품 판매 및 보수를 즉각 중단시키는 한편 미국내 국제기관을 방문하는 나이지리아 관리들에 대한 비자발급을 제한시켰다. 10일 사형집행된 사르위와 씨등 9명은 「오고니족 생존운동」(MOSOP) 활동가들로 94년 5월 살해교사 혐의로 구속되어 지난 10월 30, 31일 군사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생존권-자결권 투쟁이 원인 사르위와 씨는 90년 MOSOP를 결성하여 쉘 등 다국적 석유회사들을 상대로 수입일부를 환경보호분담금으로 내놓도록 요구하는 한편 정부에게 오고니족의 자결권을 인정토록 하는 활동을 해왔다. 이 운동은 국제적인 관심과 지지를 받아왔고 감옥안에 있던 그는 지난 해 스웨덴의 '생존권 상'을 받았고 올해엔 미국 골드먼 환경재단의 골드먼환경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사형집행된 이들은 켈 사르위와(MOSOP 대표), 바리넬 키오벨, 세러데이 두비, 노르디 에아웨, 파울 레부라, 필립 누아데, 다니엘 지부쿠, 존 키푸이엔(학생), 바리볼 베라(농민) 씨등이다.

대법, '조작간첩' 재심결정한 원심 파기 신귀영씨 사건. 검찰 재항고 받아들여

대법원 형사제3부(주심 안용득 대법관)는 지난 8일 일본관련 간첩 사건으로 신귀영씨 일가 간첩사건의 재심을 결정한 원심을 파기, 부산고법에 환송했다. 이에 따라 뚜렷한 새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신귀영씨 사건에 대한 재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1심과 2심에서 인정한 신수영씨의 진술서가 이 사건에 대한 확정된 판결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새로운 증거로 볼 수 없다"며 "1심과 2심 재판부가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결정했다. 지난 80년 일어난 신귀영씨 일가 간첩사건은 대표적인 '일본관련 조작간첩'으로 알려진 사건에 대한 재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1심과 2심에서 인정한 신수영씨의 진술서가 이 사건에 대한 확정된 판결을 뒤집을

○ 주요 공판 안내 ○

- 14일(화)
· 단병호(선고), 제3자개입, 2시, 울산지법 형사2단독, 102호
· 정홍곤의 1명(한통), 3시, 업무방해, 서울 형사4부, 418호
- 15일(수)
· 박용길, 국보법, 2시, 서울지법 형사4단독, 421호
- 16일(목)
· 김명기(선고, 한통), 폭력, 10시, 서울 형사7단독, 421호
- 17일(금)
· 김동국(선고, 한통), 폭력, 10시, 서울 형사6단독, 321호
· 권성기(5.1동맹), 국보법, 3시, 서울지법 형사23부, 311호
· 강중숙, 국보법, 4시, 서울지법 형사9단독, 317호

<현장 스케치>

청년 전태일 영화로 부활하다

22살의 청년 전태일이 25년만에 영화로 부활하여 우리 앞에 나타났다.

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 민주노총 창립원년이자 한국노동운동의 분수령을 이룬 그의 분신 25주기인 13일 공론의 심의를 통과하여 특별시사회를 갖기에 이르렀다.

13일 오후 2시부터 시사회가 열린 피카디리 소극장에는 반디딜 틈 없이 관중들과 취재진으로 꽂 들어찼다. 이날 시사회에 앞서 가진 간단한 추모식에서 전씨의 어머니 이소선씨는 "25년 동안 고통을 받으면서도 내 아들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정신을 더럽히지 않고 욕먹이지 않으려 노력하였다. 지나간 어려운 세월동안 못난 태일이 이들을 기억하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사회에는 영화제작자인 (주)기획시대 유인택 사장, 박광수 감독을 비롯해 전태일역의 홍경인씨와 영화배우 문성근씨 등이 참석했다. 또, 김승훈 신부, 박형규 목사, 이돈명 전조선대 총장,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또, 일본,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노조 대표들도 영화를 관람해 눈길을 끌었다.

성근 분)라는 대학생 수배자가 전태일씨의 수기를 쓰면서 전씨의 생을 추적하는 형식으로 이뤄진 이 영화에는 70년대의 체계적 평화시장의 노동자들의 모습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전씨의 모습은 흑백으로 김씨의 모습은 컬러 영상으로 그려지는데, 흑백과 컬러의 영상이 계속 교차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시간순으로 진행된다.

평화시장 시다들의 모습과 전씨의 죽음의 결심과정, 그리고 분신 모습 등에서 시사회장은 숙연해져 가감식 헛기침 소리와 여겨져서 눈시울을 찢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영화가 끝나고 후원금을 낸 7천5백44명의 이름이 화면 가득히 올라오자 참석자들은 일제히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시사회가 끝나고 나서 눈시울이 붉어진 한 참석자는 "90년대의 많은 사람들은 전태일을 잊어버렸거나 영웅으로 박제화된 그를 기억할 뿐이다. 하지만, 이 영화를 통해 인간 전태일의 진솔한 모습을 만날 수 있었다. 모처럼 주제의식 있는 감동적인 한국영화를 만나게 되어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영화는 오는 18일 서울의 6곳을 비롯해 전국 9개 도시에서 동시 개봉된다.

<광고>

후원인이 되어주십시오!

「한국인권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상근, 인권협)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탈냉전시대 국가안보와 인권」 국제심포지엄의 후원인단을 모집한다. 인권협은 "국가안보를 넘어 인간안보의 측면에서 아시아 지역의 제문제를 검토하고, 공동의 행동방향을 결정하게 된다"고 이번 행사의 의의를 설명했다.

후원인단에 참석하려면 전화번호: 715-9185로 문의하면 된다. 후원금은 개인 3만원 이상, 단체 10만원이다.

주간/인/권/호/름

(95년11월6일부터 11월12까지)

<6일(월)>

정부, 내년부터 공기업 채용시 여성에게 5%, 5·7급 공무원 시험에서도 3-5점 가산점 주기로/서울경찰청, 함운경·우상호·이인영씨 등 3명 부여간첩 불고지 혐의 긴급구속/경찰청, 민주노총 이적성 여부에 대한 수사 밝혀/교육부, 김찬국 상시대 총장에 대한 해임 취소, 정적 1개월로 재심 결정/이스라엘 라빈 총리 장례식 거행

<7일(화)>

민주노총(준), 명동성당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 중지를 요구 농성 돌입/진남 노동부장관, 민주노총 법적 지위 인정 못한다고 밝혀/유엔 아동기금(UNICEF), 아프리카 내전으로 지난해 어린이 50만명 사망했다고 발표/르완다군, 후투족 3백명 사살

<8일(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한국 선출/서울경찰청, 간첩 불고지 혐의로 허인회씨 긴급구속/아시아워치, 한국 정부에 노동법·국보법 개폐 촉구/대전지역 특수교육 대상 중3생 학무보 8명, 일반 고교 입학 허용 당국에 요구

<9일(목)>

문화일보사, 노조측의 파업에 강경대응 11일부터 직장폐쇄 키로/전교조, 14일 5세아동 국교 조직입학 철회 국회청원키로/유엔 옛유고 전법재판소, 91년 2백61명 학살 혐의 유고 육군 장교 3명 기소/영국·뉴질랜드 등, 나이지리아 켄 사로위와등 9명의 인권·환경운동가에게 사형선고 비난

<10일(금)>

경제5단체, 정부에 민주노총 법적 제재 촉구/부산경찰청 형사기동 2중대 감의기(27) 경장, 만취해 민가침입 흉기 난동/정부, 일반사면안 22일 국회 제출키로/간첩 불고지 혐의 우상호씨 석방, 허인회씨는 추가구속

<11일(토)>

민주노총, 연세대에서 창립 대의원대회, 초대 위원장에 권영길씨 선출/5.18비대위, 서울 종묘공원에서 7차 국민대회 열고 '노태우 구속, 92년 대선자금 공개, 5.18특별법 제정' 촉구/공보부, 1천여명 여론조사 결과 '삶의 질 10년 전 그대로, 16년후에나 선진국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발표/민자당, 5세아동 조기취학 제검토키로/나이지리아, 인권·환경운동가 켄 사로위와 등 9명 사형집행

<12일(일)>

민주노총, 여의도에서 노동자등 5만명 이상 참가한 가운데 노동자대회 열고, 사회대개혁투쟁, 정치세력화 다검/경기도 평택시에서 미군 빈센트 로버트(33) 상병, 금성택 시 운전사 홍경형(33)씨와 차선 시비 다툼 중 홍씨 차에 매달고 2백여미터 질주 /전남경찰청, 전남대 오월대대장 이시현씨 국보법·집시법 위반으로 구속

<해설>

지난주 나이지리아 군사정부는 국제적인 비난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켄 사로위와등 인권운동가및 환경운동가 9명을 사형집행하여 세계를 경악하게 하였다.

국내에서는 민주노총이 드디어 오랜 준비 과정을 끝내고 정식 출범함으로써 노동운동에 새로운 장을 개척하게 되었다. 이로써 그간 정부와 재계와 밀착하여 반노동자적 인 행태를 보여온 한국노총의 노동계에서의 절대적인 위상이 위협받게 되었다. 한편, 지난주 내내 간첩 불고지 혐의로 구속되는 사태가 이어졌는데, 이 사건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달의 주제-불처벌>

80년 광주 5월은 영원하다.
부정과 억압으로부터
인간해방투쟁의 종합적 표현이다.
-리영희-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균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대법원, 신귀영씨 사건 원심파기

천주교인권위, "조작간첩 재심 반드시 이를 것"

간첩사건중 최초로 1심, 2심에서 재심 결정된 것을 대법원이 원심파기(<인권하루소식> 11월14일자)하자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변호사, 천주교인권위)는 14일 반박성명을 발표했다.

천주교인권위는 "신귀영씨 등은 지난 80년 40일-70일간의 고문으로 간첩이 되었다"며 "간첩단 사건의 지령자로 지목되었던 사람이 일본에서 귀국하여 한국 법정에서 진실을 밝혀냈다고 하였는데도 이를 신빙성이 없는 증언이라 단정하여 기각시킨다면 재심재판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미국등 외국에서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사받고 재판받지 못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재심사유로 인정하고 있다"며 "신귀영씨등이 장기간의 불법구금 상태에서 강압적인 수사를 받은 점이 명확한데도 대법원이 증거의 신빙성을 내세워 재심 신청을 기각한 것은 반인권적 처사"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원심파기 결정은 "조작간첩 사건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며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저버린 비이성적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천주교인권위는 부산고법 원심심에서 이 사건 중 인들의 직접적인 증언을 추

진할 계획이다. 또한, △심에서 재심 결정된 것을 대법원이 원심파기(<인권하루소식> 11월14일자)하자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변호사, 천주교인권위)는 14일 반박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심에서 재심 결정된 것을 대법원이 원심파기(<인권하루소식> 11월14일자)하자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변호사, 천주교인권위)는 14일 반박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지난달 완성한 조작간첩 다규멘터리 비디오를 1천여개 성당과 수도원 등을 통해 보급, 상영하기로 했다. 일반인에게도 이를 2만원에 보급할 예정이다. 문의전화: 777-0643

5.18비대위 특별법 제정 21일부터 매일 국회 집회

「5.18 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상근등, 5.18비대위)는 14일 전국연합 사무실에서 제3차 집행위원회를 열고 오는 21일부터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매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갖기로 했다.

5.18비대위는 "야당이 강력하게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사위 위원 15명중 민자당 위원이 8명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특별법이 법사위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기는 어렵다"는 인식 아래 국회를 압

박하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국회 앞 집회와 아울러 민자당사에서도 매일 집회를 하기로 했다. 또, 오는 28일경 5.18특별법 서명을 모아 △청와대 항의방문 △국회 방청, 모니터 활동 △대표단과 원로들의 농성도 조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18일에는 소규모 집회를 각 단체별로 갖고, 다시 25일에는 전국에서 대규모 제8차 국민대집회 및 국민행동의 날 행사를 열기로 했다.

5.18비대위는 △양심적 인사들로 구성되는 시민법정 △강연회 △전시회 등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해 이후의 활동이 주목된다.

불고지 구속자 석방 촉구 청년단체, 규탄집회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전대협동우회」, 「푸른사람들」등 9개 청년단체 회원 1백여명은 14일 낮12시30분 명동성당에서 집회를 갖고 간첩 불고지죄로 구속된 허인회(33)씨등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경찰이 간첩 용의자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동식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이들을 구속했다"며 "특히 구속적부심 과정에서 우상호(33)씨만을 석방한 것은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수사상의 책임을 회피하

기 위한 술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정부에 대해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 △허인회, 함운경, 이인영씨의 즉각적인 석방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 폐지를 촉구했다.

12월10일 판문점 회담 장기수 송환 논의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등, 불교인권위)는 14일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호)에게 세계인권선언일인 오는 12월 10일 판문점에서 비전향 출소 장기수들의 송환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예비회담을 갖기로 제안했다. 불교인권위는 "정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비전향 장기수의 송환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막을 것이 아니라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원 측은 불교인권위가 김인서, 함세환, 김영태씨 등 3명의 비전향 장기수의 송환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에 서신을 보낸 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에 조치를 취해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조선불교도연맹은 13일 불교인권위측에 "남조선 당국이 판문점 접촉을 불허하는 반인권적인 조치를 취한 조건에서 베이징에서라도 만나 장기수 송환과 통일문제를 협의할 의향이 있다"고 회신을 보내왔다. 한편, 불교인권위는 고 윤이상씨의 사면복권을 정부에 촉구했다.

LG그룹 해고자 복직 외면

해고자지원대책위, 복직 촉구서 전달

「전국 구속·수배·해고 노동자 원상회복 지원대책 위원회」(집행위원장 홍근수 목사, 지대위)는 14일 오전 10시 여의도 LG그룹 본사를 방문, LG그룹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는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날 면담에는 홍근수 목사, 양재덕(인천연합 상임의장), 허영구(민노총 부위원장), 장영길(전해투 대표), 박표균(전해투 집행위원)씨등 노동계 대표와 여성계를 대표해 이미경(여성대표), 배우병(여성노동자회 회장)씨가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9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구본무 LG그룹회장과 면담을 요청했으나 “만날 필요가 없다”는 회사측의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날도 LG본사 지하1층에서 홍목사 일행을 맞은 것은 그룹 인사팀 실장과 계열사 노경협력 담당자들이었다. 모두 과장급에서 부장급인 이들은 “제3자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며 매우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그들측은 “해고자를 복직시킬 의지는 있다. 그러나 복직은 그룹차원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해당계열사와 당사자가 풀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자리에서 지대위는 “93년부터 전교조 해직교사들

비슷해 현대, 대우, 삼성 등 대기업의 수많은 해고자들이 복직되었는데 LG그룹 해고자들은 단 한사람도 복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정도경영, 인간존중의 경영이념에 맞게 해고노동자 복직문제도 해결하길 바란다”며 그룹측에 복직촉구서를 전달했다.

지대위는 현재 LG그룹 복직을 주장하는 엽서와 복직 촉구서 보내기운동, 1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회장 면담과 회사측의 성실한 답변을 계속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87년부터 지금까지 LG그룹에서 해고된 이들은 모두 64명이다. 이 가운데 성한기(LG해고자협의회 회장)씨는 업무방해와 폭력등의 혐의로 구속, 1심에서 징역8개월을 선고받았고 김천(LG전자 해고자)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수배중이다.

전교조, 교육법 개정 입법청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해숙, 전교조)은 14일 교사 6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교육관계법 개정안을 위한 입법청원을 했다. 전교조가 마련한 교육관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의 목적과 방침을 현대적

용어와 새로운 이념으로 개정할 것 △국민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학부모·학생의 권리 보장을 법제화할 것 △유치원 교육 1년을 의무교육화할 것 △각급 교육위원회의 실질적인 의결기구화할 것 △교육위원과 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할 것 △학교운영위원회는 교무회의와 학부모 회의에서 직접 선출하여 구

성토록 하고,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대표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할 것 △UN등이 인정하고 있는 교원노동조합등 교원단체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할 것 등이다. 전교조는 교육관계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16개 교육단체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한 범국민연대회의」로 확대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자료- 민주노총 창립선언문>

생산의 주역이며 사회개혁과 역사발전의 원동력인 우리들 노동자는 오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전국 중앙조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창립을 선언한다.

저 멀리 선배 노동자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간고한 탄압속에서 민족해방과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피어린 투쟁을 전개했다. 해방 이후 우리 노동자들은 독재 정권의 가혹한 탄압 속에서 민주노조를 지켜 왔고,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2,000여명에 이르는 구속자와 5,000여명이 넘는 해고자를 낳는 등 온갖 탄압 속에서도 조직을 확대 발전시켜 왔으며, 전국적 공동임투와 노동법 개정투쟁, 사회개혁 투쟁 등을 전개하면서 통일 단결을 강화해 왔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통일 단결된 힘을 기초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전국 중앙조직을 결성한다. 민주노총으로 결집한 우리는 인간다운 삶과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조건 확보, 노동기본권의 쟁취, 노동현장의 비민주적 요소 척결, 산업재해 추방과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해 가열차게 투쟁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사회의 민주적 개혁을 통해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과 더불어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가열찬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는 국경을 넘어서서 전세계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강화하고 침략전쟁과 핵무기 종식을 통한 세계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조직의 확대·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산업별 공동투쟁과 통일투쟁에 기초하여 산업별 노조에 기초한 전국 중앙조직으로 발전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자주성과 조합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전체 노동조합 운동의 통일 단결을 위해 매진할 것이며, 제민주세력과 연대하여 정치세력화를 실현할 것이다.

자! 자본과 권력의 어떠한 탄압과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 보장되는 통일조국, 민주사회 건설의 그 날까지 힘차게 전진하자!

1995년 11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달의 주제-불법>
80년 광주 5월은 영원하다.
부정과 억압으로부터
인간해방투쟁의 종합적 표현이다.
-리영화-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부여간첩 접촉 혐의 재야간부 구속

박충열·김태년씨 혐의사실 강력 부인

부여간첩과 회합한 혐의의 재야운동가들이 안기부에 구속되었다.

국가안전기획부는 15일 박충열(36, 전국연합 사무차장), 김태년(31, 성남 청년단체 미래 위원장)씨 등 2명을 국가보안법상의 회합통신·이적표현물 제작 배포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에 따라 부여간첩과 관련하여 구속된 사람은 지난 주 불고지죄로 구속된 허인회씨 등 3명을 포함, 5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안기부 요원들에 의해 이날 새벽 2시경 집에서 각각 연행되어 내곡동 안기부 신청사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안기부부는 이들의 집과 전국연합 사무실과 미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디스켓, 통장 등을 압수했다.

이들을 집견한 윤기원 변호사는 “이들이 부여간첩을 만난 혐의로 구속된 것 같으나, 아직은 정확한 것을 알

수 없다”며 “박씨등은 안기부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수사관들이 구체적인 사실이나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무턱대고 이들을 만난 것이라든 식으로 들이밀고 있다며 “심지어 구속영장도 보여주지 않아 구속사유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박충열씨는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단식과 묵비권으로 맞서고 있다.

이날 오후1시30분경 구속자 가족들과 전국연합, 민가협 회원 등은 내곡동 안기부청사에서 박씨등의 면회를 요구했으나, 안기부로 부터 거절당했다. 전국연합 사무실 주위에는 안기부 요원으로 보이는 이들이 승용차를 타고 감시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한편, 지난 7일 부여간첩 김동식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허인회씨 구속적부심이 오늘 오전 10시20분 서울지검 320호 법정에서 열린다.

인권활동가를 위한 제2기 공개강좌(9회)

행려자의 인권문제

- 일시 : 11월18일(토요일) 오전 11시-오후1시
- 장소 :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 서울역 하차 10분 거리)
- 문의 : 인권교육실 김수경 간사 (전화:715-9185)

이런 강좌는 워크샵으로 진행됩니다. 행려자, 부랑아들의 인권문제를 국내 인권단체에서는 처음으로 함께 조명하게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국고 급식 전면실시 서명받아 내무부청원 학교급식 연대회의

지난 8월 내무부가 학교급식 지원을 결정한 대전시 유성구(구청장 송석찬)에 내린 시정명령의 철회를 요하는 청원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학교급식을 위한 연대회의」(연대회의)는 15일 종로성당 앞에서 청원을 위한 가두서명운동을 벌였다.

이들은 “국민학교 학교급식 전면실시는 대통령 공약 사항인데, 정부는 예산책정도 하지 않고 모든 부담을 학부모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유성구의 학교급식 시설비 지원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전면실시를 위한 정명령 철회 △학교급식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조례제정을 요구했다.

이날 서명운동에는 시민 4백여 명이 참여하는 등 학교급식문제에 큰 관심을 보였고, 지금까지 모아진 서명자도 1천여 명이 넘는다. 연대회의는 25일까지 서명자를 취합, 27일 내무부에 청원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들은 15일 ‘단식행동권 기대회’를 갖고 16일부터 19일까지 세이와교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인다.

은 자치시대 행정의 새로운 모습을 열었다는 평가와 함께 학부모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다.

반면 내무부는 “지방비를 교육제정에 지원할 수 없다”며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현행 법체계상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는 별개이고, 자치단체 일반회계에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내무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일부에서는 “학교급식의 재정부담을 회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사업범위를 예산편성으로 국한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지방자치성당 앞에서 청원을 위한 가두서명운동을 벌였다. 이들은 “국민학교 학교급식 전면실시는 대통령 공약 사항인데, 정부는 예산책정도 하지 않고 모든 부담을 학부모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유성구의 학교급식 시설비 지원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양심수 석방 단식농성 일본단체들, APEC 기간동안

일본의 한국 양심수 지원 단체들은 김영삼대통령이 APEC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에 머무르는 기간동안 한국의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는 단식에 들어간다.

이들은 15일 성명을 발표, “민주화와 통일을 바란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힌 양심수들의 석방은 김영삼정부의 선결과제”라고 지적하고 양심수 석방을 촉구했다.

이들은 15일 ‘단식행동권 기대회’를 갖고 16일부터 19일까지 세이와교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인다.

<해설> 신귀영씨 사건 대법원 원심파기로 본 재심제도 적법절차 밟지 않았으면 재심사유 해당

신귀영씨 사건의 경과
신귀영씨는 80년 2월 25일, 서성철씨 3월 17일, 신춘석씨 3월 24일 각각 부산시경 대공분실에 연행되었다. 이들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80년 5월 3일이었다. 신귀영씨가 연행된지 68일만이었다. 이 기간동안 이들은 불법구금 당한 것이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구타, 물고문, 전기고문, 고춧가루 고문, 통닭구이, 비녀꽂이, 잠안제우기 등의 고문을 당해 결국 수사관들이 요구하는 대로 자백한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경찰은 증인들에 대해서도 여러 날 동안 불법구금 상태에서 고문을 가해 이들과 지사관들이 요구하는대로 자백했다.

경찰은 일본에 거주하는 조종련 간부인 신귀영씨의 친형이고, 서성철씨의 사촌대형, 신춘석씨의 사촌조카인 신수영씨를 만나 지령과 돈을 받고 국가기밀과 군사기밀을 탐지·보고하였다는 자백이 나오게 된다. 이에 따라 이들은 재판에서 15년형, 10년형을 선고받았고, 서성철씨는 89년 대구교도소에서 고문후유증으로 옥사했다.

재심개시 결정도 이러한 사실들을 들고 있다. 아울러 핵심증인인 신수영씨가 "자신은 조종련의 간부로 만난 것이 아니라 형제의 정으로 만났다"며 재심이 열릴 경우 범정에 출두하여 증언하겠다는 내용의 공증진술서를 새로운 증거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 42조 제5항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고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어도 제출 또는 신빙할 수 없었던 증거로써 그 증거가치에 있어 다른 증거들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발견하거나 이를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며 부산지법과 고법의 재심개시결정이 법원의 자유심증에 의해 증거가치가 좌우되는 것으로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신수영씨의 진술서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고, 박용규 씨등의 증언 반복도 인정하지 않았다.

「천주교조작간첩대책위원회」는 94년 11월 16일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재심청구 8개월만인 지난 7월 부산지법에서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1,2심과 대법원 결정 비교
부산시경에 불법연행된 신귀영씨등은 80년 4월 10일까지 진술조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이들이 연행된 날로부터 19일 내지 47일 동안 조사된 진술서나 신문조서가 전혀 없다는 일제히 자백을 하였다가, 그리고 이후로 세세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산지법과 고법의

재심의 폭 넓혀야
이에 대해 김형태 변호사는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옛날에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될 때만 재심을 허용했으나, 최근에는 원판결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의 측면에서 재심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과거의 판례로 회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변호사는 "그렇잖아도 재심의 문턱이 높은 상황에서 대법원이 이와 같은 입장이라면 인권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재심제도가 아무 소용없게 된다"고 말했다.

또, 전문가들은 "미국등에서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사받고

재판받지 못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재심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새"라며 이번 대법원의 결정을 반인권적인 결정이라고 못박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재심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문턱을 낮추는 것 뿐만 아니라, 과거 인권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례법을 제정해 재심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나오고 있다.

한편, 천주교 인권위원회등이 환송심에서 법원에 확실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박용길 장로 5년형 구형 선고공판 오는 30일

서울지법 형사4단독(조승관 판사)은 15일 오후 2시 서울지법 421호에서 북한을 방문하여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었던 박용길(76) 장로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박장로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박장로는 지난 10월 20일 재판부가 허혈성 심장질환등의 치료를 위해 일시 구속정지 처분을 내려 삼성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주민 스스로 의정감시를 바른의정을 위한 여성모임 발대식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시대를 맞아 주민들이 올바른 지방자치실현을 위한 의정감시에 직접 나섰다. 「한국여성민우회」(공동대표 정강자등 3명, 민우회)는 15일 오전 10시 종로성당에서 '제2기 바른의정을 위한 여성모임'(여성모임) 발대식을 가졌다. 여성모임은 60여 명의 주부로 구성되었고 앞으로 서울시와 양천, 강남, 성남 등 5개 기초자치단체 의정에 참여하게 된다. 이들이 주로 활동하게 될 분야는 행정사무감사, 시·구정질, 상임위 등으로 특히 여성과 밀접하게 관련된 식품, 환경, 보건, 복지,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 이들은 의정감시를 통해 모범의원도 선정할 예정인데 출석률, 발언횟수, 조례청원여부, 주민과의 접촉노력, 담당 공무원의 평가 등을 기준으로 한다. 이미 민우회는 지난 93년 1기를 결성, 도봉구와 노원구 의회방청을 시작으로 의정감시를 계속해 왔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25일까지 납부를
지로용지를 못 받으신 독자께서도 전국 어느 은행이든지 지로창구에서 아래의 지로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지로번호: 7618848

<이달의 주제-불치별>
80년 광주 5월은 영원하다.
부정과 억압으로부터
인간해방투쟁의 종합적 표현이다.
-리영희-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허인회씨, 현장 부재 증거 제출 변호인, 시간 기록된 예금청구서등 제시

'부어간첩' 불고지 혐의로 구속된 허인회(31, 현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씨가 김동식(33)씨를 만났다는 시간에 다른 사람과 함께 있었음이 구속적부심에서 밝혀졌다(2면에 관련기사).

서울지법 형사1부(재판장 민형기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5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서울지법 320호실에서 허인회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허씨는 김동식씨가 진술했다는 내용에 대해 전면 부인하였다. 허씨는 "당시 9월 23일 여동생의 결혼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허씨를 만나 얘기를 나눴다는 9월 15일 오전 10시 30분경과 낮 12시 30분경에는 사무실과 국회의원 회관에서 매제와 국회의원 보좌관 등 을 만났다고 말했다. 허씨는 "9월 16일 오전 10시경 사무실로 찾아온 동생과 결혼할 매제를 만났고, 이 시간 동안 사무실에 찾아온 사람은 뺨집 주인과 여자 두 사람 뿐이었다"고 말했다. 또, "이날 낮 12시 30분경에는 국회의원 회관에서 동생 청첩장을 돌리다가 오후 1시 20분경 사무실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또한, '간첩' 김동식씨가 세번째 만났다는 9월 20일 오후 4시경에는 "국회에서 강철선 의원등을 만나고 있

을 시각이었다"고 말했다. 임영화변호사는 "이런 사실들을 허씨 회사의 직원들과 국회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새정치국민회의 당직자들이 증언하고 있다"며 "경관이 주장하는 것들은 모두 허위임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한 증거로 재판부에 회사 직원, 강철선 의원 등 증인들의 증언 심 심리를 가졌다.

허씨는 "구속 이후 김동식씨의 사진 두 장을 보았을 뿐이며, 그의 진술서도 보지 못했다. 그의 진술내용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대질신문을 요청했으나,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물증도 하나없이 간첩의 진술만 듣고 인신구속하는 것은 인권유린"이고, "이런 무분별한 구속은 오히려 '간첩'을 도와주는 일"이라며 석방을 촉구했다. 허씨의 구속적부심에 대한 결정은 오는 오전까지 내려지게 된다.

한편, 허씨는 조사과정에서 "수사관들이 김동식씨가 구체적인 것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해 부어간첩과 관련 계속되는 구속사건이 확대될 것임을 암시했다.

성남·수원서 6명 구속
국보법 회합통신등으로

16일 새벽 김인호(31, 92년 성남청년회 회장)씨등 성남지역 청년단체 관련자 3명과 안산 새희망교회 전도사 조정현(33, 한신대 86)씨등 모두 6명이 경기도경보안과에 연행됐다.

가족들에 따르면 김씨등은 새벽 12시에서 5시 사이, 이용안(30, 총신대 86)씨는 오전 10시 자택에서 영장을 제시한 7-8명의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또 경찰은 가택수색을 벌여 책, 문건, 디스켓 등을 증거로 압수했다. 현재 이들은 성남, 수원에서 국가보안법상의 회합통신과 이적표현물 제작혐의로 연행, 92년 민족해방예국전선과 관련되어 조사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행자 명단> 김인호, 박철운(27, 회사원, 전 터사청년회 회장), 최학봉(전 성남청년회 회장), 조정현, 이용안, 정재동(30, 포항 제2교회 전도사)

안기부 변호인접견권 방해
민변, 규탄 성명

안기부가 지난 15일 연행된 김태년(31, 성남청년회 미래위원장)씨를 만나기 위해 변호사 접견을 신청한

이재명 변호사에게 "결제가 나지 않았다"며 접견을 거부했다. 이변호사는 16일 오전 9시 내곡동 안기부에 전화로 접견신청을 했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어 한시간 뒤인 오전 10시경 직접 안기부로 찾아가 정식 접견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다.

「민중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 민변)은 이날 성명을 발표, 안기부가 국가보안법상의 회합통신등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와 변호인의 접견을 가로막은 것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천주교 사제 단식 돌입
시국미사, 정부 도덕성 질타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16일 오후 7시 명동성당에서 정부의 도덕성 회복을 위한 시국미사를 가졌다. 미사를 집전한 장덕필 신부는 "현정부가 도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5.18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5.18특별법제정과 김영삼대통령의 대선자금 공개를 촉구했다. 미사를 마친 2천여명의 신도들은 명동성당앞에서 촛불시위를 벌였다.

한편,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소속 신부 30여명은 16일 명동성당 앞에서 김영삼 정권의 회개를 촉구하는 9일간의 단식기도에 들어갔다. 이들은 단식에 들어가기 전 성명을 내고 5.18 특별법 제정을 묻는 국민투표 실시와 대선자금 공개를 요구했다.

**<자료> 김동식씨 진술과 허인희씨 알리바이 비교
누가 진실을 말하는가?**

<편집자주> 경찰과 안기부는 '부어 간첩' 김동식씨의 진술을 기초로 재야인사들을 계속 구속하고 있다. 그러나, 구속자들은 한결같이 김씨의 진술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더구나 허인희씨의 경우는 주변 증인들의 증언까지 수집해 김씨의 진술과는 상반된 행위를 하였음을 16일의 구속적부심 과정에서 밝혔다. 이번 사건은 자칫 과거의 '조작간첩사건'의 과정을 똑같이 밟을까 우려스럽기 때문에 이를 정리해 실는다. 김씨의 진술내용은 구속영장에서 허씨의 알리바이는 구속적부심청구서에서 인용하여 정리했다. 허씨의 진술내용중 '박광선'은 김씨의 가명이다(김=김동식, 허=허인희).

<9월16일>
김: 오전10시경 허씨의 사무실 인근으로 찾아가 전화하는 과정에서 "나는 목포에서 전자상을 하는 박광선이야. 장사와 관련해서 조언을 받고 싶으니 시간을 내줄 수 없는가?"고 물어 허씨로부터 사무실로 오라는 대답을 들었다.

허: 전날 여동생인 허윤정이 결혼자금 대출금으로 광주은행 강남지점 김석희 대리와 만난 후 김대리와 밤 12시 넘게까지 야구정동 소재 로바다야까 '가야'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다음에 이른날 늦게 일어났다. 9월23일 결혼예정일이었던 매제 임종원씨가 오전10시경 사무실로 찾아왔다는 전화를 받고 집을 나서 자전거로 15분경 사무실에 도착했다.

김: 오전10시30분경 박이 사무실에 혼자 찾아들어가 5분 정도 기다렸다가 허씨를 만났으나, 허씨는 명함을 건네주며 시간이 없다고 해 12시30분경 다시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다.

허: 오전10시경 도착한 매제 임씨와 11시50분경까지 같이 있었고, 그 시간동안 허정희대리(허씨의 동생)와 경리직인 오정화씨가 사무실에 같이 있었다. 이 시간에 사무실에 찾아온 사람은 3명인데 오전10시25분경 '브로망' 빵집 가게주인인 백광진씨가 찾아왔고, 그의 소개로 여자 2명이 혼수품 구입차 방문했다.

김: 12시30분경 다시 사무실로 찾아가고, 다시 당산공원에서 인근 음식점

에서 꼬리곰탕을 먹으며 술까지 한잔했다. 당산공원에서 "나는 사실 목포에 사는 전자상이 아니라 북에서 온 당 연락원이다. 허형을 만나 변혁운동과 통일방도를 좀 상의해 보고 싶어"고 말한다. 내 이름은 박광선이다"고 말했다. 음식점에서 허씨가 '조광'등을 아느냐고 물었다. 헤어질 때 명함 뒷면에 호출번호를 적고 별표로 7942(친구사이)를 알려주었으며, 또한 사용방법도 알려주었다.

허: 오전11시50분경 매제와 헤어지고 난 후 자전거로 광주은행 영등포지점에서 자필로 직접 예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은행출납창구에서 현금으로 9백99만원을 인출했다. 은행인출시간은 12시5분이다. 사무실에 들려 국회의원회관으로 가 청첩장을 돌렸는데, 이길재, 유준상, 장영달, 신계클 의원실에 들렀는데, 당시 의원실에 있던 비서관들이나 직원들에 의해 확인되었다. 이후 사무실로 돌아왔다가 오후2시경 5층에 있는 사우나실에 들려 사우나와 이발을 한 후 오후3시30분경 나와 오후5시경으로 예정된 친구 조희씨와의 약속 때문에 전철을 타고 의정부역으로 갔다.

<9월20일>
김: 오후3시 당산공원에 나갔으나 약속시간에 허씨가 나타나지 않고 자전거를 탄 사람과 다른 1명이 나타났다. 그 후 허씨에게 삐삐를 쳐서 오후4시경 허씨를 만나 당산빌딩 지하 4방에 들어가 20분간 대화를 나눴다.

허: 새정치국민회의 창당직후의 당무차, 당사에서 오전 10시경부터 당무회의가 열리기로 결정되어 선약이었던 오훈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곧바로 새정치국민회의 당사로 가서 오전10시부터 11시30분까지 당무회의에 참석했다. 낮12시경 윤철상 사무부총장과 함께 당사 옆건물 지하 한 정식당인 '대보름'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컴퓨터와 관련된 논의를 한 후 오후 1시30분경 당사 옆의 사우나에 들려 사우나를 한 후 오후3시경 국회의원 박정훈씨를, 오후4시경 국회의원 강철선의원을 만났다. 다시 오후4시30분경 윤씨과 조달부장을 만나 컴퓨터 추가납품에 대해 논의했고, 사무실에 오후 5시30분경 도착했다.

- 행사와 동정 ○**
- **북녘 큰물피해 동포돕기 기금마련 일일찾집**
· 19일(일) 오전10시/· 녹수청산
· 주최:불교인권위(☎734-6401)
 - **열린터 후원의 밤-열린마음, 열린세상**
· 20일(월) 오후7시/· 르네상스호텔 3층
· 출연:김준/김지숙/신광웅밴드/이선희 등
· 주최:성폭력상담소(☎576-7127)
 - **토론회-미국의 권력부패 어쩌할 것인가?**
· 20일(월) 2시/· 변호사회관 서초별관
· 지정토론자:박재창(숙대 정법대교수)/이근식(서울시립대 경제학교수)/정종섭(건대 법대교수) 등
· 주최:대한변협(☎522-3761)
 - **분당지역 쓰레기문제 주민토론회**
· 21일(화) 오전10시/· 분당구청 대회의실
· 주제발표:쓰레기 처리문제와 해결방안(강성진)/중앙계 실시이후 쓰레기 재활용 어떻게 되고 있나(조진상)
· 주최:한국여성민우회(☎269-5763)
 - **여성환경운동의 평가와 과제 심포지움**
· 22일(수) 오후1시/· 대우재단 강당
· 발표:생태페미니즘이 세계를 구할 것인가(Maria Mies)/여성과 환경운동에 대한 국제적 논의동향 등
· 주최:한국여성민우회(☎269-5763)
 - **청년정보문화센터 정기총회**
· 24일(금) 오후7시/· 기독교연합회관 3층
· 문의:516-1542
 - **제2회 열린가족 이야기 한마당**
· 25일(토) 오후3시/· 중구문화관
· 내용:우리시대 부부의 대화(김숙자)/우리시대 부부의 성(이근덕)/사례부부이야기 등.
· 주최: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장담소'(☎643-3606)
 - **지탁연 10주년 축하잔치**
· 26일(일) 오후2시/· 여성개발원
· 문의:275-8505
 - **가정폭력방지법 입법 기금마련을 위한 재즈콘서트**
· 26일(일) 오후5시/· 호암아트홀
· 출연:이정식/임인건/장용규/김희현/박성연/안혜경 등
· 주최:한국여성의 전화(☎269-2962)
 - **「천주교조작간첩 진상규명 대책위원회」가 군사정권 하에서 조작된 간첩 사건들의 진상을 파헤친 다큐멘타리를 제작, 비디오로 출시했다. 상영시간은 42분, 가격은 2만원. 문의 777-0643.**
 - **「박용길 석방대책위원회」가 박용길 장로의 방북자료집을 판매하고 있다. 박장로의 방북배경과 경과, 방북후 활동, 대책위의 활동과 입장 등 관련자료를 실었다. 가격은 2천원, 문의 313-8201이다.**

<이달의 주제-불처벌>
80년 광주 5월은 영원하다.
부정과 억압으로부터
인간해방투쟁의 종합적 표현이다.
-리영희-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안기부, 생사람잡기식 수사
증거제시 요구는 목살
'간첩' 진술만 앞세워 자백강요**

최근 이른바 '부여간첩' 관련 구속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나, 안기부나 경찰이 이른바 '부여간첩'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증거 제시없이 자백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17일 서울지법 320호실에서 열린 박중렬(36, 전국연합 사무차장), 김태년(31, 성남 '미래청년회' 준비위원장)씨의 구속적부심 심리에서 이점은 보다 뚜렷하게 드러났다.

수사과정에서 **회합통신** 질문조사 안받아 안기부는 구속영장에서 박씨가 '90년 일자불상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박씨의 형 집에서 북한에서 납매된 성명불상의 공작원으로부터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 격려의 말과 함께 조국통일을 위해 함께 일하자는 권유를 받고 포섭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A3(무전기) 지령 수신방법등의 교육을 받고 지령에 따라 90년 이후 95년 현재까지 약속한 통신조직을 통해 북한 공작조직에 보고하였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박씨는 "나는 안기부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단 한번도 이에 대해 수사를 받은 바도 없으며 단지 '너 누군가를 만나고 있지 않느냐? 솔직히 밝혀라'

라는 일방적인 요구를 받아 왔다"고 말했다. 또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무슨 증거나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해라"라고 하며 무슨 내용으로 나를 수사하는지 알려달라고 했으나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기부 수사관들은 "내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이야기를 하면 우성남 '미래청년회' 준비위원장)씨의 구속적부심 심리에서 이점은 보다 뚜렷하게 드러났다. 안기부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박씨를 접견하러 온 변호사들에게 △북한 방송에서 박중렬이 사업을 잘하고 있다는 등의 방송이 나온 사실 △지남 10월24일 사살된 '부여간첩' 박광남의 몸에서 박씨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예 를 들어 설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안기부는 박씨가 보고하는데 사용했다는 무전기도, 죽은 '간첩' 박광남씨의 선물도 제시하지 못했다. 김태년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90년 일자불상경부터 95년 10월까지 북한 대남공작기관인 조선노동당 사회문화부 소속 성명불상의 납매간첩으로부터 접촉사의 연락을 받은 후 수시로 만나 대남공작 방안등을 협의하는 등 회합하고 성명

불상의 납매간첩으로부터 현지 통신교육을 받고 구식 HF 고속 메모리 건전 무전기를 수령하여 활동사항을 대북 보고하였다는 것"이 이에 대해 김씨도 "수사를 받으면서 단 한번도 회합통신에 대해 어떤 증거물을 제시한 적도 없고 단 한마디의 질문도 받지 않았다"며 "무조건 자백을 하라는 식의 수사를 하여 나 자신도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무슨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만약 내가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좀 보여달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고문에 의한 강요 우려 임종인 변호사들은 "구치장소로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서초경찰서에서는 단 5분 밖에 있지 않은 채 안기

부로 언행한 후 지금까지 잠도 제대로 재우지 않은 채 계속해 무조건 자백을 하라는 식의 구속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안기부를 통박했다. 또한, "현재 이들의 공소사실을 보면 국가보안법 제7조(이적표현물 관련), 10조(불고지죄)등은 안기부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장에 이례적으로 안기부와 경찰청을 동시에 기재함으로써 이러한 국가보안법 내용에 대해 안기부에서 수사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들에게 아무런 증거도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인신을 구속한 채 생사람 잡기식의 수사를 하고 있는 안기부에 대해 그 잘못된 관행에 철퇴를 내려 주기 바란다"며 "만약 적부심 재판이 기각된다면 이들은 최장 20일동안 안기부에 갇힌 채 어떤 고문을 당하는 속에서 거짓 자백을 강요당할지 모른다"며 이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계속 여부는 오늘 오전중으로 결정난다.

**인권활동가를 위한 제2기 공개강좌(9회)
행려자의 인권문제**

· 일시: 11월18일(토요일) 오전 11시-오후1시
·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 서울역 하차 10분 거리)
· 문의: 인권교육실 김수경 간사 (전화:715-9185)
· **이런 강좌는 워크숍으로 진행됩니다. 행려자, 부랑아들의 인권문제를 국내 인권단체에서는 처음으로 함께 조명하게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허인회씨 구속적부심 기각

17일 서울지법 형사1부는 소위 '부어간첩' 불고지 혐의의 구속된 허인회(33, 현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 씨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례에 따라 기각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허씨의 경우 경찰이 주장하는 바 '부어간첩' 김동식씨가 허씨를 만났다는 시간에 확실한 알리바이

를 입증하는 증언과 증거들을 제출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허씨의 변호를 맡은 임영화 변호사는 "허탈하고 착잡하다"며 "재판부가 유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구속 계속 여부만을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로써 허씨는 '새정치국민회의'의 공천과정과 회사의 운영 등에서 상당한 피

해를 입게 되었다.

경기도경 애국동맹 사건 7명 구속 1명 수배

경기지방경찰청은 17일 소위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산하 애국동맹 조직원 조정현(32, 안산희망교회 전도사) 조국연(29, 학원강사), 김인호(31, 전 성남 청년회장)씨 등 7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또 이름을 밝히지 않은 1명을 수배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압수한 컴퓨터 컴퓨터 2대, 디스켓 1백70장, 김일성 신년사 등의 유인물등 7백20장을 증거물로 압수, 분석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반국가단체인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산하 애국동맹의 핵심간부들이 검거된 지난 92년9월 이후 경기도 성남, 안산, 부천 및 경북 포항 등지에서 한국민중교회운동연합과 지역 청년회 등에

침투하여 각종 집회와 시위를 배후조정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계간지 <빛>을 발간, 배포했고, 국회 및 정부요인과 재야운동단체등 핵심인물의 활동내용과 특정부대의 위치, 조직 등 군사기밀을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른바 '부어간첩'과 관련된 사건과 함께 경기 성남과 안산지역에 사건의 파장이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늦봄 통일상 후보추천 받아 문익환목사 기념사업회

'문익환목사 기념사업회, (회장 김희선, 기념사업회)는 매년 1월 문목사의 뜻을 기리고, 통일운동에 공로가 큰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 문목사의 호를 딴 '늦봄통일상'을 제정했다. 기념사업회는 이 상을 96년 1월 문목사 2주기 추모식 때 수여할 예정으로, 현재 후보추천을 받고 있다. 추천 마감 12월15일까지, 문의 312-3036.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행사>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

· 장소: 서울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
· 문의: 522-7284, 715-9185

Table with 4 columns: Date, Time, Event, Organizer. Includes events like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 and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 인권간행물 ◇

- List of human rights publications including '철거민신문', '함께가는 여성', '보습처럼', '교육지침서-어린이는 어떤 권리를 가졌을까요?', '새날을 여는 교회여성', '여성과 한국사회'.

<이달의 주제-불처벌>
80년 광주 5월은 영원하다.
부정과 억압으로부터
인간해방투쟁의 종합적 표현이다.
-리영희-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균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안기부, '국민 품에 안겨도' 여전히 고문

박충렬·김태년씨, 일주일째 잠 못자고 서서 조사 받아

'국민의 품에 안겨' 새롭게 태어나겠다고 안기부장이 다짐을 한 것은 지난 9월 안기부가 남산시대를 마감하고 내국동 신청사로 이전 하면서였다.

그러나, 안기부의 이런 약속은 두 달도 채 안돼 거짓

지난 15일 새벽 안기부에 의해 국가보안법상 회합동

박씨(36, 전국연합 사무차장)·김태년(32, 성남 미래청

이후부터 계속 앉지도 못하고 서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무릎을 반쯤 구부린 상태에서 손등과 발을 서는 고문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이들을 안기부에서 접견한 한정화 변호사등은 "이들이 오랫동안 잠을 못

자 자신이 진술한 내용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상태"라며 전하며, "안기부가 불법적인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태년씨의 변호인인 이재명변호사도 "안기부의 이런 수사태도는 고문에 의한

이날 박씨와 김씨 가족들은 안기부에 면회를 요청했으나, 오후3시50분경 안기부 직원 20여명에 의해 강제로 밖으로 쫓겨났다.

박씨의 부인 남향숙(32)씨는 박씨가 85년 반계동맹당 사건 때 도 극심한 고문을 당했다며, "이런 상태로 고문을 계속 당하면 간첩이 되고 말 것이 아닌가"고 분노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최근의 국가보안법

사건이 "본격적인 총선체제로 돌입하기 위한 여건조성의 일환으로 우선 재야를 겨냥한 대대적인 간첩사건

조작으로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술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규정지었다. 이

전국연합은 우선 22일 안기부 앞에서 항의시위를 하고, 인권단체 실무자 간담회를 갖고 대응책을 마련키로 한다. 또, 22일부터 3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에 이를

● 주요 공판 안내 ●

- 21일(화) · 이진영(학사노대책위, 선고), 10시, 국보법, 서울형사2부, 422호
22일(수) · 조중욱(서총련의장, 선고), 10시, 국보법, 서울형사 21부, 311호
· 전호선(학생사회주의기관대오, 선고), 10시, 국보법, 서울지방법사 21부, 311호
· 정승우(법명 일력, 소색세마을), 10시30분, 재산국외도피, 서울형사 21부, 311호
· 이범준, 현준우(5.1동맹), 2시, 국보법, 서울형사21부, 311호
· 김용광, 2시, 국보법, 서울형사21부, 311호
· 강희석(한국통신), 4시, 업무방해등, 서울형사6단독, 321호
23일(목) · 조두현(서총련, 선고), 10시, 국보법, 서울형사10부, 318호
· 정홍곤 외 1명, 2시, 업무방해등, 서울형사4부, 418호
· 김용광, 양한웅, 심철식(한국통신), 2시, 폭력법, 서울지방법사4부, 418호, 2시
24일(금) · 정은철(89년 입수경방북관련), 10시, 국보법, 서울지방법사23부, 311호
· 신광수의 1명, 3시, 국보법, 서울지방법사1부, 418호,
· 도남희(한국통신), 3시, 폭력법, 서울지방법사1부, 418호.

<신청사 이전 관련 안기부 관계자들의 발언>
국민에게 안기는 안기부?

과거의 어두운 이미지를 불식하고 이름 그대로 '국민에게 안기는 안기부', '열린 안기부'로 탈바꿈하는 계기로 삼았다. -신청사 이전 관련 안기부 고위관계자 발언
신청사 이전은 단순한 물리적 이전이 아니다. 이를 정신적·문화적 이전으로 승화시켜 국민에게 한걸음 다가가는 열린 안기부로 변모할 것을 약속한다. -권영해 안기부장, 10월11일 내국동 안기부 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5.18특별법 다시 불붙어
5.18비대위 매일 집회**

「5.18하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김상근 등, 5.18비대위)는 오늘부터 매일 국회 앞 집회를 갖고 5.18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5.18비대위의 이런 결정은 지난주부터 국회 법사위에서 5.18특별법이 심의되고 있는데 따라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5.18비대위는 오늘 12시 여의도 국회 입구인 장기신용은행 앞에서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소속 단체가 매일 순번으로 돌아가며 집회를 갖고, 민자당사 항의 방문도 한다.

또, 5.18비대위는 오는 25일 서울을 비롯 전국에서 국민대회와 국민행동을 전개한다. 서울의 경우 오후 2시 국민행동, 3시 국민대회, 4시 행진을 한다.

한편, 「친군교정의구현사제단」 소속 신부등 12명은 지난 16일 시국기도회 이후부터 명동성당에서 5.18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북한수재등포 성금 전달
여연·불교인권위**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이미경등, 여연)은 20일 '북한수재등포등기 여성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5백85만6천4백60원을 대한적십자사 강영훈 총재에게 전달했다. 여연은 폭우로 수해를 입고 고통받는 북한동포를 돕자는 취지로 지난 9월 15일부터 한달간 소속단체

인권협 국제심포지엄 후원인단 모집중

「한국인권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상근, 인권협)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탈냉전시대 국가안보와 인권' 국제심포지엄의 후원인단을 모집한다. 후원인단에 참석하려면 전화번호: 715-9185로 문의하면 된다. 후원금은 개인 3만원 이상, 단체 10만원이다.

와 지역조직에 접수장구를 설치, 모금운동을 진행해 왔다.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한상범)도 이날 법민련 남측본부에 북한동포등기 성금 2백만원을 전달했다. 불교인권위는 모금을 위해 지난 19일 '북녘큰문폐해 동포등기 일일차집'을 벌였다.

**나이지리아 사형집행
외무부, 유감 표명**

외무부는 지난 17일 나이지리아 인권·환경운동가 켄 사로위와 등 9명의 사형집행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국제사회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치사상의 의문제기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집행한데 유감을 표한다"며 "나이지리아 정부가 앞으로 국제권리장전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동두천 주민 폭행 미군
경찰, 의례적인 조사만**

지난 18일 새벽12시15분경 자가용으로 동두천시 상패교 부근을 지나던 박성진(34, 동두천시 보산동)씨가 미군 8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머리와 허리에 상처를 입었다. 박씨는 "갑자기 나타난 미군들이 차를 가로막았다. 여러차례 경적을 울렸는데도 비켜주지 않아 차에서 내려 항의하자 마구 때린 후 도망쳤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폭행 미군들은 의례적인 조사를 한채 돌려보냈다.

주간/인/권/호/름

(95년11월13일부터 11월19까지)

<13일(월)> 환경련등 7개 민간단체, 나이지리아 대사관에서 켄 사로위와 등 처형 항의시위/대법원 제3부, 재일고포간첩단 신귀영씨 사건 재심 파기환송/국회 법사위, 5.18 특별법 심의 착수/캐나다 통신보안기관 전 첩보원, 주 캐나다 한국 대사관 초청 폭로

<14일(화)> 전노협 전위원 단병호씨, 제3차개입금지 적용 지역1년 선고/<문화일보> 노동쟁의 타결/국회 문체위,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수정안 통과, 96년 6월 발표/정부와 민자당, 12월 7백43만명 일반사면 단행키로/대전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일반고 입학 허용/동티모르인 21명, 인도네시아 일본대사관 농성, 외국으로 정치적 망명 요청

<15일(수)> 안기부, 박충렬(36), 김태년(32)씨 등 2명을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불응유인물제작 혐의 구속/보건복지부, 장애아 보육시설·2살 이하 영아시설 각각 1백50곳씩 신설키로/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정부의 쌀수매량 축소·수매값 동결 방침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 방청/아르헨티나 육군참모총장, '군사독재자 양산 미국 보병학교'에 장교 연수생 파견 거절/인도네시아 일본대사관 농성 동티모르인 포르투갈로 출발

<16일(목)> 노태우씨, 수뢰혐의로 구속 서울구치소에 수감/친군교 정의구현사제단등 명동성당 시국기도회, 5.18특별법 국민투표 실시 제안, 12명의 사제와 신도 9일간의 단식농성 돌입/프랑스 의회, 정부의 복지축소안 승인, 노조 28일 총파업

<17일(금)> 5.18광주전남공대위등, 5.18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전남 여천 앞바다 호유해운 유조선 기름 유출, 수백톤 오염피/농림수산부, 추곡수매량 9백60만섬에 1백40만섬 추가 매입키로/국회, 내년 1년동안 동성동본 혼인신고 허용 특별법 통과

<18일(토)> 서울구치소 수감 양심수들, 노씨 특별대우 항의농성, 21일부터는 단식/한총련 학생 5백여명, 연세대 학생회관 앞에서 '대선자금 공개 및 5.18특별법 제정 결의대회'/동두천시에서 미군 집단폭행으로 박성진씨, 이호범씨 부상등, 미군범죄 잇따라 발생/전남 화순 농민 1천여명, 집회 열고 쌀 1천1백만섬 이상 수매 요구 시위/대구지방경찰청, 대경총련 의장 이정호(23)씨 국보법·집시법 위반 혐의로 연행/해태유동 노조, 조합원 탈퇴 강요 회사 고발

<19일(일)> 헌법재판소, 전·노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한 5.18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최종결정을 12월중 내리기로

<해설> 지난주에는 시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었다. 그는 조사기간 내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중대사범임에도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았다. 또, 그가 수감된 감방은 여관방 수준이라고 한다. 서울구치소의 재소자들이 차별대우되면서 이에 대해 항의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다른 재소자들의 처우나 수용시설의 수준도 이번 기회에 향상시킬 수는 없을까. 한편, 지난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박충렬·김태년씨는 증거도 없이 일주일째 고문을 당하고 있다. 이 상반된 현상은 아직도 법외의 광등은 멀었음을 웅변으로 증거하는 것이다.

<이달의 주제-불처벌>
80년 광주 5월은 영원하다.
부정과 억압으로부터
인간해방투쟁의 종합적 표현이다.
-리영희-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안기부, 고문으로 장편소설 쓰나

"박충렬씨등 89년부터 '간첩'에 포섭, 활동해왔다"

「국가안전기획부」(부장 권영해, 안기부)가 잠인한 고문으로 한편의 장편소설을 엮으려 하는 것 같다. 안기부는 1주일동안 박충렬(36,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사무차장)·김태년(32, 「미래청년회」 준비위원장)씨에게 계속 잠 안 재우기 고문을 가하면서 자백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기부는 이들을 포섭한 '간첩'이 누군지 언제 어디서 만나 포섭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이들이 간첩활동을 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인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1일 박씨와 김씨를 점진한 임종인 변호사는 "이들은 거의 잠을 자지 못해 자신이 무슨 조사를 받고 있는지 말하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황실수설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전했다. 임변호사에 의하면 안기부는 90년 간첩에 포섭되었다며 자백을 강요하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박씨등이 89년 40대 납자를 만나 포섭된 이후 간첩활동을 해왔다고 안기부는 이른바 '부여간첩' 김동식씨가 납파되면서 무전기 3대, 공작금 4천만 원을 가지고 내려와 경기도 남양주군 능내리 어느 묘지에 파묻은 것을 찾아냈고, 그중 '무전기 1대와 공작금

은 박씨에게, 무전기 2대는 박씨의 하부 조직원에게 주려 했다'며 그 하부조직원을 대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안기부는 김씨가 사용한 무전기를 성남 「미래청년회」 사무실 천장에서 15일 새벽 압수수색 때 찾아냈다고 한다. 그러나, 「미래청년회」 회원들에 의하면 이날 새벽 아무도 없는 사무실을 뜯고 들어왔고, 수많은 천정보드 중 한군데만 뜯겨져 있었다며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다.

윤기원 변호사(전국연합 인권위원회 위원장)는 "사법부가 구체적인 시간과 인물이 불분명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간해 안기부의 고문수사를 용인해줬다"며 "인간정도로 황실수설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말했다. 윤변호사는 "사실 법적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답답하다"면서 다시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1일 박씨와 김씨의 가족, 성남 미래청년회 준비위 회원등 10여명이 안기부 앞에서 가족들의 면회와 구속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항의 시위를 벌였으나, 안기부는 끝내 가족들의 면회를 거부했다.

한편, 전국연합, 민가협, 전대협 동우회 등 단체회원

들은 오늘 10시 내곡동 안기부청사 앞에서 '고문수사의 중단'등을 요구하는 항의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박충렬씨등 석방 요구
엠네스티, 「국보법 폐지해야」**

「국제엠네스티」(엠네스티)는 20일, 최근의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 구속자가 잇따르는 상황에 대해 논평을 발표하고, 심각한 우려와 함께 구속된 이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엠네스티는 "최근 한국에서 학생, 노조 활동가, 학자 등이 국가보안법으로 연행되고 있다"며 "이들은 결사와 표현의 자유를 비폭력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정부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비폭력적으로 활동한 재야 활동가들을 자의적으로 연행·수감하는데 국가보안법이 이용되고 있다"면서 "표현·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해 한국정부가 국가보안법을 폐지, 국제법상의 책무를 이행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엠네스티는 올해만도 2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북한을 방문했거나 반국가단체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연행, 구속되었다며 방북사건으로 구속된 한총련의 이해정·정민주씨, 충남대 민족활동가대오 사건의 서영원씨등 12명, 「지도자 김정일」 책출판과 관련하여 구속된 이찬형씨, 노우협 사건으로 구속된 문성현씨등 3명, 이른바 '부여간첩'과 관련하여 구속된 이인영·박충렬씨등 5명을 포함한 23명에 대해 석방을 요구했다.

**수배 장진성씨 구속
진보련 13명 긴급구속**

94년 구국전위 사건으로 수배중이던 장진성(전 광주 전남연합 조직국장)씨가 20일 오후 7시30분경 전남도경보안수사대에 의해 연행되었다. 장씨는 현재 서울 홍계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전남도경보안수사대는 21일 오전 9시30분경 「진보정치연합」(진보련) 심우춘 부위원장등 회원 1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긴급구속하고, 3명을 수배했다. 경찰은 이들이 사노맹을 재건하기 위한 활동을 해왔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주의민족통일광주전남연합」(공동의장 정광훈등, 광주전남연합)은 "법국민적 5.18투쟁의 진원지인 광주에 대한 대대적 공안탄압으로 현정권에 부담인 5.18하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을 회피하려는 과거 독재정권과 같은 낡은 수법"이라고 비난했다.

또, 「한국기독교교장교회」도 지난 16일 예국동맹 사건으로 구속된 조정현(안산희망교회) 전도사, 정계동(포항제2교회) 준목의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을 요구하는 21일 발표했다.

국가보안법 초국경적인 연대로 풀자

국제심포지엄 오늘부터 2박3일간 열려

분단 50주년 만에 최초로 국내에서 열리는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이 오늘 저녁 환영만찬을 시작으로 수유리아카데미 하우스에서 2박3일간의 일정에 들어간다.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세계적인 인권운동가들이 대거 참여해 국내외의 관심을 끌고 있다(아래 기사 참조). 특히 유엔 비상사태 특별보고관 레안드르 데스푼이씨도 이 행사에 참가하는데, 유엔 특별보고관이 방한하기는 지난 6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방문 이후 세번째다. 외국의 참석자중 대만인 임서량(69, 林書揚)씨는 대만의 최장기수로 약 35년간 정치범으로 복역한 경력

을 지닌 인물이다. 임씨는 세계 최장기수였던 김선명씨와 22일 환영만찬장에서 만나게 된다. 해외 참석자들은 23일 오후5시부터 명동성당에서 열리는 민가협 목요집회에서 0.75평의 독방체험을 하기도 한다.

이 심포지엄을 준비해온 ‘한국인권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상근, 인권협)는 “냉전시대를 지탱한 유일한 가치기준이었던 ‘국가안보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인간을 위한 안보’를 찾아야 할 때”라며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초국경적인 연대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심포지엄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인권하루소식>에서는 이 심포지엄의 주요내용을 24일, 25일 이틀동안 상세히

보도할 예정이다(주요일정은 <인권하루소식> 18일자 2면 참조).

대선자금 공개 요구 사회단체 목소리 높아져

노태우 전대통령의 구속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비자금 사건에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김영삼대통령의 92년 대선자금 공개를 요구하는 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오재식) 소속 회원 40여 명은 21일 낮12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대선자금과 관련해 벌에 대한 전담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갖고,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공개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공개서한에서 “비자금 사건 수사는 검찰이 그간의 오명을 벗고 실추된 명예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하고, 성역없는 수사를 통한 관련자들의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또 “대선자금의혹이 밝혀지지 않고서는 여타의 비자금과 관련된 의혹이 규명될 수 없다”며 대선자금을 철저히 조사, 내역을 공개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장복, 전국연합)도 이날 김대통령의 대선자금 공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연합은 성명에서 “김대통령은 새로운 정치풍토 창출을 위해 국민앞에 고해하는 마음으로 92년 대선자금의 전모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18학살과 비자금은 한 뿌리

5.18비대위, 특별법 제정 국회 매일집회 시작

“5.18 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김상근 등, 5.18비대위)는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매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갖기로 한 방침에 따라 21일 낮12시 5.18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첫날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는 소속단체 회원 1백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창희신부는 “죄진 노태우는 감옥에 갇혀어도 3평짜리 여관방에서 두다리 쪽 펴고 잠는데, 죄도 없는 신부들은 명동성당에서 16일부터 단식을 하고 있는 현실을 뒤집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참석자들은 “5.18문제나 비자금의 문제는 결국은 한 뿌리”라며 “김영삼 대통령은 5.18특별법 제정과 대선자금 공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매일집회에 들어가는 입장

을 발표하면서, “노태우씨의 부정축제는 단순한 개인 비리나 권력비리가 아니라 양민학살과 쿠데타 체제의 추악한 구조적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노태우씨가 부정축제 혐의로 구속되었지만, 이러한 구조를 배제한 5.18 내란학살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만이 사회정의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태우 비자금 건을 벌써 알고도 수사를 기피해온 현 검찰에 5.18내란학살에 대한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국회의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5.18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집회가 끝난 후 5백미터 떨어진 민자당사 앞까지 행진한 뒤 민자당에 대선자금의 공개를 요구했다.

<이달의 주제-불처벌>

80년 광주 5월은 영원하다.

부정과 억압으로부터

인간해방투쟁의 종합적 표현이다.

-리영희-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균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국보법은 불처벌, 인권유린 정당화 수단”

국보법 국제심포지엄 개막, 해외에서 40여명 참가

‘한국인권단체협의회’(인권협) ‘전국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동총)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등 9개 단체가 해방·분단 50주년을 맞아 국내에서 최초로 갖는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이 22일 저녁 수유리아카데미하우스에서 개막, 2박3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오늘 일정 아래 표 참조).

22일 오후 6시30분부터 열린 환영만찬에는 일본, 필리핀, 인도 등 아태지역

13개국, 미국과 유럽에서 온 국제인권활동가 40여명과 국내 주최단체의 대표자 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인권단체협의회’, 김산근대표는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탈냉전시대에서 요구하는 인류공생 공동체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나가지”고 말했다.

해외 참가자들을 대표하여 연설한 인도의 라비네어씨는 “국가보안법이 세계적 필리핀, 인도 등 아태지역

권유리를 정당화시키는 구실을 하고 있다”며 “세계적 차원에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자”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국가보안법으로 45년간 수감되었던 한국의 김선명씨와 대만에서 34년여 동안 수감되었던 임서량(대만 노동당 부당수)씨가 만났다. 이들에게 민가협은 고난을 상징하는 보라색 수건을 돌려주었고, 끝이어서 전세계 국가보안법 피해자를 위한 묵념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권영길 민주노동 위원장이 비디오로 인사말을 대신해 눈길을 끌었다.

국가보안법 국제 심포지엄 23일 일정

(오전9시-9시30분)

기조발제1: 탈냉전 신국제질서에서의 국가안보와 인권, 그리고 민간인권단체(NGO)의 역할- Ross Daniels(국제엠네스티 국제집행위원장)

(오전 9시30분-12시)

Session1: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아태지역 국가안보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발제: 오재식(크리스찬 아카데미 사회교육원 원장)/ Kinhide Mushajoji(교수, IURIGHTS 의장, 일본)

토론: 서승(전 양심수, 일본)/Eric Sottas(SOS Torture 대표, 제네바)/Aida Jean Manipon(아시아교회협의회 국제위원회, 홍콩)

(오후1시30분-4시)

Session 2: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발제 Magaret Blanchard(교수, 미국)/Sandra Coliver(변호사, Aticle 19, 영국)

토론 James D. Ross(Human Rights Task Force on Cambodia, 캄보디아)/조용환(변호사)/Rene Sarmiento(필리핀인권단체협의회-PAHRA)

(오후5시-6시)

전세계 인권운동가들과 함께 하는 민가협 목요집회 장소: 명동성당

주제: 전세계의 국가보안법 희생자 추모, 국보법 폐지를 위한 국제연대의 다짐

지시에 따라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수사했다. 또 5.18 직후에는 전두환등 신군부로 구성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핵심기관인 ‘사회정화분과 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변호인들은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려 사회정의와 민족정기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불공정한 재판의 우려가 있는 재판관은 스스로 회피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학살자 특별대우 중단 5,6공 의문사 진상규명” 유가협, 서울구치소 시위

5,6공시절 분신, 고문, 의문사 등으로 죽은 이들의 유가족들이 서울구치소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전국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회장 박정기) 회원 20여명은 22일 오후1시경 “학살자도적놈 노태우를 처단하자” “노태우 특별대우 구치소장 각성하라”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시간여 동안 시위를 벌였다. 이들이 “광주학살로 양민을 학살하고 5,6공에서 의문사를 만든 장본인을 특별대우할 수 있느냐”며 구치소 안으로 밀고 들어가려 하자 경비교도대가 이를 저지, 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이들은 “우리의 자식들은 광주학살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단을 위해, 민주화를 위해 죽어갔다”면서 “5,6공의 의문사가 한건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판에 학살자만 구치소에서 특별대우 받을 수 없다”고 항의했다.

정경식씨 신군부 협조 민변, 5.18헌법소원 재판부 기피신청

전두환, 노태우씨등 5.18책임자를 고소한 피해자들이 헌법재판소에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22일 제출했다. 홍성우, 안영도 변호사등 5.18고소사건 담당 변호사 5명은 “전원재판부 심리에 참여하고 있는 정경식 재판관이 12.12와 5.18 당시 내란과정에 참여한 사람으로 공정한 판단이 불가능하다”며 이유를 밝혔다.

정경식씨는 12.12쿠데타 당시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서 합동수사본부에 파견, 본부장인 전두환씨의

세계성폭력추방주간 맞아 여성단체, 다양한 행사 마련

11월25일-12월10일 세계 성폭력추방주간을 맞아 여성단체들이 우리나라 여성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는 간담회, 시민문화제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한국여성의 전화」는 이 기간동안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과 사진전을 가질 예정이다. 여성의 전화는 11월25일부터 12월9일까지 매주 토요일 종로, 대학로, 신촌 등지에서 거리서명운동을 펼치고, 오는 26일에는 호암아트홀에서 가정폭력방지법입법 기금마련 제즈 콘서트를 갖는다. 또 성남, 광주, 울산, 대구 등 지역단체들에서는 피해사건전과 간담회등을 연다.

「성희롱추방을 위한 시민연대」는 12월2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성희롱추방 시민문화제 및 걷기대회」를 가진 예정이다.

<세계성폭력추방주간 유래>

세계성폭력 추방의 날(International Day Against Violence Against Women)은 도미니카공화국의 파트리아, 미네르마, 마리아테레사 세자레가 독재에 항거하다 살해당한 것을 기념하여 81년 제정되었다. 부유한 중류층 가정에서 태어난 이들은 독재자 트루히요에 맞서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국민봉기를 주도했다. 이일로 이들의 남편은 모두 감옥에 투옥되었고 세자레는 연금당해야 했다. 60년11월25일 감옥에 있는 남편들을 면회하기 위해 가던 이들은 도중해서 군인들에게 살해되어 바다에 버려졌다.

81년부터 라틴아메리카 여성들이 11월25일을 기념일로 제정하여 지켜오던 것을, 91년 여성에 대한 폭력을 추방하기 위한 국제적인 활동 전개를 위해 세계인권

의 날인 12월10일까지 16일간을 추방주간으로 정한 것이다.

고문조작 중단 촉구 전국연합등 안기부 시위

「간첩」과의 회합통신 혐의로 안기부에 구속, 일주일 넘게 감 안제우기 등의 고문을 당하며 박충렬(36), 김태년(32)씨가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제야단체 회원들이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안기부 앞에서 가졌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중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의 회원 70여명은 22일 오전 10시경 안기부 정문 앞에 집결, 「고문수사 즉각 중단」 「간첩조작 안기부 해체」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안기부가 박씨등을 증거없이 구속,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며 「고문으로 간첩을 조작하려는 기도를 중단하고 박씨등을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안기부는 또 다시 가족들의 면회를 거부해 참석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한편, 전국연합·한청협등 청년단체·전대협동우회 등 10여 단체 실무자들은 이날 오후 전국연합 사무실에서 모여 「안기부의 간첩사건에 조작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칠 것」에 합의하고 이를 위한 대책모임을 구성하기로 했다.

또 박충렬·김태년씨의 가족 등 최근 「간첩」사건 관련 구속자 가족들은 23일 저녁부터 명동성당에서 항의농성을 갖기로 했다.

“불고지 구속자 석방하라” 80년대 학생회장 기자회견

80년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총학생회장 35명은 22일 오전10시 세실레스트라에서 함운경, 허인회, 이인영씨등 불고지죄 혐의로 구속된 이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함씨등은 만난 상대가 간첩이라는 것을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들의 불고지죄 혐의는 납득하기 어려운 뿐 아니라 검찰의 자의적이고 무리한 법적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사건은 「최근 30대의 정치적 진출과 양심세력의 사회유지임에 밝은 젊은이들을 하려는 불분한 정치의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함씨등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보육료 전액 보호자 부담 정부 민간보육정책 비판 민간보육활성화정책토론회, “민간보육시설을 영리시설로 인식” 지적

「전국 민간·가정 보육시설연합회」(회장 한숙희)와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등)는 21일 오후2시 종로성당에서 국민연금기금 보육시설 설치자금을 통한 민간보육활성화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민간보육시설장과 교사등 80여 명이 참석한 이 토론회에는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 배병준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석해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국민연금기금 보육시설 설치자금이란 정부가 보육시설 확충계획의 하나로 민간의 참여유도를 목적으로 국민연금기금에서 94년부터 4년간 7천억원을 장기융자하는 것이다. 이 계획은 초기에는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보육관계자들에게 환영을 받았으나 2년이 흐른 지금 많은 문제점을 보여 시행과정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발제에 나선 한숙희 회장은 보건복지부의 융자계획의 문제점으로 대상자 선정과 담보, 신용대출, 비현실적인 이율을 지적했다. 한회장은 “복지부는 현재 융자대상자로 보육교사 2급 자격을 가진 8년 이상의 경력자인 동시에 40인 이상을 보육하고 있는 시설장으로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능력만 있으면 보육사업 경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설치비 지원을 하는 등 시설확충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보육시설장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담보와 신용대출이다. 복지부는 전세를 담보로 대출할 수 있으며, 대출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담보없이 신용대출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공문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시설장들의 일차적 견해다. 담당은행에서는 신용대출을 해주지 않고, 건물주의 전세권 등기설정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민간보육시설이 월세 임대시설로 매월 운영비의 상당부분을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는 상황여서 담보능력이 없는 곳이 많다.

이런 문제점에 배병준 사무관은 “현재 정부전체예산의 5%수준인 복지예산으로는 운영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표준보육단가를 지금보다 높게 책정해 현실화하고 보육료 자율화로 운영부실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출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육사업은 영리사업이 아니므로 개개인의 절적인 내실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교사는 “보육료를 전액 보호자에게 부담시키는 보육료 현실화·자율화는 민간보육시설을 영리시설로 인식하는 것”이라며 복지부의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달의 주제-불처벌>
80년 광주 5월은 영원하다.
부정과 억압으로부터
인간해방투쟁의 종합적 표현이다.
-리영희-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 불잡혀

민주노총, 석방요구 방배경찰서 앞 농성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이 23일 오후4시20분경 동대문 경찰서 형사들에게 연행되었다. 권위원장은 동대문경찰서에 연행되어 있다. 경찰이 권위원장을 방배서로 옮긴 것은 서울지방노동청이 권위원장을 고발한 것으로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은 연행 소식을 들은 민주노총 회원들은 서울지방노동청과 방배경찰서 앞 농성농성농성 농성농성농성에 속속 집결하여 권위원장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권씨는 전국연노노동조합 연맹 위원장 시절인 93년 6월 천도 기관사들의 파업을 당시 이를 격려 지지했다는 이유로 노동부가 고발, 곧바로 수배되어 2년 5개월 동안 수배생활을 해왔다.

권씨는 수배중에도 민주노총 건설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해왔고, 그런 노력이 인정되어 지난 11일 민주노총 창립 대의원대회에서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한편, 진보정치연합은 25일 성명을 발표, “많은 노동자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노조 지도자를 행한 정부의 행동은 대통령직을 이용, 부정축재하여 국제적 망신을 당한 것은 노태우씨의 행동에 비견가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즉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된 한국이 국제적인 망신거리로 유엔과 국제기구들로부터 철퇴 압력을 받고 있는 제3차개입금지 노동운동의 최고 지도자를 구속하는 일은 부당하다”며 권씨의 무조건적인 석방과 노동법 개정을 촉구했다.

국가보안법 국제 심포지엄 24일 일정

장소: 수유리아카데미 하우스(☎ 993-6181 405호)

□ 기초발제 2(오전9시-9시30분): 비상사태·국가안보하에서의 인권보호-Leandro Despoux(유엔 비상사태 특별보고관)

□ Session 3(오전9시30분-12시): 개발독재와 인권
발제: 박홍규(영남대 법학과 교수)-한국과 아시아의 개발독재와 인권

토론: Robert Reid(아태노동자연대회의, 뉴질랜드)/Sivarasa Rasisah(SUARAM, 말레이시아)/Jaran Kosanund(교수, 포럼아시아, 태국)/임서량(대만노동인권협회, 대만)

□ Session 4(오후 1시30분-3시): 나라별 사례연구
발표: 남부아시아-Babioo S. Loitongbam(남부아시아인권자료정보센터, 인도)/동티모르·인도네시아-Akihisa Matsuno(교수)/일본-Mizno(교수, 일본)/대만-Hong Jang(대만인권협회)

□ Session 5(오후3시30분-6시): 국가안보에서 인간안보로 -아태지역 민간인권운동의 과제와 전략
발제: Cecilia E. Jimenez(PAHRA, 필리핀)/박원순(변호사, 참여연대 사무처장)

토론: 국제인권봉사회(제네바)/Boonthan T. Verawongse(ACFOD, 태국)/Basil Fernando(AHRC, 홍콩)/Ravi Nair(남부아시아인권자료정보센터 소장, 인도)/James Silk(로버트 케네디 인권재단, 미국)/김동훈(교수, HURIGHTS, 일본)

□ 폐회 만찬(오후6시30분-9시30분)-아카데미 하우스 「대화의 집」

정과 이번 비자금 사건과 맥을 같이 하여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92년 대선자금의 철저한 공개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12.12 군사반란에 면죄부를 준 현 정부가 다시 5.18학살자 책임자를 비호한다면 국민적 항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5.18특별법 제정 국민투표운동 전개 결의 정의구현사제단, 시국기도회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상임대표 안충석신부)은 23일 오후7시부터 명동성당에서 신부, 수녀, 신도등 2천5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5.18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투표와 김영삼 정권의 회개를 위한 시국기도회」를 가졌다. 이날 기도회에는 부산, 광주, 전주지역의 신도들도 대거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대통령에게 헌법수호 의무 이행과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하는 청원권 행사의 차원에서 5.18특별법 제정을 국민투표에 붙일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번 청원운동은 “단순한 서명운동이 아니라 헌법을 국민의 손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헌법운동이며, 국민주권의 회복운동”이라고 규정, 이 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사제단은 다음주 중에 사제단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6일 시국기도회 때부터 단식에 들어갔던 신부들은 오늘 9일 동안의 단식을 끝냈다.

해방·분단 50주년 기념 인권국제심포지엄 첫날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국가보안법, 인권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열리고 있는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첫날 발제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실습니다. (편집자 주)

1. 탈냉전 신국제질서에서의 국가안보와 인권, 그리고 NGO의 역할

로스 다니엘스(Ross Daniels)
(국제엠네스티 국제집행위원장)

과거 10년은 아태지역에서 중요한 인권변화의 시기였다.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남한 그리고 인권에 대해 답혀 있다고 믿어지는 국가에서도 국제인권캠페인은 많은 논란과 변화를 일으켰다.

아태지역은 예전과 다르게 모든 분야에서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것은 동아시아의 경제성장과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지구적 권력의 이동을 의미한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21세기를 태평양시대라고 말하기도 한다. 아태지역은 경제성장에 있어서 과거 20년동안 시대를 이끌어 왔다. 이제 이 지역은 전 세계 생산품의 반 이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경제성장 만큼 인권성정도 이루어져야

현재 아태지역은 경제통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아태지역 국민들 사이의 이해가 증진되어 공동의 가치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또 인권운동가들도 역시 공동사업을 펼치는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들은 상호독립적이면서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정치적, 사회적, 환경분야에 있어서 아시아지역의 문제 해결을 찾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일을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사회에 이러한 메시지를 전해야 하고 모든 분야로 관계를 확대시켜야 한다. 인권·환경운동가, 노동자들 사이에 관련성을 증진시켜야 한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위해서는 시민·정치적 권리의 보호가 필수적이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속해있는 분야에서 권리와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믿는다. 아태지역의 사람들 역시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 동참할 권리와 자유를 가져야 한다.

우리 인권운동가들은 정부에게 시민들과 의무와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왔다. 나는 민간단체들이 비엔나에 이어 다시 한번 인권 향상을 위해 세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함께 일하려는 정신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아시아정부들이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들의 역할을 인식하기 바라고 그 민간단체들의 근본적인 역할을 인식할 것을 요구한다. 인권침해의 치유는 단체들의 활동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인권증진의 중요한 한 단계는 정부가 국제인권기준을 받아들이고 실행하는 것이다. 아시아 국가들은 2천10년까지 자유무역에 달성하려는 거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아시아 국가들은 유엔인권기준을 승인할 수 있지 않을까?

국제인권기준은 단순한 종이조각이 아니다. 그것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우리의 행동을 책임지겠다'라고 말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기업과 정부에게 인권은 그들이 건설하고자 하는 무역과 투자의 합법적인 토대이다. 경제와 무역연계가 강화됨에 따라 우리는 스스로에게 그것에 동반하는 어떤 종류의 사회를 원하는지를 물어봐야 한다. 경제성장은 우리가 원하는 사회의 일부이지만 목적으로 가는 수단일 뿐이지 목적 자체는 아니다. 경제개발은 사회적, 시민적, 정치적 개발과 함께 가야 한다.

더 넓은 인권개념 수용해야

아시아지역의 인권 특수성에 대한 논의가 이 지역 대부분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막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인권과 관련해 문화적 상대주의자들은 결국에는 더 심한 인권침해를 피할 수 없고 인권침해를 정당화시킬 수도 있다. 반면 아시아 민간단체

운동은 새로운 질서에 도달했다. 93년 방콕선언과 비엔나 인권대회에서 민간단체들은 지역을 넘어 인권의 보편성을 광범위하게 인정했고 상대적인 이유를 들어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려는 정부의 시도를 비난했다. 아시아에서 민간단체 운동은 이러한 이슈에 대한 동일점을 만들려고 노력해 왔다. 인권은 보편적이고 상호독립적이라는 것, 경제개발정책이 인권침해를 증가시켜 왔다는 것, 그리고 일부 서방국가들이 인권침해를 방조하거나 돕는데 일조했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인권단체의 과제

결론적으로 아시아에서 인권단체들은 새로운 세계질서 이동의 결과로 세가지 분명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것은 증가하는 지역통합의 도전, 인권가치의 보편성에 대한 공격의 도전, 합법성에 대한 도전이다.

2.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

오제식(한국사회교육원 원장)

세계적으로 냉전체제가 끝난지 5년이 됐다. 그러나 냉전체제로 가장 값비싼 댓가를 치른 한민족에게는 냉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밖으로 탈냉전의 언어를 사용하고 안으로는 냉전의 공포를 강조해야 한다. 우리는 이런 이윤배반에서 오는 충동을 별로 고민하지 않고 잘 소화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중 잣대를 가지고 그것들을 상황에 맞추어서 골라 쓰고 있으면서도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상황판단과 거기에 대응하는 원칙이 극히 주관적이어서 우리는 그것을 관용해 오고 있다. 이런 관행이 축적해서 우리사회의 분위기가 되고 이제는 관행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냉전체제의 붕괴는 무엇을 가져왔는가. 그것은 세계주의의 허구성이 단로라고 그런 세계주의를 바탕으로 한

구세주의(求世主義)가 붕괴하여 정치적, 종교적 언어의 보편적 신빙성이 실추되었으며 국민국가의 위상과 역할이 재정립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냉전체제 붕괴가 가져온 것

이렇게 한때 세계의 많은 인구를 흥분시키고 동원시켰던 세계주의가 실은 허구였고 그것을 지탱했던 제도적 통제가 느슨해지자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민족주의, 종족주의가 고개를 들고 근본주의, 원리주의가 종교적 색채를 강하게 띠고 나타났으며, 시장의 언어와 역할이 종래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게 되었다.

이런 현상들이 기존 질서의 붕괴 뿐만 아니라 가치의 공백상태를 가져왔다. 냉전 종식 후의 세계는 전후의 시기보다는 덜 흥분했지만, 체제와 가치관의 변화점에서 보면 그때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한국은 동족간의 전쟁을 치르고 군사정부주도형으로 경제를 성장시킨 경우다. 한국인이 그동안에 경제적 성과를 올린것은 사실이나, 그것을 위해서 치른 사회적 인간적 댓가는 높았고 그러므로 성장후에 새로운 세

계를 경영하는 역량을 키우지 못했다. 정부는 스스로 국가인양 군림했으며 정치세력의 비호아래 성장한 경제는 도덕적인 명분까지 행사하게 되었다. 경제성장이 지상의 목표였다. 그것은 정치언어가 되고 도덕적인 행위위까지 과장되었다. 이렇게 국가의 우선순위와 도덕적 명분의 비호아래서 정치와 경제는 유착관계에 들어가고 그것에 도전하는 것은 다 정부에 대한 도전 또는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처벌했다. 이것이 국가보안법이 남용된 배경을 이루는 것이다. 냉전 후의 우리가 받고 있는 도전 앞에서 국가와 국가안보에 관해서 재조명해야 할 때가 왔다. 국민의 식은 국가 이익을 우선시키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배려를 유보해도 된다는 단순논리가 오랫동안 우리를 지배해 왔다.

이제 새로운 국제질서의 기본은 인간에 대한 이해와 애정에 기초해야 한다. 인간에 대한 철학적인 명제나 이념적인 이해보다는 모든 인간이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며 또 받아들이는 애정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의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목적과 그 명분을 사유화해 온 일부집

단들을 보호하는데 남용되어 왔다.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를 지키려는 의지가 나라의 자산이라야 한다.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각오가 국가안보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한국민은 갈라져 살아온 형제자매와 더불어 사는 연습을 시작해야 할 때가 왔다. 우리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해 온 것은 이와 같은 대전제 때문이다.

행사와 동정

□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군 문제 해결을 위한 촉구대회

· 일시: 11월24일(오늘) 오전 11시
· 장소: 여의도 민자당사 앞
· 주최: 전국 구속·수배·해고 노동자 원상회복투쟁위원회(☎ 784-6037)

□ 5.18 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과 김영삼 대선자금 공개촉구 제8차 국민대회

· 일시·장소: 11월25일(토) 오후1시-종로일대 선전전과 약식집회/오후2시-국민행동/오후3시 국민대회
· 주최: 5.18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 747-43645)

□ 제2회 열린 가족 이야기 한마당

· 일시: 11월25일(토) 오후3시-5시
· 장소: 서울 중구 문화관
· 주요내용: 우리시대 부부의 "대화"-김숙자(명지대 교수)/우리시대 부부의 "성"-이근덕(신경정신과 전문의)/사례-부부 이야기/종합토의/"외도" 설문조사 결과 발표/노래공연
· 주최: 한국여성민우회 부설 가족과성 상담소(☎ 269-5763)

□ 녹색교통운동 '95 만남의 자리

· 일시: 11월25일(토) 낮12시~오후9시까지
· 장소: 마로니에 호프(새중문화회관 분수대광장 맞은편)
· 주최: 녹색교통운동연합(☎ 720-7879)

□ 해외진출기업문제 제2차 시민포럼

· 일시: 11월28일(화) 오후7시
· 장소: 참여연대 회의실
· 주제: 기업이민이 말하는 해외진출기업 현황과 문제점-이영섭(주) 교하산업대표이사)
· 주최: 참여연대 해외진출기업문제 특별위원회
· 문의: 김은영간사(☎ 796-8364)

□ 「송스튜디오」에서는 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영화음악 CD와 카세트 테이프를 제작할 판매중이다. CD는 6천원이며, 카세트 테이프는 3천원이다. 주문판매만 한다. 이 수익금의 일부는 전태일기념사업회에 수익금으로 전달하게 된다. 문의 ☎ 784-7456~8

<이달의 주제-불처벌>
80년 광주 5월은 영원하다.
부정과 억압으로부터
인간해방투쟁의 종합적 표현이다.
-리영희-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일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민자당, 5.18특별법 만들기로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불처벌 청산해야" 각계반응

5.18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보자던 민자당이 입장을 1백80도 선회, 24일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5.18특별법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삼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강산재 민자당 사무총장에게 "쿠데타를 일으켜 국민에게 수많은 고통과 슬픔을 안겨준 당사자들을 처리하기 위해 5.18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5.18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이땅에 정의와 진실 그리고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민자당은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처벌대상자는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을 포함하며,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 제정안과는 다른 독자적인 특별법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법안의 특별법검사제도 여부와 5.6공과와 단절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았다.

불처벌 완전 청산해야

명동성당에서 지난 7월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린 직후 천막농성을 시작, 오늘로 1백30일째 농성 중인 광주 5.18관련단체 회원들도 민자당의 발표를 일

단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농성을 이끌고 있는 '5.18 부상자동지회' 박영순 회장은 "김영삼 정권이 국민적 저항에 굴복했지만, 이럴 때인수록 사태를 주시하고 투쟁해야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특별법이 제정될 것"이라며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오재식(크리스찬아카데미 사회교육원 원장)은 "민자당이 준비하는 특별법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한 마디로 알 수 없다"면서 "특별법 안에 반드시 특별검사제가 도입되어 엄중한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불처벌 관행이 완전히 청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검사제 도입

당리당락에 이용 안될 말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온 시민·사회단체들도 민자당의 이번 발표를 환영하면서 "갑작스런 발표의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김영삼대통령의 대선자금 공개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점에 주목했다.

단체들은 한결같이 "정부가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씻어버리기 위해서는 대선자금 공개 △특별검사제

도입 등 5·6공과와 단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5.18학살자처벌·특별법 제정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늦게나마 국민의 소리에 부응해 5.18특별법제정에 동참하기로 한 김대통령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5.18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 공동대책위원회"도 논평을 내고 "민자당의 특별법 제정 발표는 지난 15년동안 광주시민들이 탄압에도 불구하고 투쟁해온 결과"라며 환영했다. 또 "특별법은 진상규명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어야 하며 전두환, 노태우, 최규하 등 전직대통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연합"은 논평을 통해 "민자당의 특별법제정 발표는 5.18진상규명과 학살자 처벌을 위해 줄기차게 싸워온 광주시민과 온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며 "5.18 문제를 '역사의 평가에 맡기자' '공소권없음' 등으로

일관해온 김영삼 정부가 특별법 제정에 동참하게 된 경위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시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논평에서 "정부 여당은 5.18문제를 역사의 심판에 맡기자고 해왔던 잘못을 속죄하고 즉시 특별법제정을 도입하여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발표가 민자당의 당리당락에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5.18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을 전개, 교수 6천5백여명의 참여를 주도해온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는 "5.18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적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과 특별법 제정 도입"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진보정치연합", "참여연대", "경실련", 등도 논평을 발표하고 특별법 제정을 통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14개 도시에서 국민대회 5.18비대위는 오늘 오후 서울, 광주, 부산을 비롯한 전국 14개 도시에서 5.18특별법 제정, 대신자금을 공개를 촉구하는 제8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30일까지 납부를

지로용지를 못 받으신 독자께서도 전국 어느 은행이든지 지로 창구에서 아래의 지로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지로번호: 7618848

이번주 공개강좌는 없습니다.

다음주 10회 강좌는 '보안관찰법'입니다.

강의는 경상대 이창호교수입니다.

"국보법 인권탄압 개정 강력 촉구"

엠네스티 보고서 발표

다니엘스씨, 국무총리 만나 인권상황 개선 요구

국제엠네스티(엠네스티)는 오늘 한국의 인권개혁 필요성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엠네스티는 이 보고서에서 국제인권기준과 한국의 국내법을 비교하며 인권 개혁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국가보안법에 의해 수감중인 이들이 3백명을 넘고 있어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며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거듭 요구했다. 엠네스티는 "구속자들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관한 자신들의 권리를 비폭력적으로 행사한 사람들"이라며 따라서 이들 대부분은 양심수라고 밝혔다.

또, "한국의 법률에도 고문과 가혹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금된 사람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한 보호장치로 인해 계속해서 고문과 가혹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권피해자들에게 효과적인 보상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총 62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이며, 국가보안법의 사용과 관련한 표현과 결사의 자유, 구금자의 권리와 구금자들을 고문과 가혹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들의 필요성, 인권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조치, 권고사항등을 수록하고 있다. <인권하루소식>에서는 다음주 이 보고서의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로스 다니엘스 엠네스티 국제집행위원장은 23일 이홍구 국무총리, 공로명 외무부장관 등 정부관계자들을 만나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에 심각한 우려와 관심"을 전달했다. 다니엘스씨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지위가 높아지려면 국제적 인권기준을 준수해

야 한다"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국무총리는 "엠네스티의 보고서를 보고,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동계철거 군사작전 방물 23일, 가락본동 기습철거

동절기 강제철거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강제철거가 진행돼 문제가 심가하다.

23일 새벽 5시 송파구 가락본동 재개발지역에서는 군사작전을 방물케 하는 강제철거가 진행되었다. (주)산천개발 소속 철거용역반원 5백여명과 송파경찰서 경찰 1백여명은 이날 새벽 재개발 지역의 외곽을 완전히 봉쇄한 채 강제철거를 단행했다. 23일 오전 철거 과정에서 최남호씨 등 6명이 골리앗(철거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철재로 높게 만든 망루)을 지키다 폭행을 당하고 송파경찰서에 연행되었다. 주민들에 의하면 이 지역은 지은 지 3-4년 밖에 안된 고급빌라도 있어 일반적인 재개발 지역은 아니라고 한다. 그럼에도, 금싸리기 땅에 고층 아파트를 지어 더 많은 이익을 남기려는 재개발 시공회사인 (주)쌍용에 의해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또, 지난 15일에는 상계동 3-1지구에서도 강제철거가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순애(33)씨가 철거반원에게 폭행당해 왼쪽 무릎 인대가 파열되는 등 주민 2명과 고자들을 만나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에 심각한 우려와 관심"을 전달했다. 다니엘스씨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지위가 높아지려면 국제적 인권기준을 준수해

야 한다"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국무총리는 "엠네스티의 보고서를 보고,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니엘스씨, 국무총리 만나 인권상황 개선 요구

안기부 박총렬씨 등 10일째 가족면회 거부

민가협등 항의시위

'민가협', '전국연합', '성남지역공대위' 등 20여명은 24일 오후 2시 내곡동 안기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박총렬, 김태년씨에 대한 가혹행위 중지하고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안기부가 15일 연행된 박씨들에 대해 지금까지 단 한번의 가족면회를 허용했을 뿐 계속 면회를 거부하고 있다"며 가족면회를 주장했다.

집회가 계속되자 안기부 관계자는 면회를 시켜줄 것처럼 가족들은 부르고는 나중에 "날씨가 너무 추워 가족들을 안으로 부른 것"이라고 말해 거센 항의를 받았다.

진보련 6명 구속

전남도경, 영장재발부

지난 21일 사노맹 재건을 기도했다는 혐의로 전남도경 보안수사대에 의해 긴급 구속되었다.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풀려났던 '진보정치연합'(진보련) 광주지부 회원 12명중 6명이 다시 구속되고, 6명은 수배되었다.

전남도경 보안수사대는 법원의 영장기각 하루만인 24일 영장을 재발부반아 김상진(31, 대우캐리어 노조위원장) 등 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나머지 6명은 검거하지 못했다.

'진보정치연합'(대표 노회찬등)은 24일 성명을 발표, "검·경은 이미 해산된 조직인 사노맹을 공안탄압에 이용하는 비열한 짓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사노맹 재건위의 존재 여부를 밝히고, 구속자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구속자명단>

김상진, 김기찬(29, 학원강사), 장은정, 유상열(39, 금호타이어 해고노동자), 신영은, 김동성(29, 회사원)

<수배자명단>

심우춘(진보련 광주지부 부위원장), 이호성(진보련 광주지부 노동위원장), 김미자(25, 회사원), 장평기(29, 회사원), 박선아(24, 회사원), 김영만(26, 금호타이어 해고노동자)

양심수 석방 호소

일본 한국정치범단체들

일본에서 한국 정치범의 석방을 위해 노력해온 '한국정치범 구원 전국운동 실행위원회'(한국 정치범구원회)는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움에 참석하면서 호소문을 발표, 국가보안법의 철폐와 양심수의 석방을 요구했다. 또 한국정치범구원회는 △한국정부는 김인서, 함세환, 김영태 세 비전향 출소 장기수를 송환할 것 △일본정부는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과하고, 군위안부 등 전쟁 희생자에게 보상할 것 △일본정부는 체일 한국인에 대한 차별정책을 중지, 민족적 권리를 보장할 것 등을 한·일 양국정부에 촉구했다.

<기사가 넘쳐 국보법 국 제심포지움 내용은 다음주에 게재합니다>

<바로 잡습니다>

24일자 '권영길 위원장 불잡혀' 기사중 "93년 6월 ~2년 5개월 동안"은 "94년 6월 ~1년 5개월 동안"으로 바로 잡습니다.

또, '5.18특별법 제정 국민투표운동 전개 결의' 기사중 '천주교정의 구현전국사제단'의 상임대표는 '오충석신부'가 아니라 '안충석신부'이기에 바로 잡습니다.

<이달의 주제-불처벌>
80년 광주 5월은 영원하다.
부정과 억압으로부터
인간해방투쟁의 종합적 표현이다.
-리영희-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특검제 도입 없는 5.18특별법 무의미

전국연합·한총련, 민자당사 앞 시위 농성

민자당의 5.18 특별법 제정에 특별검사제 불가 방침이 밝혀지자 이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강력히 일고 있다. 「전국민주주의민중동일전국연합」 소속 회원 5백여명은 27일 오후 1시 여의도 국회의관에서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집회에서 "아직도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특별검사제가 없는 특별법 제정은 기만이다"며 특검제를 주장했다. 또 "불과 몇달 전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린 검찰에 5.18 수사권을 부여할 수는 없다"며 윤리상 검찰은 대국민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서 전남대 박종채(18, 신문방송학과)씨등 2명을 연행했다. 학생들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선전전을 마치고 학교로 들어오는 학생들을 시위대로 알고 이를 진압했다고 한다. 한편, 이날 오후 5시경 학생 5백여명은 '전두환 체포 결사대'를 결성, 전씨의 집이 있는 연희동 주변 곳곳에서 진입을 시도했다. 또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소속 학생 50여명은 마포 민주당에서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특검제 도입 강력 촉구 5.18비대위, 검찰 사과도

「5.18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상근등, 5.18비대위)은 27일 헌법재판소의 5.18 계수사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5.18비대위는 "김영삼대통령이 5.18 특별법 제정을 발표하기 하루 전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5.18 계수사결정을 내렸다는 것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헌재를 통해 검찰의 계수사를 결정하면서, 통치권자의 혁명적 결단이라고 늘어놓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고, 광주시민을 두번 죽이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미 5.18문제에 대한 수사능력을 상실한 검찰에게 계수사를 맡긴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했다.

공무방해 성립 어려워 박영생씨 재판, 증인진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전국노점상연합회」 영등포지구 박영생(28)씨에 대한 1심 제3차 재판이 27

일 오후 2시 서울 동부지원 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증구청 공무원 정수복씨는 "당일날 노점상 단속을 한 바 없다"고 말해 구청의 노점상 단속을 방해했다는 경찰의 구속이유에 상반되는 진술을 했다. 다음 재판은 12월11일 오후 2시 서울 동부지원 1호법정에서 열린다. 박씨는 지난 8월26일 「장애인차량추진위원회」 회원들이 서울 청계6가에서 노점상을 쫓아내다 다른 노점상과 싸운 이 일어난 것을 경찰이 방관만 하자 이에 항의하여 연행, 구속되었다(<인권하루소식> 8월29일자 참조).

가락본동 철거민 쌍용본사 항의방문

27일 서울가락본동 철거민 10여명은 서울 중구 소재 쌍용그룹 본사를 방문, 강제철거와 주민구속에 항의했다. 이들은 지난 21일 강제철거로 집을 잃었고, 가장들이 구속된 상태다.

주요 공판 안내

- 11월29일(수)
 - 송유나(선고), 10시, 국보법, 서울형사 21부, 311호
 - 조세화, 10시30분, 국보법, 서울형사 21부, 311호
 - 신원철, 11시, 국보법, 서울형사 21부, 311호
 - 박치현, 10시, 집시법, 서울형사 6단독, 321호
 - 윤병선, 10시, 집시법등, 서울형사 22부, 425호
- 11월30일(목)
 - 안호상의 1명(선고), 11시, 남북교류법, 서울형사 10부, 318호
 - 박용길(선고), 2시, 국보법, 서울형사 4단독, 421호
 - 김중근, 3시, 업무방해 등, 서울형사 2부, 422호
- 12월1일(금)
 - 이철주의 3명, 10시, 국보법, 서울형사 23부, 311호
 - 강중숙, 2시, 국보법, 서울형사 9단독, 317호
 - 콜리나프랭크, 2시, 폭력법, 서울형사 7단독, 421호
 - 유덕열의 1명, 4시, 국보법, 서울형사 22부, 425호

12월10일 <인권하루소식> 하이텔 통신서비스 개시
11월부터 <인권하루소식>을 통신 서비스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독자 여러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준비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여러가지 발견되어 약 한달 가량 서비스가 늦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꼭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 바랍니다.

안기부, "김태년씨 무전기 발견 못해" 12일째 물증없이 박총렬씨등에 자백만 강요

안기부의 탈법적인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 15일 국가보안법상의 회합동신 혐의로 구속된 박총렬(36, 민주주의민중동일전국연합 사무차장)·김태년(32, 성남미래준비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구속 만 12일이 지난 27일까지도 물증의 제시없이 자백만 강요하고 있는 상태다. 더구나, 안기부는 김씨의 경우는 처음 사무실 전장에서 발견했다는 무전기에 대해서도 '없던 일'로 하고, 대신 89년 이후의 행적수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25일 구속 이후 처음으로 김씨를 면회한 김씨의 처 김미연(28)씨와 27일 김씨를 접견한 윤기원변호사에 따르면, 무전기 문제는 없던 것으로 하자고 했으며, 89년 이후의 행적에 대한 보강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회합동신죄를 위반한 혐의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 이직표현물 제작등을 수사할 수 없게 된 안기부법을 안기부가 위반하는 것이 된다.

대해서는 여전히 무전기 3대와 공작금 4천만원에 대해 추궁을 하고 있고, 89년 이후 행적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일요일인 26일 성남 지역의 재야인사와 학생 등 1백여명은 안기부를 항의방문, "안기부 해체, 고문수사중단" 등을 요구했다. 성남 지역의 재야인사들은 27일 오후 8시 성남시민모임 사무실에서 '총선시기 안기부간첩조작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성남지역 공동대책위'를 구성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의 진상조사, 조작저지활동, 인권변호 등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계훈제씨에 병원비 전달 불교인권위, 1천1백여만원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전관등)는 27일 오전 계훈제(73)씨가 폐결핵 후유증으로 20여일동안 입원치료 중인 서울대 병원을 방문하여 지난 13일부터 모은 성금을 전달했다. 불교인권위는 20일 1차로 2백만원, 이번에 9백81만여원을 전달, 총 1천1백80여원을 전달했다. 이 모금에는 승려, 신부, 목사 등 종교계 지도자들과 불교인권위 회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한편, 계씨는 28일 병원에서 퇴원, 통원치료를 받게 된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30일까지 납부를

지로용지를 못 받으신 독자께서도 전국 어느 은행이든지 지로 창구에서 아래의 지로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지로번호: 7618848

주간/인권/흐름

(95년11월20일부터 11월26일까지)

<20일(월)>
박총렬·김태년씨, 안기부에서 일주일 동안 간첩 회합 혐의로 잠안재우기 고문 받아/11일 경북공역에서 미군 7명이 객차 안에서 행패 밝혀져/TLO 고용위원회, 19일 어린이학대에 대한 규제 촉구, 이에 대한 투쟁 강화 조치 승인/중국, 반체제인사 웨이정성, 정부전복기도 혐의로 정식 구속

<21일(화)>
국무회의, 일반사면령안·정계사면령안 의결 국회에 동의 요청/광주시의회, 5.18특별법 제정촉구 결의안 만장일치의결/미안마 경찰, 야당지도자 아웅산 수지의 주말연설회막기 위해 17일 자택에 철조망 장벽 설치/미 의회 기술평가국, 옛소련 극동 해폐기물 무단방기로 동해, 서해 심한 상태 오염 경고

<22일(수)>
27'25일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주최로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을 논하는 국제심포지엄 개막/유가협, 서울구치소에서 5.6공 의문사 진상규명 촉구 시위/대만 최장기수 린수양(69)과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70)씨가 국보법 심포지엄에서 만나

<23일(목)>
'행정정보공개법' 일부 정부부처의 반대로 무산 위기/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명동성당에서 5.18특별법 제정 국민투표 운동 시국기도회 개최/엠펬네스티 국제집행위원장, 국보법 국제심포지엄에서 '국보법이 국가안보와는 무관, 비판자의 탄압수단'이라고 지적/권영길(54) 민노총 위원장 구속/민주노총, 노조설립신고서 제출/4개 종교단체, 명동성당에서 5.18 특별법 제정과 대선자금 공개 촉구 기자회견/인도네시아 시사주간지 텀포, 2심에서도 승소 판결

<24일(금)>
민자당, 정기국회 회기 안에 5.18특별법 제정키로 결정/노동부, 민주노총의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전남경찰청, 사노맹 호남조직 재건기도 사건 혐의자 석방 하루만에 6명 재구속/프랑스 공무원·공공부문 노동자, 정부의 사회보장제도 축소에 반대 총파업 돌입

<25일(토)>
5.18비대위, 전국 14곳에서 국민대회 열고 특별검사제 도입 강력 촉구/김대통령, 5.18 사법처리 대상 최소화 방침 천명/한국노동연구원, 전산업 노동자 월평균 노동시간 1.2% 늘고 임금 상승률이 크게 둔화 지적/의정부경찰서, 술주정과 폭행 자행 주한미군 2사단 이병 연행, 미군 헌병대에 넘겨

<26일(일)>
전남-광주지역 재야대표들 김대통령 처벌법위 미리 제함에 민자 5.18특별법제정위에 우려 전달/엠펬네스티 국제집행위원장 로스 다니엘스, 안기부 고위관계자 만난 계속된 국보법 연행에 항의

<해설>
지난주 국민적 저항에 굴복한 정부와 집권여당이 드디어 5.18특별법 제정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과 여당이 사법처리대상자 최소화, 특검제 반대 등의 입장을 계속 드러내 과거 권력형 인권침해에 대한 응징의지가 미약함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즉, 정부·여당은 5.18특별법 문제마저도 정치적 타산을 앞세우는 것이다. 따라서, 5.18특별법 제정 투쟁이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자세로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담보하는 특별법을 역사는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달의 주제-불처벌>

80년 광주 5월은 영원하다.
부정과 억압으로부터
인간해방투쟁의 종합적 표현이다.
-리영희-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롯데 부사장 직장에서 상습 성희롱” 한국여성민우회, 그룹측에 대책 촉구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 제과 부사장이 1년여 동안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피해자 이아무개(24, 롯데 제과 판매직 4년근무)씨에 따르면 94년 5월경 롯데제과 조아무개(63)부사장이 부사장실로 불러 “쉬었다 가라”며 보내주지 않고, 저항하는 이씨를 강제로 꺾이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성희롱, 성추행을 했다고 한다. 이후에도 조부사장은 수차례나 더 근무시간에 이씨를 불러 문을 잠근 채 이런 행위를 계속했다. 이씨는 회사에 이 문제의 해결을 호소하는 진정서를 보냈으나 회사측은 회신이나 조치를 하지 않고 “돈으로 해결하자. 얼마면 되겠다”며 이씨를 회유했다. 이 사건은 서울대 성희롱 사건과 마찬가지로 상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을 성희롱한 전형적인 직장내 성희롱 사건이다.

이씨의 사례를 접수·상담한 「한국여성민우회」(공동대표 이경숙·정장자, 민우회)는 28일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에게 공개요구서를 보내고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조아무개 부사장의 징계와 그룹차원의 성

희롱 예방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민우회는 “사건을 접수한 회사측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돈으로 무마하려 한 것은 사용자의 책임을 저버린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건초기 그룹측은 “조부사장은 롯데 그룹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발뺌을 하는 등 해결보다 은폐에만 급급했다며 그룹측의 책임도 크다고 말했다.

민우회는 “롯데제과에는 부사장 성희롱문제만이 아니라 상사들의 폭언, 폭행은 물론 여름휴가도 못쓰게 하는 등의 행패가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민변, 현재 재판관 기피 공정한 심판 기대 어려워

헌법재판소의 5.18 불기소에 대한 헌법소원 선고가 30일로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기피신청을 제출했다.

5.18사건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박인제, 이원재 변호사는 28일 헌법재판소장 김용준 재판관을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신청을 했다.

이들은 “김영삼대통령의 5.18특별법 제정 발표 후 공소시효, 관련자 처벌등 헌법재판소가 정부와 동일한 결론의 사건결정을 누설한 것은 결과적으로 신성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상실하고 정부와 짜맞춘 회색이 짙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김용준 헌법재판소장이 그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중대한 상황을 초래했다”고 판단,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전두환씨 반성하라 민예총, 5.18특별법 성명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의장 염무웅, 민예총)은 28일 5.18 특별법제정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 전두환씨 등 5공 세력의 자숙을 촉구했다.

민예총은 성명서에서 “김영삼대통령의 특별법제정 발표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민주화운동의 즐거운 노련의 산물로 당연한 조치”

라며 환영을 표했다.

이어 민예총은 “전두환씨측이 아무런 반성의 빛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특별법 제정이 소급입법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느니, 정면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식의 작태를 보이는 데 분노한다”며 “이제 전두환씨등 학살관련자들은 역사와 민족 앞에 무릎꿇고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스로 빗장 열기 다짐 여성장애인들 모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장애우연구소)내 여성장애인분과 ‘빗장을 여는 사람들’(빗장)은 28일 오후2시 장애우연구소 28당에서 북경세계여성대회 참가 보고대회를 가졌다. 각국의 여성장애인 정책, 국제적인 여성장애인 기관등이 소개된 이 보고대회에는 빗장 회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세계여성대회에 한국여성장애인을 대표해 참석한 빗장 회원 김미연씨는 “대회기간 내내 한국의 여성장애인들을 생각했다”며 “이제 한국의 여성장애인들도 소극적인 자리에서 일어나 스스로의 권리를 위해 노력할 때”라고 말하며 참석한 여성장애인들의 많은 공감을 얻었다.

총선시기 안기부 간첩조작 진상규명 공대위 발족식 및 진상보고회

- 일시: 11월30일(목) 오전 10시
- 장소: 종로성당(세운상가 맞은편)
- 주최: 전국연합, 한청협, 전대협동우회, 서울연합 등
- 문의: 747-4364

광주는 전두환·노태우를 학살자로 기억한다
5.18특별법 명동성당 농성 1백34일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②

주제2.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미국인이 본 표현의 자유, 공포, 국가안보

마가렛트 A. 블랑차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교수)

국가안보의 위협에 대한 공포가 한국가 내에서 퍼지게 되는 것은 이론 주도층들이 그러한 공포가 주요한 국가적 의제가 되도록 허용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외부로부터 위협이 느껴질 때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전쟁중일 때보다도 내부의 위협에 대한 공포를 느낄 때에 더 큰 억압적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미국인들은 스스로가 종종 그러한 과대한 공포의 희생자가 되었다.

국가안보 현상의 6가지 공통점

오늘날 국가안보의 우려에 의해 생긴 공포의 기간 동안에 제기되는 6가지 주된 공통점을 미국의 경우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들의 이성적 판단에 대한 불신-미국의 건국으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국인들이 스스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에서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신뢰감이 부족했다. 따라서 미국 행정부는 공산주의 이론을 가르치는 것을 처벌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어 미국인들이 공산주의 이론에 접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 많은 공산주의 신봉자들에게 미국 입국을 허용하지 않기도 했다.

둘째, 지나친 정부의 비밀유지로 인한 정보 접근의 한계-미국 정부 지도자들은 정부의 공개와 시민의 정치과정 참여에 대해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 그들은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정책토의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제한하는데 주력한다. 비밀유지는 국가안보의 대표적 현상이다. 많은 미국인들은 미국의 원난전 개입을 혐오하여 정부의

비밀을 폭로하기 위하여 비상한 조치까지 취했다. 71년 언론에 국방성 문서를 배포한 다니엘 엘스버그가 그런 경우다. 이에 따라 73년 미국은 월남으로부터 철수하였다. 이로써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전달하였고, 그를 통해 그들도 국가안보 문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셋째,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사상에 대한 정부의 통제-미국에서 사상통제는 권력자들이 불순하다고 간주하는 이념에 대한 접근을 억제하려는 형태를 띠었다. 정치지도자들은 정치적 반대자들의 사상을 접하는 것은 정부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위협했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집권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1백년이 넘도록 무정부주의자, 과격노조 운동가, 공산당들의 입국을 금지했다. 미국의 자유주의자들은 최근까지 이민정책과 귀화정책을 수행하는 관리들이 ‘위험한 이념’을 미국내에 갖고 들어오는 것이 금지된 사람들의 목록을 작성함으로써 미국국경에 ‘나이란 장막’을 드리웠다고 비난했다.

정치적 신념 조사 개인 신상 폭로

넷째, 정치적 반대자들의 감시-19세기말, 1차대전 시기, 60년대와 70년대에 애국심에 관한 문제가 거듭 제기되었다. 모든 계층의 정부 관리가 애국심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고 불순단체와 그 회원들의 명단이 만들어졌다. 40년대말과 50년대의 공산주의와의 전쟁에서는 개인의 신상폭로를 통한 사회적 매장이 주요한 무기로 사용되었다. 의회의 조사위원회가 개인의 정치적 신념을 조사하면서 시민의 자유는 거의 사라졌다. 이러한 조사에는 정부공직자들의 활약에 힘입은 바가 컸다. 60년대와 70년대 월남전 반대운동 기간에도 정치적 반대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수천명의 미국인들이 연방수사국 파일에 등장하였다. 이러한 파일은 70년대초 워터게이트 사건이후 수집이 중단되었고 파괴되었다.

다섯째, 법적 외압의 동원-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억압적인 법은 행동보다는 표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정한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의논하고 그러한 토의

들은 결국 정부를 전복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였다. 냉전 시기 동안 공산당 지도자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은 무력행동을 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부 전복을 주장하거나 이론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법정에 섰다. 이들의 처벌은 미국인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신념에 커다란 오점을 남겼다. 60년대말과 70년대 초의 반전주의자들도 법정에 기소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정부전복을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공중질서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러한 사건의 대부분은 경우 정부는 패소하였지만, 정부의 반대자들의 돈과 에너지가 소진될 때까지 그들은 법정에 묶어두는 아주 손쉬운 방법을 택했다.

여섯째, 정부의 보호가 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정부가 변화의 요구를 자신의 생존의 위협으로 여길 때 문제가 발생한다. 한 정부가 모든 비판에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정부가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는 힘을 차단하는 것이다.

미국 역사의 교훈

이러한 역사를 거쳐 미국인들은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었다.

①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늘 이성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사상들이 표현되어 자유롭게 경쟁한다면 결국 좋은 것이 채택될 것이라는 것이다.

② 정부정책에 관한 정보의 접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인들은 정보의 자유법이라는 만들어 정부가 특정한 자료를 비밀로 할 수 있는 권리에 누구나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내부고발자의 폭로를 통하여 국가안보문제를 포함한 정부정책에 대해서 숨겨진 사실을 알게 된다.

③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국가안보에 관련한 것을 포함한 어떤 이념에 대해서도 정부가 제한하려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④ 미국인들은 정치적 반대자들을 감시하고 그들의 행적을 기록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⑤ 정치적 반대자들을 억압하기 위하여 만든 법이 필요없다고 미국인들은 믿는다.

(다음 쪽에 계속-->)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 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②

⑥ 미국인들은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가 높은 때에도 정부는 국민들의 요구에 순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30년대 연방 대법원의 판결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요성은 30년대 대법관들이 수정헌법 1조를 폭넓게 해석,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미국인들의 이해의 폭을 넓혔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에서 강조

된 내용들은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넓히려고 요구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① 표현의 자유는 다양한 이념에 대한 토의를 의미하기 때문에 정부에게는 불편함을 가져올 수 있다. 만약 필요하다면 정부는 듣는 사람들이 다양한 이념에 대한 의견개진을 어렵게 할 경우 표현을 하는 사람들의 편에서 개입해야 한다.

② 표현의 자유는 시끄럽고 때로는 불쾌한 토론을 만들기도 한다. 이러

한 반응은 표현의 자유의 부산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③ 표현의 자유는 기존의 질서에 도전한다. 만약 우리가 모두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정책에 동의한다면 표현의 자유는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④ 표현의 자유는 우리가 증오하는 사상에 대한 관용을 의미한다. 증오하는 이념들이라고 해도 자유사회의 표현의 자유를 유지하려면 그들이 그러한 의견을 표현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⑤ 표현의 자유는 미리 정한 정통성 있는 견해가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표현의 자유가 주어진다 것은 우리가 누구와 어떤 문제를 놓고도 토론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⑥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자신감 있는 정부는 자국민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말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이 남긴 것>

아태지역 국보법 철폐 공동투쟁 인식 공유

지난주 22일부터 2박3일 동안 「한국인권단체협의회」등 9개 단체가 개최한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이 수유리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저명한 국제인권단체 인권운동가 40여명이 참석, 이번 심포지엄의 중요성을 말해주었다.

그러면, 이 심포지엄이 남긴 것은 무엇인가?

우선, 국가보안법의 문제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특히나 한국형 개발독재를 모델로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은 여지없이 국가안보를 구실로 한 법률들이 국민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로 이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국가보안법, 파괴방지법 등으로 법률의 명칭은 나라마다 각각 다르지만, 그 법률들이 목표하는 것은 국가적 위기의식, 공포심을 조장해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분단국의 특수성에서만 아니라, 경제성장 이데올로기와 관련되어 개발독재자들이 애용하는 탄압수단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이 세계적 차원에서 국가안보라는 미명 하에 정권의 안보를 위한 절대적인 역할을 했음을 공동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나라들에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한 공동의 투쟁, 연대가 필요함을 공감하는 자리가 되었다. 초국경적인 국가보안법의 인권유린에 대한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절감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로써 아태지역 내에서 국가보안법을 폐기하기 위한 연대투쟁이 한국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런 점은 국제심포지엄 직후 가진 아시아지역 인권단체간의 간담회를 통해 확인되었다. 지난 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이후 한국의 인권협이 해왔던 지속적인 활동에 대한 다른 아시아 지역의 인권단체들이 무게를 실어주었다는 것은 한국 인권단체들로는 또 다른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이번 국제심포지엄의 실무책임자를 맡았던 이성훈(34)씨는 "정부간의 연대기구가 아시아 지역의 인권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민간인권단체들의 연대는 더욱 필요하다. 특히 아시아지역의 정부들은 아시아적 특수성을 내세워 인권의 보편성을 훼손하려 하기 때문에 민간단체간의 연대는 더욱 절실한 것이 아니냐"며 이런 의미들에 대해 확인한 것으로도 이번 심포지엄이 성과가 있다고 말한다.

이와 더불어 안기부에서의 이른바 간첩 문제를 둘러싸고 계속되고 있는 인권침해와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이 검거되는 것이 참석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되기도 해 부수적인 효과도 얻었다. 외국인들의 눈에 비친 '문민정부'에서의 인권탄압의 실상을 고스란히 국제사회에 알리게 되었다는 점은 의도하지 않았던 해도 매우 소중한 성과였다.

미국의 경험은 완벽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의 중요성을 점점 더 많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더 많이 자유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내가 여러분의 국가에 대해서 바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다. 공포는 스스로 번식하지만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에서 생긴 공포는 표현의 자유에 의존하는 국가에 의해 극복될 수 있다.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자료는 앞으로 2회 더 소개합니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30일까지 납부를

지로용지를 못 받으신 독자께서도 전국 어느 은행이든지 지로 창구에서 아래의 지로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지로번호:

7618848

<이달의 주제-불처벌>

80년 광주 5월은 영원하다.

부정과 억압으로부터

인간해방투쟁의 종합적 표현이다.

-리영희-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이덕인씨 밧줄 묶인 채 변사체로 발견 경찰, 강제부검 후 "사인-익사"로 밝혀

28일 오전9시 인천 아암도 바닷가에서 발견된 장애인 노점상 이덕인(29, 양해재마비, 서울대중퇴)씨의 시체를 경찰이 단취, 가족의 동의도 받지않고 강제 부검에 들어갔다. 발견 당시 이씨는 얼 굴과 양관, 가슴 등 온몸에 멍이 들어있고 손은 노끈으로 묶인 상태였다.

인천남부경찰서는 29일 새벽5시 이씨의 시신이 안치된 인천 길병원에 전경 1천2백명을 투입, 이씨의 시신을 달취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영안실 진입을 막는 학생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러 학생, 노점상등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영안실에 있던 인 하대 학생 9명과 노점상 12명을 공무집행방해등의 혐의로 연행했다.

시신을 달취한 경찰은 이씨의 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데리고 가 부검동의를 요구했다. 가족들이 부검을 계속 거부하자 가족의 동의와 입회없이 부검을 진행했다. 부검을 마친 경찰은 오전 12시경 시신을 돌려준 뒤 경찰은 이씨의 사인에 대해 "바다에 빠져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족들은 숨진 이씨가 "지난 9월 사법고시 1차시험에 합격하고, 2차시험을 준비하는 중이었다"며 "자살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맨 처음 시신을 진단한 인천 세광병원측도 이씨가 구타에 의해 사망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시신을 맨 처음 발견한 장애인노점상들은 "언뜻 보기에도 무언가에 맞아 멍이든 것이 분명하다"며 타살을 의심했다. 이들은 "도둑이 제발 저런다고 경찰이 아무런 잘못도 없다면 무엇때문에 시신을 달취했겠느냐"며 강한 의혹을 보였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인천연합·전국장애인가족협의회·장애인자립추진위원회·노점상연합회 등은 대책위원회를 조직, 대응에 들어갔다. 이들은 29일 성명을 내고 △가족들이 참관하는 부검 실시 △취기선 인천시장의 자진사퇴 △진압 관련자 전원 처벌 등을 요구했다. 또 30일 오후2시 인천 시민회관 앞에서 이덕인씨 사인규명과 경찰폭력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 7월부터 인천시 연수구 아암도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포장마차를 해왔다. 그러던 중 인천시의회가 이 지역 노점상 철

거비용 2억3천만원을 승인, 적극적인 철거에 나서자 지난 24일부터 8미터 첩담을 설치하고 농성을 해 왔다. 함께 농성하던 노점상들에 따르면 이씨가 사라진 것은 25일로 농성자 27명 가운데 11명이 탈진해 첩담을 내려간 뒤 잠시후 이씨 자신도 내려가 봐야겠다며 첩담을 내려가 연락이 끊긴 채 3일만에 바닷가에서 시체로 발견됐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인천연합·전국장애인가족협의회·장애인자립추진위원회·노점상연합회 등은 대책위원회를 조직, 대응에 들어갔다. 이들은 29일 성명을 내고 △가족들이 참관하는 부검 실시 △취기선 인천시장의 자진사퇴 △진압 관련자 전원 처벌 등을 요구했다. 또 30일 오후2시 인천 시민회관 앞에서 이덕인씨 사인규명과 경찰폭력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 7월부터 인천시 연수구 아암도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포장마차를 해왔다. 그러던 중 인천시의회가 이 지역 노점상 철

거비용 2억3천만원을 승인, 적극적인 철거에 나서자 지난 24일부터 8미터 첩담을 설치하고 농성을 해 왔다. 함께 농성하던 노점상들에 따르면 이씨가 사라진 것은 25일로 농성자 27명 가운데 11명이 탈진해 첩담을 내려간 뒤 잠시후 이씨 자신도 내려가 봐야겠다며 첩담을 내려가 연락이 끊긴 채 3일만에 바닷가에서 시체로 발견됐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인천연합·전국장애인가족협의회·장애인자립추진위원회·노점상연합회 등은 대책위원회를 조직, 대응에 들어갔다. 이들은 29일 성명을 내고 △가족들이 참관하는 부검 실시 △취기선 인천시장의 자진사퇴 △진압 관련자 전원 처벌 등을 요구했다. 또 30일 오후2시 인천 시민회관 앞에서 이덕인씨 사인규명과 경찰폭력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인천연합·전국장애인가족협의회·장애인자립추진위원회·노점상연합회 등은 대책위원회를 조직, 대응에 들어갔다. 이들은 29일 성명을 내고 △가족들이 참관하는 부검 실시 △취기선 인천시장의 자진사퇴 △진압 관련자 전원 처벌 등을 요구했다. 또 30일 오후2시 인천 시민회관 앞에서 이덕인씨 사인규명과 경찰폭력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범민련 29명 긴급구속 안기부·경찰, 이적단체 규정

안기부와 경찰은 합동으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구성, 가입 혐의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의장 강희남, 범민련) 주요간부 29명을 전국에서 연행, 긴급구속했다. 안기부와 경찰은 29일 새벽 6시부터 7시경 서울·부산·대구·광주·전주 등의 범민련 중앙과 지방조직 사무실에 대해 일제히 압수수색을 벌여 범민련 활동 자료, 컴퓨터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지로용지를 못 받으신 독자께서도 전국 어느 은행이든지 지로 창구에서 아래의 지로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지로번호: 7618848

5.18 관련자 헌법소원 취하

헌법재판소 「5.18 선고」 무산

5.18 피해자들로 검찰의 5.18 관련자 불기소 결정에 반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했던 관련자들이 29일 헌법소원을 취하해 5.18특별법 제정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날 5.18관련 피해자들 3백22명, 5.17민주동지회 18명, 5.18여성피해자단체모임 20여명, 민주당내 정치개혁모임 24명 등이 낸 헌법소원 4건을 모두 취하였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한 평의와 선고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인 김철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때만 평의를 재개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도 헌법소원 취하에 동의하는 입장이지 5.18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다루지는 일이 없게 되었다.

「5.18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김상근 등, 5.18비대위)는 이에 대해

성명을 발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5.18특별법 제정의 취지가 훼손되고, 특별법 제정의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헌법소원 청구인들이 이런 판단을 내렸다"며 "헌법재판소의 내란죄 공소시효 만료 등의 결정으로 오히려 혼란만 가중될 것을 우려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5.18비대위는 이와 함께 헌법소원 취하로 특별법 제정은 다시 정치권의 임무로 돌아갔다고 "정치권은 5.18

특별법이 철저한 진상규명, 학살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사제의 도입, 광주시민의 명예회복, 적절한 배상 등 5.18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될 수 있게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올바른 결정 촉구

이에 앞서 전국연합, 통일시대국민회의 등 5.18비대위 회원 30여 명은 29일 오후 2시 30분 헌법재판소를 방문하여 「5.18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시켰다.

의견서에는 △전두환, 노태우 등이 저지른 양민학살 등의 행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반인륜적, 반인간적인 범죄행위라는 점 △이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이들의 재임기간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명식(통일시대국민회의 정책위의장)씨는 "현재의 판결이 국민의 뜻에 반한다면 현재 또한 국민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했다.

<5.18특별법 제정 공청회>

누적된 과거 역사 청산 위해 특검제 도입 의견 일치

29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5.18학살자처벌 특별법제정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김상근 등) 주관으로 5.18특별법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 공청회는 30일 헌법재판소(헌재)의 최종결정을 남겨두고 있는 5.18문제가 국민적 해결을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50여 명의 시민과 함께 모색해 보는 자리였다. 발제는 안병욱(가톨릭대, 역사학과), 김민배(인하대, 법학과)교수, 차병직 변호사가 맡았고, 박상천(새정치국민회의), 박계동(민주당), 유수호(자민련)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첫 번째자로 나선 안병욱교수는 "현재 우리는 과거로부터 누적된 잘못된 역사를 일거에 청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전제하며 "지금 역사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과제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시키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특별검사제도(특검제)에 대한 의견을 낸 차병직 변호사는 "현행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는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자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법학교수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도 있다"며 "특검제 필요성의 원리는 적정한 수사권을 위한 사전적 보장책"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행 법은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된 법률을 만들어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민배교수는 일부에서 특검제의 도입을 구태의연한 논리를 내세워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고 지적하며 "특별검사를 검찰청법에 의거하여 임명된 검사가 아니라면서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행사한 자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권인숙 성고문 사건의 공소유지 담당변호사등 여러면 있었다며 정치적 중립이나 독립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검제 도입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특검제 도입은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를 주위에 포진하여 유무형의 폭력과 비민주적 형태로 일관하여온 동조세력들에 대한 청산이어야 한다"며 "그것은 부패한 현정사를 만들었던 세력은 물론이고 이를 조장하고 지원해 왔던 검은 손들에 대한 최결과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천 의원은 현재에 대한 정치적 대응이 아닌 법적 대응을 할 때라고 말하면서 공소시효에 대해 변론이 전혀 없었던 점을 감안해 선고연기 및 변론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인 박계동 의원은 "현재 정부와 여당의 주장은 병을 진단만 하고 치료는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며 "김정권이 5.18문제에 대해 여러번 말을 바꾸었는데 그 배경에 대해 국민은 알권리가 있다"며 판단변화의 배경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현재에 대해서도 시효자체를 다 썩버리고 이제 와서 공소시효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인권활동가를 위한 2기 공개강좌(10회) 보안관찰법의 내용과 본질

강사: 이창호교수 (경상대, 법학)

· 일시: 12월2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1시
·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 문의: 김수경 간사 (전화: 715-9185)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③

비상사태 처리의 역사적 전개

리안드로 테스포이 (유엔 비상사태특별보고관)

한 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적인 감시는 70년대부터 점차 그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정부들은 비상사태를 선포할 때 국제적인 감시와 통제로부터 벗어나려고 여러 방법을 쓰지만, 위험한 상태에서 국제적인 감시는 매우 필요하고 유용하다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위기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장감, 중요감, 폭력은 정부의 권력남용 또는 기타 자의적인 조치를 취하는 상황까지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비상사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① 비상사태는 공식적으로 선포되어야 한다 ② 비상사태가 해당 국내·국제 규범에 따라 공식 발표되고 적용될 것을 요구한다. 국제적 차원에서는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기구의 협약 및 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에 의해 만들어져 구속력을 지닌 현행 국제법의 일부가 된 기준과 원칙을 말한다. ③ 예외적인 위협의 원칙-비상사태는 사태가 매우 심각하여 전체 인구가 위협에 처해 있고 그러한 위기가 사회의 구조와 삶에 진정으로 위협이 되는 경우에만 필요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국제적으로 불법적 또는 권력남용이라는 비난을 사게 된다. ④ 한시성의 원칙-비상사태의 본질과 특별한 성격을 고려할 때 특정한 시간제한이 가해져야 한다. ⑤ 조화의 원칙-사태의 심각성과 그 사태를 중재하기 위해서 취해지는 조치간의 연관이 있어야 한다. ⑥ 특정인권의 양도불가성-예외적인 상황에서도 생존권, 고문금지과 같은 인간의 기본권에 한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

을 금지된다. 또한, 실시하는 모든 조치는 인종·성별·피부·언어·종교 등의 이유로 차별대우하지 않아야 하며, 비상사태의 목적은 불법 정부의 성립과 영구화가 아니며 쿠데타에 의해 성립한 정부나 인종주의나 식민주의적 정부의 경우도 해당되지 않는다.

비상사태를 선포한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한 경우 유엔 사무총장에게도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주요 위반사례

1. 사실상의 비상사태-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의 비상사태를 유지하여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해 계속 구금시키는 등의 불법행위가 자주 일어난다.

2. 비상사태의 지속-한시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로 파라과이는 54-88년까지 비상사태를 유지했다.

3. 교묘한 비상사태(교묘화)와 제도화-자의적인 결정을 동시에 내리게 된다. 브라질에는 1백5개의 예외법칙이 있었다. 또 비상사태를 제도화하기 위해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은 국민투표 실시로 합법적인 제도를 만들었다. 칠레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비상사태와 국가보안법

냉전시대에 정부가 예외적인 조치를 채택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가장 자주 사용한 구실은 '국가안보의 수호'였다. 가장 전형적인 예는 남미의 국가안보이념(독트린)에서 찾을 수 있다. 이때 남미 대부분의 정부는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내부의 적이나 내부 적의 대리인들도 국가안보의 위협으로 간주, 수십 년간 가장 잔인하고 혹독한 독재체제를 정당화해 왔다. 비상사태의 선포가 대다수의 인권을 유린하고 모든 형태의 정치적 반대행위를 탄압할 목적으로 독재자들이 사용한 사법적 도구였다는 사실은 국가안보 이념을 실행하는 여러 사례에서 발견되고 있다.

유리국가들의 경우 국제적인 기준을 잘 지키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나라들은 가장 탈법적인 조치들, 즉,

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고 취하는 조치-이주민, 난민, 망명신청자들에 대해 예외적인 조치-를 취한다. 이런 비상조치들은 비상사태하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가장 많은 위반을 하는 지역은 아시아이다. 행정부가 의회보다 강력한 경우, 국가보안법을 무리없이 채택한다. 또는 예외적인 권한을 갖게 하는 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고 사실상의 비상사태에 준하는 예외적인 조치를 실행한다. 현재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홍콩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식민통치의 유산으로 탄생한 독재정권이 존재하는 아시아 지역의 인권운동가들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취해지는 예외적이고 탈법적인 조치들을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극복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범민련 연행자 명단

(직책은 범민련의 직책표시임)

<서울(15명)>

안기부-김영옥(60, 중앙위원), 박석률(47, 전 실행위원장), 전창일(75, 범민련 부의장), 신정길(37, 사무처장), 주명순(70, 서울연합 부의장), 김병권(74, 중앙위원)

장안동 대공분실-강희남, 이천재(64, 부의장), 이종린(72, 부의장), 김영제(39, 정책위의장), 락병준(71, 간사), 신창균(88, 상임고문), 이준우(68, 중앙위원), 김광렬(74, 회계감사), 홍세표(59, 서울연합 부의장)

<대구(7명)>

유근삼(56, 대구경북지역 의장), 한기명(67, 대구경북지역 부의장), 나경일(67, 대구경북지역 부의장), 권오봉(70), 이태환(72, 대구경북지역 상임고문), 김병길(63, 회원), 김동순(33, 대구경북지역 사무국장)

<광주(3명)>

김병균(47, 나주 고막원 교회 목사, 광주전남연합 공동의장, 전 광주전남 부의장) 김양무(43, 광주전남연합 자통위원장, 전 중앙위원), 임재복(56, 감사)

<부산(3명)>

서상권(67, 부산경남 부의장), 김상찬(64, 민자통 부산경남의장), 유혁(77, 고문)

<전북(1명)>

김형근(35, 전북집행위원장)

비상사태 하에서도
기본권의 침해는 있을
수 없다.